

GOVP1200300745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0000-000795-10

<http://www.maf.go.kr>

2002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 목 차 ◆

제 1 편 2001년 농업동향

제 1 장 경제동향	5
제 1 절 국내외 경제동향	5
1. 국내경제동향	5
가. 경제성장	5
나. 물가와 금리	9
다. 고용과 임금	12
라. 경상수지	13
2. 해외경제동향	15
가. 경제성장	15
나. 고용 및 물가	16
다. 교역 및 경상수지	17
라. 국제금리 및 환율	18
제 2 절 농촌 경제동향	20
1. 농업구조	20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
나. 농경지	21
2. 농가경제	24
가. 소득동향	24
나. 농가의 가계지출 동향	28
다. 가처분소득 및 잉여	29
라. 농가자산 동향	29
마. 농가부채 동향	30

바. 영농형태별 농가	31
사.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32
아. 경지규모별	32
자. 경영주 연령별	33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34
가. 개 황	34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35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37
4. 농림업 부가가치	39
5. 농업생산성	40
제 2 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42
제 1 절 국내 주요농산물수급동향	42
1. 식량작물	42
2. 원예·특용작물	44
가. 채소류	44
나. 과실류	46
다. 특용작물	46
라. 인삼류	47
3. 축산물과 사료작물	48
가. 축산물	48
나. 사료작물	51
제 2 절 식품수급동향	53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53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53
나. 소득계층별 식품소비 행태	54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55

2. 식품수요와 공급현황	57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57
나. 자급률 수준	59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61
3. 식품가공산업 현황	63
가. 산업구조	63
나. 생산동향	64
다. 수출입동향	66
제 3 절 농산물 교역동향	68
1. 농산물 수출입동향	68
가. 수출동향	68
나. 수입동향	69
2. 농산물 남북교역 동향	70
가. 농산물 교역규모	70
나. 농산물 교역동향	70
제 3 장 국제 농업동향	73
제 1 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73
1. 국제곡물 수급동향	73
2. 국제곡물 가격동향	75
제 2 절 주요 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77
1.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77
가. 미 국	77
나. 중 국	80
다. 일 본	84
라. 유럽연합(EU)	87

2. 양자간 농업통상협력	90
제 3 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101
1. WTO 활동	101
2. OECD 활동	103
3. FAO 등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105
4.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107
5. APEC 관련활동	108
6. 농업·환경·무역연계 논의동향	110
7. WTO/SPS협정이행 관련 논의동향	114

제 2 편 2001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제 1 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121
제 1 절 2001년도 예산 중점투자 분야 및 재원확보 내용	121
1. 예산편성기본방향 및 예산규모	121
2. 15조원 농특세 사업	125
제 2 절 농림사업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126
1. 농업·농촌 투융자 현황	126
2. 농업 투융자 사업의 평가 실시	128
가. 농림사업 자체평가	128
나.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 평가	128
다. 현장농정점검지원단 운영	129
3. 농림사업의 투융자방식 개선	130
제 3 절 농림행정쇄신·조직개편 및 법령제도개선	132
1. 농림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132

2. 농정조직의 개편	133
가. 농림부	133
나. 농촌진흥청	136
3. 농림분야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136
제 4 절 농업관련기관 및 협동조합 개혁	142
1. 농업기반공사	142
2. 농수산물유통공사	147
3. 협동조합 개혁	149
4. 한국 마사회	159
제 5 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162
1. 설치 경과	162
2. 위원회 구성	162
3. 위원회 활동	163
제 2 장 2001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166
제 1 절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	166
1. 농가경영 안정대책 추진	166
가. 농업인 부채경감 특별대책 추진	166
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실시	171
다. 재해농가 지원강화	172
2. 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쟁력 제고추진	174
가. 쌀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추진	174
나. 농지보전 및 관리 강화	175
다. 영농규모화 사업 추진	177
라. 수매가 인상 및 수급관리	178
마. RPC중심의 쌀 생산·가공·유통혁신	179

바.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181
3.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183
가. 일반경지정리 사업	183
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184
다. 밭기반 정비사업	185
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87
마. 배수개선 사업	187
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8
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189
아.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	190
자.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191
4. 농업기계화 및 영농자재의 수급안정	191
가. 농업기계화	191
나. 영농자재의 수급안정	202
5.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확충	206
가. 논농업 직불제	206
나. 경영이양 직불제	209
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210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11
6. 농외소득원 확충	213
가. 그린투어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214
나. 농공단지 활성화	214
다. 농촌휴양자원 개발	215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216
제 2 절 농업전문경영체 및 여성 농업인 육성	218
1.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 육성	218
2. 법인경영체의 육성	219

가. 영농조합 법인	219
나. 농업회사 법인	220
다. 법인경영체 육성시책 평가	221
3. 신지식 농업인육성	222
4. 농업인 교육 및 농업계학교 교육 활성화	223
가. 농업인 교육	223
나. 농업계학교 교육 활성화	225
5. 농업벤처 육성	227
6.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227
7. 농업종합자금제 확대 추진	229
8. 여성농업인 육성	233
제 3 절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 혁신과 정보화 촉진	239
1. 농업기술 혁신	239
가. 쌀의 지속적 안정생산 기술개발	240
나.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242
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243
라.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조사료 이용기술 개발	247
마.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개발	250
바. 병해충·잡초 종합관리 기술 개발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 ..	251
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유용 농업자원의 자원화 기술 개발 ...	253
2. 유용 유전자원의 종합 관리	255
가. 국내외 유전 자원의 수집·보전·탐색	255
나. 주요작물의 Genome 연구확대 및 유용 유전자 개발	256
다. 생물 정보의 D/B화 및 활용시스템 구축	257
3.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과 유용물질 생산	258
가. 형질 전환된 작물의 조기품종화 추진	258
나. 곤충·미생물 자원에서의 유용물질의 대량 생산	259

다. 동물자원 유용 물질의 대량 생산기반 구축	260
라. 체세포 복제소 안정생산 및 수태율 증진기술 확립	261
4. 농업생명 전담기구 및 지원 체계 정비	261
5. 농업정보화 촉진	262
가. 농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구축	263
나.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264
다. 농업경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터넷 콘텐츠 확충	265
라. 농림지식 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266
제 4 절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개혁	267
1. 농산물 유통계획	267
가.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267
나. 도매시장 개혁의 마무리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268
다.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활성화	269
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및 확대	270
마. 디지털 유통을 위한 물류 효율화	272
2. 농산물 수급안정	272
가. 농업관측 강화	272
나. 유통협약·명령제 추진	273
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274
라. 과실류 수급안정 지원	275
제 5 절 축산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277
1.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 활성화	277
2.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277
3. 민간수급 조절기능 활성화	278
4. 가축개량추진	279

제 6 절 농축산물 안전성제고 및 친환경농업기반 마련	281
1.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281
2. 친환경 농업의 기반마련	282
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 감축 추진	282
나. 농업자원 유지·개량 시책추진	283
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지원·육성	284
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추진	285
3.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285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체계강화	285
나. 국내 부존 사료자원의 활용 확대	286
4. 사료산업의 육성과 안전성 제고	287
5.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강화	289
6. 구제역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290
제 7 절 농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291
1. 농산물 수출진흥 대책	291
가. 개요	291
나. 해외시장 개척	292
다. 농산물 수출지원 체제 강화	295
2. 수입관리	296
제 8 절 농촌 활력증대 및 농업인 복지증진	297
1. 농촌 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297
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297
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298
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299
2. 농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300
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01
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302

제 3 편 2002년도 농정시책

제 1 장 2002년도 농정방향	305
제 1 절 2002년도 농정목표	305
제 2 절 2002년도 농정시책 방향	306
1.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적극 추진	306
2.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308
3. 농촌활력 증진방안 본격 강구	310
4. WTO 농업협상 및 FTA협상에 적극 대응	311
제 3 절 2002년도 농림부문 예산확보	312
1. 2002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312
2. 2002년 농림예산 규모	313
제 4 절 농정추진체계의 개선	315
1. 농업인·소비자·정부의 협조체제 강화	315
2. 농림사업 투융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316
가.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국정과제 추진 점검	316
나.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평가 개선	317
다. 현장농정 점검·지원의 내실화	318
3. 농업행정쇄신 및 규제개혁	318
4. 농림조직의 개편	319
가. 농림부	319
나. 농촌진흥청	321

제 2 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323
제 1 절 농가 경영혁신과 소득안정 추진	323
1. 쌀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 도모	323
가. 쌀 산업 발전대책 추진	323
나. 고품질 쌀 생산·유통촉진	324
다. 쌀 소비 촉진 전개	325
라. 민간유통기능 강화	325
2. 금융 부담 경감과 경영위험관리 강화	326
가.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	326
나. 농업경영회생 지원제도 도입 추진	327
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확대	328
라. 가축공제 대상품목 확대	330
3.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내실화	331
가. 논 농업직불제 제도개선 추진	331
나. 친환경 직불제 대상지역 확대	333
다.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 도입 추진	334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 준비	336
제 2 절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337
1.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중점 지원	337
가. 영농규모화 촉진	337
나.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338
다. 생산자 조직 중심의 계열화·브랜드화 추진	339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340
마. 농업인력 육성	342
바. 법인 경영체의 육성	343
사. 컨설팅 지원체계 확립	343
아. 여성농업인 육성	344

2. BT·IT 접목으로 농업성장 동력발굴	347
가. 유전체 분석·GMO 등 농업생명공학기술 개발	347
나. 기술개발을 위한 품목별 협의체 운영	351
다. 원격 영농 상담소 운영 확대	351
라.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355
마. 농업정보화의 확대 추진	357
바. 농업벤처 육성	362
3. 농업기반시설 정비	362
가. 일반경지정리 사업	362
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363
다. 밭기반 정비 사업	363
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64
마. 농업용수개발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 사업	365
4. 농업 기계화 촉진	367
가.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367
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368
다.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369
라. 농기계 생산지원	371
마. 농업용 면세유 공급	371
바. 서울 국제농업기계 박람회 지원	371
제 3 절 소비자 중심의 생산·유통실현	372
1.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추진	372
2.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의 추진	373
3. 수확후 관리 기술 개발·보급	375
4. 직거래 사업의 내실화·활성화	375
5.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의 내실화	377
6. 원산지 표시제 실효성 제고	377

제 4 절 축산업 경쟁력 강화	379
1. 2002년 축산여건 변화와 전망	379
2.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380
3. 가축개량 추진	381
가. 한우개량	382
나. 젖소개량	382
다. 돼지개량	383
라. 닭 개량	383
4. 양돈·양계 수급안정 및 품질고급화 추진	383
5. 우유수급 안정대책 추진	384
6.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386
가. 선진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386
나. 소비자가 신뢰하는 유통체계 구축	387
7.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388
가. 축산분뇨의 자원화	388
나.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388
8. 가축방역 대책 강화	389
〈부록〉 구제역 대책 추진	392
1. 개 요	392
2. 구제역 발생 경과	393
3. 구제역 발생 전개 양상	394
4. 구제역 방역 조치사항	395
가. 구제역 발생이전	395
나. 구제역 발생 후 차단방역	395
다. 경기 안성과 충북 진천 차단방역 추진상황 비교	398
라. 구제역 발생원인 및 전파 경로 추정	400
마. 구제역 방역추진 우수지원 사례	404

바. 방역대책 교훈	405
5. 이동 제한지역 해제	406
6. 구제역 종식에 따른 후속조치	406
제 5 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407
1. 수출여건과 전망	407
2. 농·축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	408
3. 수입관리대책	411
제 6 절 농촌 활력 증진 및 복지 지원 강화	413
1.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유치로 농촌 활력 증대	413
2. 그린투어리즘 등 농촌관광 활성화	415
3.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416
4. 전통식품산업 투자 활성화	419
5. 농촌의 교육·의료 등 복지 여건 개선	420
가. 농어촌 복지증진 종합 대책 추진	420
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21
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22
제 7 절 WTO 농업협상 대책 추진 및 남북농업교류·협력 활성화 ..	423
1. 농업협상 논의 동향	423
2. 대외협상체계구축	425
3. WTO 농업협상 적극 대응	427
4.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대책	427
5. 남북농업교류 활성화	430
가. 북한의 식량농업 상황	430
나. 남북 농업협력 및 지원현황	431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대비 체계	435

표 · 그림 목차

제1편 2001년 농업동향

<표 1-1- 1> 경제활동 부문별 경제성장률	5
<표 1-1- 2> 산업별 성장률	7
<표 1-1- 3> 소비동향	8
<표 1-1- 4> 총저축 및 총투자 추이	8
<표 1-1- 5> 투자지출 동향	9
<표 1-1- 6> 물가동향	10
<표 1-1- 7> 수출입 물가	11
<표 1-1- 8> 시중실세금리	12
<표 1-1- 9> 고용동향	12
<표 1-1-10> 임금상승률 및 노동생산성	13
<표 1-1-11> 경상수지	13
<표 1-1-12>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16
<표 1-1-13> 세계교역과 주요국 경상수지	18
<표 1-1-14> 주요국 단기금리 추이	19
<표 1-1-15> 주요국 통화의 환율추이	19
<표 1-1-16>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
<표 1-1-17> 경지면적 변동추이	21
<표 1-1-18>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22
<표 1-1-19> 농경지 이용현황	23
<표 1-1-20> 휴경면적	23
<표 1-1-21> 농가소득	24
<표 1-1-22> 농가소득 구성비	24
<표 1-1-23> 농업소득	25

<표 1-1-24> 농업조수입	25
<표 1-1-25> 농업경영비	26
<표 1-1-26> 농의소득	27
<표 1-1-27> 이전수입	28
<표 1-1-28> 가계비 지출	28
<표 1-1-29> 가처분소득/잉여금	29
<표 1-1-30> 농가자산	30
<표 1-1-31> 농가부채	30
<표 1-1-32> 영농형태별 비교	31
<표 1-1-33> 전업농가/겸업농가 비교	32
<표 1-1-34> 경지규모별 비교	33
<표 1-1-35> 경영주 연령별 비교	34
<표 1-1-36> 농가교역조건 동향	34
<표 1-1-37>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36
<표 1-1-38>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38
<표 1-1-39> 농촌임료금 동향	39
<표 1-1-40>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율	40
<표 1-1-41>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40
<표 1-1-42> 농업생산성 지표	41
<표 1-2- 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42
<표 1-2- 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43
<표 1-2- 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44
<표 1-2- 4> 채소류 수급동향	45
<표 1-2- 5> 과실류 수급동향	46
<표 1-2- 6> 특용작물 수급동향	47
<표 1-2- 7> 인삼 생산동향	48
<표 1-2- 8> 쇠고기 수급동향	48
<표 1-2- 9> 사료수급 추이	51

<표 1-2-10>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51
<표 1-2-11> 초지조성 실적	52
<표 1-2-12>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	53
<표 1-2-13>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	54
<표 1-2-14> 1인 1일당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55
<표 1-2-15> 영양권장량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 추이	56
<표 1-2-16>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58
<표 1-2-17> 연도별 자급률 추이	60
<표 1-2-18> 주요 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61
<표 1-2-19> 주요 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62
<표 1-2-20> 식품가공산업 분류별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연도별 비교 ..	63
<표 1-2-21>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66
<표 1-2-22> 품목군별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67
<표 1-2-23>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68
<표 1-2-24> 농림산물 수입동향	69
<표 1-2-25> 남북교역 동향	70
<표 1-2-26> 반출입 통관실적	71
<표 1-2-27>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71
<표 1-2-28>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72
<표 1-3- 1> 세계곡물수급전망	74
<표 1-3- 2> 국제곡물가격추이	76
<표 1-3- 3> 미국 주요 농업지표	77
<표 1-3- 4>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84
<표 1-3- 5> EU 농업의 주요지표	88
<표 1-3- 6> 국제기구별 지원실적 및 목표	107

제2편 2001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표 2-1- 1> 2001년 농림예산 기능별 · 재원별 규모	123
<표 2-1- 2> 2001년 농림예산 사업별 규모	124
<표 2-1- 3> 15조원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	125
<표 2-1- 4> 2001년도 농업 · 농촌 투융자 재원별 구성	126
<표 2-1- 5> 2001년도 국고투융자의 사업 분야별 내역	127
<표 2-2- 1> 농업피해 복구지원 현실화	173
<표 2-2- 2> 최근의 쌀 수급동향	175
<표 2-2- 3> 2001년도 농지불법 전용 적발 및 조치내역	176
<표 2-2- 4>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	177
<표 2-2- 5> 영농규모화 사업 추진실적	178
<표 2-2- 6> 관행방식 대비 미곡종합처리장 처리효과	180
<표 2-2- 7> RPC 유통시 마진 감축 효과	180
<표 2-2- 8> RPC 유통비율	181
<표 2-2- 9> 일반경지정리 추진현황	184
<표 2-2-10>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185
<표 2-2-11> 발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86
<표 2-2-12>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87
<표 2-2-13>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188
<표 2-2-14>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89
<표 2-2-15>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189
<표 2-2-16>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190
<표 2-2-17>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계획	191
<표 2-2-18> 농기계 용자지원 한도액 산정기준	192
<표 2-2-19> 연도별 주요 농업기계공급 및 구입자금지원	194
<표 2-2-20>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195

<표 2-2-21>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 설치현황	196
<표 2-2-22> 농업기계 기술훈련 실적	197
<표 2-2-23> 신기술 농업기계 주요 특성	199
<표 2-2-24> 농기계 생산지원자금 지원 실적	201
<표 2-2-25> 면세유 공급실적 및 농가부담 경감액	201
<표 2-2-26> 연도별 농약소비 상황	202
<표 2-2-27> 비료 소비량 추세	203
<표 2-2-28> 2001년 주요 비종별 비료가격	204
<표 2-2-29> 환경친화형 비료공급 실적	205
<표 2-2-30>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209
<표 2-2-31>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현황	210
<표 2-2-32> 농촌휴양자원 개발계획	215
<표 2-2-33> 농산물가공공장 연도별 운영상황	217
<표 2-2-34> 농산물 가공산업 추진현황	217
<표 2-2-35> 2001년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 육성현황	219
<표 2-2-36> 대학별 특성화 분야	226
<표 2-2-37> 대학별 사업성과	226
<표 2-2-38> 2001년 컨설팅 서비스 지원실적	228
<표 2-2-39>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230
<표 2-2-40> 농업종합자금 추진현황('01년)	231
<표 2-2-41>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 중 여성비율 추이	233
<표 2-2-42> 여성농업인 센터 사업추진 실적	235
<표 2-2-43> 농가 도우미제도 실시 시·군 현황	236
<표 2-2-44> 여성농업인육성 사업추진 현황	238
<표 2-2-45> 2001년도 주요연구 성과	239
<표 2-2-46> 2001년도 육성 신품종 현황	240
<표 2-2-47> 유전자원 보유현황(종자, '01.7현재)	256
<표 2-2-48> 통신요금 인하 조정	263

<표 2-2-49> 농업인 정보화 교육 현황	264
<표 2-2-50>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	270
<표 2-2-51> 농산물 전자상거래 효과	271
<표 2-2-52> 주요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275
<표 2-2-53> 과실류 가격 안정사업 추진실적	276
<표 2-2-54> 축산물 가격동향	279
<표 2-2-55> 2001년도 가축개량 성과	281
<표 2-2-56>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정 및 대상품목 현황	289
<표 2-2-57>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대상 확대	289
<표 2-2-58>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실적	293
<표 2-2-59> 도로포장현황	298
<표 2-2-60>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	299
<표 2-2-61> 상수도 보급 현황	299
<표 2-2-62>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계획	300
<표 2-2-63> 2001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실적	300
<표 2-2-64>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301
<표 2-2-65>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실적(결산기준)	302
<표 2-2-66>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실적(결산기준)	302

제3편 2002년도 농정시책

<표 3-1- 1> 2002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예산 포함)	314
<표 3-1- 2> 2002년 농림예산 사업별 규모	314
<표 3-1- 3> 농·소·정 협력지원사업	316
<표 3-2- 1>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내용	329
<표 3-2- 2> 가축공제 추진과정	330
<표 3-2- 3> 논농업 직불제 예산	331

<표 3-2- 4> '02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대상 선정	333
<표 3-2- 5> 친환경농업의 이행단계별 실천기준	334
<표 3-2- 6> '02 영농규모화 추진 계획	338
<표 3-2- 7> '02 경영이양 직접지불 사업 계획	339
<표 3-2- 8>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규모	341
<표 3-2- 9> '02 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육성계획	343
<표 3-2-10>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시·군현황	345
<표 3-2-11> 농가도우미제도 실시 시·군현황	346
<표 3-2-12> 농업유전자원 등급지정 및 국외분양 요건	348
<표 3-2-13> 농업인 정보화 교육 계획	359
<표 3-2-14> 일반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363
<표 3-2-15>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363
<표 3-2-16> 연차별 받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	364
<표 3-2-1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365
<표 3-2-18> '02 농기계구입지원 사업비	369
<표 3-2-19> 융자 한도액 산정기준표	369
<표 3-2-20> 서울국제농업기계박람회 지원실적	372
<표 3-2-21> 연도별 품질인증 및 친환경 인증실적	374
<표 3-2-22> 고발 포상금 지급액 및 명예 감시원 위촉현황	378
<표 3-2-23>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벌칙 기준	379
<표 3-2-24> 지역별 이동제한 해제 상황	390
<표 3-2-25> '02 농·축·임산물 수출전망	408
<표 3-2-26>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412
<표 3-2-27> '02 농산물 가공산업 추진계획	419
<표 3-2-28> '02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계획	422
<표 3-2-29> '0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계획	422
<표 3-2-30> '01/'02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431
<표 3-2-31>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규모	434
<표 3-2-32> 북한농업지원 협력단 구성	436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 ◎ 제1편 2001년 농업동향
- ◎ 제2편 2001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 ◎ 제3편 2002년도 농정시책

여 백

제1편 2001년 농업동향

여 백

제 1 장

경 제 동 향

제 1 절 국내외 경제동향

1. 국내경제동향

가. 경제성장

2001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3.0%로 전년(9.3%)보다 크게 낮아졌다. 미국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3/4분기까지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다가 4/4분기 들어 국내소비와 건설투자 등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4/4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인 이유로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인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 그 동안 실시한 경기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표 1-1-1>

경제활동 부문별 경제성장률

(단위 : 전년대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GDP		6.8	5.0	△6.7	10.9	9.3	3.0
경 제 활동별	전 산 업	7.0	5.8	△6.1	11.0	9.8	3.8
	농림어업	3.3	4.6	△6.6	5.4	2.0	1.4
	제 조 업	6.8	6.6	△7.4	21.0	15.9	1.7
	서비스업	7.8	5.4	△7.2	11.9	9.5	4.1
재고증가율		16.5	4.6	△17.0	2.1	16.1	△1.7
제조업평균가동율		80.7	79.2	68.0	76.4	78.5	73.2

주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하며 금융귀금속서비스는 공제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활동부문별로는 산업전반의 성장률이 3.8%로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제조업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활동이 크게 부진하여 성장률이 1.7%에 그쳐 전체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농림어업은 양식업이 호조를 보였으나 축산업의 광우병 파동 등으로 부진하여 1.4%의 성장에 그쳤다.

재고증가율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1999년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어(2.1%) 2000년에는 16.1%까지 급격히 재고증가율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1년 들어 생산활동 위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1.7%까지 낮아졌고, 그 결과 2001년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보다 크게 낮은 73.2%로 나타났다.

(1) 산업별 생산활동

산업전반은 2001년 건설업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이 전년에 비해 신장세가 둔화 되어 1/4 ~ 3/4분기 감소세를 보이다가 4/4분기에 접어들어 반전함으로써 연간 3.8%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성장률이 1.7%에 그쳐 전체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박의 수출호조로 운수장비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반도체, 컴퓨터, 음향통신 등 정보통신관계 산업이 내외수요부진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전기·가스·수도업은 산업활동 부진에 따른 전력사용 둔화로 전년대비 8.3%p 감소한 5.7%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4.1% 증가하여 제조업에 비해서는 비교적 견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년(9.5%)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금융·보험·부동산업(4.6%)은 보험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업의 호조로 전년수준의 성장을 유지하였으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7.3%)도 학원·영화·오락 등의 빠른 신장세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다.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4.0%)은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거래 부진으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운수 창고 및 통신업(7.3%)도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냈지만 전년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졌다.

<표 1-1-2>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2001				
			연간	1/4	2/4	3/4	4/4
산업	11.0	9.8	3.8	4.4	3.5	2.7	4.5
농림어업	5.4	2.0	1.4	△4.1	3.5	1.3	1.5
광업	5.3	2.5	0.5	△5.8	△0.1	10.8	△1.2
제조업	21.0	15.9	1.7	4.5	2.2	△1.7	2.1
전기 가스 수도사업	10.4	14.0	5.7	7.5	4.7	4.3	6.0
건설업	△9.1	△3.1	5.6	2.4	1.5	7.6	9.5
서비스업 ¹⁾	11.9	9.5	4.1	3.9	4.0	3.8	4.7
도소매 음식숙박업	14.1	9.8	4.0	3.4	3.8	3.8	5.1
운수창고및통신업	14.5	17.9	7.3	8.2	6.8	7.7	6.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5	4.9	4.6	4.4	4.2	4.2	5.5
사회및개인서비스업	11.1	5.1	7.3	3.9	5.8	10.0	9.8
국 내 총 생 산	10.9	9.3	3.0	3.7	2.9	1.9	3.7
국 민 총 소 득	9.4	3.6	1.3	0.5	1.3	△0.1	3.4

주 : 1) 수입세 포함, 금융귀속서비스는 공제
 자료 : 한국은행

건설업은 민간건설이 크게 호전된 데다 도로 등 정부건설도 꾸준히 늘어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5.6%를 기록하였다. 1/4분기 2.4%에서 2/4분기에 약간 감소한 1.5%였으나 하반기 들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농림어업은 연간 1.4% 성장에 그쳤다. 1/4분기에 광우병 파동으로 축산업이 부진하여 4.1%의 감소를 기록하였고, 2/4분기에 양식업의 호조로 3.5%의 성장을 하였지만, 일기불순으로 재배업이 부진하여 3/4분기 이후 낮은 증가세를 지속 하였다.

(2) 소비지출

2001년도의 소비지출은 민간소비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정부소비는 약간의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 증가율이 3.7%로 낮아졌다. 민간소비는 연중 4.2% 증가하였는데 1/4분기(1.5%)에 경기부진, 실업률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2/4분기이후 주택가격 및 주가상승, 실업률 하락 등으로 증가율이 점차 높아져 국내경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표 1-1-3>

소 비 동 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2001p				
			연간	1/4	2/4	3/4	4/4
소 비 지 출	9.4	6.7	3.7	1.2	3.5	4.3	5.6
민간소비지출	11.0	7.9	4.2	1.5	4.1	4.8	6.6
정부소비지출	1.3	0.1	0.2	△0.7	△0.1	1.0	0.3

자료 : 한국은행

(3) 저축 및 투자

<표 1-1-4>

총저축 및 총투자 추이(명목금액)

(단위 : 전년대비, %)

	1999	2000	2001
총 저 축	5.2	6.8	△3.6
민 간	3.4	△9.6	△7.6
일 반 정 부	9.8	46.0	2.3
총 투 자	4.6	2.0	△2.8
민 간	51.3	15.4	△3.3
일 반 정 부	1.5	10.0	7.2
투 자 재 원 자 립 도	122.4	114.3	111.5

자료 : 한국은행

2001년 총저축은 전년대비 3.6% 감소하였다. 이는 민간부문의 저축이 전년대비 7.6%가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정부 저축은 2.3% 증가에 그치는 등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건설투자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총투자(-2.8%) 역시 감소세를 보였는데 민간부문의 투자는 전년대비 3.3% 감소하였고, 정부부문의 투자는 7.2%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01년 투자지출은 건설투자(5.8%)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9.8%)가 부진하여 감소로 반전, 연간 -1.7%를 기록하였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수장비 등 대다수 품목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감소폭이 계속 확대되다가 소비 및 건설투자의 증가세 확대, 대테러 전쟁의 조기종결기대, 반도체가격 상승 등으로 4/4분기 들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건설투자는 주택 등 건물 건설투자가 활기를 띠는 데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또한 늘어나 증가로 반전하였다.

<표 1-1-5>

투자지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2001p				
			연간	1/4	2/4	3/4	4/4
총고정자본형성	3.7	11.4	△1.7	△4.0	△4.8	△3.1	4.9
설비투자	36.3	35.3	△9.8	△8.4	△11.2	△15.7	△3.1
건설투자	△10.3	△4.1	5.8	1.5	1.1	8.2	10.7

자료 : 한국은행

나. 물가와 금리

(1) 물가

2001년중 소비자물가는 연간 4.1% 상승하여 전년(2.3%)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이는 국내경기의 부진으로 수요압력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하반기 이후의 물가오름세가 이어진 데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미달러환율, 공공요금, 집세, 단위노동비용 등이 높은 상승을 보인 데 주로 기인하였다.

농축수산물은 기상악화에 따른 채소류 및 과실류의 작황부진, 일부 축산물의 공급감소 등으로 6.3%의 높은 가격상승을 보였다. 1/4~2/4분기에는 이상기온과 구제역 및 광우병 파동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3/4~4/4분기에는 일부 축산물의 불균형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든 농산물의 산지출하가 늘어난 데 힘입어 내림세로 돌아섰다.

공업제품 물가는 2.6%가 상승하였는데, 상반기에는 전년 하반기중 고유가의 파급영향지속, 담배세제 개편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완만한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국내 유류제품 가격이 인하되고, 경기부진으로 수요가 둔화되어 내림세를 보였다. 서비스 물가는 연간 4.6% 상승하여 오름세가 지속되었다.

<표 1-1-6>

물 가 동 향

(단위 : 전기동기대비, %)

	1999	2000	2001				
			연간	1/4	2/4	3/4	4/4
소비자물가	0.8	2.3	4.1	3.6	5.0	4.2	3.4
농축수산물	7.3	1.9	6.3	1.0	8.8	8.1	7.4
공업 제품	0.5	1.6	2.6	3.2	3.8	2.5	0.9
서비스	△0.8	2.9	4.6	4.5	5.0	4.6	4.1
생산자물가	△2.1	2.0	1.9	2.5	3.1	2.0	0.0
농림수산물	10.1	△2.6	1.0	△4.1	3.0	3.0	2.4
공산품	△3.3	2.4	1.5	2.5	3.0	1.7	△1.2
전력·수도·가스	0.5	8.5	7.3	8.5	8.5	8.0	4.7
서비스	△2.1	1.5	2.4	3.2	2.9	1.7	1.9

주 : 연간은 연평균 기준 전년대비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는 연간 1.9%가 상승하였는데, 상반기에 전년하반기중 고유가의 영향, 기상악화에 따른 일부 농산품의 수급불균형 등이 겹치면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국제유가의 하락, 국내경기의 부진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낮아져 4/4분기에는 전기말월대비 0.0%를 기록하였다.

농림수산물 생산자 물가는 일부 품목의 수급불균형, 축산물의 사육감소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수확기의 농산물 산지출하 증가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연간 1.0% 상승하였다. 공산품은 연간 1.5% 상승하였다. 전력·수도·가스는 7.3%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가스,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인상과 전년하반기중 국제유가의 상승 영향 때문이다. 서비스 물가는 연간 2.4% 상승하였다.

<표 1-1-7>

수출입 물가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2001				
			연간	1/4	2/4	3/4	4/4
수출물가	△18.9	△1.0	6.2	7.9	9.8	6.3	0.9
수입물가	△12.1	7.6	4.9	8.8	11.3	4.9	△4.6
원자재	△13.2	11.1	4.5	9.6	11.9	4.2	△6.9
자본재	△ 8.3	△4.9	6.6	5.5	7.5	8.4	5.3
소비재	△ 8.5	1.0	7.6	9.1	13.6	7.7	0.5

단위 : 한국은행

수출물가는 연간 6.2%로 전년(-1.0%)보다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원화환율이 큰폭으로 상승한데 기인한다. 수입물가는 연간 4.9% 상승하여 전년(7.6%)보다 오름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대미달러 환율이 하향안정되면서 원자재 자본재 및 소비재 가격이 모두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2) 금 리

2001년 중 국고채와 우량회사채 금리 등 장기시장금리는 경기부진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와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인하, 통화의 신축적 공급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단기시장금리도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수준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회사채유통수익률은 1998년 14.99%를 기록한 이후 2001년 7.04%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CD유통수익률 또한 2001년 5.03%를 기록하여 하향안정세를 지속하였다. 콜금리는 2~9월중 네 차례에 걸쳐 1.25%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4.0%수준으로 낮아진 후 연말까지 동 수준내외에서 유지되었다.

<표 1-1-8>

시중실세금리

(단위 : 연%)

	1998	1999	2000	2001
회사채유통수익률(3년)	14.99	8.86	9.25	7.04
CD유통수익률(3년)	14.99	6.81	7.08	5.03
콜금리(1일)	14.91	4.92	5.05	4.63

자료 : 재경부

다. 고용과 임금

(1) 고용

<표1-1-9>

고용 동향

(단위 : 천명, %)

	1999	2000	2001	증감율(%)
경제활동인구	21,634	21,950	22,181	1.1
경제활동참가율	60.5	60.7	60.8	0.2
취업자	20,281	21,061	21,362	1.4
농림업	2,349	2,288	2,193	△4.2
제조업	4,006	4,243	4,199	△1.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3,906	14,511	14,950	3.0
건설업	1,476	1,582	1,575	△0.4
실업자	1,353	889	819	△7.9
실업률	6.3	4.1	3.7	△9.8

자료 : 재경부

2001년도의 실업률은 3.7%로 전년의 4.1%에서 소폭 낮아졌다. 실업자수도 2000년 889천명에서 2001년에는 819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사회 전반에 취업자가 소폭(1.4%) 늘어난 반면, 농림업 취업자수(-4.2%)는 계속되는 이농현상을 반영하여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전산업 취업자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낮아졌다.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로 볼 때 임시·일용직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기업들이 경력자 등 상용직 위주로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상용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4.0%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0.7% 감소하였다.

(2) 임 금

<표 1-1-10>

임금상승률 및 노동생산성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2001				
			연간	1/4	2/4	3/4	4/4
명목임금 ¹⁾	12.1	8.0	5.6	8.5	4.6	4.6	5.2
실질임금	11.1	5.6	1.5	4.7	△0.4	0.4	1.7
제조업							
노동생산성 ²⁾	17.0	9.8	4.0	4.8	1.0	0.2	10.3

주 : 1) 비농림어업 10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한국생산성본부의 제조업상용근로자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

자료 : 한국은행

2001년 근로자 명목임금은 5.6% 올라 전년의 8.0%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실질임금은 1.5%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15.5%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은 도소매업에서의 성과급 지급 증가 등으로 12.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조업은 생산활동 부진으로 초과근로가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하여 상승률이 6.3%로 낮아졌다. 이밖에 금융·보험·부동산업이 5.7%, 사회·개인서비스업이 2.9%를 기록하였고, 건설업(-0.3%)은 건설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슷한 임금수준을 나타내었다.

라. 경상수지

<표 1-1-11>

경 상 수 지

(단위 : 억달러)

	1998	1999	2000	2001
경상수지	403.6	244.8	122.4	86.2
상품서비스수지	426.5	277.2	139.8	98.7
상품수지	416.3	283.7	168.7	133.9
수출	1,321.2	1,451.6	1,759.5	1,513.7
수입	904.9	1,167.9	1,590.8	1,379.8
서비스수지	10.2	△6.5	△28.9	△35.3
소득수지	△56.4	△51.6	△24.2	△8.9
경상이전수지	33.5	19.2	6.8	△3.6

자료 : 한국은행

2001년중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흑자규모가 전년의 122억달러에서 86억달러로 축소되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전년의 169억달러에서 134억달러로 흑자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는 수입이 설비투자 및 수출 부진으로 감소하였으나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반도체 가격의 급락 등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의 증가로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3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소득수지는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와 대외 이자지급 감소에 힘입어 적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9억달러로 크게 축소되었다. 경상이전수지는 해외 송금이 증가해 전년의 7억달러 흑자에서 4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1) 수 출

2001년 총수출은 전년대비 14.0% 감소한 1,514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을 보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반도체, 컴퓨터는 미국 등의 정보통신산업 침체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철강, 화공품 등 다른 품목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부진하였다. 반도체와 컴퓨터의 경우 각각 전년의 38%, 87% 증가에서 45%, 24% 감소로 반전하면서 연중 수출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철강, 화공품의 경우도 각각 전년의 10%, 29% 증가에서 12%, 11% 감소로 반전하였다. 이밖에 섬유류도 주요 선진국의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 등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감소로 반전하였고, 타이어·튜브·신발류 등 다른 품목도 부진하였다. 전반적으로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에서도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3%, 18%, 23%로 증가하였다.

(2) 수 입

2001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13.3% 감소하여 1,38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설비 투자 및 수출부진으로 자본재와 원자재가 각각 20%, 9% 감소로 반전하였다.

수입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본재 중 전기·전자기기와 기계류가 각각 22% 18% 감소로 반전하였고, 원자재중 원유가 전년의 16% 증가에서 15% 감소로 반전하였다. 전체 수입중 수출용 수입이 16% 감소하였으나 내수용 수입은 소비재의 수입증가 등에 기인하여 9% 감소에 그침에 따라 내수용 수입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의 55%에서 57%로 상승하였다.

(3) 자본수지

2001년중 자본수지는 외국인 직접투자자금 등의 유입이 크게 줄어든 데다 IMF 차입금 조기상환, 금융기관 무역신용 및 해외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년의 121억 달러 유입초에서 36억 달러 유출초로 돌아섰다.

(4) 환 율

2001년 연중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연초 대규모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하다가 2월말부터 엔화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급등세를 보여 4월 4일에는 연중최고수준인 1,365.2원을 기록하였다. 그 후 대미달러 환율은 엔화약세의 진정,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 지속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11월 중순 이후 엔화의 급격한 약세로 다시 크게 상승하여 연말 현재 원화는 미달러화에 대하여 전년말보다 3.7% 절하된 1,313.5원을 기록하였다.

2. 해외경제동향

가. 경제성장

2001년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 부진의 영향이 유로지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경제에도 파급되면서 2000년의 4.1% 성장에서 2001년 1.5% 성장으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은 국제 무역 확대, 금융시장 통합, 정보기술 발달 등으로 각 국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가운데 1990년대 이후 미국 및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정보통신 산업의 침체에 주로 기인하였다.

미국경제는 정보통신산업 등의 시설과잉에 따른 투자부진, 재고조정 등으로 전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01년 연간으로 1.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본경제는 미국 및 세계경제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한 데다 실업증가, 신용경색 등으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유로지역 경제는 2/4분기부터 성장세가 급속히 위축되어 연간

성장률이 1.7%로 크게 둔화되었다. 개도국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둔화로 연간 성장률이 2000년의 6.2%에서 2001년 3.1%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중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낮아 세계경기 부진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데다 민간소비 및 정부투자가 호조를 보임으로써 2001년 연간으로 7.3%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표 1-1-12>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실질 GDP 기준)

(단위 : 전년대비, %)

	1998	1999	2000	2001
세 계	2.4	3.0	4.1	1.5
선 진 국	2.7	2.8	3.6	1.0
미 국	4.3	4.1	4.1	1.0
일 본	△1.0	0.7	2.2	△0.4
E U	2.8	2.6	3.5	1.7
개 도 국	1.4	3.9	6.2	3.1
태평양연안국 ¹⁾	△5.0	6.2	7.1	0.8
한 국	△6.5	10.9	8.6	2.5
중 국	7.8	7.1	8.1	7.3
라틴아메리카 ²⁾	1.2	△1.0	3.3	0.6
동 유 럽	2.1	2.2	3.7	2.9
구소련연방	△3.3	4.6	7.9	5.7

주 : 1)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태국이 포함됨.

2) 멕시코 제외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st Quarter, 2002.

나. 고용 및 물가

2001년 중 선진국 고용사정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은 실업률이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며 유로지역은 2000년보다 실업률 감소세가 완만하였다.

미국은 가동률 저하에 따른 기업들의 인력감축으로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여 2001년 12월에는 5.8%를 기록하였으며, 연간으로는 2000년의 4.0%에서

2001년 4.8%로 높아졌다. 일본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도산 증가와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2001년 12월에는 5.6%까지 상승하고, 연간으로도 사상 최고 수준인 5.0%를 기록하였다. 유로지역은 2000년의 경기 호조에 힘입은 고용증대 효과가 상반기까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실업이 늘어나면서 연간 실업률이 2000년의 8.9%에서 2001년 8.5%로 소폭 하락하였다.

연중 선진국의 소비자 물가는 미국이 2000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고, 일본이 내림세를 지속한 반면 유로지역은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3% 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경기부진 심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하반기 들어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어, 연간 상승률이 2000년의 3.4%에서 2001년 2.8%로 낮아졌다. 일본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0.7% 하락하여 3년 연속 내림세를 지속하였다. 유로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 광우병 및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상반기 중 오름세가 확대되어 연간 상승률이 2000년의 2.3%에서 2001년 2.6%로 높아졌다.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가 크게 위축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소폭 하락한 반면, 성장세가 양호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전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남미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경기악화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며, 특히 경제불안이 지속된 아르헨티나는 디플레이션이 3년째 지속되었다.

다. 교역 및 경상수지

2001년 세계교역은 전년의 12.6% 증가에서 1.0% 증가로 증가폭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부진이 전세계로 확대된 데 기인한다. 원자재 교역은 8.6%에서 3.5%, 원료·에너지 교역은 10.3%에서 5.0%, 공산품 교역은 13.5%에서 0.3%로 각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1-1-13>

세계교역과 주요국 경상수지

	1998	1999	2000	2001
세계교역(%)	4.2	4.5	12.6	1.0
원자재	1.5	3.2	8.6	3.5
연료·에너지	0.5	3.9	10.3	5.0
공산품	5.0	5.3	13.5	0.3
경상수지(십억달러)				
미 국	△217	△324	△445	△422
일 본	121	107	117	89
서유럽	96	47	13	68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st Quarter, 2002.

2001년 주요국의 경상수지는 미국의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일본의 흑자 폭이 줄어들면서 불균형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의 4450억 달러에서 4220억 달러를 기록해 경상수지 적자폭이 소폭 감소하였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의 1170억 달러에서 890억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유럽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여 6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라. 국제금리 및 환율

2001년 선진국의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적극 나서면서 연중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초부터 11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인하한 영향으로 2000년 말 5.87%에서 2001년 말 1.71%로 대폭 하락하였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재할인을 인하 등 제로금리정책을 강화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인 0.01%로 떨어졌다. 유로지역의 단기금리는 유럽중앙은행의 4차례 금리인하 등으로 연중 하락세를 지속하여 2000년 말 4.86%에서 2001년 말 3.29%로 떨어졌다.

<표 1-1-14>

주요국 단기금리 추이¹⁾

(단위 : %)

	1999	2000	2001			
			1/4	2/4	3/4	4/4
미 국 ²⁾	5.21	5.87	4.28	3.63	2.35	1.71
일 본 ²⁾	0.08	0.40	0.05	0.01	0.01	0.01
유로지역 ³⁾	3.34	4.86	4.56	4.44	3.66	3.29

주 : 1) 기말기준

2) 3개월 만기 재정증권 수익률 기준

3) 3개월 만기 EURIBOR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엔화는 일본의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 미국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미 달러화에 대해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연중 약세기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엔화는 4/4분기에 일본의 경기침체 심화,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 등으로 급격히 절하되었다. 유로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3/4분기중 미국경기 부진 심화 등으로 강세를 보이긴 했으나, 대체로 연초 이래의 약세 기조를 지속하였다.

<표 1-1-15>

주요국 통화의 환율추이(달러대비)

	1998	1999	2000	2001
유 로	0.901	0.939	1.085	1.117
엔	130.9	113.9	107.8	121.6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st Quarter, 20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덕, 연구원 정학균, 송우진)

제 2 절 농촌 경제동향

1. 농업구조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01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354천가구로 전년의 1,383천가구보다 29천가구(△2.2%)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3,933천명으로 전년의 4,031천명보다 98천명(△2.4%)이 감소하였다.

농가수는 농가의 도시전출과 겸업농가의 타산업 전업 등으로 예년('90~'00 연평균 감소율 2.4%)과 비슷한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농가인구는 영세 및 고령농가의 탈농과 타산업 전출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그 감소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감소율 4.9%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구내 가구원 전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농업직불제 등과 같은 정부의 농업지원책 강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16>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단위	1995	2000	2001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농 가 호 수		천호	1,501	1,383	1,354	29	△2.2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4,851 (10.9)	4,031 (8.6)	3,933 (8.3)	△98	△2.4
호당농가인구		명	3.23	2.91	2.91		
연령별 농가 인 구	50세이상 (구성비)	천명 (%)	2,122 (43.7)	2,009 (49.9)	2,059 (52.4)	50	2.5
	50세미만 (구성비)	천명 (%)	2,729 (56.3)	2,022 (50.1)	1,874 (47.6)	△148	△7.3
성 별 농 가 인 구	남 자 (구성비)	천명 (%)	2,373 (48.9)	1,971 (48.9)	1,903 (48.4)	△68	△3.5
	여 자 (구성비)	천명 (%)	2,478 (51.1)	2,060 (51.1)	2,031 (51.6)	△29	△1.4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65.3%인 884천가구로 전년의 902천가구(65.2%)보다 18천 가구가 감소하였으며,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이외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469천가구로 전체농가의 34.7%를 차지하여 전년의 481천 가구(34.8%)보다 12천가구가 감소하였으나,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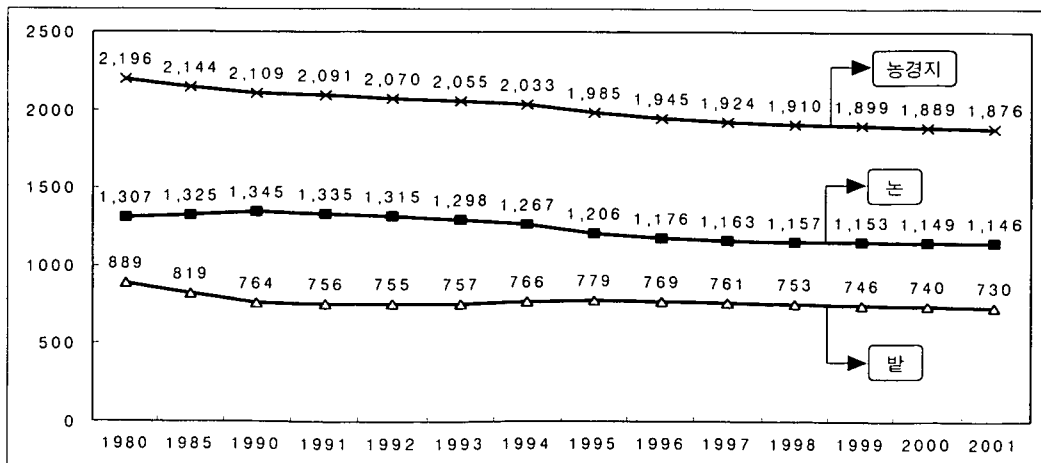
총 농가인구(3,933천명)중 50세이상 인구비중이 52.4%로 전년보다 2.5%p 증가한 것은 농가인구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성별 비중은 남자가 1,903천명으로 4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른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용도 전환면적이 크게 증가되어 지난 5년간 해마다 연평균 13.8천ha씩 줄고 있다.

2001년말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13천ha 줄어든 1,876천h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논은 전년에 비하여 3천ha 감소한 1,146천ha이고, 밭은 10천ha 감소한 730천ha로 나타났다. 경지면적의 변동사유를 살펴보면 건물·건축(5.6천ha), 공공시설(5.5천ha), 기타사유(9.2천ha)로 총 20.3천ha 감소하였으며, 개간·간척(5.3천ha), 복구 등(2.3천ha)으로 총 7.6천ha 증가하였다.

<표 1-1-17> 경지면적 변동추이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표 1-1-18>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천ha)

연도별	증 가				감 소				증 감 면 적
	계	개 간	간 척	복 구	계	건 물 건축	공 시 공 설	기타	
1991	5.4	1.3	3.3	0.8	23.4	9.0	5.0	9.4	△18.0
1995	15.6	5.1	9.0	1.5	63.0	24.7	11.2	27.1	△47.4
1996	12.1	8.9	0.5	2.7	51.9	16.8	6.6	28.5	△39.8
1997	10.9	5.5	3.1	2.3	32.9	10.4	7.1	15.4	△22.0
1998	12.3	5.9	3.1	3.3	25.3	6.3	5.9	13.2	△13.0
1999	12.0	8.1	0.8	3.1	23.0	5.0	7.5	10.5	△11.0
2000	9.0	5.6	1.0	2.4	19.1	5.3	5.2	8.6	△10.1
2001	7.6	4.3	1.0	2.3	20.3	5.6	5.5	9.2	△12.7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2001년의 경지이용면적은 2,089천ha로 전년보다 9천ha가 감소하였으며, 경지이용률은 전년의 110.5%에서 110.6%로 높아졌다. 경지이용면적중 식량작물은 16천ha가 증가하였는 데, 이는 미곡·맥류의 증가면적이 잡곡·두류·서류 등의 감소면적보다 크기 때문이다.

채소·과수 등 경제작물 중 채소면적은 양파·오이 등 일부 품목의 재배면적이 증가 하였음에도 고추·마늘·김장무·김장배추 등 많은 품목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채소 전체면적은 20천ha가 감소하고, 과수면적도 6천ha 감소하여, 기타 특용작물 등의 면적이 1천ha가 증가하여 경제작물 전체적으로는 25천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경면적은 16.6천ha가 발생하여 전년보다 0.2천ha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휴경지 생산화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9>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경지이용면적	2,197	2,142	2,097	2,118	2,116	2,098	2,089
식 량 작 물	1,346	1,342	1,315	1,332	1,327	1,318	1,334
(미 곡)	(1,056)	(1,050)	(1,052)	(1,059)	(1,066)	(1,072)	(1,083)
(맥 류)	(90)	(95)	(70)	(83)	(77)	(68)	(92)
(두류 등)	(200)	(197)	(193)	(190)	(184)	(177)	(159)
경 제 작 물	851	800	782	786	789	780	755
(채 소)	(403)	(389)	(364)	(360)	(376)	(386)	(366)
(과 수)	(174)	(173)	(176)	(176)	(174)	(173)	(167)
(기타) ¹⁾	(274)	(238)	(242)	(250)	(249)	(221)	(222)
경 지 면 적	1,985	1,945	1,923	1,910	1,899	1,889	1,876
경지이용률(%)	108.1	107.9	107.8	110.1	110.8	110.5	110.6
(논)	(104.1)	(106.1)	(104.8)	(107.0)	(107.2)	(106.3)	(107.9)
(밭)	(114.7)	(110.7)	(112.4)	(114.9)	(116.3)	(116.9)	(114.9)

주 : 1) 특·약용작물, 병발,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표 1-1-20>

휴 경 면 적

(단위 : 천ha)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휴경면적	67.5	68.9	66.5	62.5	64.6	34.3	29.5	22.3	17.0	16.8	16.6
논	24.0	31.0	30.3	31.4	33.5	14.5	10.3	6.2	4.6	4.3	3.8
밭	43.5	37.9	36.2	31.1	31.1	19.8	19.2	16.1	12.4	12.5	12.8
휴경율(%)	3.2	3.3	3.2	3.0	3.2	1.7	1.5	1.2	0.9	0.9	0.9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통계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상근)

2. 농가경제

가. 소득동향

(1) 농가소득

2001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23,907천원으로서 전년(23,072천원)에 비해 3.6%(835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소득 3.4%, 농외소득 5.3%, 이전수입 1.4%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1>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 감	
							금액	%
농가소득	13,105 (18.9)	21,803 (7.3)	20,494 (△12.7)	22,323 (8.9)	23,072 (3.4)	23,907	835	3.6
○ 농업소득	7,035	10,469	8,955	10,566	10,897	11,267	370	3.4
○ 농외소득	3,662	6,931	6,976	7,034	7,432	7,829	397	5.3
○ 이전수입	2,408	4,403	4,563	4,723	4,743	4,811	68	1.4

※ ()는 전년비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의존도)은 47.1%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농업소득과 이전수입 비중은 각각 0.1%p, 0.5%p 축소된 반면, 농외소득 비중은 0.6%p 확대되었다

<표 1-1-22>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농가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농업소득	53.7	48.0	43.7	47.3	47.2	47.1
○ 농외소득	27.9	31.8	34.0	31.5	32.2	32.8
○ 이전수입	18.4	20.2	22.3	21.2	20.6	20.1

※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2)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11,267천원으로 전년(10,897천원)에 비해 3.4%(370천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업경영비 증가(310천원)에도 불구하고 농업조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679천원)하였기 때문이다.

<표 1-1-23>

농업 소득

(단위 : 천원, %)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 감	
							금액	%
농업소득 (농업소득률)	7,035 (69.7)	10,469 (65.4)	8,955 (53.8)	10,566 (56.7)	10,897 (55.8)	11,267 (55.8)	370 -	3.4 -
○농업조수입	10,097	16,012	16,630	18,638	19,514	20,193	679	3.5
○농업경영비	3,062	5,543	7,675	8,072	8,617	8,927	310	3.6

주 : 농업소득 = 농업조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조수입*100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농업조수입>

농업조수입은 20,193천원으로 전년(19,514천원)에 비해 3.5%(679천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축산·과수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곡·채소·기타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24>

농업조수입

(단위 : 천원)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 감	
							금액	%
농업조수입	10,097	16,012	16,630	18,638	19,514	20,193	679	3.5
○미곡수입	4,381	5,450	6,703	7,282	7,758	8,277	519	6.7
○축산수입	1,950	3,981	2,050	2,358	2,566	2,421	△145	△5.7
○채소수입	1,681	3,386	4,030	4,775	4,765	5,064	299	6.3
○과수수입	973	1,542	2,119	2,398	2,443	2,407	△36	△1.5
○기타수입 ¹⁾	1,112	1,653	1,728	1,825	1,982	2,024	42	2.1

주 : 1) 서류, 두류, 맥류, 화훼, 잡곡수입 등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농가의 농업조수입 구조는 전년에 비해 미곡과 채소 부문의 비중이 각각 1.2%p, 0.7%p 확대된 반면, 축산과 과수부문의 비중은 각각 1.1%p, 0.6%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인 1991년에 비해 미곡 및 축산수입 비중은 각각 2.4%p, 7.3%p 줄어든 반면, 채소 및 과수수입 비중이 8.4%p, 2.3%p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농업경영비>

농업경영비는 8,927천원으로 전년(8,617천원)에 비해 3.6%(310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노임, 양축비 지출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농구비, 비료 및 농약비, 임차료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농업노임과 양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어 가는 반면 농구비, 임차료, 농업용이자 등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1-1-25>

농업경영비

(단위 : 천원)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 감	
							금액	%
농업경영비	3,062	5,543	7,675	8,072	8,617	8,927	310	3.6
○ 농 구 비	384	807	1,224	1,318	1,414	1,541	127	9.0
○ 농업노임	296	441	495	543	600	593	△7	△1.2
○ 양 축 비	593	1,261	1,337	1,277	1,175	1,144	△31	△2.6
○ 비료, 농약비	409	695	1,056	1,131	1,245	1,281	36	2.9
○ 임 차 료	726	1,070	1,254	1,415	1,613	1,625	12	0.7
○ 농업용이자등 ¹⁾	654	1,269	2,309	2,388	2,570	2,742	172	6.7

주 : 1) 농업용이자, 종묘비, 영농시설비, 영농광열비, 도정료 등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3) 농외소득

농외소득은 7,829천 원으로 전년(7,432천 원)에 비해 5.3%(397천 원)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사업이외소득 증가(341천 원)에 따른 것이나 겸업 소득도 증가(56천 원)하였기 때문이다.

농외소득은 1997년까지 매년 크게 증가해 왔으나, 1998년 외환위기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26>

농 외 소 득

(단위 : 천원, %)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 감	
							금 액	%
농 외 소 득	3,662	6,931	6,976	7,034	7,432	7,829	397	5.3
○ 겸 업 소 득	758 (20.7)	1,527 (22.0)	1,213 (17.4)	1,484 (21.1)	1,435 (19.3)	1,491 (19.0)	56 -	3.9 -
○ 사업이외소득	2,904 (79.3)	5,404 (78.0)	5,763 (82.6)	5,550 (78.9)	5,997 (80.7)	6,338 (81.0)	341 -	5.7 -

주 : 농외소득 = 겸업소득 + 사업이외소득,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4) 이전수입

이전수입은 4,811천 원으로 전년(4,743원)에 비해 1.4%(68천 원) 증가하였다. 이는 친인척 보조금과 공적보조금 등이 5.7%(240천 원) 증가한 데 기인하며, 출타가족 보조와 퇴직일시금 등은 감소하였다.

이전수입은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외환위기 영향으로 감소한 이후 최근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27>

이 전 수 입

(단위 : 천원)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 감	
							금 액	%
이 전 수 입	2,408	4,403	4,563	4,723	4,743	4,811	68	1.4
○ 가 족 보 조	573	706	457	470	390	291	△99	△25.4
○ 타 인 보 조	1,803	3,469	3,688	4,011	4,175	4,415	240	5.7
- 축 조 의 금	-	-	1,323	1,366	1,372	1,230	△142	△10.3
○ 퇴 직 일 시 금	32	228	418	242	178	105	△73	△41.0

주 : 가족보조는 출타가족의 보조금이며, 타인보조는 친인척 및 공적 보조금이 포함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나. 농가의 가계지출 동향

2001년도의 농가의 가계비 지출은 가구당 18,458천원(월평균 1,53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하였다. 이중 보건의료비(13.1%) 및 교통통신비(11.4%)는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인 반면, 관혼상제비(△10.6%)와 교육·교양오락비(△1.8%) 지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8>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 감	
							금 액	%
가 계 비	9,417	14,782	16,442	17,123	18,003	18,458	455	2.5
○ 음 식 물 비	2,149	3,118	3,445	3,630	3,637	3,752	115	3.2
(엥 켈 계 수)	22.8	21.1	21.0	21.2	20.2	20.3	-	-
○ 주 거 비	768	1,187	974	1,038	1,231	1,242	11	0.9
○ 교 육 · 교 양 오 락 비	1,056	1,703	1,850	1,793	1,985	1,950	△35	△1.8
- 교 육 비	975	1,553	1,706	1,653	1,834	1,794	△40	△2.2
○ 보 건 의 료 비	601	1,001	1,130	1,204	1,319	1,492	173	13.1
○ 교 통 통 신 비	468	793	1,053	1,182	1,334	1,486	152	11.4
○ 교 제 증 여 비	2,124	3,450	4,233	4,378	4,582	4,735	153	3.3
○ 관 혼 상 제 비	1,208	1,755	1,779	1,860	1,830	1,636	△194	△10.6
○ 기 타 지 출	1,043	1,775	1,978	2,038	2,085	2,165	80	3.8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74.7	70.8	54.5	61.7	60.5	61.0	-	-
평 균 소 비 성 향	72.2	68.3	81.1	77.5	78.8	78.0	-	-

※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 (농업소득/가계비), 평균소비성향 (가계비/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다. 가치분 소득 및 잉여

2001년도 농가소득에서 조세·부담금을 제외한 농가의 가치분소득은 23,669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6% 증가하였다. 가치분소득에서 가계비와 분가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4,819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0.5% 증가하였다. 이는 가치분소득 증가율(3.6%)에 비해 가계비 증가율(2.5%)이 낮아 농가의 잉여금이 증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농가부채 증가폭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9>

가치분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 감	
							금 액	%
○ 가치분소득	13,036	21,629	20,277	22,104	22,838	23,669	831	3.6
○ 가 계 비	9,417	14,782	16,442	17,123	18,003	18,458	455	2.5
○ 분 가지 출	311	548	329	388	474	393	△81	△17.1
○ 잉 여 금 ¹	3,308	6,299	3,506	4,593	4,361	4,819	458	10.5
○ 농 가 부 채	5,192	9,163	17,011	18,535	20,207	20,376	169	0.8

주 : 1) 잉여금 = 가치분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라. 농가자산 동향

2001년말 현재, 토지를 제외한 농가의 평균자산은 82,585천원으로서 전년말(78,744천원)에 비해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금 등의 유통자산(10.5%)과 고정자산(1.8%)의 증가 때문이다.

<표 1-1-30>

농 가 자 산

(단위 : 천원, %)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 감	
							금 액	%
농 가 자 산	24,502	52,727	69,498	74,197	78,744	82,585	3,841	4.9
○ 고정 자산 ¹⁾	13,171 (53.7)	28,890 (54.8)	41,796 (60.1)	42,738 (57.6)	44,687 (56.8)	45,485 (55.1)	798 -	1.8 -
○ 유 동 자 산 ²⁾	3,301 (13.5)	4,098 (7.8)	4,611 (6.6)	4,596 (6.2)	4,796 (6.1)	4,776 (5.8)	△20 -	△0.4 -
○ 유 통 자 산 ³⁾	8,030 (32.8)	19,739 (37.4)	23,091 (33.3)	26,863 (36.2)	29,261 (37.4)	32,324 (39.1)	3,063 -	10.5 -

주 : 1)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농업용시설물, 대농구, 대동·식물 자산

2) 재고농산물, 재고농자재, 소동물 등의 재고자산

3) 현금, 예금, 빌려준 돈 등의 금융자산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마. 농가부채 동향

2001년말 현재, 농가부채는 가구당 20,376천원으로 전년말(20,207천원)에 비해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가계성자금(3.4%)과 생산성자금(0.8%) 증가에 따른 것이며, 채무상환용 자금 차입금은 전년에 비해 감소(△7.5%)하였다.

2001년말 현재, 농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유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63.0%로서 전년(69.1%)에 비해 6.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

농 가 부 채

(단위 : 천원, %)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 감	
							금 액	%
농 가 부 채 (A)	5,192	9,163	17,011	18,535	20,207	20,376	169	0.8
○ 생산성 자금 (구성비)	3,600 (69.3)	7,331 (80.0)	12,958 (76.2)	14,054 (75.8)	15,159 (75.0)	15,282 (75.0)	123 -	0.8 -
○ 가계성 자금	1,027	1,110	2,653	3,182	3,882	4,015	133	3.4
○ 채무상환용	565	722	1,400	1,299	1,166	1,079	△87	△7.5
유 통 자 산 (B)	8,030	19,739	23,091	26,863	29,261	32,324	3,063	10.5
단기상환능력[(A/B)×100]	64.7	46.4	73.7	69.0	69.1	63.0	-	-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바.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특작농가의 소득이 32,705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화훼농가의 소득은 15,958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논벼농가의 소득은 20,857천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소득(23,907천원)의 87.2% 수준이었다.

농가자산은 과수농가의 자산이 210,406천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전작농가의 자산은 127,715천원에 불과하였다. 부채비율은 화훼농가가 가장 높은 반면, 논벼농가와 전작농가의 부채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1-1-32>

영농형태별 비교

(단위 : 천원, %)

	전 국	논벼 농가	과수 농가	채소 농가	특작 농가	축산 농가	전작 농가	화훼 농가
농가구성비 ¹⁾	100.0	56.6	10.8	18.5	2.9	5.6	4.6	0.7
농가소득	23,907	20,857	28,877	21,388	32,705	27,078	16,810	15,958
가계비	18,458	16,697	19,861	17,816	15,370	18,304	18,391	17,046
자산 ²⁾	166,765	156,752	210,406	143,310	128,781	206,748	127,715	142,612
부채	20,376	17,664	28,148	24,001	25,575	26,674	15,831	39,557
- 부채/소득	85.2	84.7	97.5	112.2	78.2	98.5	94.2	247.9
- 부채/자산	12.2	11.3	13.4	16.7	19.9	12.9	12.4	27.7

주 : 1) 2001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영농형태별 농가의 구성비임

2) 토지를 포함한 농가자산 총액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사.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높고, 그 가운데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농가(제2종겸업)의 소득이 28,437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2종 겸업농가」의 68.4% 수준이다.

농가자산은 「제2종 겸업농가」의 자산이 182,782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제1종 겸업농가」가 가장 높고, 「제2종 겸업농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3>

전업농가/겸업농가 비교

(단위 : 천원, %)

	전 국 (A)	전업농가 (B)	겸업농가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가구성비 ¹⁾	100.0	65.3	11.9	22.7	-	-	-
농가소득	23,907	19,447	28,302	28,437	81.3	118.4	118.9
가 계 비	18,458	16,470	20,054	21,792	89.2	108.6	118.1
자 산 ²⁾	166,765	156,095	175,831	182,782	93.6	105.4	109.6
부 채	20,376	19,149	28,103	18,633	94.0	137.9	91.4
- 부채/소득	85.2	98.5	99.3	65.5	-	-	-
- 부채/자산	12.2	12.3	16.0	10.2	-	-	-

주 : 1) 2001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전·겸업별 농가의 구성비임

2) 토지를 포함한 농가자산 총액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아. 경지규모별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5.0ha 이상」 농가의 소득은 「0.5ha미만」 농가의 2.7배 수준이다.

농가자산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토지자산이 많아 자산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비율도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4>

경지규모별 비교

(단위 : 천원, %)

	전 국	0.5ha 미만	0.5~ 1.0ha	1.0~ 1.5ha	1.5~ 2.0ha	2.0~ 3.0ha	3.0~ 5.0ha	5.0ha 이상
농가구성비 ¹⁾	100.0	35.3	27.2	15.6	8.9	7.4	4.0	1.6
농가소득	23,907	18,380	19,865	23,259	26,895	30,230	36,459	50,205
가계비	18,458	16,100	17,167	17,974	20,179	21,520	23,194	27,569
자산 ²⁾	166,765	123,083	141,757	167,670	187,683	204,617	244,667	285,569
부채	20,376	12,734	15,341	17,094	22,642	26,399	45,343	77,783
- 부채/소득	85.2	69.3	77.2	73.5	84.2	87.3	124.4	154.9
- 부채/자산	12.2	10.3	10.8	10.2	12.1	12.9	18.5	27.2

주 : 1) 2001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경지규모별 농가의 구성비임

2) 토지를 포함한 농가자산 총액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자.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은 30대 연령층의 소득이 27,791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70대 연령층의 소득은 15,354천원에 불과하였다.

농가자산은 50대 연령층이 189,312천원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반면, 70대 연령층은 109,69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농사경력이 짧은 30대 연령층의 자산보유액은 188,575천원으로 40대 연령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연령층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1-35>

경영주연령별 비교

(단위 : 천원, %)

	전 국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농가구성비 ¹⁾	100.0	4.4	15.9	24.1	37.2	18.2
농가소득	23,907	27,791	26,207	27,125	21,455	15,354
가계비	18,458	18,357	21,297	22,163	16,790	12,379
자산 ²⁾	166,765	188,575	179,204	189,312	164,598	109,697
부채	20,376	49,845	39,241	24,697	12,965	5,373
- 부채/소득	85.2	179.4	149.7	91.0	60.4	35.0
- 부채/자산	12.2	26.4	21.9	13.0	7.9	4.9

주 : 1) 2001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경영주연령별 농가의 구성비임

2) 토지를 포함한 농가자산 총액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통계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상근)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가. 개 황

200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비 6.2% 상승한 116.4, 농가구입가격은 전년비 9.3% 상승한 139.4로 농가교역조건은 2.5포인트 악화된 83.5이다.

<표 1-1-36>

농가교역조건 동향

(1995=100)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농가판매가격지수(A)	100.0	105.2	102.2	101.9	108.5	109.6	116.4
농가구입가격지수(B)	100.0	104.3	106.7	118.0	121.2	127.5	139.4
농가교역조건 (A/B×100)	100.0	100.9	95.8	86.4	89.5	86.0	83.5

자료 : 농협중앙회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1년 연평균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4로 전년의 109.6에 비해 6.2% 상승하였다.

(1) 곡 물

2001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2.7로 맥류(4.0%), 잡곡(3.6%), 서류(18.2%)는 올랐으나 미곡(Δ 1.8%), 두류(Δ 9.7%)가 내려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1.4% 하락하였다. 미곡은 일반미(Δ 3.1%) 가격이 하락했으나, 맥류는 보리(4.0%), 쌀보리(4.0%), 맥주맥(3.9%)이 오름세를 보였다. 잡곡은 옥수수(3.1%)의 가격이 올랐다. 두류는 콩나물콩(1.4%)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서류는 고구마(11.3%)와 감자(20.7%)가 오름세를 보였다.

(2) 청과물

2001년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2.9로 과실이 23.2% 하락했으나, 채소가 11.9% 올라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2.7% 상승하였다.

채소의 경우 엽채류는 양배추(Δ 40.5%), 시금치(Δ 1.7%), 미나리(Δ 5.5%)등이 내림세를 보였으나 배추(41.1%), 상추(14.5%), 열무(55.6%), 깻잎(13.6%) 등이 올라 17.6%의 상승세를 보였다. 근채류는 무(Δ 41.1%)와 당근(Δ 25.3%)이 내려 35.1% 하락하였다. 조미채류는 양파(Δ 27.3%), 파(Δ 14.2%)가 내렸으나 고추(22.0%), 마늘(27.9%), 생강(4.2%)이 올라 6.1%의 상승세를 보였다. 과채류는 호박(Δ 14.6%)이 내린 반면 오이(24.1%), 수박(3.0%), 토마토(61.2%) 등이 올라 전년도에 비해 20.4% 상승하였다.

과실은 사과(6.5%)가 오름세를 보였으나 배(Δ 15.7%), 복숭아(Δ 13.5%), 포도(Δ 48.3%), 감귤(Δ 46.3%) 등이 내림세를 보였다.

(3) 축산물

2001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1.2로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18.2% 상승하였다. 가축이 19.7%, 유란이 4.7% 각각 상승하였다.

가축의 경우 한우(23.0%), 유우(11.6%), 한우송아지(45.7%), 돼지(3.0%) 등이 상승하였고 유란은 계란(23.7%)이 상승세를 보였다.

(4) 기타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농산물의 200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8.6으로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10.6% 상승하였다.

특용작물은 참깨(△4.0%)와 표고버섯(△17.9%)이 내렸으나 들깨(11.9%), 땅콩(3.9%), 인삼(6.4%) 등이 오름세를 보여 지난해에 비해 12.7%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화훼류는 국화(3.3%)와 카네이션(3.4%)이 올랐으나 장미(△8.0%), 안개꽃(△12.6%), 백합(△6.9%), 거베라(△30.3%)가 내려 4.7% 하락하였다. 부산물(벼짚)은 지난해에 비해 8.0% 상승하였다.

<표 1-1-37>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995=100)

구 분	가 중 치	농가판매가격지수		등 락 률 (%)
		2000년	2001년	
총 지 수	1000.0	109.6	116.4	6.2
곡 물	323.3	134.6	132.7	△1.4
(미 곡)	288.7	137.8	135.3	△1.8
(맥 류)	13.6	115.2	119.8	4.0
(잡 곡)	3.7	124.6	129.1	3.6
(두 류)	7.8	136.0	122.8	△9.7
(서 류)	9.5	69.6	82.3	18.2
청 과 물	296.6	90.5	92.9	2.7
(채 소)	208.5	94.8	106.1	11.9
(과 실)	88.1	80.3	61.7	△23.2
축 산 물	322.3	102.5	121.2	18.2
(가 축)	294.7	101.1	121.0	19.7
(유 란)	27.6	117.8	123.3	4.7
기 타 농 산 물	57.8	107.2	118.6	10.6
(특 용 작 물)	48.8	107.1	120.7	12.7
(화 훼)	6.7	95.7	91.2	△4.7
(부 산 물)	2.3	142.5	153.9	8.0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1년 연평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39.4로 전년의 127.5에 비해 9.3% 상승하였다.

(1) 가계용품

2001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34.8로 연평균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7.2% 상승하였다.

식료품은 쌀·보리쌀·고구마 등 곡류(2.7%)와 콩치·생명태·고등어 등 해조어류(7.0%), 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육류(11.5%)가 올라 2.8%의 오름세를 보였다. 피복비는 내의·블라우스 등의 의류(2.7%)가 오름세를 보여 2.1% 상승하였다. 주거비는 1.4% 상승했는데, 유별로는 책상·장롱 등 가구집기(4.6%)와 식기 등의 주방용기구(1.5%), 벽지·장판지 등 주택자재(3.1%)가 오름세를 보였다.

가계광열비는 석유, 경유, 가스료 등이 상승해 5.8% 올랐다. 보건의료비는 21.3% 상승했는데 유별로는 입원료, 병원검사료 등 병원비(15.7%)와 한의원이용(43.3%)이 오름세를 보였다. 교육교양오락비는 납입금 등 교육비(5.9%)와 시청관람료(2.1%) 등이 올라 전년대비 5.4% 상승하였다. 교통통신비는 항공료·기차요금 등이 오름세를 보여 7.2% 상승하였으며, 기타잡비는 목욕료, 미용료, 샴푸 등이 상승하여 6.3%의 오름세를 보였다.

(2) 농업용품

2001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44.0으로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비 12.9% 상승하였다.

종자는 감자종자(Δ 6.7%)가 내려 0.4% 하락했으며, 비료는 염화加里(8.9%)가 올라 0.2% 상승하였다. 농약은 수도용(2.5%)과 원예용(1.7%), 제초제(3.8%)가 올라 2.5% 상승하였다. 농기구는 0.1%의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영농광열비는 석유와 경유, 휘발유 등이 올라 2.5% 상승하였으며, 사료는

12.2%의 오름세를 보였다. 영농자재는 PP포대와 농용비닐 등이 올라 0.3% 상승하였고 가축도 송아지와 유우송아지, 한우 등이 올라 34.8%의 상승세를 보였다.

<표 1-1-38>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1995=100)

구 분	가중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락률 (%)
		2000년	2001년	
총 지 수	1000.0	127.5	139.4	9.3
가 계 용 품	524.9	125.8	134.8	7.2
(식 료 품)	97.6	122.9	126.4	2.8
(피 복 비)	39.1	116.4	118.9	2.1
(주 거 비)	48.7	93.5	94.8	1.4
(가 계 광 열 비)	35.6	176.8	187.1	5.8
(보 건 의 료)	69.8	136.6	165.7	21.3
(교 육 교 양 오 락)	121.5	129.7	136.7	5.4
(교 통 통 신)	76.5	118.8	127.4	7.2
(기 타 잡 비)	36.1	118.4	125.8	6.3
농 업 용 품	403.7	127.5	144.0	12.9
(종 자)	17.4	100.7	100.3	△0.4
(비 료)	24.3	149.6	149.9	0.2
(농 약)	24.6	129.4	132.6	2.5
(농 기 구)	83.6	154.0	154.2	0.1
(영 농 광 열)	13.9	171.0	175.3	2.5
(가 축)	129.9	121.6	163.9	34.8
(사 료)	77.7	104.8	117.6	12.2
(영 농 자 재)	32.3	115.0	115.3	0.3
농 촌 임 료 금	71.4	139.4	147.5	5.8
(농 업 노 동)	31.7	140.8	149.1	5.9
(기 타 임 금)	2.8	109.3	117.8	7.8
(도 정 료)	8.2	175.1	190.7	8.9
(농 기 계 임 차 료)	28.7	130.6	136.3	4.4

자료 : 농협중앙회

(3) 농촌임료금

2001년 농촌임료금지수는 147.5로 지난해에 비해 5.8% 상승하였다. 이 중 농업노동임금은 남자, 여자가 각각 6.0%, 5.9% 상승했는데, 급식물평가액을 포함하여 남자의 경우는 하루 50,905원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34,184원이었다. 기타임금은 7.8% 상승했는데 목수(8.7%)와 미장이(5.6%)가 올랐다.

한편 쌀도정료는 전년대비 8.9% 상승하였으며, 농기계임차료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의 임차료가 올라 4.4%의 오름세를 보였다.

<표 1-1-39>

농촌임료금 동향

(단위 : 원/1일, 급식물평가액 포함)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농업노동 임금	남 자	33,237	36,156	38,681	37,136	41,612	48,039	50,905
	여 자	23,791	26,349	27,746	25,885	29,232	32,292	34,184
기타임금	목 수	67,221	71,934	73,509	69,408	68,140	73,070	79,404
	미장이	66,792	70,044	71,148	66,987	67,072	73,939	78,086

(농협중앙회 조사부 조사역 정진욱)

4. 농림업 부가가치

2001년 농림어업 총 부가가치는 명목금액으로 24,127십억원이며 실질로는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이 중 농업부문 생산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반면 임업부문은 전년대비 0.5% 증가하였다.

재배업은 채소류, 감자류 등의 생산이 줄어들었으나, 비중이 큰 벼와 과일류 등의 생산이 증가하여 1.5% 성장하였다. 축산업은 양계, 양돈, 젖소의 사육 두수가 늘어났으나 광우병 파동 등으로 육우가 크게 줄어들어 0.6% 감소하였다.

한편, 농림어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4.9%), 1999년(5.1%), 2000년(4.7%), 2001년(4.4%)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였다.

<표 1-1-40>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률

(단위 : 10억원, %)

		1999	2000	2001
농림어업		24,482	24,518	24,127
농업		20,828	20,660	20,265
실질 증감률	농림어업	5.4	2.0	1.4
	농업	7.0	3.2	1.1
	재배업	7.9	2.4	1.5
	축산업	2.6	7.2	△0.6
	임업	△0.2	△10.7	0.5
	어업	△3.1	△5.5	3.7

자료 : 한국은행,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덕, 연구원 정학균, 송우진)

5. 농업생산성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를 보면, 2001년 호당 노동시간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1,259시간이며, 농업자본액은 32,661천원으로 1994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호당 경지면적은 1.42ha로 199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1년 호당 영농 투입시간은 1,259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6시간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해 시설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작업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이며, 호당 농업자본액은 32,661천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하였다.

<표 1-1-41>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구분	단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영농시간	시간	1,376	1,293	1,219	1,226	1,249	1,253	1,259
농업자본액	천원	21,323	25,707	25,782	29,057	30,047	31,425	32,661
경지면적	ha	1.35	1.37	1.36	1.38	1.37	1.41	1.42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2001년에는 소비확대 등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힘입어 대부분의 농업생산성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2,141원으로 전년 11,778원보다 3.1% 증가하였다. 10a당 토지생산성은 1,074천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하였으며, 자본생산성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0.47원으로 나타났다.

일정면적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88시간으로 전년 89시간에 비해 0.9% 감소하였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2,293천원으로 1987년 이후의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표 1-1-42>

농업생산성 지표

구 분	단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노동생산성	원/시간	9,387	10,573	10,780	9,897	11,263	11,778	12141
토지생산성	천원/10a	954	1,001	970	880	1,027	1,051	1,074
자본생산성	원/원	0.61	0.53	0.51	0.42	0.47	0.47	0.47
노동집약도	시간/10a	102	95	90	89	91	89	88
자본집약도	천원/10a	1,575	1,882	1,903	2,106	2,194	2,237	2,294

주 : 1) 노동, 토지, 자본생산성은 농업부가가치 기준

2)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통계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상근)

국내농산물 수급동향

제 1 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1. 식량작물

2001년도의 식량작물재배면적은 2000년도의 1,318천ha보다 16천ha가 늘어난 1,334천ha 수준이었으며, 식량작물중 벼재배면적은 전년의 1,072천ha보다 11천ha가 늘어난 1,083천ha이었다. 이는 1996년부터 시작된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벼재배면적 확보시책이 주효하였으며 수매가 인상 및 논농업직불제 실시 등으로 농업인들이 판로 및 수입이 안정적인 벼농사를 선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전체 경지이용면적중 벼 재배비율이 전년도 51.1%에서 51.8%로 증가하였다

맥류의 경우에는 파종기의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계약재배로 판로가 안정됨에 따라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24천ha 급증하였다.

<표 1-2-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단위 : 천ha, %)

연도	경지 이용 면적	식 럡 작 물					채 소		과 실		기 타	
		소계	구성비	미곡	맥류	기타 품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0	2,409	1,669	69.3	1,244	160	265	277	11.5	131	5.5	332	13.7
1995	2,197	1,347	61.3	1,056	90	201	403	18.4	174	7.9	273	12.4
1996	2,142	1,315	61.4	1,050	95	197	389	18.2	173	8.0	265	12.4
1997	2,097	1,315	62.7	1,052	70	193	364	17.4	176	8.4	242	11.5
1998	2,118	1,332	62.9	1,059	84	189	360	17.0	176	8.3	250	11.8
1999	2,116	1,327	62.7	1,066	77	184	376	17.8	174	8.2	239	11.3
2000	2,098	1,318	62.8	1,072	68	178	386	18.4	173	8.2	221	10.6
2001	2,089	1,334	63.9	1,083	92	159	366	17.5	167	8.0	222	10.6

주 : 기타는 수원지, 기타작물임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전체곡물 생산량은 매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1년 양곡 년도에는 총 5,994천톤이 생산되어 전년도 5,931천톤에 비해 63천톤의 생산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국내곡물생산량의 88%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생산량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비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2001년은 19,248천톤으로 2000년보다 713천톤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업의 침체로 수요의 비중이 높은 사료용 소비가 지난해 보다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며,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용 소비는 옥수수, 콩의 가공용 수요가 다소 줄어들어 전년의 10,014천톤에 비해 조금 감소된 9,606천톤으로 나타났다. 전체곡물 자급도는 31.1%로 2000년보다 1.4% 증가되었고, 사료를 제외하면 56.8%로 전년도 55.6%보다 1.2%가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0년 곡물자급도는 1999년도 보다 1% 증가한 28%이며 주식용곡물자급도도 지난해 보다 1% 증가한 60%수준이다.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	1980	1985	1990	1995	1999	2000	2001
생 산	7,048	7,102	7,013	5,816	5,831	5,931	5,994
수 입	5,051	5,051	10,022	14,258	13,860	14,624	13,709
소 비	12,596	14,667	16,282	19,974	19,858	19,961	19,248
- 식량용	10,124	9,921	9,981	10,601	10,040	10,014	9,606
- 사료용	2,472	4,746	6,301	9,373	9,106	9,285	8,694
양곡년도	1980	1985	1990	1995	1999	2000	2001
연말재고	2,179	2,280	3,657	3,119	2,031	2,625	3,830
자급률(%)	56.0	48.4	43.1	29.1	29.4	29.7	31.1
(사료용 제외시)	(69.6)	(71.6)	(70.3)	(55.7)	(54.2)	(55.6)	(56.8)
1인당 연간소비량(kg)	195.1	181.7	167.0	160.5	156.9	153.3	145.5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 곡물자급도는 생산/수요, 식량자급도는 생산/(소비-사료) 비율임

한편, 국민의 식생활변화에 따라 육류·과일·채소류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곡물소비량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2001년도 국민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00년의 153.3kg에서 145.5kg으로 7.8kg이 줄어들었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93.6kg에서 4.7kg가 줄어든 88.9kg으로 나타났다으며, 가공식품용 소비증가에 따라 옥수수가 0.4kg 늘어났으나 밀가루, 콩, 서류 등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9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19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1996	160.2	104.9	1.6	33.8	3.6	9.3	3.5	3.5
1997	157.9	102.4	1.7	33.7	3.7	9.3	3.6	3.5
1998	156.4	99.2	1.5	34.6	4.8	9.7	3.2	3.4
1999	156.9	96.9	1.5	35.8	5.8	9.9	3.8	3.2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1	145.5	88.9	1.7	34.4	6.3	8.2	2.5	3.5

자료 : 자료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행정서기관 김인중)

2. 원예·특용작물

가. 채소류

2001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도보다 5.2% 감소된 366.3천ha였다. 그러나 무·배추 등 대부분의 채소류가 풍작을 이룸에 따라 생산량은 11,310천톤으로 2000년보다 0.3% 증가하였고 인구증가 및 수출입 감안시 1인당 소

비량은 2000년과 비슷한 연간 150.0kg인 것으로 추정된다.

봄무·배추는 재배면적이 2.6% 감소되었으나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1,931천톤이었으며, 평년생산량 1,689천톤보다도 14.3%나 늘어나 과잉 생산되었다. 고랭지무·배추는 재배면적이 14.2천ha로 전년대비 7.6% 증가되고 작황은 예년수준을 유지하여 생산량은 512천톤으로 2000년보다 6.0%가 증가하였다. 가을무·배추는 재배면적이 7.1% 감소되었으나 생육기간 중의 기상여건이 좋아 평년수준을 유지하여 생산량은 2,328천톤으로 2000년 대비 7.3%가 감소했으나 소비감소 등으로 28천톤을 정부에서 구매하여 산지폐기 하는 등 수급대책을 추진하였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70.7천ha로 전년보다 5% 정도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지난해의 194천톤 보다 5.0%가 감소한 180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37.1천ha로 전년보다 17.4% 정도 감소되었으며 평년작 수준을 보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14.3% 감소한 406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재배 농가의 작목전환 등으로 지난해보다 13.2% 증가한 19.0천ha가 재배된 양파의 경우 생산량은 전년보다 2.4% 증가한 1,074천톤이 생산되어 유통협약에 의한 산지폐기 등 적극적인 수급안정대책의 추진으로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이재욱)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요	계	8,697	10,670	10,337	9,957	10,114	10,413	11,388	11,548
	내 수	8,677	10,611	10,302	9,932	10,059	10,350	11,353	11,478
	수 출	20	59	35	25	55	38	35	70
공급	계	8,697	10,670	10,337	9,957	10,114	10,413	11,388	11,548
	생 산	8,677	10,586	10,209	9,806	9,984	10,219	11,282	11,310
	수 입	20	84	128	151	130	194	106	238
1인당 소비량(kg)		132.6	158.5	152.2	148.2	148.3	153.9	150.0	150.0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나. 과실류

과수재배면적은 총 166.9천ha로 전년에 비해 5.9천ha가 감소하였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복숭아만 0.5천ha 증가하였고, 그외 과종은 감소 추세로 2000년이후 수급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실 생산량은 생육초기 서리 피해 등의 영향이 있었으나 성과수 면적이 증가한 배의 생산증가와 감귤의 해거리 풍작으로 지난해보다 59천톤 증가한 2,488천톤이었다. 다만,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소비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과실가격은 예년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5	1999	2000	2001
수 요	내 수	1,790.4	2,472.7	2,617.0	2,746.7	2,802.4
	수 출	13.0	10.9	16.3	20.2	25.0
공 급	생 산	1,766.2	2,300.1	2,385.3	2,428.7	2,487.7
	수 입	37.2	183.5	248.0	338.2	339.7
1인당 소비량(kg)		41.8	54.8	56.1	58.4	59.2

자료: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이영식)

다. 특용작물

2001년 참깨 재배면적은 생육초기 가뭄 등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한 43.5천ha이며, 참깨 과중기에 적정 토양수분으로 발아가 양호하고, 재배 기간중 영향을 미친 태풍이 없었으나, 생육초기가뭄에 의한 면적감소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3.2%감소한 31.0천톤이 생산되었으며 소비량은 전년대비 3.5천톤이 증가하였다.

땅콩 재배면적은 4.8천ha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7.9% 증가한 9.6천톤을 기록하였다. 연간 땅콩 소비량은 전년대비 3.3천톤 감소하였으며, 자급률은 23%이다.

<표 1-2-6>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참 개							땅 콩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수	계	57.8	88.9	103.6	101.3	99.4	101.7	116.1	44.2	31.1	36.3	31.0	44.7	43.2	40.0
	당년소비	56.8	86.3	90.3	89.5	91.9	94.7	98.2	40.1	26.5	32.0	26.1	41.8	41.3	38.0
	수 출	0.4	-	-	1.1	-	-	-	-	2.3	0.6	0.2	0.2	0.4	0.0
요	차년이월	0.6	2.6	13.3	10.7	7.5	7.0	17.9	4.1	2.3	3.7	4.7	2.7	1.5	2.0
	공	계	57.8	88.9	103.6	101.3	99.4	101.7	116.1	44.2	31.1	36.3	31.0	44.7	43.2
급	전년이월	4.7	19.0	9.0	13.3	10.7	7.5	7.0	8.1	3.3	3.8	3.7	4.7	2.7	1.5
	생 산	38.1	27.9	29.4	33.4	27.7	24.2	31.7	28.7	16.8	10.8	10.9	13.8	12.4	8.9
	수 입	15.0	42.0	65.2	54.6	61.0	70.0	77.4	7.4	11.0	21.7	16.4	26.2	28.1	29.6
자급율(%)		67	32	33	37	30	26	32	72	63	34	42	33	30	23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생산은 전년도 생산량임)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윤광일)

라. 인삼류

고려인삼은 우리민족의 전통 특산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상품이며 우리나라의 인삼가공기술은 세계 선두로서 해외에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는 상품이다

인삼의 재배면적은 1990년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1996년 홍삼전매제 폐지 및 인삼관리 업무의 농림부 이관을 계기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1년에는 13,018ha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다.

농가수는 2001년기준 19,310호로 전체농가의 1.4%에 불과하나 2001년도 인삼수출액은 7,500만불로서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수출전략 품목으로 내수소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세계일류 수출전략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표 1-2-7>

인삼 생산 동향

	1990	1995	1996	1997	1999	2000	2001
면적	12,184ha	3,375	8,940	9,903	10,349	11,561	13,018
생산량	13,889톤	11,971	10,147	11,259	11,478	14,500	13,215
농가수	36,404호	23,172	23,304	20,399	22,170	24,702	19,310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이재환)

3. 축산물과 사료작물

가. 축산물

(1) 쇠고기

쇠고기 소비는 2001년 유럽 및 일본지역의 광우병 여파로 쇠고기 소비가 위축되어 2000년 보다 소비량이 감소되었다.

쇠고기 소비동향은 지난 10년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1년 소비량은 384톤으로 전년보다 4.5% 감소하였다.

이중 수입산 소비량은 220천톤으로 15.8% 증가한 반면, 국내산 소비량은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164톤으로 22.6% 감소하였다.

한편,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8.1kg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하였다.

<표 1-2-8>

쇠고기 수급동향

	1997	1998	1999	2000	2001
○총소비량	362천톤	346	393	402	384
- 국내산	228	260	240	212	164
- 수입산	134	85	153	190	220
○1인당소비량	7.9kg	7.4	8.4	8.5	8.1

2000. 12월 298만원 하던 산지 소값은 광우병 여파에 의한 소비위축으로 2001. 5월 267만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사육두수 감소와 하반기부터 소비가 회복되면서 7월은 303만원, 추석직전 9월은 395만원, 연말에는 453만원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산지 평균 큰수소값은 325만원으로 2001년 생산비 247만원 보다 32%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2001년도 한우산업은 1998년 IMF, 2000년 구제역 발생, 2001년 1월부터 생우 및 쇠고기 수입 완전 자유화로 인한 사육심리 위축으로 한육우 사육두수는 2000년 12월 1,590천두에서 2001년 12월에는 1,406천두로 11.6%나 감소하였으며, 특히 가임암소는 2000년 12월 687천두에서 2001년 12월에는 613천두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육우 사육가구수도 2000년 12월 290천가구에서 2001년 12월에는 235천가구로 19.0% 감소하였다. 이는 소 사육농가의 불안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도 암소도축율 등을 감안할 때 2002년을 최저점으로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돼지고기

또한, 2001년 돼지고기 총소비량은 2000년 보다 6% 높은 80만톤으로 늘어났고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16.5kg에서 2001년에는 16.9kg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돼지사육두수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대일 돈육수출이 중단되었음에도 2000년 12월 8,214천두에서 2001년 12월에는 8,720천두로 6.1% 증가하였고, 모돈수도 2000년 12월 982천두에서 2001년 12월에는 955천두로 증가하였다.

사육가구수는 2000년 12월 23.8천가구에서 2001년 12월에는 19.5천 가구로 18.1% 감소하였으나, 사육가구당 사육두수는 2000년 12월 345두에서 2001년 12월 447두로 증가하여 점차 규모화·전업화가 진전되고 있다.

2000년도 평균산지돼지가격은 166천원/100kg이었으나 2001년의 경우에는 사육두수 증가, 수출중단에도 불구하고 육가공원료 등 내수기반증가로 174천원/100kg으로 유지하였다

(3) 닭고기

닭고기의 2001년 총 소비량은 35만톤으로 2000년보다 7.0% 증가하였으며 1인당 소비량은 7.3kg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닭고기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8.6% 상승하여 연평균 1,397원/kg이었으며, 9월이후 12월까지의 가격은 전년동기보다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전체 사육수수는 0.2% 감소한 102백만수였다.

2001. 12월 전체 사육농가의 수는 2000년 말에 비하여 7.8% 감소한 20만호였으며, 호당 사육수수는 509수로 8.3% 증가하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수는 1,161호로 2000년보다 2.9% 증가하였으며, 전업농가의 사육수수비율은 전체 사육수수의 61.4%로 증가하는 등 양계산업의 계열화, 전업화가 진전되고 있다.

(4) 계란

계란의 2001년 총 소비량은 529톤으로 2000년보다 10.4%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9.9% 증가한 11.1kg이었으며 연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4.5%가 증가한 860(원/10개/특란)이었다.

(5) 우유

2001년 원유 총생산량은 2,339천톤으로 2000년 2,253천톤보다 3.8%증가하였고, 1인당 원유소비량은 2000년 59.2kg보다 7.9%증가한 63.9kg에 달하였다. 분유재고는 소비증가에 따라 3월부터 감소하여 9월에 3천톤 수준까지 감소하였고 2001년말 5,809톤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젖소 사육두수는 2001년말 548천두로써 2000년말 544천두보다 0.7% 증가하였으며 젖소 사육농가수도 2000년말 13.3천호에서 2001년말 12.8천호로 3.8%감소하였으며, 가구당 젖소사육두수는 2001년말 42.7두로써 2000년말 40.7두보다 4.9%증가하였다.

(행정사무관 이학주·임채록, 축산사무관 이흥철, 이상수)

나. 사료작물

2001년에 가축용사료의 총 수급량은 19,505천톤으로 전년(19,289천톤) 보다 1.0%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농후사료가 15,624천톤으로 전년대비 0.8% 감소한 반면, 조사료는 3,881천톤으로 전년대비 14.4% 증가하였다. 농후사료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4,974천톤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하였다.

<표 1-2-9>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A)	2001 (B)	증감율 (B/A)
합 계	13,250	17,154	23,302	18,680	19,388	19,289	19,505	△0.8
농 후 사 료	7,322	11,211	15,700	15,081	15,673	15,897	15,624	△1.6
-배합사료	6,467	10,567	14,856	14,259	14,991	15,105	14,974	△0.9
-농가자급사료	855	644	844	780	682	992	650	△32.1
조 사 료	5,928	5,943	7,602	3,641	3,715	3,392	3,881	14.4
-사료작물및목초류	1,974	2,832	2,498	1,266	1,170	992	1,735	74.9
-산야초, 볏짚등	3,954	3,111	5,104	2,375	2,545	2,400	2,146	△10.6

주 : 조사료는 말린무게 기준임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종별로 보면 비육우용 사료생산량은 한육우의 사육두수 감소로 17.4%감소한 반면, 양돈용사료는 돼지 사육두수 확대로 6.4% 증가하였다. 낙농용사료는 조사료 및 섬유질 가공사료의 생산량증가 등으로 6.4% 감소하였다.

<표 1-2-10>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A)	2001 (B)	증감율 (B/A)
합 계	6,467	10,529	14,856	14,259	14,991	15,106	14,974	0.9
양 계 용	2,310	3,274	3,766	3,423	3,846	3,867	3,874	0.2
양 돈 용	1,924	3,551	4,725	4,918	4,872	5,215	5,549	6.4
낙 농 용	994	1,790	2,905	1,833	1,916	1,892	1,771	△6.4
비 육 우 용	1,209	1,667	3,681	3,605	3,739	3,340	2,760	△17.4
기 타	30	247	589	480	618	792	1,020	28.9

자료 : 농림부 축산국

국내사료가격은 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 대부분 배합사료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곡물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사료산업은 해외가격변화에 따른 가격인상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2001. 2월 및 2001. 5월 2차례에 걸쳐 축종별로 사료가격이 14~15%가량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을 통해 사료자급도를 높여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지 초지개발과 청예 및 답리작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1년에 신규로 227만m²의 초지를 조성한 바 있다.

2001년말 현재 초지 총관리면적은 50천만m²로서 358천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으나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은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전용 등에 따라 관리제의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2-11> 초지조성 실적

(단위 : 만m²,천톤, %)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A)	2001 (B)	증감율 (B/A)
신규조성면적	616	413	676	882	430	253	228	△9.9
관 리 면 적	89,903	66,301	59,236	56,715	53,783	51,870	50,367	△2.9
목초생산량	742	462	435	392	371	364	358	△1.6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이상수,
축산물위생과 축산사무관 조병임)

제 2 절 식품수급동향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1982~2001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8.3%로 같은 기간 소비지출액 증가율 10.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표 1-2-12>. 식품류별로는 외식비(19.9%), 낙농품(8.1%), 빵 및 과자류(7.9%), 과일류(8.0%), 육류(7.2%), 어패류(7.7%)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곡류 및 식빵(2.5%), 조미식품(3.1%)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1-2-12>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

(단위 : 천원, %)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식빵	육류	낙농 품	어패 류	채소, 해조류	과실	조미 식품	빵, 과자류	차,음료, 주류	기타 식품	외식
1982	248.9	101.6 (100)	35.1 (34.5)	11.5 (11.3)	4.5 (4.4)	8.0 (7.9)	12.2 (12.0)	6.5 (6.4)	8.3 (8.2)	4.2 (4.1)	4.5 (4.4)	0.3 (0.3)	6.0 (5.9)
1985	317.0	118.8 (100)	34.6 (29.1)	14.8 (12.5)	6.0 (5.1)	10.2 (8.6)	15.2 (12.8)	7.4 (6.2)	10.5 (8.8)	5.2 (4.4)	5.2 (4.4)	0.2 (0.2)	8.8 (7.4)
1990	685.6	220.8 (100)	44.8 (20.3)	26.1 (11.8)	12.0 (5.4)	21.0 (9.5)	24.8 (11.2)	15.6 (7.1)	11.7 (5.3)	8.2 (3.7)	8.2 (3.7)	2.6 (1.2)	44.8 (20.3)
1997	1489.5	427.4 (100)	53.5 (12.5)	43.7 (10.2)	17.9 (4.2)	35.0 (8.2)	38.8 (9.1)	30.8 (7.2)	15.8 (3.7)	15.5 (3.6)	15.5 (3.6)	5.1 (1.2)	155.0 (36.3)
1998	1316.2	365.9 (100)	48.4 (13.2)	38.6 (10.5)	19.2 (5.2)	29.1 (8.0)	35.0 (9.6)	22.3 (6.1)	16.2 (4.4)	15.8 (4.3)	14.1 (3.9)	4.5 (1.2)	122.8 (33.6)
1999	1478.9	412.1 (100)	56.6 (13.7)	42.6 (10.3)	19.2 (4.7)	31.3 (7.6)	37.0 (9.0)	25.6 (6.2)	15.8 (3.8)	17.4 (4.2)	15.6 (3.8)	4.6 (1.1)	146.4 (35.5)
2000	1632.3	447.0 (100)	56.7 (12.7)	45.0 (10.1)	19.3 (4.3)	32.1 (7.2)	35.6 (8.0)	27.3 (6.1)	15.1 (3.4)	17.3 (3.9)	16.4 (3.7)	6.2 (1.4)	176.0 (39.4)
2001	1762.1	463.6 (100)	56.6 (12.2)	43.0 (9.3)	20.1 (4.3)	32.9 (7.1)	34.7 (7.5)	28.2 (6.1)	15.1 (3.3)	18.0 (3.9)	17.5 (3.8)	7.2 (1.5)	190.5 (41.1)
'82-'01 증감율	10.8	8.3	2.5	7.2	8.1	7.7	5.6	8.0	3.1	7.9	7.3	18.1	19.9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의 경우 1982년 5.9%에서 2000년 41.1%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곡류·식빵의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12.2%로 감소하였다. 그밖에 2000년 식품류별 비중은 육류 9.3%, 어패류 7.1%, 채소·해조류 7.5%, 과실류 6.1%이다.

나. 소득계층별 식품소비행태

2001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2-13>. 중간소득계층(4~7분위) 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육류, 과실류, 어패류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작은 품목은 곡물, 낙농품, 채소·해조류 등이었다.

<표 1-2-13>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2001년도 평균)

(단위 : 천원, %)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1~3분위	4~7분위	8~10분위	
소비지출	1074(64.7)	1659(100)	2552(153.8)	1775(107.0)
식료품	330(71.5)	462(100)	599(129.7)	464(100.4)
곡류및식빵	46(83.5)	55(100)	65(117.8)	58(106.5)
육류	29(72.4)	40(100)	53(130.1)	46(113.7)
낙농품	17(74.9)	22(100)	24(107.8)	19(83.4)
어패류	22(76.1)	29(100)	38(131.2)	37(125.7)
채소·해조류	28(85.5)	33(100)	37(113.8)	37(113.8)
과실류	18(67.9)	26(100)	36(136.1)	30(113.9)
조미식품	11(87.8)	13(100)	16(124.8)	17(129.7)
빵및과자류	13(68.8)	19(100)	23(117.5)	17(89.5)
차·음료,주류	13(71.8)	18(100)	22(123.5)	17(94.7)
외식	128(64.4)	199(100)	275(138.1)	177(89.0)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비근로자가구는 평균소득 근로자가구에 비해 어패류, 조미식품, 육류, 과실류, 채소·해조류의 지출액은 많은 반면, 빵·과자류, 낙농품, 차·음료와 주류, 외식 등의 지출액은 적은 수준이었다.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표 1-2-14>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당질 g	칼슘 mg	철분 mg	비타민 A (I.U./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 C mg
1980	2,052	67.2	21.8	396	598	13.5	1,688	1.13	1.08	19.1	87.9
1985	1,936	74.5	29.5	342	569	15.6	1,846	1.34	1.21	25.7	64.7
1990	1,868	78.9	28.9	316	517	22.7	1,662	1.15	1.27	21.6	81.2
1991	1,930	73.0	35.6	325	518	23.0	550 ¹⁾	1.27	1.24	17.5	92.2
1992	1,875	74.2	34.5	313	538	22.9	535 ¹⁾	1.22	1.22	17.4	102.5
1993	1,848	72.6	36.9	301	523	22.4	440 ¹⁾	1.37	1.11	16.5	92.6
1994	1,770	71.9	35.9	286	556	22.0	411 ¹⁾	1.12	1.19	16.6	93.5
1995	1,839	73.3	38.5	295	531	21.9	443 ¹⁾	1.16	1.20	16.7	98.3
1998 ²⁾	1,985	74.2	41.5	325	511	12.5 ²⁾	625 ¹⁾	1.35	1.09	15.7	123.1

주 : 1) 1991년부터 비타민A의 단위는 RE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 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함.

3) 1995년 이전에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실시된 결과임.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결과보고서」, 1999.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와 당질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 지방, 비타민C 등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1,985kcal, 당질 325g, 단백질 74.2g, 지방 41.5g, 철분 12.5mg, 비타민C 123.1mg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4>.

영양소별 권장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 RDA)대비 섭취비율을 보면 칼슘은 권장량의 72.8% 수준으로 크게 미달되고 있고, 리보플라빈(86.2%), 비타민A(95.6%)도 과소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철분의 경우 1995년까지 권장량을 초과하다가 1998년 미달수준을 보이게 된 것은 1998년 식품성분표상에 쌀의 철분 함량이 하향조정된 데 기인한다. 반면 단백질(117.8%), 티아민(126.3%), 나이아신(110.8%), 비타민C(234.0%)는 과다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는 1980년대 이후 권장량대비 90%내외에 머물고 있다<표 1-2-15>.

<표 1-2-15> 영양권장량(RDA)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 추이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A	티아민	리 보 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1980	93.5	94.6	81.9	96.4	90.2	128.4	89.3	131.7	176.9
1985	91.1	110.4	93.0	112.0	81.2	122.9	93.8	182.1	125.0
1990	90.0	127.8	82.0	173.3	76.5	109.9	101.4	156.2	154.9
1991	93.1	118.1	82.3	177.3	84.3	120.7	98.9	126.7	175.8
1992	90.0	118.8	85.1	175.1	81.5	114.9	96.0	124.5	194.2
1993	90.0	117.9	84.0	176.0	67.7	140.1	97.3	120.6	175.6
1994	85.0	121.8	91.8	192.0	62.0	109.0	100.2	122.8	176.9
1995	88.6	116.7	75.4	159.5	67.2	108.8	96.0	119.8	185.4
1998	94.5	117.8	72.8	91.9	95.6	126.3	86.2	110.8	234.0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결과보고서」, 1999.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비율을 보면 1998년을 기준으로 당질 66.0%, 단백질 15.0%, 지방 19.0%이다. 단백질의 경우 에너지 구성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동이 없으나 지방은 1990년대 접어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당질의 에너지 구성비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2. 식품수요와 공급현황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00년은 국내 경제의 회복추세가 지속되어 민간소비지출이 전년대비 10% 이상 빠르게 증가하면서 식품 공급도 본래 추세를 회복하게 되었다. 1999년 대비 2000년 품목별 공급량 변화는 <표 1-2-16>과 같다.

쌀은 MMA(최소시장접근물량)가 10천톤, 생산량이 166천톤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인당 식용공급량은 전년대비 3.3% 감소하였다.

밀 생산량은 2천톤 수준으로 1999년 대비 4천톤 줄었으나 식용 밀 수입량이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전년대비 0.3% 증가하였다. 반면 국제 밀 가격 상승에 의해 사료용 밀 수입은 1999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감자와 고구마는 1인당 식용공급량이 전년대비 각각 28.9%, 5.2% 감소하였다. 설탕류는 생산 증가로 1인당 공급량이 17.2kg에서 17.8kg으로 3.3% 증가하였다.

2000년 채소류 수입은 비슷한 수준이나, 채소류 생산이 10.2%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154.5kg에서 164.8kg으로 6.7% 증가하였다. 생산 증가는 품목별로 배추, 무, 시금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 과실은 식부면적이 약간 감소했으나 기상 호조로 평년수준 이상을 유지하여 전년보다 생산이 51천톤 증가하였다. 과실 수입은 오렌지 수입가격이 미국 캘리포니아지역 대풍으로 1999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아져 수입량이 3배나 증가하는 등 대부분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과일의 1인당 식용공급량은 39.1kg에서 40.5kg으로 3.8% 증가하였다.

<표 1-2-16>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 kg, %)

품 목	1999	2000	증가율
곡 류	167.8	165.9	-1.1
쌀	100.6	97.3	-3.3
보리	2.0	1.8	-9.1
밀	35.8	35.9	0.3
옥수수	27.5	28.7	4.3
기타	1.9	2.2	16.3
서 류	14.8	11.7	-21.2
감자	10.0	7.1	-28.9
고구마	4.8	4.6	-5.2
설탕류	17.2	17.8	3.3
두 류	12.0	10.7	-11.3
콩	9.9	8.4	-14.4
팥	0.7	0.7	8.8
기타	1.5	1.5	0.0
견과류	1.5	1.5	-0.7
종실류	0.6	0.7	14.8
참깨	0.3	0.5	68.8
기타	0.3	0.2	-44.8
채소류	154.5	164.8	6.7
과실류	39.1	40.5	3.8
육 류	36.3	37.3	2.9
쇠고기	8.1	8.3	1.5
돼지고기	15.5	15.8	2.3
닭고기	4.3	4.9	14.8
부산물	8.4	8.3	-0.6
계란류	8.3	8.5	2.8
우유류	50.5	49.2	-2.6
우유	49.6	48.0	-3.2
어패류	30.7	30.6	-0.3
어류	19.6	20.5	4.4
패류	11.1	10.1	-8.6
해조류	7.6	5.0	-33.9
유지류	15.7	16.1	2.8
식물성	15.1	15.6	3.5
동물성	0.6	0.5	-12.9
주 류	64.4	62.8	-2.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1.

육류의 1인당 식용공급량은 36.3kg에서 37.3kg으로 2.9%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는 생산이 13천톤 감소하였으나 수입이 60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1.5% 증가하였고, 돼지고기는 수입이 46천톤 감소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64천톤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은 2.3% 증가하였다. 닭고기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구제역, 광우병에 의한 심리적인 소비 위축의 반작용으로 1인당 식용공급량이 14.8%로 크게 증가하였다.

어류는 일본수역의 입어실적 부실과 엘리뇨현상으로 인한 원양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수입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4.4% 증가하였다. 패류는 수입이 53.5천톤 증가하였으나 생산이 175.5천톤 감소하고 수출이 100천톤 이상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8.6% 감소하였다.

식물성 유지류 1인당 식용공급량은 수입 증가로 15.1kg에서 15.6kg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반면, 동물성 유지는 수입 감소로 0.6kg에서 0.5kg으로 12.9% 감소하였다.

나. 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두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등 대부분 식품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1-2-17>. 곡류자급률은 1980~2000년간 53.3%에서 30.8%로, 두류는 40.1%에서 8.2%로, 유지류는 19.0%에서 3.2%로 크게 하락하였다. 우유류도 같은 기간 109.7%에서 81.0%로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여 왔다. 어패류는 1999년까지 대체로 자급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도 자급률이 87.4%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쌀은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로 자급률이 102.9%로 100%를 넘고 있다. 돼지고기는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2000년도 자급률이 91.6%로 하락하였으며, 닭고기는 소비량 및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1999년도 84.1%에서 2000년 79.9%로 하락하였다.

칼로리 지급률¹⁾은 1980년 70.0%, 1990년 62.6%, 2000년(P) 49.3% 수준으로 대체로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지급률은 1980년 75.2%에서 2000년 53.1%로 칼로리 지급률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 지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표 1-2-17> 연도별 지급률 추이

		1980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p)
공급영양 지급률	칼로리	70.0	62.6	50.6	53.6	54.2	49.0	49.3
	단백질	75.2	67.8	57.2	58.1	57.1	54.7	53.1
	지방	64.2	30.3	26.8	25.2	27.1	23.6	22.8
물량기준 지급률	곡류	53.3	43.8	30.0	31.7	32.7	30.1	30.8
	쌀	95.1	108.3	91.1	105.0	104.5	96.6	102.9
	두류	40.1	24.5	11.7	10.3	11.1	10.7	8.2
	채소류	100.2	98.9	99.2	97.0	97.8	97.4	97.8
	과실류	98.6	102.5	93.2	92.0	94.3	91.1	88.5
	육류	97.4	92.9	89.2	92.1	96.4	86.1	83.9
	쇠고기	93.0	53.6	50.8	65.3	76.4	57.8	53.2
	돼지고기	97.5	100.3	96.6	100.1	104.6	92.9	91.6
	닭고기	100.0	100.0	98.1	93.1	94.0	84.1	79.9
	계란류	100.0	100.0	99.9	100.2	99.8	100.0	100.0
	우유류	109.7	92.8	93.3	81.8	89.0	81.6	81.0
	어패류	132.7	121.7	100.4	98.3	112.5	102.2	87.4
	유지류	19.0	8.0	4.8	4.1	4.5	3.3	3.2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1.

1)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지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지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2000년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식품공급량(조식품기준)은 곡류(176.6kg), 두류(13.5kg), 채소류(187.6kg), 어패류(53.5kg)의 경우 비교적 많은 수준이다. 곡류 공급량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116.8kg)과 대만(94.1kg) 그리고 파키스탄(158.7kg)에 비교하여도 많은 편이며, 미국과 유럽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반면, 과실류(52.3kg), 육류(40.3kg), 계란류(9.9kg), 우유류(49.2kg), 유지류(16.1kg) 등은 적은 편이다<표 1-2-18>. 특히, 육류와 과실류의 공급수준은 유럽 국가들의 1/2~1/3수준이며, 우유류는 약 1/5에 불과하다. 유지류의 공급량은 파키스탄, 일본보다는 많지만 대만, 미국, 독일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표 1-2-18> 주요 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 kg)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파키스탄
연 도	2000	1999	1999	1999	1999	1999
곡 류	176.6	116.8	94.1	113.7	99.8	158.7
서 류	12.5	34.1	23.2	64.2	77.9	13.4
설탕류	17.8	29.7	25.1	74.2	42.5	28.6
두 류	13.5	12.7	25.8	13.4	9.6	7.8
채소류	187.6	112.6	124.5	134.2	73.7	32.1
과실류	52.3	52.5	142.2	108.6	111.7	37.0
육 류	40.3	42.4	78.1	124.0	85.3	12.4
계란류	9.9	19.2	19.4	14.5	12.2	2.0
우유류	49.2	66.2	58.1	256.0	239.1	150.0
어패류	53.5	66.5	44.8	20.3	14.6	2.2
유지류	16.1	15.3	26.5	30.7	40.0	14.5

주 : 1) 조식품 기준임.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1.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점차 증가하여 왔다. 2000년도 공급 에너지는 2,953kcal로서 1980~2000년간 연평균 0.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유럽국가의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3,4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는데,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데 기인한다<표 1-2-9>.

1인 1일당 단백질 공급량은 96.9g으로 일본의 92.1g, 대만의 97.6g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영양 3요소 중 가장 차가 적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의 소비는 적지만 간장, 된장 및 두부 등 식물성 고단백질 식품의 소비가 많은데 기인된다.

<표 1-2-19> 주요 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한국 ¹⁾	일본 ¹⁾	대만 ¹⁾	미국	독일	파키스탄
연도	2000	1999	1999	1999	1999	1999
에너지(kcal)	2,953	2,782	3,036	3,754	3,411	2,462
전분질(%)	58.8	46.6	-	29.0	29.4	56.9
설탕(%)	6.4	10.1	-	18.3	12.1	11.3
동물성(%)	14.7	20.5	-	28.0	31.3	17.5
유지류(%)	13.2	12.8	-	18.0	22.3	13.4
기타(%)	6.9	10.0	-	6.8	4.8	0.9
단백질(g)	96.9	92.1	97.6	114.9	96.2	62.8
동물성(g)	41.1	51.7	52.0	73.1	57.7	22.2
지방질(g)	83.7	82.5	127.2	148.5	146.9	64.4
유지류(g)	44.1	40.1	72.6	76.1	85.2	37.3
1인당GNP(\$)	9,628	36,156	13,235	33,927	25,532	480 ¹⁾

주 : 1) 한국, 대만은 순식품공급량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1.

1인 1일당 지방질 공급량은 국민소득의 증대와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83.7g으로 1985년의 51.8g에 비해 60%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질 공급량은 유럽 국가의 50~60% 수준인데, 이는 축산물과 유지류의 공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질 공급량은 우리나라와 식생활이 비슷한 일본(82.5g)과 비슷한 수준이며, 대만을 제외한 동남아시아국가의 44~66g에 비하면 다소 많은 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계임)

3. 식품가공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식품가공산업은 2000년 생산액이 33조 6,780억원, 부가가치는 14조 6,2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에서 생산액은 6.0%, 부가가치는 6.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 기준으로 식료품과 음료품의 구성비는 각각 82%, 18%로 식료품 제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곡물가공(14.1%), 빵·과자·국수(14%), 육가공(12%), 기타식품류(11.4%), 유가공(10%) 순으로 규모가 크다.

제조업의 총생산액은 564조 8,430억원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하였으나, 식품가공산업의 총생산액은 1999년 32조 3,240억원에서 2000년 33조 6,780억원으로 4.2%의 성장에 그쳤다.

<표 1-2-20> 식품가공산업 분류별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연도별 비교

	생산액(10억원)		부가가치(10억원)		사업체수(개)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제조업(전체)	177,309	564,834	70,925	219,425	97,144	98,110
음식료업	13,104	33,678	5,194	14,620	6,055	6,188
○ 식료품	10,352	27,588	3,857	10,908	5,557	5,758
- 육가공	872	3,909	255	1,259	407	530
- 유가공	1,519	3,439	447	1,374	113	103
- 수산가공	1,420	2,397	567	954	1,804	1,838
- 과채가공	342	920	134	383	487	504
- 곡물가공	810	4,768	242	1,130	824	663
- 식용유지	646	1,302	275	393	76	84
- 빵·과자·국수	2,411	4,735	1,074	2,459	760	780
- 식품첨가물	687	2,272	297	1,068	317	320
- 기타식료품	1,645	3,846	566	1,888	769	936
○ 음료품	2,752	6,090	1,337	3,712	498	430
- 알콜성음료	1,450	3,285	714	2,191	244	192
- 비알콜성음료	1,302	2,805	623	1,521	254	238

주 : 사료가공분야 및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체 제외
 자료 : 통계청, 「1990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2
 「2000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1

소득수준의 향상,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취업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가공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은 1990년에 비해 2.6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9.1% 성장하여 제조업 평균성장 12.1%보다는 낮지만 농업성장을 2.8%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은 외형적 성장과 병행하여 기업의 대형화,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의 사업체수는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육가공산업과 기타식료품 산업을 제외한 부문에서는 현상유지 또는 감소함으로써 사업체당 생산액이 1990년 21억 6천만원에서 5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2.5배나 성장하였다. 특히 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부문은 육가공, 유가공, 곡물가공, 식용유 지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생산액당 부가가치로 나타난 부가가치율은 식품가공산업 평균으로 볼 때 1990년 39.6%에서 2000년 43.4%로 미미한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육가공, 유가공, 식품첨가물, 기타식료품산업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이들 부문에서 제품의 고급화, 차별화가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생산동향

2000년 생산은 생산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내수증가와 기존 누적재고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5.2% 증가한 112.7을 기록하여 IMF이전인 1997년 105.3을 다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음식료품 생산은 3.4% 증가하여 1999년도의 9.4% 증가에서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육류, 과일, 채소 및 유지가공업과 냉동식품, 혼합음료의 생산이 둔화세를 보인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육가공산업은 1998년에는 IMF 한파로 -11.6%의 생산량 감소를 보였으며, 2000년에는 경기가 다소 호전되어 전년대비 4.4%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의 구제역 파동에 의한 대일 수출 중단 및 소비심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급화 전략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2000년 유가공업계는 3월부터 불어닥친 구제역 파동과 본격적인 유제품 수입개방 등의 이유로 원유생산량 증가(9%)에 비해 우유소비가 3% 정도 증가하는데 그쳐 분유재고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원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차액보전사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업계에서도 꾸준히 신제품개발과 우유소비가 많은 발효유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채가공산업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김치가 1988올림픽을 전후하여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특히, 일본의 김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 및 서구화의 진행에 따른 수요감소의 원인을 상품김치나 단체급식 공급 등으로 충당한데 기인하고 있다.

1999년도 김치시장은 업소용 김치가 200천톤으로 가장 많고, 가정용이 64천톤, 수출용이 23천톤, 포장김치가 22천톤, 상품김치가 309천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김치가 2001년 7월 5일 제24차 Codex 총회(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전통김치에 근거한 국제식품규격을 최종 확정됨으로써 자연적인 젖산발효식품으로서 세계 각국의 절임류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김치의 국제적인 상품가치가 크게 향상되어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류시장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으며, 시장규모가 1999년을 기점으로 5천억원 수준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간장이나 된장을 직접 담가 먹지 않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용 소비증가가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간장이 국제공인 식품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Codex에 간장규격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과채가공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품질 고급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높은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들어서 음료시장은 소비자의 세분화에 따라 전문성을 띤 음료의 등장과 소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음료시장은 상반기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인하여 비알콜성음료 및 알콜성음료가 증가세를 보였다. 알콜성음료의 경우 건강음료선택추세 강화에 따른 저도주와 고가주의 선호도가 높아 맥주는 9.8%증가, 위스키는 9.8% 증가, 소주는 2.7% 감소했다. 비알콜성음료의 경우 탄산음료는 1.8% 증가, 과즙음료는 4.9% 증가했다.

두유와 스포츠음료, 미과즙음료, 전통음료, 먹는샘물, 차류, 기능성음료 등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비알콜성 음료도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함에 따라 음료시장은 계속 그 규모를 회복·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 수출입동향

2001년도 가공식품 수입은 국내 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45억불 이었고 수출액은 구제역 파동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5.6% 감소한 19억 8천만불 정도였다. 무역역조 현상은 IMF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도 12억 9천 6백만불에서 2001년도에는 25억 6천 4백만불로 두 배 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표 1-2-21>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백만불)

	1991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년대비
수 입	2,266	4,021	4,006	2,560	3,603	4,342	4,546	4.7%
수 출	1,813	2,538	2,548	2,226	2,307	2,099	1,982	-5.6%
무역수지	-453	-1,483	-1,458	-334	-1,296	-2,243	-2,564	14%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2001년도 품목군별 수입구조를 보면 수산가공품(29.1%), 육가공(19.2%), 기타식료품(18.3%), 과채가공(8.2%) 순이며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전년도에 가장 많이 수입되었던 육가공품이 11억 6천 2백만불에서 8억 7천 5백만불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수출은 수산가공품이 49.7%로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빵·과자·국수(16.2%), 기타식료품(13.6%) 및 알콜성음료(7%) 등의 순이며 1999년도 3억 5천만불 수출하던 육가공품이 2000년도 8천만불, 2001년도 5천만불로 계속 줄어들어 아직도 구제역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공식품 중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큰 품목은 빵·과자·국수류로서 8천 4백만불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품목군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다. 무역적자 품목군은 육가공(32.7%), 기타식료품(21.9%), 수산가공(13.3%), 과채가공(10.5%) 순이며 육가공, 주류, 식품첨가물 등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표 1-2-22> 품목군별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백만불)

	수 입		수 출		무역수지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육가공	173	208	12	15	-161	-193
육가공	1,162	875	81	51	-1,081	-824
수산가공	1,117	1,327	1,153	986	36	-341
과채가공	386	373	113	105	-273	-268
식용유지	244	243	6	9	-238	-234
곡물가공	8	10	10	8	2	-2
빵·과자·국수	209	238	293	322	84	84
식품첨가물	66	76	42	43	-24	-33
기타식료품	665	832	230	270	-435	-562
알콜성음료	278	326	134	139	-144	-187
비알콜성음료	34	38	25	34	-9	-4
계	4,342	4,342	2,099	1,982	-2,243	-2,564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식품산업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제 3 절 농산물교역동향

1. 농산물 수출입동향

가. 수출 동향

2001년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580백만달러로 국가전체 수출액 150,439백만달러의 1.1%를 차지하였다. 2001년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과 2000년 3월에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돈육수출 중단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년대비 수출이 3.1% 증가하였다. 수출의 구조별 내역을 살펴보면 농산물이 1,252백만달러(79%), 축산물이 118백만달러(8%), 임산물이 210백만 달러(13%)을 기록하였다.

<표 1-2-23>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년대비 증 감 륜
총 수출	125,058	129,715	136,164	132,313	143,685	172,268	150,439	△12.7
농림축산물	1,570	1,707	1,759	1,635	1,680	1,532	1,580	3.1
농축산물	1,242	1,424	1,508	1,391	1,412	1,277	1,370	7.2
임 산 물	328	283	251	244	268	255	210	△17.6

※ 석재류 제외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동시에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신선농림축산물(돈육제외) 수출은 475백만달러로 전년수준은 유지하였고, 가공농림축산물 수출은 1,059백만달러로 7.8%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보면,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등의 품목이 호조를 보인 반면, 김치, 인삼이 보합수준 내지는 수출이 저조하였으나 가공식품은 주 수출국인 러시아, 동남아 지역의 경기회복 등의 영향에 따라 증가를 기록하였다.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돈육 주수출시장인 일본에 대한 수출이 638

백만달러로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액의 40%를 차지한 가운데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돈육 수출중단 영향으로 전년대비 11.3%의 감소세를 기록하였고,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액은 240백만달러로 4.8%의 감소하여 전체의 15%를 차지하였으며 대미국 수출액은 173백만달러로 18.4%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의 10.9%를 차지하였고, 대러시아 수출액은 전년대비 74.1%가 증가한 129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나. 수입 동향

2001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8,463백만달러로 국가전체 수입액 141,098백만달러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도 8,450백만달러 대비 0.2%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농림축산물 수입 증가가 미미한 것은 국내 내수경기의 침체영향으로 곡물의 일부 자연소비 증가분 이외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원목, 합판을 비롯한 임산물의 수요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여 증가폭을 상쇄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을 보면 농축산물이 총 수입액의 80%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년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밀 530백만달러, 섬유관 102백만달러, 닭고기 97백만달러, 대두박 300백만달러 등이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된 품목은 옥수수 933백만달러, 오렌지 122백만달러, 채소류 192백만달러, 원목 536백만달러 등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인 곡물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표 1-2-24>

농림산물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1990	1995	1997	1999	2000	2001	전년대비 증 감 륜
총 수입	69,844	135,119	144,616	119,752	160,481	141,098	△12.1
농림축산물	5,382	9,587	10,105	7,388	8,450	8,463	0.1
농축산물	3,754	6,899	7,619	5,928	6,783	6,792	0.1
임 산 물	1,628	2,688	2,486	1,460	1,667	1,671	0.2

* 석재류 제외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2,371백만달러로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액의 28%를 차지하였고, 중국이 1,111백만달러로 13%, 호주가 645백만달러로 8%를 차지하였다.

(무역진흥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황인용)

2. 농산물 남북교역 동향

가. 농산물 교역규모

2001년도 남북한 교역실적은 402.9백만달러로 전년도 425.1백만달러에 비해 5.2% 감소하였다. 이중 농림축산물 교역실적은 121.2백만달러로 전년대비 9.1%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남북교역규모 402.9백만달러의 30.1%를 차지하였다.

<표 1-2-25>

남북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연 도 별 교 역 실 적		
	2000	2001	증감률(%)
전 체	425.1	402.9	△5.2
농림축산물	133.4	121.2	△9.1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나. 농산물 교역동향

(1)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2001년도 농림축산물의 대북 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76.7백만달러로서 전년도 103.1백만달러보다 25.6% 감소하였고, 반입은 44.5백만달러로서 전년도 30.3백만달러 보다 46.9% 증가하였다.

<표 1-2-26>

반출입 통관실적

(단위 : 천달러)

		2000	2001	증감률(%)
반 출	계	103,097	76,698	△25.6
	농축산물	102,093	76,274	△25.3
	임산물	1,004	424	△42.2
반 입	계	30,372	44,495	46.5
	농축산물	23,356	38,780	66.0
	임산물	7,016	5,715	△18.5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2) 주요 품목별 반출입 실적

(가) 반출실적

농림축산물 반출 총품목수는 62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비료, 제조담배, 쇠고기 등 53개품목이고 임산물은 합판, 제재목 등 9개품목이다. 농축산물 반출실적은 76백만달러로 전년대비 25.3% 감소하였고, 임산물은 0.4백만달러로서 42.4% 감소하였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비료지원은 47백만달러로서 농림축산물 전체 반출금액의 62.6%를 차지하였다.

<표 1-2-27>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 천달러)

		연도별 반출실적		
		2000	2001	증감률(%)
계		103,097	76,698	△25.6
농축산물	비료	78,268	47,181	△39.7
	제조담배	11,373	5,450	△52.1
	쇠고기	2,159	754	△65.1
	채소류	874	2,979	240.8
	과실류	2,367	12,580	431.5
	밀가루	542	756	39.5
	기타	6,510	6,574	0.9
	소계	102,093	76,274	△25.3
임산물	합판	569	231	△59.4
	제재목	137	120	△12.4
	기타목제품	7	17	142.8
	기타	291	56	△80.8
	소계	+1,004	424	△42.2

(나) 반입실적

농림축산물 반입 총품목수는 42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채유용농산물, 제조담배, 한약재 등 31개 품목이고, 임산물은 송이버섯, 표고버섯, 기타 견과류 등 11개 품목이다. 반입실적은 농축산물이 39백만달러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임산물은 5.7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8.5% 감소하였다.

<표 1-2-28>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 천달러)

구 분		연도별 반입실적		
		2000	2001	증감률(%)
계		30,372	44,495	46.5
농축산물	채유용농산물	6,056	12,846	112.1
	제조담배	5,367	2,396	△55.3
	한약재	3,538	4,355	23.1
	채소류	2,608	5,153	97.5
	잎담배	904	1,193	31.9
	과실류	2,680	9,496	254.3
	기타	2,203	3,341	51.7
	소계	23,356	38,780	66.0
임산물	버섯류	2,936	3,377	15.0
	기타견과류	3,810	2,068	△45.7
	기타	270	270	-
		7,016	5,715	△18.5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 행정사무관 황인용)

제 1 절 국제곡물수급과 가격동향

1. 국제곡물 수급동향

가. 개 요

2002/2003년도 세계 전체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1.1%(21백만톤)증가한 18억78백만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1.2%증가한 19억17만톤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21.7%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나 FAO 권장 재고율(17~18%) 수준을 약 4%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곡물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나. 쌀

2002/2003년도 세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394백만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보다 0.7%증가한 410백만톤으로 전망된다. 쌀의 기말재고율은 26.6%에 이르고 있으나, 국제시장에서 중단립종 쌀 교역은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35% 내외에 불과하여 수입국의 생산이 저조하거나 수출국(미국, 호주, 중국 등)의 생산이 약간만 불안해도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 밀

2002/2003년 세계 밀 생산량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등의 생산감소 예상으로 전년대비 0.2%(5백만톤)증가한 581백만톤(1995/1996년 이래 최저)으로 전망되고 소비량은 전년보다 1.0%증가한 594백만톤으로 생산량보다 13백만톤이 많으며, 기말재고율은 24.7%(FAO 권장재고율인 23~26%)로 전망된다.

라. 옥수수

2002/2003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3.7%증가한 615백만톤으로 예상되고, 소비량은 전년대비 1.6%증가한 627백만톤으로 생산량을 12백만톤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말재고율은 18.3%로 전망된다.

마. 대두

2002/2003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대부분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2.7%(5백만톤) 증가한 189백만톤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재배면적의 증가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4.8% 증가한 78백만톤으로 예상되어 미국 대두 생산증가량이 세계 대두 생산 증가량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1>

세계곡물수급전망

(단위 : 백만톤)

		2000/2001(A)	2001/2002(A)	2002/2003(B) (잠정)	증△감(%) (B-A)/A
전체곡물	생 산	1,839	1,857	1,878	1.1
	소 비	1,876	1,894	1,917	1.2
	교 역	233	231	229	▲0.9
	재 고	492	455	416	▲8.6
	(재고율,%)	(26.2)	(24.0)	(21.7)	
쌀	생 산	398	395	394	▲0.3
	소 비	405	407	410	0.7
	교 역	25	25	26	4.0
	재 고	137	124	109	▲12.1
	(재고율,%)	(33.8)	(30.5)	(26.6)	
밀	생 산	584	580	581	0.2
	소 비	591	588	594	1.0
	교 역	103	107	104	▲2.8
	재 고	169	161	147	▲8.7
	(재고율,%)	(28.6)	(27.4)	(24.7)	
옥수수	생 산	586	593	615	3.7
	소 비	606	617	627	1.6
	교 역	77	71	71	0.0
	재 고	151	127	115	▲9.4
	(재고율,%)	(24.9)	(20.6)	(18.3)	

		1999/2000(A)	2000/2001(A)	2001/2002(B) (잠정)	증△감(%) (B-A)/A
대 두	생 산	175	184	189	2.7
	소 비	172	184	191	3.8
	교 역	55	57	60	5.3
	재 고	31	31	29	▲6.5
	(재고율,%)	(18.0)	(16.8)	(15.2)	
잡 곡	생 산	858	883	903	2.3
	소 비	881	899	913	1.6
	교 역	106	99	99	0.0
	재 고	187	170	160	▲5.9
	(재고율,%)	(21.2)	(18.9)	(17.5)	

주 : 전체곡물 = 쌀+밀+잡곡(옥수수, 대두,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혼합곡)
 자료 : USDA, ERS,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2002.7.11일자료)
 USDA, FAS,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2002.7.11)

2. 국제곡물가격동향

1995/1996년도 밀, 잡곡류의 생산 감소로 기말 재고율이 14%대로 떨어졌고, 이는 1970년대 상반기의 가장 낮은 재고율(15%)보다도 낮은 재고율 수준이었다. 이로 인하여 1996년도 봄부터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국제가격이 최고수준까지 폭등하였다.

그후 1996/1997~1998/1999년도까지 연속 풍작으로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국제가격이 1996년 이전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왔다.

1998/1999년도 쌀, 옥수수, 대두생산이 증가한 반면 밀 생산은 줄어들었으나 미국의 곡물생산이 양호하였고, 러시아 및 아시아국가, 브라질 등의 경제위기 영향으로 주요곡물가격은 1998년도 가을이후 낮은 추이를 보여왔다

1999/2000년도에는 쌀은 미국 쌀의 대폭적 생산량 증가와 1998년 홍수 피해가 컸던 중국의 생산회복, 그리고 주요수출국의 생산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쌀 생산이 사상최대를 기록하였으나, 2000/2001년도는 미국, 중국, 파키스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로 추정된다.

밀과 옥수수 및 기타잡곡의 경우에도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두는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0/2001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생산량을 상회하고 있으나, 전체 곡물 수입 수요부재로 인해 국제곡물가격은 1970년대 곡물과동 이후 대체적으로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1/2002년도에는 쌀, 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옥수수, 대두 및 기타잡곡은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고, 높은 재고율(24.0%)과 계속되는 곡물 수입수요부족으로 국제곡물가의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2> 국제곡물가격추이

(단위 : 달러/톤, FOB)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7	전년동기 대비(%)
						평균	7월		
밀	131	174	120	122	110	127	124	132	6.5
옥수수	109	120	103	92	92	91	92	101	9.8
대 두	228	235	234	186	194	180	197	220	11.7
미국산 중립종쌀	335	397	431	501	432	294	276	281	1.8
태국산 장립종쌀	326	373	310	256	212	178	178	182	2.2

주 : (밀) US Portland 백밀1등급, (옥수수, 콩)US Gulf2등급
(미국 중립종쌀) US California)

자료 : USDA, 2002. 7월 발표자료 근거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은청)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1. 주요 국가의 농업동향

가. 미국

(1) 농업경제동향

미국의 농경지는 3억 86백만헥타로 2001년 곡물생산은 3억 25백만톤에 이르고, 농산물수출도 528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 농업국가이다. 반면 농업인구는 629만명(2000)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며, 대규모 기업농 및 중소규모 농장으로 이루어진 농가는 219만호로 총가구중 점유비중은 2%로 매우 낮다.

2001년 농산물수출은 527억달러로 2000년 507억달러에 비해 3.9%나 늘었다. 한편 농산물수입은 390억달러로 지난해 389억달러에 비해 0.3% 증가하는 데 그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1년의 미국의 무역적자는 4,266억달러에 달하나, 농산물에서는 유일하게 138억달러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주요 곡물생산은 2000년에 비해 쌀은 11.6%,옥수수는 0.2% 증가한 반면, 밀은 12.3% 감소하였다.

<표 1-3-3>

미국 주요 농업지표

구분	단위	2001	구분	단위	2001
○ 농업인구 -총인구대비	천명 %	6,290(2000) 2.3(2000)	○ 밀생산량 ○ 쌀생산량	백만톤 "	53.3 9.7
○ 농가호수 -총가구대비	천호 %	2,190(2000) 2.0(2000)	○ 과일류생산량	"	32.6(2000)
○ GDP	억달러	98,729	○ 농산물수출 -총 수출대비	억달러 %	527 7.6
○ 경지면적 -호당경지면적	천ha ha	385,983(2000) 176.2(2000)	○ 농산물 수입 -총 수입대비	억달러 %	390 3.3

자료 : USDA, FAOSTAT, 농림수산 통계(일본농림수산성, 2002년)

(2) 농업정책동향

최근 미국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미국농업이 세계 곡물가격 하락, 아시아지역 등으로의 수출감소 및 가뭄 등 자연재해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 따라 2002년 농업법(Farm Bill)의 제정 등을 통해 농가소득안전망과 관련된 각종 소득안정지원 정책을 강화하였다.

연계한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서 1933년 이후 계속 실시해오던 생산조정제도와 이와 부족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생산자율직불제를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동시에 가격변동이나 수량변동에 대응한 수입보험제도를 확충하여 소득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특히 1998년 이후부터는 생산자율직접지불을 추가하는 형태로 긴급대책을 매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1996년 농업법의 내용과 긴급지원 형태의 농가지원을 2002년 농업법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대체하고, 아울러 종전의 부족불제도와 유사한 경기조절지불제(또는 목표가격제) 등 새로운 소득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법안은 2002년 5월 2일 하원에서, 그리고 5월 8일 상원에서 가결된 후 5월 13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2002년부터 2007년까지(작물년도)의 6년간 실시되고 예산 배분은 10년간(2002-11)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 농업법에서는 향후 10년간 약 828억불(추정)이 증액되어 총 1,900억불(추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용자단가”의 인상 및 “고정 중립 직접지불(또는 생산자율직불제)단가”의 인상, 그리고 목표가격을 보장하는 “경기조절지불제도”의 도입 등 정부보조를 증액하는 소득안전망을 강화한 것이 그 주요 특징이다. 그 이외에도 환경보전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과 농촌지역단위의 개발정책을 강화한 것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2002년 농업법에서 신규로 도입된 경기조절지불제도는 종전의 긴급대책으로 실시하던 시장손실지불(market loss payment)을 2002년 농업법에서 제도화한 것이다.

시장손실지불은 1998년 이후 세계 곡물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고정적인 생산자율직불제 만으로는 소득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임시대책으로서 생산자율직접지불을 수급하는 농가에게 1998-2001년간 약 185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한 조치였다.

이러한 경기조절지불제도는 종전의 부족불제도의 목표가격을 부활시킨 것이며, 이 목표가격과 ‘고정중립직접지불+시장가격(또는 유회단가)’과의 차액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로서 농가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환경보호 및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유기농산물 규격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조치와 관련된 농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전단계를 감시하여 식품안전성 보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에 적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를 과일, 채소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고, 1999년 11월 식육 등 축산물생산시설에 대한 HACCP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도 공포하였다.

또한 유기식품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GMOs) 안전성기준 및 표시제, 계란 위생기준, 식육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에 관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농무성은 유기농업인증제, 시범적인 유기농업지원제 등을 마련하여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해가고 있다.

셋째, 시장지향성이 강한 공화당의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정책은 농산물 무역확대를 위한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의 획득,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를 비롯한 FTA정책의 추진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무역협상권한은 2002. 8. 1일 상원을 통과하여 향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하게 될 예정이다. 동법안은 대통령에 대한 무역협상권한(TPA) 부여, 무역으로 인한 실직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TAA),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서기관 이상재)

나. 중 국

(1) 농업과 농촌 경제구조

WTO가입과 국제 농산물시장의 경쟁국면에 직면하여, 중국은 중국은 1999년부터 농업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금번 구조조정은 단순하게 농산물 수량을 증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품질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폐쇄식 조정이 아니라, 각 지역의 비교우위에 따라 전국 농업구역 분포를 최적화하는 것이며, 기존 생산력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선진기술로 전통농업을 개량하고 농업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산출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농업생산구조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경제구조도 조정하여 제2, 제3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농업구조조정은 첫째, 재배업구조가 한층 최적화되었다. 각 지역은 식량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수익 경제작물과 사료작물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1998년과 2001년을 대비해보면 전국적으로 1.3억무의 식량면적이 줄어들었으며 경제작물과 사료작물은 9000만무가 증가하였다. 경제작물과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농작물 총 재배면적의 30.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3.75% 증가한 것이다. 재배업은 식량작물-경제작물-사료작물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기본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야채, 과일, 화훼 발전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농민들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다. 둘째, 목축업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식량공급이 충분한 기회를 이용, 목축업과 수산양식업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1998년과 2001년을 대비하면 전국 육류 생산량은 623만 톤이 증가(10%)하였고 알류 생산량은 269.5만 톤(13.4%) 증가하였으며 수산물은 473만 톤(12.1%) 증가하였다. 셋째, 농산물의 품질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각 지역에서는 품질 향상과 소비가 원활한 우량 가공전용 농산물 생산을 구조조정 중심방향으로 삼고 우량품종을 발전시켰으며 유명 브랜드 농산물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우량 벼의 재배면적은 2.5억 무에 달하는데 우량 품종의 논벼는 총 면적의 절반을 초과하고 있다. 우량전용 밀 재배면적은 9000여만 무로 밀 총 재배면적의 25%을 차지하는데 밀 가공시, 과거 수입 밀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현상에서 벗어났다. 쌍저유채씨 재배면적은 6000만 무로, 이는 유채씨 총 재배면적의 56%을 차지하는 수치다. 고유분, 고단백 전용 옥수수는 빠르게 발전하여 재배면적은 7800만 무에 달한다. 목축, 수산, 과일, 야채 등의 우량화정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농산물위생은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져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유기식품 등이 크게 발전하였다. 넷째,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으로 더욱 집중되었다.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의 비교우위를 이끌어 내었고 지역의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점차 농업의 지역화, 전문화, 분업화가 진행되었다. 장강(長江)유역의 논벼 면적은 전국의 65.7%을 차지하고 있으며, 황회해평원 (黃淮海平原, 황하와 회수지역)의 밀 재배 면적은 전국의 60%, 동북지역과 冀魯豫(하북성, 산둥성, 하남성의 약칭) 3성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전국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유류작물도 장강유역의 유채, 황회해 지대의 땅콩, 동북지대의 콩으로 분화되었다. 중국농업구조조정은 향후 재배업 지역분포조정을 통해 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양곡종합생산능력을 안정화시키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수준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물 가공업을 발전시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며, 농촌취업구조 조정으로 농촌 잉여노동력을 타 산업으로 전환 시킴으로서 농민수입원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2) WTO 가입후의 중국농업정책 조정

WTO 가입이후 중국 농업정책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수급 관계의 변화이다. 과거 장기간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었으며 풍년이 들 경우 여유가 있는 상태로 전환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 동안 중국 농업의 종합 생산능력은 뚜렷히 제고되었는데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이 대폭 증가되었다. 식량생산능력은 1978년의 3억 여 톤에서 약 5억톤 내외로 증가되었다. 5000만톤을 1단계로 나누어 계산해보면, 모두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년 동안 연 평균 2.4%이상씩 증가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의 인구증가속도보다 1% 더 높은 수치다. 현재 중국 1인당 평균 식량 소비량은 355kg이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목화, 기름(油料), 과일, 육류, 수산물, 야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소비량은 4.2kg, 8.9kg, 51.2kg, 49.7kg, 34.3kg, 336kg 등이다. 과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다. 농민 1인당 순 수입은 1978년 133.6위안에서 2001년 2366위안으로 증가되었다. 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1978년을 100으로 볼 때 2001년은 503.8이다. 농산물 공급 증가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엔젤 계수는 점차 하락하여 1984년 도시 58%, 농촌59%에서 2001년에는 37.9%와 47.8%로 각각 하락하였다. 농산물 생산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급 관계에 역사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118가지 농산물 중 야자 기름 외 나머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공급 과잉이며 과거 무엇이든 생산만 하면 판매할 수 있다고 했던 판매자 위주의 시장 특징은 조금씩 사라지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 특징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2) 농업생산 증가방식의 변화이다. 과거 주로 토지와 노동력에 의존하던 영농방식에서 자본과 기술투자가 생산성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8.5계획내지 9.5계획기간 동안, 농업투입요소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술과 자본이 농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농업노동력은 비농업으로 이동하였다. 9.5계획기간 동안,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공헌율은 42%에 달했는데, 이는 8.5계획대비 8%

늘어난 것이다. 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총 노동력 점유 비중은 8.5계획말(1995년) 47%에서 9.5계획말(2000년)의 47%로 하락했다가, 2001년에는 43.9%까지 하락하였다. 현재 전국의 7.3억명 노동력중 약 2.39억명은 도시에서 취업중이며, 약 2억명은 향진기업에 취업하거나 도시에 나가 일하고 있다. 중앙재정의 농업투입은 8.5계획말 574억 위안에서 9.5계획말 108.5억 위안(1999년)으로 증가되었다. 2002년 재정예산중 농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1179억 위안이다. 이 같은 생산요소 투입구조의 변화는 농업발전이 과거 대규모 자연자원과 노동력 투입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자본투자 및 집약화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 농촌경제 운영시스템과 경영방식의 변화, 시장 자원의 재배치라는 기본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시장을 지향하는 농촌개혁은, 농촌경제 운영시스템을 과거 자원의 계획배치 방식에서 거시적 통제 하에서 시장기능에 의해 자원이 배치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현재 특정 제품 이외의 농산물은 개방되어 시장에서 수급이 조절되고 가격이 형성된다. 농산물의 시장화 정도는 90%를 넘어 섰다. 시장기능 중 더욱 중요한 것은 생산자에게 상품판매장소를 제공하는 외에 농민들이 생산구조, 투자구조, 취업구조를 조정토록 인도하는 것이며 자원 배치 방식을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4) 농산물의 시장경쟁 관계에 변화를 가져 왔다. 과거 국내경쟁에서 국내외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대외개방 정도는 빠르며 세계 농업과의 교류와 합작은 빈번해졌다. 주요 국제 농업조직 및 140여개 국가와 농업 과학기술교류 및 무역관계를 갖고 있다. 20년간 중국 농산물의 수출입 총액은 14.7배 증가되었고 8000여 개의 외자, 10만여종의 우수품종과 재료 및 1000여 개 선진기술 항목이 도입되었다. WTO 가입 후 중국농업이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과거 단일시장, 단일자원에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복수시장, 복수자원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5) 국민경제에 대한 농업과 농촌경제의 기초적 역할에 변화가 일어났다. 즉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기초산업이자 앞으로 내수진작과 환경보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들의 생활이 먹고 살만한 수준에서 小康(여유가 있는)상태로 진입함에 따라 농업은 국민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는 기초

수요를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잘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농업 상품화 정도의 심화에 따라 농산물 공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는데 농업, 특히 양식 풍년은 그 중요한 원인이다. 또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농업 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에 따라, 과거 주로 농업 위주로 공업화를 추진해왔던 상황도 큰 변화를 가져 왔다. 국민 총 생산액중 농업의 비중이 비록 하락하였지만 이것이 국민 경제에 대한 농업의 기본적 역할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같은 농업과 농촌경제의 단계적인 변화는, 개혁개방이 심화된 결과이며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의 필연적 추세이자 중국 농업정책조정의 기본적인 근거이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선복)

다. 일 본

(1)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01년 농업인구는 총 인구의 8.1%인 10,169천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의 13.1%인 4,794천ha이다.

2001년 농산물 수입액은 2000년 480.5억불에 비해 10.5% 감소한 429.9억 달러로 총수입에 10.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3-4>

일본의 주요농업지표

	단 위	2001		단 위	2001
○ 농업인구 -총인구대비	천명 %	10,169 8.1	○ 곡물류 생산량 -쌀생산량	백만톤 "	10.0 9.1
○ 농가호수 -총가구대비	천호 %	3,072 6.4	○ 과일류생산량	"	4.3
○ GDP	억달러 %	52,890	○ 농산물수출 -총 수출대비	억달러 %	30.2 0.6
○ 경지면적 -호당경지면적	천ha ha	4,794 1.6	○ 농산물 수입 -총 수입대비	억달러 %	429.9 10.1

자료 : 농림수산 통계(일본농림수산성, 2002년), FAOSTAT

(2) 농업정책동향

일본의 농업제도 및 정책은 21세기의 식료·농업·농촌정책의 기본지침이 되고 있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2000년 7월 제정함으로써 그 방향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과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첫째, 식료의 안전공급의 확보에 관한 시책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농업생산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소비·생산 양측의 조화를 촉진함과 함께 식량의 자급률 목표(2010년 기준 곡물자급을 45%, 주곡자급을 62%, 열량공급기준 45%)를 책정했다.

또한, 소비자의 식료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성, 품질확보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생활에 있어서 정보제공, 식료의 표시규격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했다. 2000년 6월 강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일본농업표준(JAS)법의 제정과 더불어 2001년 10월부터 절인 양파와 건포도에 대하여 품질표기기준이 적용되게 되었다.

둘째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고 바람직한 농업구조를 조기에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생산의 가장 기본적 자원인 농지의 양호한 상태를 확보함과 동시에 농업의 생산성향상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착실히 촉진했다. 그 결과 농업관개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수자원 공급기능을 강화하여 농업경영의 불확정성을 감소시켜 경지면적확대에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전업 농업인구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0년도 처음으로 50%를 상회하고 여성비율이 55%에 달함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폭 넓은 인재의 확보육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법인경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경영을 전개한 외에 여성 및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행하였다.

농업생산력의 향상, 농산물의 품질·안전성향상, 담당자의 확보·육성 등을 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충실히 강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업운영의 관점에 입각하여 인터넷을 통한 유용한 정보를 배포 및 교환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함에 따라 생산, 판매, 병해충피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다양한 유용성을 농업분야에서 활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수요에 맞는 국내농업생산의 유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의 수급 사정 등이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보리, 콩, 우유, 유제품 등에 있어서 가격정책을 재평가함과 함께 가격 하락시 경영안정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외 농업이 본래 갖고 있는 자연순환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도모되도록 새로운 법제도의 정비 등에 의해 바람직한 농업생산 방식의 도입촉진, 가축 분뇨의 적절한 관리, 유기성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행했다. 2000년 현재 500천 농가가 화학비료감축과 퇴비이용 토양개량농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일본정부에서도 1999년 지속농업법의 제정을 통해 환경농업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셋째, 농촌진흥을 위해 농업생산활동의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도모하기 위해서 농촌의 종합적인 진흥을 추진함과 함께 중산간지역 등에 대한 직접지불을 2000년부터 도입했다. 중산간지역은 일본 농산물의 40%를 생산하고 농업의 다원적기능 지니고 있어 하류지역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농업관련단체의 재편·정비 등에 대한 시책으로 농업협동조합계통조직, 농업위원회 계통조직, 농업공제단체, 토지개량조합 등의 각 단체의 역할을 명확화 함과 동시에 조직의 간소화, 합리화,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그 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WTO농업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자,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WTO농업협상제안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주민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농촌재건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서기관 이상재)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1) 농업경제 동향

EU 15개 회원국의 경지면적은 129백만ha, 농가수 700만호, 호당경지면적 18.4ha, 농수산업 종사자수는 약 708만명이며 농업총생산액은 2,135억ECU (유럽통화단위 : European Currency Unit)정도이다. 농산물 생산액에 있어서는 우유생산이 1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돼지고기 10.0%, 쇠고기 10.0%, 곡물류 9.4%, 신선채소 9.4%, 와인 6.6%, 신선과일이 6.4%, 가금육 5.4%순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네덜란드를 제외한 10개국은 농업생산액중 축산물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일랜드(84.2%), 룩셈부르크(79.1%), 덴마크(65.8%) 등의 축산물 생산 비중이 높다. 프랑스(14.5%)와 영국(12.5%), 덴마크(11.5%) 등은 곡물생산 비중이 비교적 높고, 스페인(27.8%), 이탈리아(26.3%), 그리스(24.6%) 등 지중해연안 국가에서는 과채류가 많이 생산된다.

EU 전체로 볼 때 농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인데 영국(1.7%), 벨기에(2.2%), 룩셈부르크(2.9%), 스웨덴(3.1%) 등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그리스(17.7%), 포르투갈(13.7%), 아일랜드(10.9%) 등은 높은 편이다. EU 농업생산액이 전체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인데 스웨덴(0.4%), 영국(0.5%), 핀란드(0.6%) 등 낮은 국가와 그리스(5.8%), 스페인(3.0%) 등 비교적 높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EU의 농업생산은 공동농업정책추진, 가맹국확대, 기술변화에 의한 단위당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EU 농산물이 세계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맥 16.6%, 설탕 25.2%, 쇠고기 6.9%, 돼지고기 1.4%, 가금육 8.0%, 분유 41.8%, 치즈 7.3%, 버터 12.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U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공급증가가 수요확대를 상회하고 있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곡물과 낙농제품의 과잉현상이 심한 편이다.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7.0%이며 수입은 7.7%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9.2%), 러시아(4.6%), 일본(4.2%), 스위스(3.6%) 등이며 최근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음료를 비롯하여 곡물, 과채류, 육류 등의 비중이 크며,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8.5%)이 으뜸으로 높고 그 외 브라질(5.8%), 아르헨티나(3.0%) 등이며 주로 과채류, 목재, 동물사료, 수산물 및 커피 등이 수입되고 있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며 역내 무역증가율이 역외 무역증가율보다 높다. 1998년도의 역외 농산물 무역적자는 34억 ECU이다.

<표 1-3-5> EU 농업의 주요 지표(1998)

국 가 (15개국)	농수산업 종 사 자 (천명)	농업총 생산액 (백만ECU)	식 량 자급률 ^{b)} (%)	농 산 물 무역수지 (백만ECU)	농산물 비중(%)		
					수 출	수입	가계비 ^{c)}
벨 기 에	86	6,247	50	1,562	10.9	10.7	16.3
덴 마 크	99	6,199	119	4,273	20.0	10.7	19.7
독 일	988	32,043	120	△14,423	5.3	9.5	13.9
그 리 스	704	8,834	-	△964	27.8	13.9	21.3
스 페 인	1,041	26,642	99	2,672	14.7	9.8	18.6
프 랑 스	993	46,187	-	11,352	12.5	8.8	17.9
아 일 랜 드	149	4,430	98	4,141	12.4	7.9	30.5
이 태 리	1,293	35,694	-	△6,861	6.8	11.2	18.1
룩셈부르크	5	183	-	1,562	10.9	10.7	18.2
네덜란드	246	16,283	26	16,703	19.8	11.8	14.1
오스트리아	235	3,553	99	△1,412	5.1	6.9	16.3
포르투갈	654	3,935	-	△2,605	6.2	11.7	27.0
핀 랜 드	155	2,147	124	△885	3.1	7.1	19.1
스 웨 덴	121	3,252	127	△2,262	2.3	6.6	18.4
영 국	463	17,838	123	△11,087	6.3	9.3	19.9
전 체	7,083	213,467	-	△3,384	7.0	7.7	17.4

주 : 1)은 1997년 자료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 1999

(2) 농업정책동향

EU 농업정책의 근간은 역내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역내 농산물 우대, 공동재정부담 등을 원칙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CAP : Common Agricultural Policy)으로 지난 1967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이 제도하의 농산물 고가격 지지가 결국 생산과잉으로 연결되어 농업재정지출을 급증시켜 EU 재정을 압박함에 따라 1992년 그간의 생산장려적인 가격지지 정책에서 지지가 격 인하, 직접지불제도 도입 등을 골간으로 하는 소득지지 정책으로 획기적인 개혁을 하였으며 그후 1999년 3월 유럽이사회에서 합의된 「Agenda 2000」에서 1992년 개혁을 보다 심화·발전시킨 CAP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CAP개혁은 세계무역환경의 자유화 추세, EU가입국의 확대,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및 동물의 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 등의 여건하에서 EU농산물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며 아울러 환경 및 자연자원보호와 조화되는 영농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CAP 개혁의 주요내용은 곡물분야에 대한 지지가격을 2000/2001년부터 2개년에 걸쳐 15% 감축하고, 소득 손실보상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인상 지급하며, 직접지불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의무 휴경비율을 기존 17.5%에서 2006/2007 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쇠고기 분야는 광우병파동 등에 따른 공급통제로 재고가 낮아지고 있으나 2005년까지 재고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지지가격을 2000년 7월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20% 감축하고 장려금을 인상 지급하며 조방화를 위한 가축사양밀도는 ha당 2.0 가축단위로 계속 제한키로 하였다.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2005/2006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15% 감축하고 그에 따른 낙농보상금을 2005년부터 지급하되 젖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우유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현행 쿼타제도는 2007/2008까지 연장하는 등 생산쿼터 제도를 급격히 폐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차원에서 CAP보조금

지급시 일정한 환경기준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농가가 이를 위반할 시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조기이농, 농업환경, 임업, 조건불리지역 등과 관련한 농촌개발정책, CAP수행을 위한 재정문제 등도 「Agenda 2000」의 공동농업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2000년 EU의 농업정책은 상기 「Agenda 2000」의 공동농업정책(CAP) 원칙 하에 추진되었으며 향후 식품의 안전성 확보,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업의 장려, 과잉생산 억제, 농촌지역발전 등에 주안점을 두고 CAP를 보완·발전시키는 형태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백철우)

2. 양자간 농업통상협력

2001년도 양자간 농업통상 및 협력활동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결과 이행 및 2000년부터 논의되는 WTO 농산물협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농축산물 관세인하 및 동식물검역 완화 등 각국이 제기하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논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설명하여 상대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WTO협정 및 우리나라 농산물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에 따라 성실히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은 짧은 기간안에 정부의 수입관리를 철폐하는 등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이루었으며, UR협상을 비롯한 다자 및 양자무대에서 약속한 사항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협상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여 현안해결을 원만하게 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다수국이 제기하는 합리적 요구사항은 WTO협정 및 국제관례 등에 따라 국내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농업정책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가. 미국

우리나라는 2001년에 미국으로부터 옥수수·대두·밀 등 곡물류,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 축산물, 오렌지·건포도·아몬드·양파·주류·과일 및 채소쥬스 등 과채류 및 가공품 등 거의 모든 농산물에 걸쳐 약 23억달러 어치를 수입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이고 미국입자에서도 한국은 캐나다·일본·멕시코에 이어 제4위 수출국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은 인삼, 연초, 면류, 일부 과실류 등이 2001년에 약 1.5억달러가 수출되어 미국은 일본, 홍콩에 이어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다자 및 양자간의 관세인하 약속의 이행과 동식물검역 및 저세율 시장접근물량(In-quota)의 수입관리문제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쌀 등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수입산이 국내산에 비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및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정책건의서를 통해 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 및 국내판매관리, 쇠고기 구분판매 및 보조금지급, 국내산 소비촉진운동, 유전자변형농산물(GMOs) 표시제 시행, 밀·사료용 옥수수·팝콘 등 WTO 이행계획에 따른 농산물 관세인하 약속이행, 양벚·사과 등에 대한 시장접근제한, 동식물검역조치를 통한 통관지연, 꿀·분유·보리·감자·팝콘 등의 고관세 문제, 동물약품 수입검사 및 지적재산권보호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측에 대해 한국산 감귤의 미국내 5개주(캘리포니아·플로리다·루이지애나·아리조나·텍사스)에서의 반입금지 해제, 참외·오이·호박·수박 등 박과작물류에 대한 수입허용, 단감 및 파프리카 대한 수입허용절차의 조속한 진행, 삼계탕 위생기준 완화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 6월 한·미 식물검역전문가회의 및 2002년 8월 한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산 감귤의 미국내 5개주 반입허용과 기타 농작물에 대한 수입허용절차 진행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한-미간의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미경제협의회, 한미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및 한-미식품검역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데 2002년도에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여러 차례의 정례점검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한미식품 검역전문가회의는 2002년 6월 하와이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런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농무참사관의 외교활동과 주한 미국농무참사관 등과의 공식·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서기관 이상재)

나. 일 본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산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며,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 통상분야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FAO, OECD,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 10. 8일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 선언」을 발표하면서 농업분야에 관한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농업관련 고위급 협의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양국간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농업관련 각종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원만한 공조유지와 정보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정상간 합의의 후속조치로 한·일 농림당국은 농업각료회의를 매년 교환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3. 9일에는 서울에서 제3차 한·일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WTO차기 농산물협상에서의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고 새로운 농업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2년 6월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식량 정상회의”에서 양국 농림부장관은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의 농업분야의 상호협력 및 우호협력관계를 확대 심화시키기로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교환 개최하고 농업기술 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2001. 11월 서울에서 제34차 회의를 갖고 바이오테크놀러지의 연구현황과 과제 등에 대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논농사의 지속성과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등 시험연구협력사업과 24개분야 37명의 전문가 교류, 종자 및 기술정보자료교환 등을 추진기로 합의하였다.

(통상협력과 농업서기관 이상재)

다. 중 국

중국은 1992. 8월 한·중 수교이후에 우리나라와의 농산물교역이 급격히 증가되어왔으며 우리나라에 2번째로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현안협회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무역실무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1998. 11. 11~15일간 김대중대통령은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양국간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21세기의 한·중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고, 농림분야 협력사업으로서 량팡시범 농장건설, 산림보호·조림사업, 병충해 방제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측은 우리와의 전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에 관심이 매우 크다. 중국측은 2001년도에도 조정관세폐지 및 세율인하, 수입 입찰제도개선, 중국산 과일수입문제, 마늘교역합의 이행등 경제·통상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측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양국 관련분야의 전문가간 의견교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상호간에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간의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간 한·중 농수산물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1. 12월 서울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ASEAN, APEC, WTO, FAO 등

각종 국제 기구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농림분야에서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선복)

라. 캐나다

캐나다산 농산물은 2001년 2억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제분용밀·유채유·보리·알팔파·쇠고기·돼지고기·치이즈·감자제품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라면·감귤·배·비스켓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01년 약 0.2억달러에 그쳐 양국간 농산물교역은 그리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시장 편중의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개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유사제품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측은 사료용 완두콩과 유채정제유에 등에 대한 실행세율을 낮춰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캐나다내에 만성소모성질병(CWD)의 발생으로 우리측이 취한 잠정 수입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여 캐나다산 사슴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한국산 배의 검역절차 간소화를 요구하여 지난 한개 식물검역전문가회의시(2001. 10.11)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또한 삼계탕의 수입을 허용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캐나다 검역전문가가 방한하여 우리나라 위생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한-캐나다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캐 특별동반자관계회의(SPWG)를 통해 해소해 나가는데 1999년 5월 제9차 회의가 토론토에서 개최되어 의견해소에 기여했으며, 제10차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제11차회의는 2002년11월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정부는 공식회의 이외에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서기관 이상재)

마.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농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를 중요시하는 등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은 편이다. 양측의 농업관련 통상현안은 주로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며, 농업통상에 관련된 협의는 그간 매년 양측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온 한·EU 각료회의 및 고위급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2001.4.1 한·EU 기본협력협정의 발효로 한·EU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회의에서 농업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키로 하였으며 기존의 고위급협의회는 폐지하였다. 특히 공동위원회 산하에는 농업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신속한 후속조치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물검역과 관련하여 금년초 유럽지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구제역의 여파로 EU산 우제품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는 구제역의 높은 전염성을 고려할 때 국내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하고 구제역 비발생국을 중심으로 당해 국가의 방역실태등 구제역 발생여건을 검토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구제역 발생국에 대하여는 국제수역사무소(OIE)로부터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 수입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광우병과 관련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EU산 쇠고기에 대하여도 광우병 비발생국에 대한 세부여건 조사를 거쳐 역시 수입을 재개해 나가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스페인산 오렌지 수입요청건에 대하여는 양국 검역당국간 최종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속히 수입절차를 완료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우리측 요구사항으로서 대 EU 분재 수출건은 EU측의 조사단이 방한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관련절차가 진행중이며, 삼계탕의 경우 우리나라 작업장의 위생상태 개선과 관련한 EU측의 재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백철우)

바. 중남미국가

중남미지역 국가들 대부분은 국내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중해과실파리 등이 분포하거나 구제역 등이 발병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으로 우리나라와 농산물교역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은 동식물검역문제가 해소되는 경우 농산물교역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멕시코는 감귤 등 과일류,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및 감귤류, 에쿠아도르는 망고, 브라질은 가금육·쇠고기 및 오렌지, 콜롬비아는 과일류, 페루는 열대과일 등의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브라질은 오렌지쥬스·커피·설탕, 에쿠아도르는 바나나·커피·코코아 등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동식물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한국의 검역전문가 파견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기 위한 활동을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통상현안은 주로 양국간에 구성된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2차 한-브라질경제공동위는 1998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제3차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98년 11월 제4차회의에 이어 제5차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2000년 5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고, 제2차 한-페루경제공동위원회가 1999년 12월 리마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차 회의는 2002. 9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0년 4월에는 제1차 한-콜롬비아 및 에쿠아도르경제공동위원회가 양국 수도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한편,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 등의 육류 및 열대과일 등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동식물 검역현안은 WTO/SPS규정과 IPPC, OIE 등 국제기준이 설정한 범위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 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다른 농산물의 경우에는 UR협상에서 양허한 범위내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대응해 오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서기관 이상재)

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1998년 11월부터 한국과 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11월 5일 “대의경제조정위원회”에서 한·칠레 FTA를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FTA 추진과정에서 농수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하고 협상과정에서 예외인정을 최대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후 한·칠레 FTA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급 정보교환회의(한-칠레 FTA추진 고위급작업반 준비회의)를 1999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두 차례 개최하여 양국 무역 및 경제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1차 협상은 1999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칠레측이 마련한 각 분야별 협정초안(Text)을 중심으로 한-칠레 FTA 체결방향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였고 기준세율은 2000년 1월1일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를 적용키로 하였다.

제2차 협상은 2000년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동 회의에서는 양국의 관세양허안을 상호 교환하고 FTA 협정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공산품의 관세양허안만을 전달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에 대해서는 5월에 개최될 제3차 협상전에 칠레측에 전달키로 하였다. 아울러 시장접근분야 협정문안은 농산물 관세양허안과 병행하여 3차협상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식물검역분야에서 우리측은 원칙적으로 WTO/SPS규정 범위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칠레측은 FTA임을 감안하여 WTO/SPS보다 교역이 더 촉진(WTO plus)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원산지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제3국산 농산물의 우회 수입 가능성이 최대한 방지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제2차협상결과에 따라 칠레측에 제시할 우리측의 농산물 관세양허안을 다음 기준에 따라 마련하고, 그 개요에 대해 2000년 4월 20일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회를 거친 후 제3차협상개최 일주일전에 칠레측에 전달하였다. 농산물의 범위는 WTO 농업협정 제2조상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산물 관세양허안 작성기준은, 장기적으로 MFN세율과 FTA세율간의 현저한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MFN세율이 높은 경우는 “WTO 농산물협상 이후 논의”로 하였다. 관세철폐유형은 일단 현행 실행관세율(FTA 기준 세율)을 기준으로 「발효시 철폐·5년내 철폐·10년내 철폐·15년내 철폐」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유형별 품목선정은 품목별로 「교역가능성·수입필요성·WTO 양허세율 수준」 등의 특성을 고려하였고, 2000년 7월에 발효되는 EU/Mexico FTA의 농산물분야 양허내용을 기초로 칠레가 제시한 농산물 및 공산품분야의 양허안도 함께 고려하였다.

제3차협상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2000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칠레측은 우리측 양허안의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미제시(WTO 협상이후 논의)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측도 칠레의 공산품 양허안에 우리 관심품목이 예외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양국 모두 상대국 양허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양국은 상호 관심품목 리스트를 교환하여 검토기로 하였다.

칠레측은 자국 관심농산물 리스트를 칠레 HS(SACH 8단위) 기준으로 269개(우리 HS 10단위 기준으로 469개)를 5월말 우리측에 전달해 왔으며, 이어 칠레측은 2000년 6월 15일 우리측 관심품목을 포함한 양허수정안을 우리측에 제시하였는데 동 양허안은 「협정발효시 관세철폐품목 40%, 5년내 철폐품목 27%, 10년내 철폐품목 32%, 특별취급품목 1%」로 이루어져 있었다. 칠레측 관세구조가 단순하고 세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측 양허안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우리측은 3차협상 이전에 제시한 양허안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제3차협상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2000년 7월 25일부터 28일로 예정된 제

4차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농산물 관세양허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2000년 7월 13일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 내용은, 관세율을 기준으로 당초 15년내 관세철폐품목을 품목별 관세수준과 영향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0년동안 50% 감축하는 특혜관세를 부여하거나 10년내 관세철폐품목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과일류에 대하여는 계절관세를 도입하였으며, WTO협상 이후 논의로 분류한 품목중 일부는 특혜관세 또는 10년내 관세철폐품목으로, 필요시 이중관세품목에 대한 관세할당제(TRQ) 도입 등으로 조정되었다.

2000년 7월이후 연기된 제4차협상이 2000년 12월 12일부터 1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포도 등 일부 과실류에 대해서는 계절(특혜)관세, 옥수수, 보리 등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TRQ),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WTO 농산물협상 이후 논의라는 양허안을 제시하였으나 칠레측은 관세철폐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양측은 상호관심품목을 중심으로 검토키로 하였다. 이외에 시장접근, SPS(동식물 검역), 원산지, 세이프가드 등 FTA분야별 협정문(Text)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양측은 12월 하순 상호관심품목을 제시하였고 과실류·축산물 등 칠레측 관심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관세할당제도의 조정안을 마련하여, 2001년 2월 22일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동 대표들은 농산물 양허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1년 3월초순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제5차 협상에 대비하여 양측의 관세양허안이 교환되었으나 우리는 칠레의 양허안을 납득할 수 없어 실무협의단을 파견하여 상호입장에 대해 협의(3.7~8일)하였으며, 칠레측은 자국의 공산품 양허개선안을 우리측에 다시 제시키로 하였으나 그후 5월에는 적절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FTA협상을 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상교섭본부장은 2001년 6월 1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칠레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지금까지의 한·칠레 FTA협상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협상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동 회담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은 앞으로의 상품양허안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 위하여 고위급협상을 갖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정병규)

아. 기타국가

(1)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아세안등 동남아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농업국가이며 미작위주의 농업경영을 위주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농업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나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이면서 우리나라와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년 무역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동·식물검역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열대과일, 채소류 농산물수입허용, 동식물검역협정체결요청, 오리고기등 축산물 수입확대요구등을 통해 자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할 것을 양자회의 및 농림부 방문등 개별면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양국정상과 정상회담을 비롯한 무역공동위, 농업장관면담, 경제공동위, 통상장관회담등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동회의를 통하여 품목별관세율은 UR협상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향후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계획임을 상대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또한 동·식물 검역현안에 대하여는 WTO/SPS규정 및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국제식물보호협약), OIE등 관련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입허용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협력채널로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한·태국, 한·베트남, 한·튀니지, 한·리비아, 한·모로코, 한·이란, 한·남아공, 한·우즈베키스탄, 한·카자흐스탄, 한·말레이시아, 한·미얀마, 한·방글라데시등과 정례적으로 경제공동위 및 무역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및 통상장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농업교류확대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백철우)

제 3 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1. WTO 활동

가. WTO 활동일반

WTO는 UR협상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1994년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UR협상결과인 마라케쉬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잠정적인 협정구조라는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품이외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도 관할하는 광범위한 세계무역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출범하였다. WTO는 회원국간의 협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국제규범을 정립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며, 규범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제도·관행 등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세계교역을 보다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WTO의 전신인 GATT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95년 WTO출범과 함께 원회원국이 되었다. WTO는 국제교역 분야를 규율하기 위해 각료회의를 정점으로 하여 일반이사회, 무역환경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와 무역정책검토기구, 분쟁해결기구와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 교역이사회, 복수국간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교역이사회 산하에 농업문제를 다루는 농업위원회와 위생및식품위생조치위원회를 비롯하여 9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농산물교역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일반적인 규범은 각료회의나 일반이사회에서 결정되고 그 이행방안이나 세부기준·이행지침 등은 농업위원회에서 회원국간 협의와 협상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WTO 농업위원회는 UR협상 결과에 따라 각 회원국의 농산물수입관리제도 개선·관세인하 등 약속이행, 시장접근물량 이행실적, 특별긴급관세 발동실적, 보조금 감축 등의 이행상황 점검 등을 수행해 왔다. 농업분야의 경우 서비스 등의 분야와 더불어 UR 협상결과에 따라 2000년부터 추가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바, 1996년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1997년부터는 농업협상을 위한 협상쟁점 발굴 등 사전논의도 농업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나. 농업협상 관련 활동

UR협상 결과에 따라 농업분야는 서비스분야(Built-in Agenda)와 더불어 2000년부터 추가 자유화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농업협정문 제20조)되어 있었으며, 농업위원회에서는 1997년 6월부터 “분석 및 정보교환(AIE)” 작업을 통해 농산물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위한 사전적 준비차원의 논의를 1999년말까지 행해졌다. 1999년말 개최된 제3차각료회의(시애틀)에서는 농업과 서비스 외에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는 뉴라운드협상 출범을 시도하였으나 협상의 제에 대한 수출국과 수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 등으로 뉴라운드의 출범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농업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은 당초 예정대로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다.

농업협상은 제1단계로 2000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협상의 목표와 달성 방법에 대하여 각 국이 제출한 협상제안서의 소개와 예비 논의를 해왔고, 그 이후 2002년 3월까지 제2단계로 주요 협상쟁점별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협상쟁점으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 관세, 감축대상보조, 수출보조, 수출신용, 국영무역, 수출제한,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허용보조, 생산제한직접지불, 특별긴급관세(SSG), 지리적 표시, 환경, 특혜적 무역협정, 소비자정보와 표시, 식량원조, 분야별 접근 등 23개 의제가 다루어졌다. 또한 2001년 11.9~13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등 기설정 의제와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출범하였다. WTO 농업위원회에서 추진된 농업협상에서는 농산물 관세인하 방법·감축 수준, 보조금 감축, 허용보조 범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종합제안서를 제출하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농업협정 20조에 입각하여 점진적이고 신축적으로 농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적극 대응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EU·일본·노르웨이 등 NTC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국제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수입국입장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농림부장관이 카타르각료회의 직전에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과 하빈슨 일반이사회 의장을 방문하여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1998년 4월부터 WTO협상대책단을 운영하여 협상동향을 소상히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WTO농업협상대책반장 김종철)

2. OECD 활동

가. OECD 농업분야 활동 개요

우리 나라는 1996년 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로 OECD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회의에 참여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중기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WTO 차기협상관련 농업무역쟁점들에 대한 연구·분석, 농산물 시장 및 유통기능에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활동으로 첫째, 1987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둘째, 회원국 농업정책 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 연례농정검토(Monitoring and Evaluation)를 실시하고 회원국간의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중기농업전망은 AGLINK라는 고유의 모형을 사용하여 향후 5년간(2003년부터는 10년 단위 전망으로 수정)의 세계 및 주요 농산물 생산·소비·무역·가격 등에 대한 예측을 하는 작업으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농업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세계농업정책이나 농산물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과거 UR협상시 주요쟁점이 되었던 농업보조금 삭감문제, 시장 지향적 농업정책의 추진 등도 OECD에서 먼저 논의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나. 최근 활동

2001년도 이후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지지정책의 효율성 분석, 식품안전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2001년 한해 동안의 회원국의 농정개혁을 평가한 농정평가보고서를 2002년 상반기에 공개하였다.

첫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하여, 2000년의 1단계 개념분석작업을 바탕으로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2001년 7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6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당시 워크숍에서는 생산의 결합성, 시장실패의 발생여부, 시장실패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 정책형성 및 거래비용의 문제점 등과 관련하여 각국이 진행했던 실증분석의 결과가 요약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관련 학계 및 생산자 단체의 참여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원적 기능에 관한 우리나라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한 country paper를 발표하는 등 토론에 적극 기여하였다. 사무국에서는 실증분석의 추가작업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및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에 대한 분석작업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정책제안 작업과 관련하여 정책조합(policy mix)의 제시, 지역별 접근 및 여타 분야의 정책활용방안(territorial and sectoral approach)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농업지지정책의 효율성 분석작업에서는 사무국은 시장가격지지, 부족 불지불제도, 경지면적기준 직접지불 등 여러 유형의 정책의 농가소득이전 효율성(transfer efficiency)을 측정한 결과 정부지지의 약 20%만이 농가소득으로 이전되며, 정책중 경지면적기준 직접지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정부정책의 거래비용 불포함, 소규모 국가의 가정의 부적절성, 소득지지만이 정부정책의 목적은 아니라는 점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였고, 우리나라는 가정치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민감도 분석을 제안하였다.

셋째, 2001년 1003차 OECD 이사회에서는 향후 2년간 식품안전 작업계획을 승인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였다. 사무국은 비회원국 현대생명공학의 경제적·정책적 측면에 대한 분석 작업, 사회-경제적 관심과 공공협의의 작업, 식품안전 규제 순응 방안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에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보다 높은 GM기술을 가진 국가와 개도국은 현대생명공학기술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경제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식품안전 규제 순응 방안에 대한 작업과 관련하여, 2002년 하반기에 보고할 목적으로 WHO와 공동으로 식인성질병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유럽 지역의 식품안전규제조치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행하여 2003년 농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02년 공개한 농정평가보고서에서는 회원국 전체에 대해 1980년 중반 이래 시장지향성 증가, 지지 및 보호수준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가간·상품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 시장가격지지와 생산기준지불로부터 왜곡이 덜한 정책수단으로의 전환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에 있어 이들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농업정책개혁에 있어 다소의 진전이 있긴 했으나 그 속도가 더디고 불안정하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2001년 한해 동안 시장지향성에 있어서 거의 진전이 없다는 점, 지지수준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는 점, 생산 및 무역왜곡이 가장 큰 형태의 정책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일부 품목에서 보호수준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과 같은 주요 민감품목의 국내가격은 국제시장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결과 한국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총농업지지가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조감소, 생산 및 무역왜곡적이지 않은 형태의 보조로 전환, 시장지향성 촉진 등을 권고 안으로 제시하였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시혜)

3. FAO 등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4,500여명의 직원과 183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 UN 최대의 전문기구로서 각국의 농업, 수산업, 임업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각 회원국과 UN기구에 분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림수산분야의 UN본부라 할 수 있다.

FAO는 총회, 지역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와 정부간 그룹회의 등을 개최하며 FAO에서 논의된 사항이 기초가 되어 각종 농림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이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FAO에 납부하는 기여금은 2001년 559만\$, 2002년 605만\$로 정해져 회원국중 10위(2002년)로 주요 기여국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01년 제31차 총회까지 총 27회에 걸쳐 대표단을 파견해 왔으며, 1966년에는 서울에서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하고, 3년 임기의 이사국에 6회 진출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여 왔다. 특히 2000년에는 최초로 FAO 재정위원회에 진출(2000-2001)하여 FAO 예산과 사업을 심의하고 재정상황을 평가하는 등 주요정책과 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2001년에는 제31차 총회(11월, 로마)를 비롯하여 제120차(6월), 제121차(10월), 제122차(11월) 이사회 참석과 제16차 농업위원회(3월), 제27차 식량안보위원회(5월), 그리고 제96차(5월) 및 제97차(9월) 재정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가하여 세계 및 아·태지역 식량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 농업 및 농촌개발 방안, 세계식량정상회의(WFS, 1996.11) 행동계획 진전상황, 생명공학기술 개발이용, FAO 사업 및 재정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2001년에는 FAO본부에 「FAO 한국센터(Korean Conference Service Center)」를 설치(11월)하여, 농업관련 국제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FAO 내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한국센터에는 우리나라의 농업 및 전통건축물 사진과 북, 장구, 도자기 등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식물을 전시하고 최신 영상홍보 및 컴퓨터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우리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를 통해 세계속의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제24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2월), 제57차 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 총회(4월), 제48차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집행위원회(1월)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업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 전파와 기술협력 등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협력과 농업서기관 김응분)

4.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은 1995년 수해에 따른 긴급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사회주의 경제의 비생산성과 북한당국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매년 100~200만톤 정도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FAO/WFP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0년에는 총수요량 497만톤중 187만톤, 2001년에는 총수요량 496만톤중 168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엔인도지원국(OCHA)의 발표에 의하면 2001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합동호소(Appeal) 목표액은 3억3,899만\$이며, 지원실적은 2001년 10월말 기준으로 2억2,694만\$이었다. 국제기구 대북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WFP를 통한 긴급식량지원은 목표의 70%를 달성했으나 기타 국제기구의 지원실적은 이보다 낮은 목표액의 59% 수준이었다.

<표 1-3-6>

국제기구별 지원실적 및 목표

(단위 : 만\$)

기구	제1차 (’95.9 ~’96.6)	제2차 (’96.7 ~’97.3)	제3차 (’97.4 ~’97.12)	제4차 (’98)	1999	2000	2001		2002 목표	주요 지원내용
							목표	실적*		
WFP	592	2,652	13,434	20,922	17,790	10,096	31,592	21,977	21,673	긴급식량지원
FAO	-	229	166	90	-	-	-	(-)	-	농작물생산, 시설복구
UNDP	136	228	249	0	0	0	-	0	176	농경지, 도로복구
UNICEF	134	349	1,728	570	616	223	1,050	317	1,037	아동영양 개선
WHO	22	6.5	160	117	190	135	835	136	724	의료시설 복구
OCHA	-	5.7	5.6	30	84	68	130	49	96	행정 및 모니터
FAO/UNDP	-	-	102	244	309	304	4,005	144	1,635	이모작, 감자생산
UNFPA	-	-	-	-	-	0	75	10	100	가족계획
NGO 등	43	-	-	-	0	0	711	418 (-)	685	학교급식, 감자생산
계 (목표대비%)	927 (46)	3,470 (80)	15,846 (84)	21,973 (57)	18,989 (53)	10,827 (55)	38,399	22,694 (59)	26,126	

주 : 1) 1998년부터 OCHA(<http://www.reliefweb.int>)에서 유엔기구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발표

2) WFP(세계식량계획), FAO(세계 식량농업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WHO(세계보건기구), OCHA(유엔인도지원국), NGO(민간지원기구), UNFPA(유엔인구기금)

*10월말 현재의 실적임

(국제협력과 농업서기관 김응분)

5. APEC관련 활동

가. 개 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의 경제유대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1989년 호주 캔버라 회의에서 태동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하였고, 각종 APEC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분야별 조기자유화, 식량작업반, 생명공학, AFS(Apec Food System)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초 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6개국의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담당한 1991년에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3개국이, 1993년에는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아, 1994년에는 칠레가 1998년에는 러시아, 페루, 베트남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은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각료회의, 각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회의(SOM)와 그 산하에 무역·투자위원회(CTI), 농업기술실무작업단(ATCWG) 등 4개위원회 및 10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주요 활동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에서는 “1993.12.15일까지 UR협상타결 최대노력”을 결의하였고, 선진·개도국의 중장기 무역자유화 목표(2010/2020)를 정한 1994년 보고르 선언에 이어 우리나라가 확고하게 제기한 농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신축성 원칙(Flexibility)이 반영된 1995년 오사카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 행동지침(OAA)을 통해 APEC의 양대 축인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TILF : 14개 분야)와 경제·기술협력(Eco-tech : 13개 분야)의 세부분야별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였고 “인구증가와 소득성장이 식량, 에너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과제로 채택되어 우리나라는 식량작업반에서 2년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여 식량수입국의 입장을 확보하였다.

1996년 필리핀 수빅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 행동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인 마닐라 행동계획(MAPA)이 국가별 개별행동계획(IAP), 공동행동계획(CAP), 경제기술협력 공동계획으로 집대성·채택되고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발굴을 검토토록 제시되었다.

1997년 벤쿠버 정상회의에서는 15개 분야별 조기자유화 대상을 정하고 임산물, 수산물 등 9개 우선분야(주로 관세분야)를 98년중에 논의하여 1999년부터 이행할 구상이었으나 1998년 11월 각료회의시까지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장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후속 추진분야에 속한 농산물 등 6개분야는 1999년중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1999년 6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시 후속 추진분야에 포함된 농산물의 경우는 “농산물은 BIA에 의거 차기 WTO 협상에서 논의한다”는 기존입장을 한·일의 긴밀한 공조로 관철시켜 농산물은 APEC에서 어떠한 사전 조건 없이 차기 WTO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1999년 9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각료/정상회의에서는 생명공학의 농업 생산에 대한 유용성을 인식하는 한편 ATCEG의 지금까지 연구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2000년 6월 통상장관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1998년 민간이 제안하여 1999년 8월 고위급회의에서 확정된 APEC Food System을 승인 APEC의 장기과제로서 식량분야의 3개 협력방안(농촌하부구조개발, 식품교역촉진, 진보기술확산)을 균형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0년초 브루나이에서 열린 1차 고위급회의에서 뉴질랜드는 1999년 정상 및 각료 보고서의 지시에 따라 AFS 3개분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Tasking matrix 와 Reporting mechanism을 제안하였고, 6월 호주 다윈에서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는 ATCEG의 보고서가 승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들은 GMO의 투명하고 과학적 접근에 기초한 활용을 강조하였으나, 우리는 일본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GMO의 식품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사항을 의장 보고서에 관철하였다.

2000년 11월 브루나이 각료/정상회의에서는 APEC의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되어 “충분히 광범위하고 균형된 의제의 뉴라운드가 2001년 중에 출범되어야 한다”는 APEC 회원국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2001년, APEC 논의는 주로 WTO 뉴라운드 기여방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주의 실행관세 모라토리움 및 미국의 상하이차터 제안 등 시장 접근분야에서 무역자유화 진전 노력이 있었으나, 회원국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였으며, 미국이 신경제하의 APEC활성화를 위하여 상하이 차터를 수정 제안한 “상하이합의”(Shanghai-Accord)가 2001. 10 각료정상회의에서 채택 되었으며, 미국의 테러전쟁과 관련하여 “반테러선언”도 채택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조기자유화 논의가 WTO협상으로 넘어감에 따라 생명공학에 대한 고위급정책대화 설치, APEC Food System이행촉진을 위한 오사카행동지침(OAA) 개정, 투명성원칙 등의 확보 등이 주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선복)

6. 농업 · 환경 · 무역 연계 논의동향

“지구정상회의”라고도 불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어,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의 일반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의제21”이 채택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구환경논의가 시작 되었으며, 이때부터 지속가능개발이라는 큰 목표아래에서 각 분야별로 환경과 연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농업의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의 개념이 확산 되면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정책 도입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걸친 논의가 여러 국제기구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가. OECD 농업 및 환경회의

OECD에서는 경제·환경정책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지속가능한 개발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OECD가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주창하면서 농업과 환경간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1993. 9월부터 농업위·환경정책위원회 공동작업반 회의(JWP, Joint Working Party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 분야에 관한 논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사항은 농업정책 개혁과 환경과의 관계, 농업무역자유화와 환경, 그리고 13개 분야별 농업환경지표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정책개혁이란 그 동안 OECD국가에서 채택해 온 농업정책이 가격, 생산 및 무역에 왜곡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농업정책이 생산연계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대신 직접지불제등과 같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친환경 농업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가하여, 환경농업분야에 있어서 OECD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논의동향을 파악하여 농업·환경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2월, 제13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부의장국으로 선임되었는 바, 이로써 향후 진행될 OECD 논의를 통하여 그간 각종 다자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주장해 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논 농업의 환경 긍정적 기능 등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과 우리 입장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각국의 농업환경정책의 평가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 OECD의 농업환경지표 개발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국토이용지표(land conservation indicator)는 주로 논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수분 흡착기능, 홍수방지, 토양침식방지 및 산사태방지 등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강력히 주도하여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이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온난화 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저감기술 및 정책현황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지속가능농업을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한편, 1995년 출범한 WTO에서는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설치하여 무역과 환경에 관한 10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농업부문과 관련된 주요 의제는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으로써, 무역 왜곡조치(농업보조금, 고관세 등) 제거가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또한 2002년 3월부터 도하선언에 따라 무역환경위원회에서 환경협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WTO 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감축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농산물수출국들(케언즈 그룹)은 농업보조금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환경편익을 증대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EU, 일본,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농업보조금은 다양한 환경효과를 지니며, 또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환경과 연계된 농업보조금 논의가 차기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는 별도로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하고자 하는 각종 국제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스로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을 지구촌차원에서 감축하도록 약속한 기후변화변화협약 및 교토

의정서,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사전통보승인(PIC)협약,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을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스톡홀름협약, 멸종이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히, 2000.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 총회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생명 공학제품의 국가간 이동 및 자연방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생태계에의 위해 방지를 주요목적으로 하여, 이른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를 위한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여 이를 최종 채택하였다.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 safety)”로 명명된 동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사용 용도에 따라 환경방출용 및 기타 LMOs, 식용·사료용·가공용(LMO-FFPs), 밀폐사용 LMO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국가간 이동시 차별화된 교역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동 의정서의 채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임을 감안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수입국의 새로운 환경에 들어 올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수입국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통보승인제도(AIA, Advance Informed Agreement)를 반영토록 하여 수입국의 주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의 세계적인 시장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개발정책을 병행하여 21세기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 및 개발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균형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2002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3차 정부간 위원회에서는 163개국이 참가하여 의무준수체제, 책임과 배상, LMO 고유표기제도 등 의정서 이행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하였다.

2001.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세계 186개국이 참가하여 협약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운영체제를 확정하기 위한 4년간 협상의 결과로서 마라케시합의(The Marrakesh Accords)를 채택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산림경영을 통한 CO₂ 흡수기능 대폭인정, 배출권 거래제도 등 간접적인 감축수단(일명 교토메카니즘) 허용, 선진국이 의정서상의 감축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적용 등이 있다. 마라케시 합의로 운영체제가 확정됨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비준이 가능한 의정서가 되었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최병국)

7. WTO/SPS협정이행 관련 논의동향

가. WTO/SPS위원회

WTO/SPS위원회는 1995년 WTO출범과 함께 『WTO/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WTO/SPS협정)』에 의거 설치되어 매년 3~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2001년에는 4차례의 회의(2001.3-20차회의, 2001.7-21차회의, 2001.9-특별회의, 2001.11-22차회의)를 개최하였다.

SPS협정의 기본취지가 SPS조치(수입식품 위생검사와 동·식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동·식물 검역조치)가 국제교역을 왜곡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협정 발효이후 SPS관련 농축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은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행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SPS위원회는 2001년도에 SPS협정 제4조 이행에 관한 SPS위원회 결정(G/SPS/19, 2001.10.26)을 채택하면서 협정이행을 위한 일반규율 마련을 위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SPS위원회는 개별국가의 위생 및 검역관련 무역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이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이주를 이루었으며, 이와 아울러 상기 SPS협정 제4조 이행에 관한 SPS위원회 결정, 개도국 특별대우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입장차가

커진 한해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의동향의 변화에 대응하여 위생 및 검역관련 무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이행문제 등 논의시 SPS 관련물품(농산물, 식품 등)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였다.

SPS협정 제4조 이행에 관한 SPS위원회 결정은 협정 제4조(동등성)의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나라 또는 동일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회원국이 사용하는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한다」는 규정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결정으로서 동 결정문의 채택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수출국 조치의 동등성 인정을 위하여는 수입국의 점검, 검사 등 적절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반영시키고, 제안서에서 사용된 「수입경력(historically imported)」이라는 용어는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동 개념이 명확히 되기 이전에는 신속절차를 활용하기 위한 수입국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 반영시켰다. 이러한 결정이 채택됨에 따라 동 결정을 이행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위생 및 검역과 관련한 무역현안에 대한 논의는 2000년에 비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SPS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BSE(광우병) 관련조치 등에 대한 수출국들의 이의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우리나라 조치의 정당성 및 후속조치계획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으며, 우리의 관심사가 제기 되는 경우에는 관련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BSE 관련조치에 대해 루마니아는 동유럽 10개국을 대표하여 우리나라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임과 긴급통보 형식으로 통보하여 관련국의 의견개진 기회를 주지 않았음을 들어 이를 즉각 해제하

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우리측은 OIE 관련규정을 언급하고, BSE 관련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 BSE 발생건수의 증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잠정 조치임을 설명하면서 후속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자의적인 조치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대응하였다.

미국도 BSE와 관련, 우리나라가 요구한 유럽 30개국산 반추가축 산물 “비사용증명서” 제출의무화 제도에 대한 간소화를 요구하여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나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비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뉴질랜드의 도축용 소 위생조건 간소화에 대하여는 도축용 소라 하더라도 질병의 우려가 감소되지 않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우리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특히 미국의 Starlink사의 GMO옥수수 검출사례에 대하여 양국 간 신뢰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국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우리측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였으며, 미국측의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또한 일본의 식물검역 건수제한 조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일측의 조치가 명백한 WTO/SPS협정에 위반하는 조치로서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일본측은 이에 대해 동 조치가 새롭게 도입된 것은 아니고, 1일 검사조치는 단순 기준치로서 고정된 것이 아님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연장 및 검역인력 보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측의 채소류 수출 피해우려에 대하여는 적절히 고려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내고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실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위생 및 검역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내용이 국제교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WTO/SPS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WTO사무국에 통보하여 각 회원국에 회람토록 조치하였다.

나. 동·축산물 및 식물 검역·검사관련 국제기구 동향

WTO/SPS협정 제3조(국제기준과의 조화)는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 위생조치를 가능한 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에서 정한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SPS협정상의 의무에 대해 동 기구의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 제정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표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동 기구의 활동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국제기준과 식품품목에 관한 국제규격을 설정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01년 총회에서 김치에 대한 국제규격안에 대해 이를 채택키로 결정하여 김치 Codex규격화 작업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정부는 각종 Codex 분과위원회에 관련전문가를 파견하여 대응케 함으로써 사전예방원칙에 기초한 위험관리 필요성과 생산방법에 기초한 표기 필요성 등 GMO 식품과 관련된 우리 입장을 적극 제시하여 반영시키는 한편, 정부내 기설치(1998.4)된 Codex 대책협의회를 적극 가동하여 회의참석자 및 관련업무 담당자들간에 회의전 및 회의후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Codex 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물위생관련 국제기준 설정을 담당하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는 2001.4월 제3차 식물위생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회원국간의 협의 및 검토과정을 거친 국제기준(안)중 “식물위생용어집의 개정”, “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식물위생증명서에 관한 지침”, “위반사항 및 비상 조치 통보에 관한 지침”, “식물위생용어집 부속서 1. 규제병해충에 대한 공적 방제 개념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지침” 등 5개의 국제기준을 새로이 채택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향후 개발할 국제기준(안)중 “식물병해충의 환경 위해에 관한 위험분석”, “규제비검역 병해충에 관한 병해충위험분석”, “경제적

중요성의 정의”, “식물위생조치의 효과”, “낮은 수준의 병해충 분포(Low pest prevalence)”, “방사선 조사(irradiation)” 등 6개의 국제기준을 우선적으로 개발키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본 회의 및 작업단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고, 향후 제정할 국제기준의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우리측은 “식물병해충의 환경위해에 관한 병해충위험분석”, “규제비검역 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식물위생조치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의하여 동 안건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기준개발 과정에 있어 IPPC 사무국이 정보제공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전종민)

제2편 2001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여 백

제 1 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제 1 절 2001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확보내용

1.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

2001년도 예산은 IMF로 인한 부채상환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융자를 강화하고, 농업관련조직의 2단계개혁의 추진을 뒷받침하며, 매년 반복되는 재해예방과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농업기술개발 및 농업·농촌정보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농어촌분야는 중기재정계획상(1999~2002) 교육·국방 등과 함께 평균재정 증가율 이하인 “효율성 제고 및 구조조정분야”로 분류되었고, 세출 수요에 비하여 세입여건이 어려워 긴급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에도 2001년도 농림부문 총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 5.3% 증가한 8조8,10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은 농업용수개발·배수개선·수리시설개보수 및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등 빈발하는 재해대비와 우량농지의 조기확보 및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전년보다 2.7% 증가된 2조1,908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농기계의 대체수요증가, 중대형 농기계 전환 추세, 개인보관창고 신규지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9.8% 증가된 2,623억원을 책정하였다.

생산·농산물유통개선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 등 하드웨어(시설)부문의 신규투자를 지양하고 완공위주로 지원하되, 유통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협동조합유통활성화 자금 등 소프트웨어(운영) 중심의 투융자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전년보다 20.6%감액된 1조 834억원이 책정

되었다.

농어가부채경감대책(1999. 12. 15.)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정책자금 상환연기, 상호금융저리대체 및 경영개선자금 조성 등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이차보전 예산도 9,319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업인력육성사업에는 농업인후계자 3천명 육성 등을 위해 2,855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농업인의 자율·책임경영 의식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예산 1,485억원을 책정하였다.

한편, 주곡인 쌀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구축과 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2,105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사과·배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46억을 책정하였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민연태)

<표 2-1-1> 2001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예산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0예산 (A)	2001예산 (B)	증△감 (B-A)	%
기 능 별	○생 산 기 반 조 성	21,340	21,908	568	2.7
	○농 업 기 계 화	2,390	2,623	233	9.8
	○생 산 및 유통 개선	13,646	10,834	△2,812	△20.6
	○기술개발 및 정보화	1,921	2,250	329	17.1
	○인 력 육 성	3,024	2,855	△169	△5.6
	○농촌소득원개발 등	2,631	2,743	112	4.3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26,971	32,649	5,678	21.1
	○양 곡 지 원	7,215	7,813	598	8.3
	○공 공 근 로 사 업	1,695	1,239	△456	△26.9
○기 본 적 경 비	2,816	3,186	370	13.1	
합 계		83,649	88,100	4,451	5.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포함)		(87,909)	(92,777)	(4,868)	(5.5)
재 원 별	○일 반 회 계	26,676	24,758	△1,918	△7.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3,631	59,349	5,718	10.7
	○재 정 용 자 특 별 회 계	2,020	1,327	△693	△34.3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225	1,315	90	7.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7	1,351	1,254	1,292.8
양 곡 관 리 특 별 회 계		12,167	11,586	△581	△4.8
농 특 세 관 리 특 별 회 계		517	2,162	1,645	318.2

<표 2-1-2>

2001년 농림예산 사업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0예산 (A)	2001예산 (B)	증△감 (B-A)	%
1. 생산 기반 조성	21,340	21,908	568	2.7
2. 농업 기계화	2,390	2,623	233	9.7
3. 생산 및 유통개선	13,646	10,834	△2,812	△20.6
4. 기술 개발 및 정보화	1,921	2,250	329	17.1
5. 인 력 육 성	3,024	2,855	△169	△5.6
6. 농 촌 소 득 원 개 발 등	2,631	2,743	112	4.3
○ 농 촌 소 득 원 개 발 등	1,304	1,581	277	21.2
○ 생 활 환 경 개 선	968	874	△94	△9.7
○ 기 타 사 업	359	288	△71	△19.8
7. 부 담 경 감 및 채 무 상 환	26,971	32,649	5,678	21.1
○ 부 담 경 감 및 소 득 보 전	9,383	11,071	1,688	18.0
○ 채 무 상 환	15,778	20,498	4,720	29.9
○ 비 료 계 정 적 자 보 전	1,810	1,080	△730	△40.3
8. 양 곡 지 원	7,215	7,813	598	8.3
○ 수 매 지 원	2,066	3,571	1,505	72.8
○ 양 곡 증 권 기 금	5,149	4,242	△907	△17.6
9. 공 공 근 로 사 업	1,695	1,239	△456	△26.9
10. 기 본 적 경 비	2,816	3,186	370	13.1
합 계	83,649	88,100	4,451	5.3

2. 15조원 농특세사업

15조원 농특세사업은 경기의 호전등에 따라 전년보다 39.8% 증액된 1조 5,829억원이 책정되었다. 2001년 농특세사업 예산중 대구획경지정리, 유통구조개선, 기술개발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예산은 전체 예산의 81.6%인 2조6,900억원 이었다.

농촌도로·하수도정비 및 주택개량, 폐수처리, 생활용수개발 등 농어촌생활여건개선 예산과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의료서비스, 공공도서관 건립, 직업훈련, 학자금융자, 오지 및 낙도교통지원 등 농어촌 생활여건개선·농업인 복지증진 예산은 6,55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8.4%를 점하였다.

<표 2-1-3> 15조원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2001)

(단위 : 억원)

구 분	15조계획	1994~1999	2000	2001	비 고
1. 생산기반정비	43,000	16,781	1,166	12,860	※2001까지 총투자 계획의 82.1%
2. 시설현대화	2,000	936	80	106	
3. 기술개발 및 정보화	5,040	2,859	436	520	
4. 정예인력육성	2,500	1,204	59	61	
5. 유통구조개선	14,550	6,784	2,913	4,236	
6. 생활환경·복지개선	66,225	33,617	9,299	11,234	
7. 어업구조개선	13,535	8,669	1,362	3,896	
8. 임업구조개선	3,150	2,945	514	544	
합 계	150,000	73,795	15,829	33,457	

주 : 합계금액에는 농특세회계 채무상환액 제외

제2절 농림사업 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1. 농업·농촌 투융자 현황

2001년 농업·농촌 투융자실적은 8조 9,690억원으로 계획 대비 121.2%를 달성하였으며, 그중 지방비, 자부담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 투융자 규모는 7조 200억원이다.

<표 2-1-4> 2001년도 농업·농촌 투융자 재원별 구성

(단위 : 억원)

	계획(A)	예산(B)	집행실적(C)	증△감		비 율	
				B-A	C-A	C/A	C/B
계	73,973	93,187	89,690	19,214	15,717	121.2	96.2
국 고	61,868	73,226	70,200	11,358	8,332	113.5	95.9
지방비	7,891	13,065	13,035	5,174	5,144	165.2	99.8
자부담	4,214	6,896	6,455	2,682	2,241	153.2	93.6

회계별로는 일반·농특·재특·국특회계 등 정부예산 5조 9,176억원(84.3%), 농지기금 5,138억원(7.3%), 축발기금 4,833억원(6.9%), 농안기금 920억원(1.3%), 임업진흥기금 133억원(0.2%)순이다.

국고 투융자 집행액 7조 200억원은 당초 계획 대비 113.5%로 초과집행되었는데, 이는 농업경영자금 등 이차보전과 기금사업 등의 계획 변경, 새로 도입된 논농업직접지불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지방비는 1조3,035억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165.2%, 예산 대비 99.8% 달성하였다. 지방비 집행액이 당초 계획을 초과한 것은 경지정리사업의 지원단가 초과분에 대한 지자체 부담 증가, 농어촌도로·하수도, 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자부담 증가는 농업인 자율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 상향조정에 기인한 것이다.

국고투융자를 기능·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5> 2001년도 국고투용자의 사업 분야별 내역

(단위 : 억원)

	계획(A)	예산(B)	집행실적(C)	증△감		비율	
				B-A	C-A	C/A	C/B
계	61,868	73,226	70,200	11,358	8,332	113.5	95.9
농림업공익적기능확충	21,223	25,170	25,013	3,947	3,790	117.9	99.4
건설한농림업경영체육성	11,244	10,956	10,226	△288	△1,018	90.9	93.3
농림업부가가치제고	2,629	2,883	2,691	254	62	102.4	93.3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11,414	11,288	9,778	△126	△1,636	85.7	86.6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9,047	7,654	7,583	△1,393	△1,464	83.8	99.1
농업인경영안정지원	6,311	15,275	14,909	8,964	8,598	236.2	97.6

계획보다 집행액이 많은 사업분야는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117.9%), 농림업부가가치제고(102.4%),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236.2%)이며, 계획보다 실제 투자액이 적은 분야는 건설한 농림업 경영체 육성(90.9%),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85.7%),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83.8%)분야 등이다.

건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분야의 집행실적은 1조 226억원으로 당초계획 1조 1,244억원보다 적게 집행되었는데, 이는 축산업의 여건악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분야 집행실적은 각각 1,636억원, 1,464억원이 적게 집행되었는데, 이는 협동조합합병지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계획변경으로 인한 감액집행과 정주권 개발 및 오폐수처리, 농촌활력화사업 등이 계획보다 적게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 서기관 배호열)

2. 농업 투융자 사업의 평가실시

가. 농림사업 자체평가

농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체평가를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2001년도에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주곡자급기반 확충과 유통활성화” 등 14개 평가과제를 선정, 동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자체평가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다.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고, 평가위원 18명 전원을 학계·연구기관 및 농업인 단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에 앞서 한차례 농촌 현 지점검을 실시하였고, 자체평가결과의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총 12회, 전체회의를 5회 각각 개최한 바 있다.

평가결과 총 30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그 개선방안을 2002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2002년 상반기에 전년도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 결과, 조치완료 10개, 정상추진 20개로 평가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자체평가제도가 농림사업의 업무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배종혁)

나.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평가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림사업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림사업 추진실태 평가는 199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1997~2001년까지는 실적가산금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림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 하므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정업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농림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2001년도에는 농림업무 평가 시행과정에서 일선 시군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장 수를 2000년 6,000여개에서 2001년에는 2,440여개로 축소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으며, 2000년 한해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12개 주요 예산사업의 추진상황, 지방비 투입실적, 주요 농정시책 추진노력 등의 사업추진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가산금 120억원을 차등지원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신성암)

다. 현장농정점검 지원단 운영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농림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여론 수렴 및 농정시책 홍보를 통해 현장농정, 참여농정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농림부 중견공무원들로 9개도 및 138개 시군별로 1~2명의 지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정기점검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일선 시군에서의 농림사업추진상황 등의 현장점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지방농정을 활성화하고 정책실무자들이 보다 현장감 있는 농정을 추진토록 지원하여 그 동안 제기되어온 농업투융자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고 가축 방역대책, 가물대책 추진 등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담당관이 지역농업인, 농업관련기관, 단체 관계자와 직접 만나 주요농정시책을 홍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농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농림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므로써 농정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신성암)

3. 농림사업의 투자 방식 개선

농림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보완하였다.

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개선

첫째, 「친환경농업육성법」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나 생산자단체 등은 우대하거나 사업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농기계구입자금은 고품질 쌀을 3,300㎡이상 재배할 경우, 콤팩트, 트랙터, 이앙기 구입시 소요액의 90%까지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의 대·소규모 지구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에 맞는 벼 재배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선정되도록 하였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쌀의 경우도 친환경인증품, 품질인증품 재배면적이 3,300㎡이상일 때에는 우선 지원되고, 농업종합자금은 사업자 선정시 친환경 농산물 표시농가는 가점이 부여되도록 하였다.

둘째, 고품질 쌀을 생산한 농가나 법인 등은 우선 지원되거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고품질 벼 생산농가나 법인 등과 계약하여 수매한 우수 RPC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토양객토사업도 고품질 쌀(벼)을 재배한 농가(농가 1,000㎡, 법인 10,000㎡)는 우선 지원되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 후계농업인 사업은 사업자 선정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하였다.

셋째, 쌀 품평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나 법인, 고품질 쌀 대책 평가시 우수한 지자체는 사업 및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 고려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즉, 농지매매나 농지임대차사업은 농림부장관,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인 단체 등이 주최하는 우수 쌀 품평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쌀 전업농은 우선 지원되며, 고품질 쌀 대책평가시 우수한 지자체도 경지정리, 배수개선, 밭기반정비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고품질 쌀 생산 대책의 평가 순위에 따라 지역특화사업비가 차등 지원되도록 하였다.

나. 소득안정망 구축사업 보완

소득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업의 보완 등 개선을 추진하였다.

논농업직불제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였다.

- 진흥지역 : ('01) 25 → ('02) 50만원/ha
- 비진흥지역 : ('01) 20 → ('02) 40만원/ha
- 사과, 배에서 단감, 감귤, 포도, 복숭아까지 확대
- 보험료 단가 : ('01) 농가별 보험료의 30% → ('02) 50%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그린투어리즘 및 농촌전통 테마마을조성 등 휴식공간 확대지원으로 농외소득 증대시책을 뒷받침하였다.

다. 사업집행관리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보강

사업완료시 실적과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고, 지도감독 강화 등 사업추진체계를 보완하였다.

- 축산분뇨 : 대출기관이 사업자에게 대출한 자금을 시공업체에도 통보하여 사업자가 타 용도로 사용치 못하게 함
- 농업컨설팅 : 계약금은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잔금은 계약기간종료 이후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급시기의 조정이 가능토록 함
- 받기반정비 : 대단위 농업개발 등 타사업 추진여부를 확인하여 중복투자 방지
- 농촌가공산업육성 : 신규 참여시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 의무화
- 농업종합자금 : 인삼식재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전환하고 농기업경영 자금과 축산전업경영자금을 통합 운영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강신복)

제3절 농림행정쇄신·조직개편 및 법령제도개선

1. 농림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1998~1999년간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규제 전면 정비계획에 따라 1998년도에 701건 중 527건(75.2%)를 정비하고 1999년도에 잔존규제를 발굴하여 38건을 정비하였으며, 2000~2001년도에는 행정의 안정성을 감안, 기존규제의 전면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농업인과 직접 관련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농지의 취득 및 농지전용변경허가 절차와 소규모 농지거래제한규모 완화 등 14건을 개선하였다.

그 주요 정비내용은 농업관련 민원업무절차 개선을 통하여 농업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4건을 완화하고, 각종 민원업무처리과정에서 교통·통신의 발달, 행정전산망구축 등으로 행정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13건, 민원첨부서류 26건 44종을 감축하였다.

축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개선을 통하여 주문용 사료첨가제를 축산농가, 협업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폐지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매년 실시하는 축산물취급영업자의 위생교육을 신규영업자만 실시토록 개선하였다.

기타 실제 농업인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농업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절차, 농지거래제한규모, 생물학적 방제용 동물수입제도 등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행정규칙이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생활을 규제하는 고시, 예규, 훈령 등 하위규정에 대한 규제 81건을 발굴·심사하여 28건을 정비하고, 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규제라고 느끼는 각종 경쟁제한적 규정 87건을 발굴·심사하여 47건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 고충을 상시 접수하여 이를 검토 처리하고 농림부의 규제현황 및 개선실적을 게재할 수 있도록 2000. 6월부터 농림부홈페이지에 「규제개선코너」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유창상)

2. 농정조직의 개편

가. 농림부

(1) 한국마사회 농림부로 이관

2001. 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부칙으로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하여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한 한국마사회의 소관이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변경되었다.<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 제6400호, 2001. 1.29)>

농림부장관의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림부직제 및 직제시행규칙개정령 부칙으로 한국마사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관련규정을 각각 개정함으로써 한국마사회 업무소관이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으로 이관되었다.<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제17118호, 2001. 1.29),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381호, 2001. 2. 1)>

한국마사회는 1990.12.27 정부조직법을 개정(법률 제4268호)되어 문화관광부(당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92.1.1시행)된 후 9년여만에 다시 농림부로 환원되었다.

(2) 인천국제공항개항에 따른 동·식물검역기능 강화

2001. 3.29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검역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에 대한 조직을 개편하였다.<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170호, 2001. 3.27),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382호, 2001, 3.29)>

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에 위치하고 있던 인천지원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검역인력 11인을 증원하였으며, 인천지원 관할구역중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이천시·용인시 등을 서울지원으로 변경하고, 인천지원 소속의 용인출장소(종전의 이천출장소를 명칭변경)와 청주출장소를 서울지원 소속으로 조정하였다.

나) 국립식물검역소

서울지소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여 인천공항지소로 하고, 검역인력 18인을 증원하였으며, 지소의 명칭도 인천지소·부산지소·군산지소를 각각 중부지소·영남지소·호남지소로 변경하였다.

또한, 서울지소의 관할이던 서울특별시·강원도 등을 중부지소 관할로 변경하고 종전의 서울지소 소속의 출장소(서울세관·서울국제우체국·동해)를 모두 중부지소로 이관하였다. 한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가 동북아무역 중심항으로 부상하여 검역물량이 계속 증가됨에 따른 업무수행의 원활을 위해 여수출장소를 광양시로 이전하여 광양출장소로 변경하였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 검정기능과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등

2001.12.31 유전자변형농산물 검정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검정과를 신설하고 동물검역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질병방역부와 역학조사과 및 정밀진단과를 각각 신설하고 식물검역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립식물검역소의 직제를 개편하였다.<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7473호, 2001.12.31), 농림부의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09호, 2001.12.31)>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전자변형농산물 검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검정과를 신설하고 동연구소의 시험과 및 연구과를 각각 조사시험과 및 안전성분석과로 변경하고 정원 3인(농업주사1, 농업연구관1, 농업연구사1, 기능직사무원 △3)의 직급을 조정하였다.

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방역기능강화를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질병방역부와 역학조사과 및 정밀진단과를 각각 신설하고, 서울 및 부산지원에 검역과·축산물위생과 및 정밀검사과를, 인천지원에 검역1과·검역2과 및 축산물위생과를 각각 신설하고 서울지원에 속초출장소를, 인천지원에 평택출장소를, 군산지

원에 광양출장소를 각각 신설하고 정원 20인(별정직 7급상당 1, 별정직 8급상당 1, 별정직 9급상당 4, 수의부이사관 또는 가축위생연구원 1, 수의서기관 또는 가축위생연구원 2, 수의사무관 2, 수의주사 3, 수의주사보 2, 가축위생연구원 3, 가축위생연구사 3, 기능10급 사무원 △2)을 증원하였다.

다) 국립식물검역소

식물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식물검역소의 병균조사과·해충조사과 및 소독관리과를 위험평가과·방제과 및 조사연구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지소·중부지소 및 영남지소에 검역1과·검역2과 및 조사과를 각각 신설하고 중부지소에 평택출장소와 속초출장소를 신설하고 정원 2인(서기관 1, 행정사무관 2, 식물검역주사보 2, 식물검역서기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1, 행정주사 △2, 기능10급 운전원 △1)을 증원하였다.

라) 국립종자관리소

국립종자관리소의 정보화 및 품종보호 시험·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및 직급(전산사무관 1,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1, 농업연구사 2, 기능10급 기계원 4, 행정서기 △1, 기능10급 사무원 △5, 기능10급 방호원△4)을 조정하였다.

마) 조직·인사 전담과 신설 등

농림부의 조직과 인사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조직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에 두는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하여 2002. 3.1 시행키로 하고

기획관리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중 중장기투융자계획수립 등의 업무와 농업정책국 소속 협동조합과장의 농업관련 보험업무를 농업정책국 소속 농업정책과장에게로 이관하는 등 과간의 업무도 조정하였다.

아울러, 농촌정비과에 그린투어리즘 등 녹색관광사업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토록하고 과의 명칭도 농촌진흥과로 변경하였다.

(조직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병은)

나. 농촌진흥청

(1) 조직개편 개요

농촌진흥청의 조직개편은 연구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한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책임운영기관을 선정·운영 등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2) 축산기술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7069호, 2000. 12. 30) 되어 축산기술연구소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7082호, 2000. 12. 30) 2001. 1. 1부터 동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였으며, 육종번식과를 유전공학과로, 시설환경과를 축산환경과로 개칭하고, 대전지소를 폐지하여 종축개량부소속으로 가금과를 신설하였다.

(농촌진흥청 행정법무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임대환)

3. 농림분야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정부는 변화된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나은 제도적 바탕을 제공하여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중 총 16개의 농림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였다.

(1) 수의사법중개정법률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동물전염병의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전염병의 예방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휴·폐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였다. (공포 : 01.12.31, 시행 : 02. 7. 1)

(2)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범위에 식용란을 추가하고, 타조 등과 같이 식용으로 이용되는 가축외의 일부동물이 위생적으로 도살·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살·처리되는 이들 동물과 그 고기에 대한 위생검사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하였으며,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여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공포 : '01.12.31, 시행 : '02. 7. 1)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낙후된 산촌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촌진흥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명을 “임업진흥촉진법”에서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산림복합 경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품질인증 대상을 목재제품에서 임산물로 확대하였다. (공포 : '01.12.31, 시행 : '02. 7. 1)

(4)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

한국마사회 업무에 관한 장관의 승인사항을 축소하여 한국마사회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한국마사회가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생긴 이익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비율을 현행 「40퍼센트 이상」에서 「30퍼센트」로 낮추고, 이익준비금은 현행 「1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로 변경하여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 사회복지로 지원되는 특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높였다. (공포 : '01.12.31, 시행 : '02. 4. 1)

(5)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등이 포함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포 : '01.12.31, 시행 : '02. 7. 1)

(6) 농지법중개정법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농지취득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현행의 절차 외에 시·구·읍·면장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받도록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보호구역안에는 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권 등 농림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였다. (공포 : '02. 1.14, 시행 : '02. 4. 1)

(7)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

농업기반공사가 토양보전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평가 및 오염토양의 개선사업을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에 추가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수리계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이양하였다. (공포 : '02. 1.14, 시행 : '02. 4.15)

(8)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고시·열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다. (공포 : '02. 1.14, 시행 : '02. 7.15)

(9)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 등의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을 하게 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업무와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지표시가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원산지표시조사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사무로 하고 있던 이들 업무를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조정하였다. (공포 : '02. 1.14, 시행 : '02. 7.15)

(10)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

정부관리양곡에 관한 회계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환 또는 대여한 정부관리양곡을 인도 또는 상환받지 못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였다. (공포 : '02. 1.14, 시행 : '02. 7.15)

(11)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종전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농업용 유류를 구매하여 농업인 등에게 판매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일괄구매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용 유류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등록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공포 : '02. 1.14, 시행 : '02. 4.15)

(12)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 및 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고, 정부위원,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동대책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공포 : '02. 1.26, 시행 : '02. 1.26)

(13)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

유해 곤충·미생물 등 병해충은 시험연구용 등으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병해충 위험분석을 거쳐 생물학적 방제용으로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촉진시키고,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 외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발생 뿐만 아니라 임산물에 대한 병해충 발생에 대하여도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식물검역질서를 감시·지도·계몽하는 명예식물검역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식물검역질서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포 : '02. 5.13, 시행 : '02.11.14)

(14)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축산단체는 축산물별로 하나의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축산물가공업자 등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되, 축산업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로 하되, 거출금의 금액은 대의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축산물소비홍보사업,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밖에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산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산단체에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위원회는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조달·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공포 : '02. 5.13, 시행 : '02.11.14)

(15) 축산법중개정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에 대하여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포 : '02. 5.13, 시행 : '02.11.14)

(16) 초지법중개정법률

초지를 비초식가축용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거나 동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대체 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포 : '02. 5.13, 시행 : '02. 8.14)

(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주원철)

제4절 농업관련기관 및 협동조합 개혁

1. 농업기반공사

가. 농업기반공사 출범과 지속적 개혁

2000. 1. 1 농업기반공사 출범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역점과제로 추진한 “농업관련 3기관 통합”이라는 하드웨어적 개혁을 완성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전담하는 공기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 일원화, 물관리의 과학화·현대화, 개발과 환경보전이 병행하는 친환경 생산기반 정비, 경영안정기반 조기 구축 및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 등 소프트웨어적인 2단계 개혁을 착수하였다.

서로 상이했던 조직문화를 지닌 직원들의 조직활성화 교육을 통하여 公社의 장기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직원간의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는 한편, 한마음·한마당 행사 등 상호이해와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경영진과 직원, 직원과 직원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고, 통합공사출법 당시 승계된 양개 노동조합의 통합을 이끌어 냄으로써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본사·도본부·지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초고속통신망 설치와 1인 1PC 보급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재무정보시스템 등 S/W를 보완·가동하였으며, 제 규정과 지침·요령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서로 달리 적용해 온 업무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인사·자산·회계·정보처리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집중 실시함으로써, 조직안정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公社 출범과 함께 자체적으로 「조직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사업·조직(인력)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 8개 도본부의 실장직(1급) 감축과 90개 지사의 부지사장(1·2급)직 전면 폐지 및 지사의 하부조직 통·폐합 등 조직 감축을 실시하는 한편, 통합전 기관별로 총 1,200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으나, 출범후 1,068명을 추가 감축하였으며,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 학자금 및 주택자금 제도개선, 연봉제 도입 및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등 과제를 100% 완료함으로써, 기획예산처로부터 “공기업 경영혁신 실천 최우수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역단위 물관리를 전국단위로 개편하기 위하여 公社관리 수리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밀조사를 실시하여 D/B화하고, 수계별 물관리구역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험발생 예상순위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수립하는 등 물관리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중앙(본사)과 90개 지사에 농업인들로 구성된 “운영대의원회”와, 농업인단체·경영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열린공기업 위원회” 및 “농업용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농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용·배수로 수초제거기, 농업용수 적정 배분을 위한 무동력 자동분수문, 자동 물꼬 및 자동 수질측정장치 등을 개발하여 현장위주의 물관리와 대농업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종합적인 “시설개보수 중장기계획”과 “물관리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자연재해에 대비한 전사적 재해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하고, 유관기관이나 농업인 등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한·수해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풍년농사 달성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시화호와 새만금호 등으로 표출된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적극 대처하여, 환경친화적 설계기준 확대, 신공법 개발 등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고, 주식의 자급을 통한 식량안보, 물부족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개발 필요성 등 논리 정립과 이해설득으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을 심어줌으로써 “새만금간척 사업 재개”라는 결과를 통하여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는 전국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본부·지사에 “폐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604공의 대형폐공을 신고받아 적정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인 지하수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 조직망을 이용하여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을 전국의 강과 하천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행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실질적인 친환경 공기업으로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의 고품질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편익이 증대될수 있도록 모든 사업지구에 “工事현장 실명제”를 실시하고, 사업현장 수혜주민을 “명예감독원”으로 위촉·운영하였으며, 각 현장직원의 기술역량 증대를 위하여 “품질관리 분임조”를 확대 운영하고 기술발전과 품질개선을 도모한 결과 2000년 전국 품질관리 경진대회에서 새만금현장 분임조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출범 첫해에 연간 860억원 수준의 경상적자가 예상되었으나, 부서별·사업별 목표이익 관리를 통한 수익확대와 건축예산 편성에 의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자산정밀실사를 통한 재산찾기 운동 전개, 통합으로 발생한 불용·유휴화된 자산의 조기매각, 미수채권 조기회수 추진 등 전사적인 경영개선노력을 경주하여 출범 첫해부터 흑자를 실현하는 예상외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나. 향후 개혁방향

농업기반공사가 “세계적 수준의 물관리·농업생산기반정비 전문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고효율·저비용의 공기업체제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수리시설물 현대화와 물관리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공사의 기술수준을 제고하여 민간 엔지니어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안정적 영농 급·배수업무와 시설물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농업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과,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공사의 핵심역량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결집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반공사의 개혁방향은 “세계적 수준의 농어촌개발·용수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는 장기비전에 함축되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체계 정립과 물관리의 과학화로 첨단 기술력을 배양하고, 핵심역량을 기본으로 한 사업 집중화·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노력이 필요하며,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고객과 환경보전에 최우선 가치를 둔 최상의 서비스 창출로 고객만족 경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풍년농사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연재해 대처능력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풍·수해에 대한 극복사례 등을 참고하여 재해대책체계를 보강하고, 이에 따른 유관기관이나 지역주민과의 협조체계도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수리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와 현대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고 전국적 농촌용수자원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수리시설물의 설치와 이용,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력관리를 통하여 21세기 식량위기와 물부족 시대에 대처할 정책기초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원화된 사업추진체계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개별사업 추진방식을 종합개발방식(Package)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발과 환경이 병존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서 조사·설계·시공 등 모든 사업과정에 친환경 개발기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용수의 수질보전과 농지의 오염·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을 확산하고, 수질오염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각종 생활폐수, 축산폐수 및 산업폐수가 농업용수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예방하여 농업·농촌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켜나가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공기업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관리업무의 정보화로 고효율·저비용의 공기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식경영 마스터플랜 수립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분산 관리되고 있는 D/B 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합관리방안, 정보인프라 구축과 개별단위의 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경영체계를 이끌어 갈 인력을 정예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고급인력을 육성하고,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첨단기술력 확보를 통하여 세계적 우위를 선점해 나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집중화·고도화 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업기반공사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경영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사, 도본부 및 지사의 기능분담과 불합리한 하부조직 정비, 추진중인 전사적 기업진단작업을 통한 합리적인 인력관리방안이 제시될 것이 요구되며, 본연의 임무와는 관련이 없는 자회사인 (주)농지개발은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발주 및工事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품질관리 결과가 시공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평가 및 피드백체계를 갖추고,

조사·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 사업공정 전반에 대한 실명제 실시로 책임공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고객지향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와 농업인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새로운 공기업을 확립하는 것이다.

(개발정책과 행정사무관 김태곤)

2.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 유통개선 및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998년에 새로이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우리나라의 IMF체제 조기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공공부문 등 4대 개혁과제에 부응하여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핵심사업 수행 기능을 강화하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유통공사는 1998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3차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해 종전의 4본부 15처실 1원 2사업소 10지사에서 1본부 5처실 1사업소 5지사를 폐지하였으며, 조직축소와 병행하여 인원도 1998년 3월 현재 948명의 정원에서 448명을 대폭 감축하여 5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조개혁 착수 전 유통공사는 매일유업(주), 한국물산(주), 한국냉장(주) 등 3개의 자회사와 노량진수산시장(주), 한국축산(주), 코리아후드서비스(주), 매일뉴질랜드치즈(주) 등 4개의 재투자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연차적으로 민영화 및 정리하여 2001년 한국냉장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민영화함으로써 7개 자회사 전부를 매각 완료하였다.

한편, 핵심기능 이외의 사업정비를 위해 중계동물류센터를 매각 전문사인 한국감정원에 매각위탁하여 2001년 2월에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전진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농업무역관은 6개국 9농업

무역관을 5개국 7농업무역관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민간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의 아웃소싱 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비축창고의 냉동·전기·하역운영·관리업무, 산지가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 사업타당성 심사업무, 서울농업무역센터운영관리 업무 등에 대한 아웃소싱을 완료하였다.

또한, 인력감축, 자회사 정리와 병행하여 장기근속휴가 및 특별휴가 등 유급휴가제도의 완전폐지, 대학생 학자금지원을 무상지원에서 융자로 전환,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명예퇴직금 지원제도 개선, 개인연금과 경조금의 예산지원제도 폐지 등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1급 및 2급의 연봉제 도입·운영, 사장 및 임원 경영계약제 도입 등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경영혁신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다.

아울러, 2001년 2월에 경영혁신전략팀(T/F팀) 구성을 통해 업무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개처를 이사직속의 팀제로 전환하였으며, 기존 3팀을 12개 팀으로 확대하고, 다면평정과 우수인재발굴평정제도를 도입하여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합경영정보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구조개혁과 경영혁신 추진을 통해 유통공사는 구조개혁 전인 1997년말 부가가치율이 19%이던 것이 2001년말 50%로 높아졌고, 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은 138%에서 45%로 크게 낮아지는 등 제반 경영지표가 대폭 호전되었으며,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부문 평가 결과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평가되었다.

(유통정책과 서기관 강학원)

3. 협동조합개혁

가.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 추진

정부는 중앙회 통합 및 제도개혁의 성과가 조기에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해 중앙회 통합직후인 2000.10.9일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하고, 2001년부터 2단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의 기본방향은, 중앙회는 사업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경량화·전문화하여 회원조합 및 조합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일선조합은 전문화·규모화를 통해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유통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의 경제사업장은 회원조합에 이관하거나 자회사화하고, 중복 금융점포 폐쇄,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매각, 잉여인력 구조조정, 조직 축소 등 중앙회의 슬림화와 함께 대표이사별 경영협약제, 인사권확립 등 대표이사별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통합 등 농·축산물 통합유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앙회를 일선조합과 조합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였다.

한편, 일선조합은 부실조합정리,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상임이사제 및 운영평가자문회의 확대 등 경영건전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2001.3.16일 농협중앙회 내에 학계, 농민단체, 협동조합관계자, 정부관계자 등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협동조합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나. 그 동안의 추진실적

■ 중앙회

2000.7.1일 통합이후 2001.12월말 현재까지 인력 899명 감축, 중복금융점포 64개소 통폐합, 양재동 사옥 등 고정자산 51건 2,823억원 매각, 조직축

소(집행간부 1, 8부) 및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경영성과에 따른 대표이사별 성과급제 도입 등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회장과 대표이사간, 대표이사와 집행간부간 경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산물공판장 13개소와 축산물공판장 4개소도 각각 중앙회내의 단일 분사화하고, 전국의 포장육 가공사업소 정비, 수도권 축산물판매장의 (주)농협축산유통 통합 등 중앙회 경제사업장도 정비하였다.

아울러, (주)농협유통, 부산경남유통 등 개별 자회사와 사내분사 형태로 운영중인 종합유통센터도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농협유통을 중심으로 통합물류·조직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6.30일 (주)부산경남유통과 (주)충북유통의 농협중앙회 지분을 (주)농협유통으로 양도하여 (주)농협유통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류 통합과 함께 단계적인 조직통합을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중앙회소속 유가공공장, 사료공장 등은 회원조합의 사업과 경합관계에 있게됨에 따라 경합관계를 배제하고자 하는 목표아래 회원조합이관 또는 단일 자회사화 등 정비를 추진중이다.

이러한 강도높은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통합 이후 신용사업 경영건전성 지표인 BIS비율도 2001년말에 10.26%로 통합전의 9.12%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2001년말 당기순이익도 3,80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통합 이후 신인도 증가로 예수금이 16조원이나 증가하여 2002.6말 현재 중앙회의 예수금은 77조원을 기록하였다.

■ 일선회원조합

2000.7.1일 통합이후 2001.12월말 현재까지 중복지사무소 161개소 폐쇄, 인력 3,159명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운영평가자문회의(275개조합), 사외이사제(51개조합), 상임이사제(56개조합)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0.11월 농림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공인회계사와 합동으로

제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209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사 결과 169개 조합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조합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부실액이 7,092억원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부실조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령 제정

조합부실예방 및 조기정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김영진 의원의 40인, 신경식 의원의 16인(찬성자 59인) 등 여·야의원 발의로 2001.6월에 각각 제 222회 임시국회에 제출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이 상임위 대체토론(6.27), 법안소위 공청회(7.19) 및 상임위 의결(8.24), 법제사법위원회 의결(8.28)을 거쳐 9.1일 제225회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에 이송되어 9.12일 공포되었다.

농협구조개선법 국회심사과정에서는 헌법상 보호되는 농업인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에 따른 위헌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으나, 7.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공술인으로 참석한 우방법무법인 김성식 변호사는 부실조합방치시 부실규모의 확대로 조합의 파산이 불가피하고, 그 경우 조합원 출자금 소각, 예금지급 정지, 조합기능 마비 등으로 농촌경제의 혼란과 조합원 예금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합부실예방 및 정리를 위한 농협구조개선법 제정은 공익적 입장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 헌법재판관 조승형 변호사도 조합의 자율성은 조합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예금고객 및 채권자보호를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는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에 관한 것이었다. 자산관리회사는 일선조합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계약이전, 합병 등의 방법으로 부실조합정리시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함으로써 조합부실 정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안심사과정에서 중앙회가 별도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신경식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도 별도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보다는 중앙회내에 자산관리부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과정에서 국회상임위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자산관리회사를 농협중앙회내에 설치할 경우 조합부실채권의 인수로 농협중앙회의 경영까지 크게 악화되는 문제가 있고, 일선조합 구조개선을 위해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져 이를 별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농협구조개선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동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12.15일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공포하고, 동법률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등 관련 고시·훈령을 2002.1.29일 제정하였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김성태)

< 농협구조개선법의 주요내용 >

- 농림부장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을 결정
 - 부실조합은 재산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
 - 부실우려조합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조합
- 적기시정조치를 제도화하여 조합부실의 사전예방 및 조기정리
 - 경영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해 경영상태별로 경영개선 권고, 요구 또는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실시
 -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구조조정, 조합임직원 문책, 증자,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임
 - * 금산법과는 달리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농민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해 행정처분
 - 행정처분에는 임원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사업의 정지, 계약이전, 설립인가 취소 등이 포함
 - * 행정처분시에도 청문 실시 등 소명기회를 주어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 장치 마련
- 현행 농협법상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개편하여 보호대상과 기능을 확대
 - 기금의 용도에 예금대지급 외에 부실조합정비를 위한 자금지원 등을 추가하여 부실조합정리를 촉진
 - 기금의 재원에 보험료, 정부출연금,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하여 재원을 확대
-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근거 마련
 - 조합부실채권은 소액이고, 농지 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처분이 어려움
 - 자산관리회사는 조합과 중앙회로부터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대시킨 후 정리

라. 농업금융개혁

농림부는 2000년 11월 「농업금융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개혁내용을 바탕으로 2001년 4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농업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농업금융 개혁의 각 분야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조합 상호금융개혁과 관련, 상호금융신규대출금리가 2000.12월 현재 10.72%이던 것을 2001.12월 8.66%로 $\Delta 2.06\%$ 로 인하하였다. 그동안 상호금융 금리인하를 위해 대출 약정기간 경과시 최고 1%까지 가산되는 기간가산금리제도 폐지, 대출금리가 12% 이상인 고금리 운용조합은 특별지도를 통하여 고금리조합 수를 대폭감축(2000.12월 : 454개조합 \rightarrow 2001.12월 : 8개조합)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조합이 자체적으로 농업용 저금리자금을 공급토록 하여 지난해 말 현재 31,208억원(평균금리8.4%)을 지원하였다.

한편, 회원조합의 선진대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적정보와 과거 채무상환형태 등 각종 신용정보를 종합하여 대출상담에서 실행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신용평점시스템(CSS)을 구축하고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대출연계를 통한 지도금융체제를 금년말까지 도입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다.

둘째, 정책금융 및 농신보제도개선부문에서는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여 농업인의 금리부담을 덜어주었다. 관광농원개발 등 16개사업의 금리를 8.0%에서 5.5%로, 농지 매입자금 등 2개사업은 4.5%에서 3%로, 미곡처리장운영자금은 5.0%에서 0.0%로 각각 인하하는 등 총 19개 사업의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는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등 37개 사업의 금리를 5.0%에서 4.0%로 추가로 인하하였다. 한편 지난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여력확충을 위하여 농신보법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농신보 운용배수

를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하였으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여 1 억원 초과 개인보증시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폐지하였다.

셋째,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중앙회 출자금증대, 이익잉여금 증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임 직원 우선출자를 통하여 546억원의 출자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기반구축을 신용사업부문의 인력양성, 생산성, 수익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IT(정보기술)투자강화, 국내·외 금융기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마.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분리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1999년 (구)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각 사업부문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중앙회 경제사업의 효율성 평가와 책임소재 파악이 어렵고, 신용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농협이 자율, 자주적인 협동조합 정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제기되었다.

최근 WTO체제 출범 및 IMF 구제금융이후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추진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였다.

그동안 신·경분리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한국개발연구원(1980년대), 농촌경제 연구원(1993), 한국금융연구원(1996)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업발전위원회 협동조합발전개혁단(1997), 범농업신21C농업개혁위원회(1998),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1998)에서도 신·경분리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이러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농협중앙회에서는 독립사업부제(1999)가 실시되고 사업전담대표이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농림부는 농협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경분리추진협의회를 지난 1999년 9월 구성하였다. 추진협의회는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농

협중앙회, 학계, 농업인단체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이후 신·경분리추진협의회는 기능강화를 위해 협의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현재 총 15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신·경분리추진협의회에서는 총 8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제2차 신·경분리추진협의회에서는 연구용역기관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을 선정하고, 그 이후 6차례의 신경분리추진협의회를 통해 연구용역 방향, 진행상황, 보고서 내용등을 보고 받고, 협의하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진협동조합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일본, 대만의 협동조합, 네덜란드 라보뱅크, 농업협동조합협의회(NCR),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 전국농업신용협동조합연합회(FNCA), 독일 지역협동조합은행(Vereinigte Volksbank), 덴마크 협동조합연합회(SDA) 등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신·경분리에 대한 농업인, 학계, 농업인단체, 협동조합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토론회(2001.12.27) 및 간담회(군산 : 2002.1.30, 상주 : 2002.2.1)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현행 농협체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체제 미흡, 전문성 부족, 조직의 비효율성 등이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의 분리가 필요하나, 현행 농협중앙회 조직을 당장에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에 제기되는 막대한 자금의 소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신·경분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현행 농협체제내에서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신용·경제사업의 분리효과를 거두고,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 등 여건이 성숙되면 2단계로 3개 법인(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으로 완전 분리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3단계로는 회원조합을 경제사업조합과 신용사업조합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

을 제시하고 있으나, 3단계의 회원조합 신·경분리는 금번 연구용역범위 밖으로 농협의 장기 비전 차원에서 기술한 것이다.

농림부는 농협법 규정에 따라 2002년 6월말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의 분리를 위해 농협중앙회,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1단계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고 2년이내에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서기관 조재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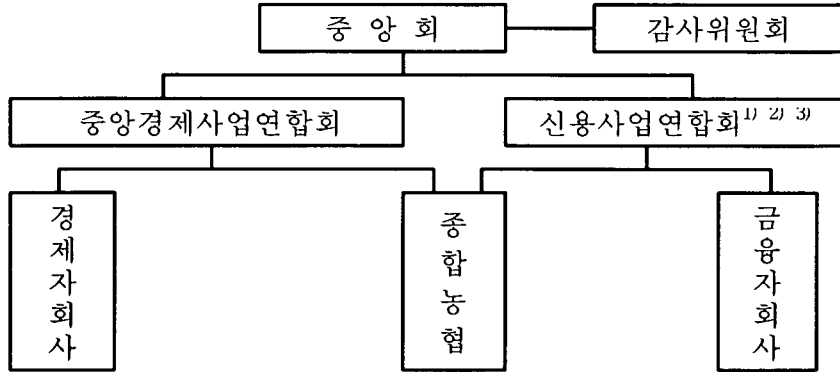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단계별 추진방안>

1단계 : 현 조직체제내에서의 경제·신용사업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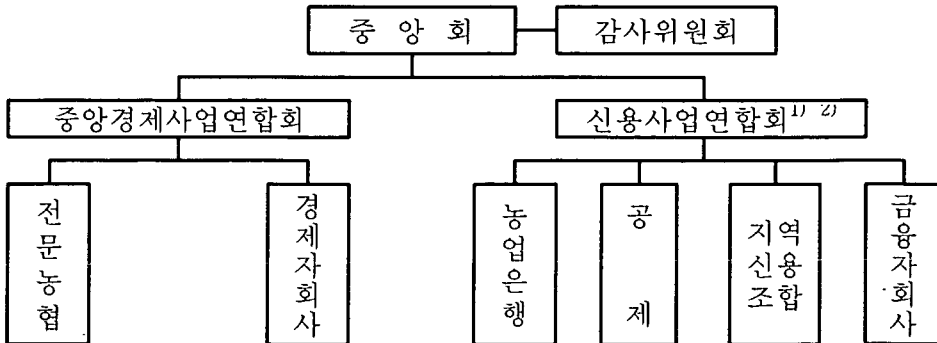
중 앙 회					
지도사업 본부	농업경제 사업본부	축산경제 사업본부	신용사업본부		
			중앙회 신용사업	상호금융 (특별회계)	공제 (특별회계)



2단계 : 경제·신용사업 연합회 설립



3단계 : 장기비전의 완성⁴)



- 주 : 1) 신용사업연합회와 상호금융과의 관계는 2단계에서는 신용사업계통조직으로서의 관계라고 한다면 3단계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와의 관계
 2) 2단계 및 3단계에서의 상호금융특별회계(중앙금고)는 신용사업연합회에서 관리
 3) 2단계에서의 공제특별회계는 신용연합회에서 관리
 4) 3단계는 어디까지나 연구용역 범위 밖으로 단지 농협의 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

4. 한국마사회

가.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과 경영진단 실시

한국마사회는 1992.1월 체육청소년부로 소관부처가 이관되었다가 9년만인 2001.1월에 농림부로 환원되었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계기로 마사회 운영방안에 대해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나타나고, 농업인들의 경우 마사회 경영 혁신을 통한 경마이익금의 농촌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마사회에 대해 조직·인력·업무내용 등 일반적인 경영진단과 함께 경마관련 세제 및 이익금 처분, 지방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적정 설치, 경주마 생산기반 확충, 타 경쟁산업 등장에 따른 경마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4월~6월까지 실시하였다.

또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국마사회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승인·인가 등 각종 규제완화, 조직기능의 재설계, 성과관리 체계 구축, 경마산업 경쟁력 확보, 국내산 경주마 생산기반 확충, 경마장·장외발매소·인터넷 경마의 적정성, 경마이익금 처분의 적정성, 경마상금의 운영개선, 경마관련 세제 개편 등 장·단기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 주요 경영개선 실적

한국마사회는 농림부 이관을 계기로 2001년도 모든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그 주요 경영개선 실적을 경마의 사회적 기여도 확대, 경영 혁신 및 이미지 쇄신, 공정경마 시행, 고객 제일주의 경마 지향, 경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마의 국제화 추진 등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마산업의 신장 및 사회적 역할 확대 등 이미지 개선

2001년도 경마사업은 이전장외의 규모확대와 시설의 고급화 및 전화투표 회선 증설 등 경마팬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등으로 경마의 대중화와 매출액의 대폭 증가로 큰 폭의 신장세를 기록 했다

- 2001년도 입장객 : 12,971천명('00년도 : 11,555)

- 2001년도 마권 및 입장권 매출액 : 60,187억원('00년 : 46,254)

매출액의 증가와 경영개선을 통한 이익금의 증가로 축산발전기금 출연, 농어촌사회복지분야 지원등 사회환원 규모가 1,254억원으로 전년대비 48.8% 증가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세납부금액도 전년대비 40.5%나 증가하여 국가 및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2001년도 제세납부금액 : 1조2,465억원(국세 2,669, 지방세 9,626)

또한, 경마공원의 무료개방, 장외발매소의 문화교실 운영, 무료 승마 강습 확대 등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비인기 종목인 유도·탁구·승마선수단 육성·강화를 통하여 국가 스포츠와 국민 생활체육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다.

(2) 경영혁신을 통한 자율책임경영 구현

마사회의 책임·자율경영 구현을 위하여 각종 정부의 승인사항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금 증액, 경영공시제도 등을 포함한 정관개정과 함께 기존 관리중심의 직제를 직무와 성과중심의 책임경영본부제 전환으로 권한을 대폭 하부이양 하는 등 인사관리체계의 혁신 및 연봉제·능력급제를 시행하여 직원의 성취동기를 부여 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해 새로운 제도도입 및 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추진과 자발적인 외부 회계감사 실시, 전자입찰 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켰으며, 마사회의 미션, 비전 및 추진전략, 기타 경영환경 분석 및 부서별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 집행기준 수립 및 운영·통제·분석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였다

(3) 공정경마 시행

경쟁성 상금비중의 확대, 출주마필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출주료 폐지, 착순별 차등지급하는 출주장려금 신설, 경주편성 운영기준 준수, 공정성 저해 방지와

인마사고 예방을 위한 발주후 진로변경 제한기준 제도 도입, 경주마 금지약물제도 운영기준 마련, 경주감시용 장비의 확충, 마필관계자의 의식교육 실시, 경마비위 예방·지도 교육 실시, 경마비위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제 시행, 보안 활동 강화 등 공정경마를 구현하였다

(4) 고객 제일주의 경마 지향

음악회 개최, 사은품 지급, 벚꽃축제, 야간경마축제, 경마문화제 등 계절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행사실시 등으로 볼거리와 놀거리 문화를 제공하였고, 고객의 다양한 의견수렴, 불편사항 해소 및 지원을 위하여 고객모니터 제도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경마팬의 의견수렴과 성향조사를 실시하여 경마시책에 반영하는 등 고객편의를 위한 경마시행을 실시하였다.

(5) 경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마의 선진화 추진

경마의 대중화를 위해 리빙TV를 통하여 경마실황 중계 실시, 전화를 통하여 경마팬이 직접입력하는 방식의 ARS마권발매시스템 도입 운영, 적중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복연승식 제도 도입근거 마련 등 경쟁 우위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부산경남권 경마장 건설 착공, 노후화된 수도권 장외발매소 이전 및 지방장외발매소 확산 등을 통하여 경마산업 인프라 확충 및 발전 기반 조성과 국내산마 생산 증장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질 좋은 외국산마 확보를 통한 경주질 제고와 우수 국내경마필 생산 등 국내경마를 선진화 시켰다.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주영)

제 5 절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구성 · 운영

1. 설치경과

2001년 11월 14일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출범함에 따라 관세 및 보조금의 추가 감축 등 시장개방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국내적으로도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불안과 교육·의료·복지여건의 미흡으로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농어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농업인, 학계·전문가들과 더불어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대부분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지만, WTO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226회 국회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 발의('01. 12. 19)되었고, 곧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동 법률안이 통과('01. 12. 27)되어, 국무회의 의결('02. 1. 22)을 거쳐 지난 1월 26일 공포·시행되었다.

2. 위원회 구성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이 위촉(2.7)되었고, 재정경제부·농림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농어업인단체 대표 9명, 소비자단체 대표 4명, 학계 전문가 및 언론인 9명이 위원으로 위촉(3.6)되었다.

또한 본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3.22)하여, 관계부처 공무원, 농어업인단체 대표, 전문가 등 14인으로 구성하였고, 분야별 과제 검토를 위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3.29)하고 있으며 제1분과위(22)는

농업경쟁력 제고, 유통효율화 및 수출촉진 분야, 제2분과위(14)는 직접지불제, 가격안정장치 등 소득안전망 확충 분야, 제3분과위(16)는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의료 등 복지증진 분야, 제4분과위(14)는 어업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분야로 각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3. 위원회 활동

3월 6일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수차례 분과위 및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6월 17일 열린 본위원회에서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가격 하락에 대응한 소득보전장치를 마련하며, 민간 유통활성화 및 시장안정을 위한 “쌀산업종합대책” 안건이 상정되어 2002년산부터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수확기 물량흡수를 위한 수탁판매 지원, 2002년중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추진, 2003년 양곡거래소 개설 등이 의결 되었으며, 두번째 안건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농지의 소유 및 거래에 관한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농지제도 개선”이 상정되어 농업진흥지역밖에서의 농지소유 상한 폐지,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소유(300평 미만) 허용 등이 의결되었다.

7월 24일 본위원회에서는 올해 수확기 시장안정과 수매에 대비한 창고 확보를 위한 “쌀 재고처리 특별대책”이 상정되어 추가로 쌀 400만석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1998~1999년 고미의 사료용 공급, 북한 식량지원의 계속 추진,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원조 등이 의결되었다.

9월18일 열린 4차 본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발전과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21C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액이 농특세 목적에 맞게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고, 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이나 국민연금기금에서 자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농어촌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실정에 맞추어 보험료 부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수확기 쌀가격 하락시 정부와 농업인이 각각 일정액을 각출하여 조수입 감소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상정 논의되었으나, 보전비율 등에 대해 위원들간의 입장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생산조정제의 경우도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도입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미합의되었다.

10월 22일 열린 5차 본위원회에서는 4차 회의때 미합의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하여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감소시 명목 조수입 하락분의 80%를 보전하고 기준년도('98~2000)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중 당해년도 경영면적에 한하여 지급하되 지급대상은 0.1ha이상 해당농지 경영농업인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액은 약정수매량을 제외한 경영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참여농가는 기준 조수입의 0.5% 수준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며, 쌀 재협상의 입지를 강화하고 공급과잉의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3만ha(100만석) 수준의 생산조정제를 2003년부터 일정기간 동안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앞으로 농어촌 교육 개선,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농어업·농어촌정책 방향 및 실천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업정책과 서기관 서해동)

< 추진경과 >

- 2001.11.20 국무회의시 대통령님께서 WTO 뉴라운드에 따른 새로운 농어업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농어업인·전문가·정부 등이 지혜를 모아 우리 농어업이 나아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으로 조속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
-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대부분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지만, WTO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특별법으로 제정
 -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동 법률안 의결('01.12.27)
 -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26일 공포 시행
-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02.2.7)
-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농림부 및 관계기관·단체의 직원으로 [사무국 설립준비단]을 구성·운영('02.2.20)
 - 농림부 파견 국장을 설립준비단장으로 하고 농림부 과장 및 사무관, 농진청·산림청 사무관, 농협·농업기반공사 직원 파견
-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위촉 위원을 내정('02.2.23)하고, 3월 6일 위촉
 - 당연직위원(6명) : 재경부·농림부·해수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 위촉 위원(21명) : 농어업인단체 대표 8명,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 4명,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언론인 9명
- 제1차 본위원회 개최('02. 3. 6)
 - 위원회 설치경과 보고, 농어업특위 운영계획과 운영규정 의결

2001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제 1 절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

1. 농가경영 안정대책 추진

가. 농업인 부채경감 특별대책 추진

(1) 수립배경

정부는 UR/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이제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난 1992년부터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 시설자동화, 현대화 등을 위한 농업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97년말 IMF경제위기는 이제 막 투자의 결실을 기대하고 있던 농업인들에게 경영비의 대폭 상승과 농산물가격하락 등으로 농업투자액의 원리금 상환마저 어려운 상황을 가져 왔다.

또한, 2000년 이후 국내 과일가격이 하락하고 가축질병(구제역)의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막혀 국내 돼지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중국산 마늘 수입 증가 등으로 마늘재배 농가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IMF이후 국내경기가 위축되어 농산물 수요가 감소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고도 IMF 경제위기이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기,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의 저리대체, 경영개선자금 지원, 연대 보증 해소 등 각종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었으나 태풍 등 잦은 재해와 경기위축, 구제역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회복되지 않아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상존하여,

지난 2000.12.20일 여·야 합의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2001.1.8 공포·시행하므로써 농업인들이 부채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5~7년 이내에 농가의 소득을 높여 부채상환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였다.

(2) 2001년도 농가부채경감대책 내용 및 추진경과

< 2001년 부채경감특별대책 주요내용 >

- ① 2001~2003년 중 상환 도래되는 중장기 정책자금 3조 6천억원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②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중 9.6조원을 연리 6.5%, 5년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
- ③ 2000년도에 1.8조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1조원을 연리 6.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
- ④ 주채무자의 파산, 사망, 도주 등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연대보증인에게 연리 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특별자금 5,000억원 지원
- ⑤ 주 채무자의 연체로 인해 연대보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연대보증인을 위하여 이 법의 시행으로 채무 연체를 해소할 경우 추가로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대체
- ⑥ 협동조합 자율로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용 자금 지원
- ⑦ 중장기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납부이자의 20%를 환급

2001년 시행된 농가부채대책은 「옥석」을 가려, 성실히 영농을 해왔으나,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을 중점 지원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따라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 정책자금 부당사용자, 부채상환 능력이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제외대상 예시

-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농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자
- 2,000cc이상 승용·승합용 소유자(단, Jeep형 디젤차량, 봉고형 승합차 제외)
- 예금·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을 총부채액의 80%이상 보유한 자

특히, 지원금액 1억원이상 고액부채 농업인에 대해서는 실제 자금 사용용도 등을 엄격히 실사하여 비농업용 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면, 연체자라도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과 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연쇄도산 고리를 단절하였다.

정상 채무상환 농업인인 경우는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농업인의 지원대상자 자격여부와 자금사용 용도를 확인한 후 지원규모를 심사하였고,

연체농업인의 경우는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농업인의 지원대상자 자격여부와 자금용도를 확인하여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협동조합이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채권을 정상화 한 후 부채대책자금을 지원하였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지침을 지속보완하였다.

상호금융대체지원시 1999.4/4분기중 상환한 금액의 잔액을 포함하였으며, 신청접수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0월말로 두차례 연장하였다. 또한 중앙회 자금 및 경제사업 채무에 대해 농협자체적으로 분할상환 조치하였고, 농업용 상호금융부채 전액(당초 70%)을 저리자금 대체지원하였다

대출실행기간이 2001.12.31까지였으나 농민단체, 대출취급기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업인에게 대출실행기간을 2002.8월말까지 4차례에 걸쳐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 농가부채대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부적격자 지원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자금회수, 대상자 지정취소 및 재심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시행

으로 자금이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하였다.

(가) 중장기 정책자금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중장기 정책자금이라 함은 농업인이 협동조합으로부터 통상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정책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단기 회전성 자금(영농자금)과,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주택개량자금 등), 그리고 지원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자금(농지구입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우선 지원대상 자금은 1998~2000년 기간중 상환연기된 중장기 정책자금과 2001~2003기간 중에 상환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3조 6,113억원(2001 : 13,857, 2002 : 11,261, 2003 : 10,995)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당초 상환해야 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을 협동조합 자금으로 신규대출 받아 상환하고, 신규대출 받은 자금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때 협동조합에서 신규대출된 자금의 이자와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간 차액은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2001년도 13,857억원 계획에 7,900억원이 상환연기되고, 5,843억원이 인센티브를 받아 정상 상환되었다. 당초 상환 도래액의 20%가 정상상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대부분 소액이고 정상상환 인센티브에 대한 호응이 높아, 도래액의 42%가 정상 상환되었다.

※ 2002년 중장기정책자금 상환도래금액중 9월말 현재 정상상환 비율은 73%, 상환연기 비율은 27%로 나타남

(나) 금리 11~12%대의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9.6조원을 5년간 연리 6.5%로 대체지원

상호금융자금이라 함은 통상 일선조합에서 11~12%대의 금리로 빌린 자금을 말한다.

당초 특별법 시행일(2001.1.8) 현재 상호금융 대출잔액의 70%이내에서 지원되었으나, 지침을 보완(2001.11)하여 전액(100%) 저리대체 지원하였다. 다만,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법시행일 현재 해당 농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12.31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12.31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법 시행일 현재 연체일 경우 이후 연체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경영회생이 가능할 경우 연체이자 감면·연체해소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기한내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상호금융저리대체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원할 경우 지원자금으로 기한내 이자를 우선 정리토록 하였다.

계획금액 9조6,300억원중 2002.7월말까지 8조1,068억원(계획대비 84%)이 대출실행되었다.

(다) 농업경영개선자금을 2000년 1.8조원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조원을 추가 지원

농업경영개선자금은 부도나 파산위기 등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이 자금은 준전업농 규모이상이거나 농업용 대출잔액이 5천만원이상인 농업경영체로 경영평가결과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었는데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타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한 기존 대출금 대체용, 신규 운영자금, 연체해소용, 대위변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리 6.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었다.

2000년도에 1.8조원이 기 지원되었고, 2001년 1조원 추가자금에 대해 2002.7월말까지 6,998원이 지원되었다.

(라) 연대보증 피해 농업인에게 특별자금 5,000억원을 지원

2000년 3조 5천억원 규모의 농업인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으로 대체하여 약 30만호의 농가를 연쇄도산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가 무자력, 파산, 사망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1998.1.1이후 주 채무자의 무자력·파산·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거나 주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신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연대보증인에 대해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리 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5,000억원 계획에 2002. 7월말까지 4,931억원(계획대비 98%)이 지원되었다.

(마) 연체자에 대한 연대보증 해소 지원

특별법 시행일 현재 채무를 연체하고 있으나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감면, 연체 해소자금 지원을 통해 채권을 정상화시킨 다음 연대보증을 선 농업인의 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으로 대체하여 연대보증을 해소시켰다.

(바) 정상채무상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채무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자금,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2001~2003년 상환도래하는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에게 상환액에 대한 납부이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었다

(예) 원금 1,000만원 상환시 납입이자액 50만원(이자율 5%) \times 20%=10만원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김오영)

나.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 실시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후변동의 차가 크고,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점차 대형화되어 농가의 경영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2001년에 처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추진 경과

1999년 9월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0%가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보험도입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2000년 3월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였다.

(3) 사업개요

2001년에는 피해통계 축적, 농가의 전업화 정도 등 비교적 보험도입여건이 양호한 사과·배를 대상으로 주산지 중심으로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보험에서 보상하는 대상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로써 이들 재해는 사과·배에서 발생하는 재해피해중에서 93%정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재해보험운영을 담당하며 거대재해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외 보험사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였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는 순보험료 30%와 운영비 50%를 지원하여 농가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여 보험가입상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였다.

(4) 보험가입 실적

2001년 5월 19일 가입신청을 마감한 결과 8,204 농가(사과 4,450, 배 3,754)가 가입하여,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정착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입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면적 23400ha중 4,114ha로 가입율은 17.6%로서 이는 일본의 도입초년도 인 13.8%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보험금 지급 실적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적었으나 동상해와 우박피해를 입은 411농가에게 1367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김원일)

다. 재해농가 지원강화

정부는 재해농가의 영농의욕고취 및 생계안정도모를 위하여 재해지원 기준단가 인상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업재해지원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1에는 전례없는 대설로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되어 2회에 걸쳐 농업재해지원 현실화를 추진하였다. 현행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의 보조지원 범위 확대 (1 → 2ha미만), 소규모 축사의 보조지원 범위 확대 (600 → 1,800㎡), 보조율 상향조정(20 → 35%), 채소

류 농약대 인상 (49,940 → 139,000원/ha), 시설채소 대파대 인상(1,421→2,800천 원/ha)등을 추진하였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농업재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농산물저장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창고)하였으며 철거비도 지원토록 하는 등 피해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도 지난해의 재해를 거울삼아 예고없는 기상재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특보 발령 등 전국적으로 기상재해가 우려될 경우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피해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구비 지원기준이 낮은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 농업피해 복구지원 현실화

	2000년	2001년	비 고
<input type="checkbox"/> 지원단가 현실화			
○ 과수·채소농약대 (일반작물기준)	49,940원/ha	139,000	증 89,060
○ 채소류 대파대			
·일반작물	1,421,000	1,575,000	증 154,000
·시설채소 엽채류	1,421,000	2,120,000	증 699,000
·시설채소 과채류	1,421,000	2,800,000	증 1,379,000
<input type="checkbox"/> 보조율 상향조정			
○ 농립시설복구비	○ 소규모 시설(1ha미만) : 국고15%, 지방비5, 용자60, 자담20	○ 2ha미만 : 국고25%, 지방비10, 용자55, 자담10)	○ 1 → 2ha (보조20→35%)
○ 축사복구비	○ 소규모시설(600㎡미만) : 국고15%, 지방비5, 용자60, 자담20	○ 800㎡미만 : 국고25%, 지방비10, 용자55, 자담10)	○ 600 → 1,800㎡ (보조20→35%)
○ 잠실 "	○ 소규모시설(330㎡미만) : 국고15%, 지방비5, 용자60, 자담20	○ 330㎡미만 : 국고25%, 지방비10, 용자55, 자담10)	○ 보조20→35%
<input type="checkbox"/> 용자조건개선			
○ 원예특작시설농경지	○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농산과 농업사무관 김후동)

2. 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쟁력 제고 추진

가. 쌀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추진

2001년도 전체양곡 수급을 보면 연간 국내 양곡의 총수요량 1,900만톤중 1,40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900만톤은 옥수수, 밀, 콩 중심의 사료용이고, 500만톤은 식용으로서 육류소비증가 등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한 사료용 곡물 수요(900만톤)가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599만톤중 88%인 529만톤은 쌀로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고 밀, 옥수수 등 기타 곡물은 수익성이 낮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주곡인 쌀의 경우, 2002 양곡년도중 공급량은 2000년도 보다 많은 5,515천톤이 생산되고 전년이월재고 및 MMA 수입쌀 증가로 2001년보다 518천톤이 늘어난 7,004천톤으로 예상되며, 수요는 1인당 연간 식용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5,105천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재고량은 FAO 권장수준(62일분, 842천톤)을 1,057천톤 초과한 1,899천톤 수준으로 재고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해만 흉작이 들더라도 수급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통일시대에 대비한다는 점에서도 쌀의 자급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곡의 자급기조를 확고히 하여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는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농지의 안정적 보전, 경지정리,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쌀 생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고품질쌀 생산유도, 유통구조의 혁신과 민간유통의 활성화, 규모화와 경영비 절감을 통해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표 2-2-2>

최근의 쌀수급 동향

(단위 : 천톤)

양곡년도	생 산	수 요	재 고
1995	5,060	5,557	659
1998	5,450	5,216	806
1999	5,097	5,112	722
2000	5,263	5,114	978
2001	5,291	5,151	1,335
2002(P)	5,515	5,105	1,899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하지만, 최근 연이은 풍작과 MMA수입쌀의 증가 등으로 쌀 공급량이 늘어난 반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재고량이 늘어나는 등 수급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기반은 확고히 유지하되, 수급균형회복을 위해 생산증대에서 고품질 양질미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RPC 중심의 민간유통 활성화, 식용·가공용 수요기반 확대 등 쌀 소비 촉진, 논농업직불제 단가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쌀값하락 예상에 따른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인중)

나. 농지보전 및 관리강화

2001년말 농지면적은 1,876.1천ha로서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농지보전 시책 추진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2001년도 농지면적은 2000년도 대비 0.7%(12.7천ha)가 감소하였다.

2001년도에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보호구역내 숙박·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집단화 된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이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 지정하도록 하는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도로 등 대규모 사업시행시 가급적 농지의 가장자리, 구릉지나 산지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농지전용 허가심사를 강화하여 우량농지의 잠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만을 대체 지정하던 것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농지를 신규개발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관련법령 개정 등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농지가 타용도로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농림부, 시·도 및 시·군 합동으로 전국적인 농지불법전용단속을 실시하였다.

<표 2-2-3> 2001년도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내역

(단위 : 건/천㎡)

구 분	계	고 발	원상복구명령	성실경작지시등
건 수	3,959	1,148	2,720	91
면 적	4,727	1,529	3,002	196

자료 : 농림부 농지과

1996년 농지법시행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휴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지취득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해 나가고 있다. 2001년도에는 5,034명의 소유농지 1,302ha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농지보전운동을 추진하고, 농림부 홈페이지의 '농지보전 사이트'에 불법전용신고센터 운영, 농지의 공익적 기능 및 세계 각국의 농지보전정책 홍보 등을 통하여 농지의 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농지전용면적은 10,209ha로서 2000년 9,883ha보다 3.3%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1998~2000년) 농지전용 평균면적 12,347ha보다 17.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은 2001년말 현재 1,148.4천ha로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지정 당시 1,008.4천ha보다 13%(140.0천ha)가 증가하였다.

<표 2-2-4>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

(단위 : 천, ha)

구 분	1998	1999	2000	2001
건 수	47,650	55,395	56,499	57,524
면 적	15,141	12,017	9,883	10,209

자료 : 농림부 농지과

(농지과 행정사무관 이성원)

다.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우리농업의 근본문제중의 하나인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등을 통하여 쌀전업농의 경영규모확대를 지원하고 경작농지의 집단화를 도모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1988년 이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비농업인,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 등에게 연리 3.0%,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무이자로 5~10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임대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총4조 252억원 122천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하였다. 그 결과 1988년에 1만호 정도이던 농 경영면적 3ha이상 농가수가 2001년에는 4만호로 300% 증가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쌀산업 구조개선을 촉진시켰다

1988년 이전 20여년간 논 경영면적이 3ha 이상되는 농가수가 1만호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쌀전업농의 경우 2001년말 현재 평균 경영규모가 지원전의 2.1ha에서 지원후에는 3.6ha로 확대·집단화되어 연간 쌀생산비를 5.55% 절감하는 한편 농가 호당 약 1천만원의 소득을 증대시켰으며, 안정적 영농계층인 40-50대 경영주가 80.5%, 50세 미만의 경영주도 58.7%를 차지하여 젊고 능력 있는 우수 농업인력 육성에 기여하였다.

<표 2-2-5>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ha, 백만원)

사업별	건수	면적	금액	지원조건
계	230,124	121,655	4,025,159	
농지매매	92,085	47,784	2,577,644	연리3.0%, 20년상환
구입자금	78,082	31,317	655,415	1994년 폐지
임대차	48,182	41,180	746,305	무이자, 5~10년상환
교환분합	11,775	1,374	45,795	연리3.0%, 10년상환

※ 쌀전업농 육성(1995~2001) : 42,071명, 62,666ha, 2조 849억원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행정사무관 김규억)

라. 수매가 인상 및 수급관리

2001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농가교역조건이 다소 악화되고, IMF사태 이후 어려운 농가사정과 주곡자금 및 식량안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추곡약정 수매가격을 2000년도 보다 4.0% 인상한 167,720원/80kg원으로 책정하여 영농기 이전에 추곡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45%의 선금(6,143억원)을 377천농가에 지급하였다.

또한, 9월 25일부터 실시한 RPC 산물수매는 2000년보다는 다소 적은 양이지만 223만석을 실시하여 농가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였다. (RPC 물벼 수매량 : '98, 170만석 → '99 209 → 2000, 246 → 2001, 223)

수급 측면에서 보면, 5년 연속 풍작에 따라 쌀 공급량이 늘어난 반면, 소비는 계속 줄어들어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수확기 쌀값이 떨어져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해 산물벼의 인도시기 조정과 정부벼의 공매시기·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지만 계절진폭은 전년말대비 1.3%의 수준에 머물렀다.

2001년도 보리 수매가는 추곡과 마찬가지로 2000년보다 4.0%로 인상하였으며, 재배면적은 파종기 일기호조, 타작물에 대해 판로와 소득이 안정되면서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데다 등숙기 일조량도 좋아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지만 소비부진에 따른 재고처분 문제도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 연도별 보리생산량 : ('99) 331천톤/조곡 → ('00) 226 → ('01) 383

또한, 정부는 보리 수확기의 잦은 비와 다습한 기상조건으로 인해 수확과 건조에 어려움이 많고 이모작 지역의 영농기와 겹쳐 농가의 일손이 부족한 점등을 감안하여 2001년도에도 보리주산지를 중심으로 18개 RPC가 11,705톤에 대해 보리 산물수매를 실시하였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인중)

마. RPC 중심의 쌀생산·가공·유통혁신

2004년까지 쌀 유통량의 40%수준을 RPC에서 산물상태로 일관처리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총 7,363억원(국고보조 2,322, 국고융자 2,047, 지방비 38, 자부담 2,956)을 투자하여 328개소의 신규 RPC를 설치하였고, 443개소의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였다. 2001년말 현재 RPC의 부문별 시설 능력은 전체 쌀 생산량 대비 건조 26.3%, 저장 15.0%, 가공 98.3% 수준이다.

쌀 주산지 중심으로 설치된 RPC는 벼 수확후 건조·저장·가공·판매 과정을 일관 처리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미질 향상은 물론, 유통단계 단축과 유통마진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2001년도의 경우 산물벼 처리량은 약 986만석으로 약 1,642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6> 관행방식 대비 미곡종합처리장 처리효과

구 분	관행방식 (A)	RPC (B)	증△감 (C=B-A)	절감율(%) (C/A)
처리비용(원/톤)	262,254	178,980	△83,274	31.8
노동시간(hr/톤)	33.72	12.17	△21.55	63.9
양곡손실율(%)	6	1	△5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표 2-2-7> RPC 유통시 마진 감축효과

(단위 : 원)

구 분	최종소비자가격	농가수취가격	유통마진
RPC유통	156,000(100%)	148,700(95.3%)	7,300(4.7)
도매상	160,000(100%)	147,555(92.2)	12,445(7.8)

※ 유통비용 : 건조·가공비, 포장비, 운송비, 하역비, 이윤

주 : 김제 → 서울, 80kg 쌀

뿐만 아니라, RPC는 정부수매량 감축을 보완하여 풍작의 경우에도 판로 보장, 쌀값안정 등 산지민간유통의 중심체로 성장하고 있다. 2001년에는 쌀 총생산량 3,830만석의 25.8%인 986만석(공매벼 제외)을 RPC에서 매입·처리 하였는데 이중 RPC가 자체적으로 매입한 물량이 762만석으로서, RPC 자체 매입량이 정부수매량 575만석을 앞서게 되었다.

<표 2-2-8>

RPC 유통비율

(단위 : 천석)

년도별	생산량(A)	정부수매량	RPC유통량		산지쌀값(12월기준)
			(B)	B/A(%)	
1994	35,134	10,500	2,462	7.0	105,508원/80kg
1995	32,601	9,550	4,550	14.0	130,670
1996	36,959	8,618	7,107	19.2	136,110
1997	37,842	8,500	7,952	21.0	137,396
1998	35,397	6,445	8,633	24.4	147,660
1999	36,550	6,082	11,248	30.8	155,103
2000	36,742	6,291	10,890	29.6	158,206
2001	38,299	5,753	10,492	27.4	150,100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 RPC 유통량은 자체매입 + 산물수매 + 공매벼 매입 + 농가수탁물량임

한편, 정부수매량이 연차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RPC의 공매곡 의존률은 1995년의 62%(총 384만석)에서 2001년에는 6.0%(총 63만석)로 크게 감소 하였다.

반면, RPC의 농가벼 자체매입량은 1995년 141만석에 불과하였으나, 2001에는 762만석으로 급증하였다. 산물처리시의 경제성과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산농가의 산물출하 희망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RPC업체들은 건조·저장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품종을 통일하고 공동 농작업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의 원료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생산·유통계열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윤명중)

바.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현행 정부수매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매년 750억원씩 추가로

감축되는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매년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수매물량을 일정량 축소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풍작시 수매량을 확대하거나 작황부진시의 가격인상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지는 등 정부수매는 수급조절기능에 한계가 있고, 최근들어 소비자를 중심으로 고품질쌀 수요가 확대되면서 브랜드화('01년 1200여개)는 진전되고 있으나 품질차별화가 잘 되지 않고 정부수매 또한 단순 수매규격으로 전국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미 생산을 위한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풍작 등에 따른 공급과잉과 재고누적으로 민간유통이 위축되고 RPC의 경우 계절진폭(수확기와 단경기의 가격차 비율) 축소와 운영자금에 대한 금리부담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 계절진폭 : ('95) 11.2% → ('99) 7.9 → ('00) 3.0 → ('01) 1.3

이에 따라 정부는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고품질쌀 생산체계로 전환하여 증산 요인을 억제해 나가고 범국민적인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광고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비촉진 홍보도 실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수매규격을 강화하여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쌀 유통의 민간시장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고 시장에 팔릴 수 있도록 유통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RPC의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운영자금 금리인하(5% → 무이자)와 지원확대를 통해 RPC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늘어나는 수확기 산물벼 매입능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품질쌀의 차별화를 유도해 나가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양곡에 대한 표시사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인중)

3.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가. 일반경지정리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을 통한 노동력 절감 등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핵심사업으로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경지정리사업은 연간 2~3만ha 규모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1980년대에 국고 50%, 지방비 30%, 주민부담 20%이던 보조율을 지방비 및 농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19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부터는 주민부담을 없애고 국고 80%, 지방비 20%로 하여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3년 봄마무리사업까지 총 소요사업비의 80%를 국고에서, 20%를 지방비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1993년 가을착수사업부터는 사업비 상승 억제에 위하여 시행면적 기준으로 예산단가의 80% 해당액만 국고에서 정액 지원하고, 국고지원액 이외의 소요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였다.

1995년 가을착수분부터는 예산단가의 10%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국고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방식을 제한적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수준을 다소 향상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소요사업비에 비해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며, 정부는 실제 소요 사업비 수준으로 예산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지정리사업은 쌀뿐만 아니라 채소 등 국민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량자급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운, 이앙, 방제, 수확 등 일련의 영농과정을 기계화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2001년 봄까지 경지정리사업의 추진실적은 논면적 1,146천ha의 62%인 709천ha로서 국고 4조4,185억원, 지방비 1조8,584억원, 농민부담 2,711억원 등 6조5,480억원을 투자하였다. 2001년에는 국고 1,881억원과 지방비 1,683억원 등

총 3,564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가을에 착수한 10천ha를 5월에 완료하였고, 2001년 가을에 6천ha를 착수하여 2002년 봄에 마무리하였다.

<표 2-2-9>

일반경지정리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 분	총논면적	목 표	2001봄까지	2002계획	2003년이후
사업량(천ha)	1,146	800(915)	709(813)	6(7)	85(95)
-진흥지역	770	665(760)	623(713)	6(7)	36(40)
-진흥지역밖	376	135(155)	86(100)	-	49(55)

주 : 면적은 마무리 논면적 기준, ()는 논면적에 농로, 용·배수로 등 시설부지를 포함한 구역면적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재흥)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984년 이전에 경지정리된 지역은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 농지이나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용수로와 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지역을 재정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이미 경지정리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지 규모를 3천평 규모로 대형화하고, 용수로와 배수로를 구조물화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는 기존의 폭 1.5~4m을 4~7m으로 확장·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200천ha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01년 봄마무리까지 79천ha를 완료하였다.

<표 2-2-10>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1까지	2002계획	2003이후
사 업 량	200	79	4	117

주 : 봄마무리 기준임.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재홍)

다. 밭기반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밭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기반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기반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업 초년도인 1994년에는 국고지원율이 60%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비(40%)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업 추진방식도 착수 당해년에 완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율을 1995년에 70%, 1996년에 80%로 상향조정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년도 완료방식에서 2개년차 사업완료방식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밭관정의 전기요금이 양곡생산 전기료보다 과중하여 1997년 6월부터는 양곡생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곡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도록 하여 농민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밭기반이 정비된 지구에 문화마을 조성, 생산유통지원 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밭에서 마늘, 양파, 양배추 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고, 시설 유지 관리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의 경우 밭관정 시설이 100% 활용되고 있는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주민 유지관리조직 미구성 또는 미흡한 운영, 농업인의 밭관정 이용시설 사용 미숙 및 고장시설물 방치 등으로 용수이용 시설(관정)의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밭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적정한 사업계획 검토, 시설물 활용방안, 영농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군, 농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사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후에는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밭 관개용수는 기존 저수지와 양수장의 여유수량을 활용하고, 신규 농업 용수 개발시에는 밭용수를 확보하는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지하수 개발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맛등 품질이 우수한 밭작물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 아름다운 국토공간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1>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발면적	목 표	2001까지	2002계획	2003이후
사 업 량	730	110	47	5	58
사 업 비	-	25,794	10,729	1,217	14,028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재홍)

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19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1985년부터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으로 농림부 주관하에 추진되었다.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정으로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이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통합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농어촌생활권 위주의 개발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대형농기계의 보급확대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1995년도에 별도의 기계화경작로사업을 농림부 주관하에 시작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로는 개설되었으나 농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인데 따른 기계화영농, 농산물 운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농업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생활도로로도 이용되고 농촌에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목 표	2001까지	2002계획	2003이후
사 업 량	22	11.23	1.45	9.32
사 업 비	29,262	11,362	1,514	16,386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권총희)

마. 배수개선 사업

이는 수해상습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2001년에는 2,226억원을 투입하여 약 10천ha를 준공함으로써

총 대상면적 23만5천ha중 11만1천ha를 완료하였다. 호우시 하루 이상 침수 되는 지역에는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을 설치하고, 지하수위가 높아 과습한 지역에는 흡수관 등 지하암거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다.

<표 2-2-13>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 분	총대상	2001까지		2002계획		2003이후	
		%	%	%	%		
지표배수	180	100	108	8	4	72	38
지하배수	55	100	3	-	-	44	94
계	235	100	111	8	3	116	49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이성홍)

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방조제 등 이미 설치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영농급수에 지장이 있으며, 재해에 위험이 있는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2001년도에는 저수지, 양수장, 방조제 등의 재해취약시설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중 흠으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수로의 개보수에 3,221억원을 투입하였다. 사업별로 보면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개보수에 2,525억원,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에 280억원,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에 400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토사가 퇴적되어 저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준설하는데 80억원을 투입하여 물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표 2-2-14>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	2001까지		2002계획		2003이후	
				%		%		%
공사관리수리시설	7,716	100	5,147	66.7	110	1.4	2,459	31.9
국가관리방조제	98	100	82	83.7	9	9.2	7	7.1
지방관리방조제	1,491	100	719	48.2	91	6.1	428	28.7
저수지준설(백만㎡)	120	100	335	27.9	3	2.5	835	69.6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시설서기관 김주호)

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은 모든 농사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농민의 열망도 역시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예산 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의 준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예산규모 확대등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대규모 농업용수개발로 경북 성주, 전북 동화 2개지구에 325억원을 투입하였고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는 136개지구에 2,774억원을 투입하여 16개지구 4,430ha를 준공하는 등 용수부족지역 영농급수에 기여하였다.

<표 2-2-15>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총답면적	개발대상면적	2001까지	2002이후
1,149	1,100	880	220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 토목사무관 민경남)

아.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 사업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지역을 권역으로 하여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등 각종 농업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수자원 확보와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은 물론,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우량농지 창출등으로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1970년에 금강·평택지구를 시작으로 1999년까지 총21지구 26만6천ha를 추진하여 그중 15지구 16만2천ha를 완공하고 그동안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영산강IV지구 1만7천ha를 신규 착수하였다. 7지구 12만2천ha를 계속 사업으로 시행중이며, 2002년에는 국고 886억원, 농지관리기금 2,350억원등 총 3,236억원을 투입하여 새만금지구등 7지구를 계속 추진하였다.

<표 2-2-16>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지구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사업기간
				2001까지	2002년	2003이후	
계	22지구	283,227	72,879	35,427	3,236	34,216	
준 공	15지구	161,667	13,767	13,767	-	-	
시 행 중	7지구	121,560	59,112	21,660	3,226	34,216	
	금강Ⅱ	43,000	5,847	2,228	381	3,238	'89~'06
	미호천Ⅱ	4,430	2,241	1,565	245	431	'89~'05
	홍 보	8,100	3,071	1,729	180	1,162	'91~'05
	영산강Ⅲ-1	13,160	6,814	2,361	410	4,043	'85~'06
	영산강Ⅲ-2	7,840	3,515	1,188	140	2,187	'89~'07
	새 만 금	28,300	30,489	12,458	1,800	16,231	'91~'11
	영산강Ⅳ	16,730	7,135	130,130	80	6,925	'00~'07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용수와 토목사무관 전경구)

자.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농업용수관리 자동화(TM/TC)사업은 기존의 인력에 의하여 현장위주로 물관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조정에 의하여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배수 제어시설물을 자동화 및 원격조정장치설치 등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물관리 효율을 높임으로써 용수절약, 물관리비 절감,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 농업인에 대한 물관리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2001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 53억원을 투입하여 7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2-17>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2001까지		2002계획		2003이후	
		%		%		%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371	100	- (7)	-	2 (11)	0.5	369	99.5

※ 사업량은 완료기준이며, ()는 시행물량임.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시설서기관 김주호)

4. 농업기계화 및 영농자재의 수급안정

가. 농업기계화

(1) 기본방향

2001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여건의 변화와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기계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기계공급제도개선 및 사후관리강화 방안의 실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농기계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농기계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 농업기계화정책 개선

첫째, 농기계공급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농기계판매에 자유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업체통보가격 범위내에서 시장기능에 따라 판매토록 자유 경쟁판매를 허용하였고, 용자지원방식은 종전의 정율지원방식에서 정액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비슷한 규격·성능을 가진 농기계를 그룹으로 묶어 기준가격을 정하고 용자비율은 기준가격의 70%를 정액으로 정하되, 정책목적에 따라 용자비율을 각각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자력구입이 가능한 100만원미만의 소형·저가농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당 최고용자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농기계의 수요시기에 맞게 용자금을 배정·집행되도록 개선하였으며, 고가농기계 구입시(3천만원이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경영상담을 받도록 하였다.

<표 2-2-18> 농기계 용자지원 한도액 산정기준

구 분	용자지원액 산정기준
① ○ 신기술농기계(신규공급일로부터 2년 이내) ○ 농협농기계은행, 농업회사법인 등이 공동이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농기계	기준금액의 90% 해당액
② ○ 발작물·축산전용 농기계중 주요기종	기준금액의 80% 해당액
③ ○ 보행형동력경운기와 그 부속작업기 ○ 톱밥제조기(15마력미만 원동기 부착) 및 선택품	기준금액의 50% 해당액 (선택품은 공급가격의 50% 해당액)
④ 기타 농기계(①②③제외)	기준금액의 70% 해당액

둘째 저비용 기계화의 실현과 농가부담 경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고농기계 거래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였다. 2001년부터 지역농협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7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2

년부터 2003년까지 신규사업으로 개소당 1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등 50%)씩 총 20개소의 상설판매장설치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와 병행하여 중고농기계의 용자지원제도 개선방안과 품질보증 방안을 강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농기계 매매, 알선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중장기과제로서 농업기계화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앞으로의 농업기계화정책의 장기발전전략과 정책방향, 금융제도 및 정책자금 지원제도 등을 다양하게 분석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ask Force」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넷째, 농기계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농기계 A/S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조업체 및 사후봉사사업소가 A/S를 책임있게 위해 제조업체가 최고 3회이상 부품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당해 모델 등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봉사사업소도 최고 3회이상 부품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기지원금 회수와 함께 신규지원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또한, 대리점과 제조업체간 전산망을 구축하고 대리점의 부품전산화도 유도하였으며, 권역별 부품 종합판매점을 육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신규로 부품 확보자금을 용자지원 하였다.

다섯째, 수리용 부품·장비에산의 적기확보,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을 다양화하는 등 농기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기계생산의 원활한 지원과 수출 촉진을 위해 생산·비축자금의 적기 공급, 국제농기자재박람회 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또한, 민간자율로 농기계산업의 전문화를 촉진하여 농기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용성 있는 농기계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관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며 신기술농기계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 등 농업경영개선을 위해 2001년도에 경운기 3.9천대, 트랙터 14.2천대, 이앙기 12.7천대, 관리기 4.7천대, 콤바인 5.8천대 등 총 100천대분의 구입자금으로 총 4,726억원을 연리 4% 저리로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지원실적은 <표 2-2-24>와 같다.

<표 2-2-19> 연도별 주요 농업기계공급 및 구입자금지원

(단위 : 대, 백만원)

	1997	1998	1999	2000	2001
○ 농기계공급	278,990	116,719	98,471	121,169	99,979
- 경운기	79,171	10,077	7,501	7,808	3,894
- 트랙터	22,652	25,377	17,919	22,716	14,198
- 이앙기	46,108	15,719	15,695	15,920	12,666
- 바인더	3,731	1,058	326	866	246
- 콤바인	8,091	9,275	7,907	11,767	5,811
- 곡물건조기	7,467	4,144	3,674	2,553	2,614
- 관리기	41,058	7,190	5,602	7,325	4,679
- 기타	70,712	43,876	39,847	52,214	55,871
○ 자금지원	819,138	710,723	634,406	780,117	718,897
- 보조	311,425	55,240	27,167	-	-
- 융자	507,713	655,483	607,239	780,117	472,648

2001년말 주요 농업기계의 보유량은 338만7천대로, 농기계 보급률은 경운기 68.1%, 트랙터 14.9%, 이앙기 25.3%, 콤바인 6.5%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연도별 농업기계보유현황은 <표 2-2-25>와 같다.

<표 2-2-20>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단위 : 천대)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3,331.5	3,348.7	3,365.5	3,386.9	3,430.7
경운기	945.8	960.0	953.7	939.2	922.7
트랙터	131.4	157.9	176.1	191.6	201.1
이앙기	302.9	325.1	335.8	342.0	342.6
바인더	68.9	73.0	73.3	72.3	70.3
콤바인	74.3	78.1	84.0	87.0	87.8
관리기	315.9	348.7	369.2	378.8	379.9
방제기	703.4	640.9	624.9	628.9	642.9
양수기	397.4	345.0	309.1	292.9	325.3
탈곡기	95.8	78.2	65.6	58.8	54.4
곡물건조기	44.1	49.8	53.2	55.6	58.2
기타	251.6	292.0	620.6	339.8	345.5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업기계자재과 행정사무관 임신탉)

(가) 사후봉사 및 기술훈련

(4) 농업기계 사후관리 강화

농업기계의 공급확대에 따라 이미 공급된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로 하여금 공급한 농기계에 대하여 수리용 부품공급과 신속한 수리봉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1981년도부터 일정 기준의 수리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를 읍·면, 시·군, 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육성하여 2001년말에는 3,213개 소의 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에서 수리기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01년에만 수리기사 184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 농기계를 점검 수리할 수 있도록 기계화영농사 995명을 양성하였다.

농기계사후봉사업소의 수리용 부품 확보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수리용 부품을 신속히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봉사업소에 대해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에도 347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또한, 봄철(3~4월)과 가을철(8~9월) 년 2회 전국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토록 하여 174.6천대의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봉사 해 주고 998백만원 어치의 부품을 무상 교환해 줌으로써 수리불편을 덜어주고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표 2-2-21>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 설치현황

(단위 : 개소)

	1997	1998	1999	2000	2001
도 단 위	34	37	34	45	48
군 단 위	948	992	1,050	1,120	1,127
면 단 위	2,099	2,130	2,079	2,117	2,038
계	3,081	3,159	3,163	3,282	3,213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아울러, 농업기계의 운전조작과 정비능력을 배양하여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업기계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교관요원 및 수리기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교육하고,

도단위 농업기술원에서는 기계화영농사와 시·군 지도사를 중심으로 대형기종을 포함한 기종별 전문훈련을 실시하며,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녀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조작훈련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약 203천명을 교육하였다. 특히, 부녀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운행요령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 생산업체에서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정밀기종에 대한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기계 기술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훈련시설 및 장비를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만 6,328백만원을 보조지원(국고 3,164백만원, 지방비 3,164백만원)하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훈련용 농업기계 451대와 순회수리차량 30대 등 훈련장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2001말 현재 4,557대의 훈련용 농업기계를 보유하게 되었다.

<표 2-2-22>

농업기계 기술훈련 실적

(단위 : 천명)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194.8	214.4	217.8	194.6	202.6
전문기술인력	3.0	3.6	2.6	2.7	2.8
부녀자	5.2	5.2	5.6	3.4	3.1
실수요자	186.6	205.6	209.6	188.5	196.7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나)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농업기계는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고장발생빈도와 사용가능연수가 크게 달라지고 있어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01년에도 2000년도와 같이 보조 20%, 용자 60%의 조건으로 지원하여 35개소의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농가경제 악화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29개소의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그쳐, 2001년까지 총 6,998개소의 마을공동농기계보관 창고를 설치하였다.

농기계사후봉사업소 보관창고설치사업도 2000년도부터 신규로 소요사업비의 70%를 용자지원하여 일반농가의 이앙기 및 콤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정비한 후 집단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농기계 수요감소에 따른 사후봉사업소의 적극적인 투자 기피 등의 사유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9개소의 설치에 그쳤다.

또한, 2001년부터 신규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소요사업비의 70%를 용자지원하여 100개소의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농가경제 악화에 따른 수요감소로 90개소만을 설치하였다.

(다)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고시하고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1994년 11월 11일자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을 1995년 7월 6일자로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실적이 미흡한 경우도 있어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및 관리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평가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신기술 농기계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2000-79호('00.12.30)로 개정 고시하였다.

2001년까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된 농기계는 승용 관리기 및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등 14종이다. 그중 승용관리기,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벼도정수급자동판정기등 몇 개의 기종은 보급이 확대되어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인하등 농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된 농기계는 구입자금의 90%를 2년간 용자지원해 주며, 생산비추자금도 5억원 이내에서 2년간 우선 용자지원하고 있다.

<표 2-2-23>

신기술 농업기계 주요 특성

농기계명	제조업체명	형식	주요특성
무인자동방제기	중앙공업(주)	배터리 구동형	온실내부 또는 노지에서 유도선을 따라 무인자동주행하면서 방제작업 실시
원거리용 고성능방제기	(주)한성농산 기계제작소	견인 및 탑재형	농약살포장치의 상하, 좌우 등을 원격조절하여 과수, 벼, 감자 등의 방제작업 실시
채소자동접목기	(주)유평기연	호접형	수박등 채소류를 자동으로 접목하고 클립핑
과수형 승용관리기	아세아 산업공사	4륜구동형무한궤도형	전·후방의 동력취출축과 작업기 부착장치를 이용, 여러가지 작업기를 부착하여 병해충 방제등 10여가지의 과수원 관리작업 실시
버섯자동 천공접종기	(주)한농정공	4조식	원목을 이용한 버섯재배시 천공, 종균접종, 마개봉합작업을 일관자동화
벼품위 자동판정기	쌍용기계 산업사	탈망정선식	소량의 벼를 이용 제현율과 설현미율을 정확히 자동계측하여 벼 품위 판정의 정밀도를 향상
승용관리기 (논용, 밭용)	아세아종합기계(주) 중앙공업(주)	승용형	승용관리기 본체에 여러 가지 작업기를 부착하여 논농사와 밭농사에 이용
자동관수분배기	보경산업	무인자동형	양수기에 연결하여 관수예약일, 관수시간, 관수주기 및 관수 토출구를 작목과 생육상태에 따라 임의로 선정하여 무인자동형으로 급수 가능
종자봉입기	화성농산	공기흡입식	작은 종자를 종이테이프로 봉입하여 파종함으로써 50% 종자 절감 가능

농기계명	제조업체명	형식	주요특성
유도케이블식 과수무인방제기	아세아 산업공사	무한계 도무인 자주식	지하에 매설된 유도케이블을 따라 무인주 행하면서 방제 작업할 수 있어, 농업인을 농약중독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센터를 이용하여 정상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주행 및 방제작업이 자동정지
벼도정수율 자동판정기	쌍용기계 산업사(주)	종합판 정식	제현율, 현백율 및 도정수율을 자동으로 동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 현미기, 정미기, 선별기 등의 단위기계를 농산물검사표준계측법의 기준에 맞게 개발·개량 미곡종합처리장 등에서 사용하여 고품질의 쌀생산 의욕 고취, 도정수율 관리에 따른 양곡손실 예방이 가능
레일이동식 정전 대전방제기	태인테크(주)	호스견인 형 고정 경로주행식	온실내에서 무인주행하면서 방제작업을 할 수 있어 농업인을 농약중독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분무입자를 정전대전시켜 작물의 잎뒷면에 잘 부착되도록 한 정전살포기술을 실용화
승용경운기	동양물산(주)	승용견 인구동식	밭농사 전용형 농기계로 기체높이가 낮아 온실·과수원등에서 사용이 편리하고 소형 경량이므로 부녀자나 노약자도 손쉽게 운전 할 수 있으며, 로타리 등 여러 가지 작업을 부착 사용 가능
원심회전충격분 무방식온·습도 조절기	태인테크(주)	상온연 무정치식	회전판과 충돌 핀에 의해 물을 미립화 하므로써 불순물에 의한 노즐 막힘이나 노즐마모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아 내구성이 크며 온실냉방 및 습도조절용 등으로 사용 가능

(농업기계자재과 기계사무관 박상민)

(5)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은 계절성 사용 농기계의 사전 생산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기계의 수급원활 및 대농업인 판매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부녀자 및 노약자가 운전하기 쉬운 농기계 등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자금과 자본기술집약형 농업 촉진을 위한 첨단농업기자재의 생산·장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다.

<표 2-2-24> 농기계 생산지원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소)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사 업 량	35	39	38	28	27
지 원 액	635	630	420	400	400

(6) 농업용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사용 유류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86.3.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제세금을 면제하여 공급해오고 있다. 면세석유류 대상 농업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2의 규정에 의거 영농에 많이 사용하는 기종 중심으로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등 38개 기종이며, 농업인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농협에 농가당 보유 농업기계를 신고하면 농가의 영농규모,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영농에 필요한 량의 면세석유류를 공급 받을 수 있다.

<표 2-2-25> 면세유 공급실적 및 농가부담경감액

(단위 : 천kl,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공급물량	2,489	1,959	2,449	2,300	2,440
공 급 액	8,159	6,656	7,412	9,069	9,047
면 세 액	3,141	4,399	5,773	5,579	6,654

(농업기계자재과 공업서기관 한한수)

나. 영농자재의 수급안정

(1) 농약의 수급관리

전체 농약품목수는 2001년에 약효·약해·독성·잔류성 등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신규농약 58개 품목을 추가 등록함으로써 2000년 959개에서 1,017개로 늘어났으며, 농약사용량으로는 2001년도에 28,218톤으로서 과거('91~2001)의 사례를 보면 1991년의 27,476톤에서 1998까지는 점차적으로 농약사용량이 줄어 들었으나, 이후는 늘어나고 있다. 내용측면에서 보면 수도용의 경우는 1991년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원예용의 경우는 원예·과수 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시설원예작물의 년중 생산 등으로 농약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표 2-2-26>

연도별 농약소비 상황(공장출하량 기준)

(단위 : 성분량, 톤)

연도별	계	수도용	원예용	제조제	기타
1991	27,476	9,254	9,719	5,631	2,872
1994	26,282	5,512	12,606	5,506	2,658
1996	24,641	5,526	10,490	5,962	3,116
1997	24,814	6,526	9,967	6,043	2,278
1998	22,103	6,749	8,559	5,116	1,679
1999	25,837	7,255	10,371	5,596	2,615
2000	26,087	6,292	11,301	5,822	2,672
2001	28,218	6,492	12,782	6,380	2,564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약의 공급은 농약시장 자율화계획에 따라 1990년부터 농약제조업체가 연간 수요량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농약을 생산·공급해오고 있다. 2001년 총 수요량의 35% 정도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이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수요량 전량을 제조업체와 일괄 구매계약을 맺어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65%정도는 시판상을 통하여 공급하였다.

2001년도에도 당면 영농시기별 병해충 발생 및 농약수급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돌발병해충 대비 농약비축 및 전수배 체계 유지로 농약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식량생산에 기여하였다.

(농업기계자재과 농업사무관 이병환)

(2) 비료의 수급관리

(가) 농업용 비료 소비량

2000년의 농업용 비료 총소비량은 성분량 기준 717천톤으로 이는 2000년 801천톤의 89.5% 수준이며, 비료 소비량을 성분별로 보면 질소질 375천톤(52%), 인산질 153천톤(21%), 가리질 189천톤(27%)으로 나타났다.

<표 2-2-27>

비료 소비량 추세

(단위 : 성분량 기준, 천톤)

		1997	1998	1999	2000	2001
3요소별	질 소 질	446	447	444	423	375
	인 산 질	199	187	179	171	153
	가 리 질	237	226	219	207	189
계		882	860	842	801	717
단복비별	단 비	228	232	225	207	172
	복 비	654	628	617	594	545
ha당 소비량(kg)		421	406	398	382	343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비료 공급체계는 1988년 1월부터 정부의 비료판매가격 자율화 조치에 따라 종전에 정부에서 취급하던 비료공급업무가 농협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01년 농협취급 비료의 공급량은 651천톤으로 전체 비료공급량 717천톤의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2%(66천톤)는 시판으로 공급되었다.

(나) 농업용 비료가격 안정시책 추진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과 비료가격 안정을 위하여 1962~1987년까지는 정부가 비료가격을 결정하고 비료공급에 따른 판매가격 차손을 비료계정에서 부담하였으나, 1987년 『비료산업개선대책』에 따라 1988년부터 비료판매 자율화를 실시하고 비료의 생산 및 판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비료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였고, 비료판매원가절감을 위하여 1989년 10월부터 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비료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비료 판매가격은 1988년부터 자율화되었으나 1990년 8월에 발생한 걸프전으로 비료원료인 나프타 등의 가격이 급등하여 국내비료가의 대폭 인상요인(25%)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 부담경감과 비료 공급가격 안정을 위하여 1991년부터 농협취급 비료는 구매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농업인에게 판매하고 판매가격 차손을 매년 재정에서 보전해 오고 있다.(’91~2001년 지원액 : 8,357억원)

<표 2-2-28> 2001년 주요 비종별 비료가격(20kg당)

(단위 : 원, %)

비종별	구매가격(A)	판매가격(B)	차액(C)	보조율(C/A)
요소	7,143	5,300	1,843	25.8
용성인비	6,178	3,650	2,528	40.9
이모작복합비료	6,896	5,800	1,096	15.9
일모작복합비료	6,785	5,500	1,285	18.9
유기질(퇴비)비료	2,500	1,800	700	28.0
평균	5,773	4,466	1,307	22.6

주 : 평균은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공급하고 있는 전체비종(29종)의 평균임

(다) 토양환경보전형비료 공급을 통한 시비량 절감 추진

1995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논토양의 양분함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산, 칼리 성분함량이 과다한 농경지가 428천ha로서 전체 논면적의 35%를 차지하였다. 이는 토양양분 함량을 감안하지 않고 관행에 의한 시비 및 인산, 칼리 함량이 높은 복합비료를 계속적으로 과다 사용하는데 기인된다.

따라서, 1997년부터는 저인산·저칼리 등 저농도 복합비료와 토양진단결과 재배작물에 맞는 주문배합비료 등의 공급을 시작하여 매년 공급량을 확대하는 대신에 요소, 이모작 복합비료 등 고농도 화학비료는 공급을 축소함으로써 화학비료사용량을 감축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가축분뇨 등 농업 부산물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보전과 지력증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퇴비등 유기질비료를 1998년부터 지원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단위면적당(ha) 화학비료 사용량이 매년 2~3%씩 줄어들고 있어 과다시비로 인한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01년은 화학비료 총공급량 1,529천톤(실중량 기준)중 48%인 730천톤이 환경친화형 비료로 공급되어 비료사용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29>

환경친화형 비료공급 실적

(단위 : 실중량 기준, 천톤)

비종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53	422	847	1,072	1,230
저농도 복합비료	36	119	305	398	537
주문배합 및 완효성비료	17	103	142	174	193
유기질비료	-	200	400	500	500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업기계자재과 농업사무관 김상경)

5.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확충

가. 논농업 직불제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가) 도입배경

논농업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대다수 농가가 논농사를 짓고 있으며, 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논농업이 가져다 주는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농업에 있어서 주된 지원정책인 쌀 수매제도가 WTO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WTO협정에서도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하여 농가소득 지지는 물론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홍수방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비료·농약 적정사용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위

1999년 9월 21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농업인의 날('99. 11.11), 통합협동조합 출범식(2000.7.1) 등에서 논농업직불제를 2001년에 도입하겠다는 정부입장을 누차 표명된 바 있다.

1999년 12월에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교수,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기획단」이 구성되고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2001년 도입할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시행 방안에 대해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주관으로 조세연구원 및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연구용역도 병행하였으며, 도입방안 검토시 학계, 언론계,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정책토론회(3.22, 5.12)와 공청회(6.27)를 개최하여 농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일반 경제학자들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입방안에 반영하였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농업직접지불제 기획단」에서 회의와 토론을 거쳐 8월 24일 최종회의를 갖고 2001년부터 전체 논에 대하여 전면적인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시행준비 및 시행과정

(가) 시행준비

기획단에서 최종 시안이 발표되자 그동안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세부 시행지침 및 세부 내용을 준비해 오던 농림부는 9월~10월중 전국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하였으며, 도상연습결과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서식·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1년 논농업직접지불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지원 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밖은 ha당 20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은 0.1ha~2.0ha으로 하여 전체 890천ha 총 2,105억원(행정비 32억 포함)을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

(나) 사업시행

2001년도 사업시행지침을 11월 29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과 아울러 일간지, 전문지 및 농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다.

논농업직불제 신청기간은 1월부터 2월말까지였으나,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3월말까지로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수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행지침을 보완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농업인의 사업신청을 토대로 833천ha를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점과 구제역 방역, 산불·봄가뭄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신청기회를 8월까지 연장하여 추가신청토록 하였다.

또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대상 선정농가를 대상으로 이중·중복신청 여부와 실제 경작여부등을 집중 확인하여 부적격자(농지)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점검과 친환경영농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토양검사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등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지급요건 불이행농가(농지)에 대해서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를 하는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가(농지)에 대해서 11~12월중에 1,910억원(816천ha, 1,023천농가)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업평가

200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선기관·단체의 노력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논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농업인·소비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WTO체제하에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써 직접지불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된다. 2001년도에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1,910억원을 지원(ha당 234천원, 농가당 187천원)함으로써 약 2.2%의 수매가 인상효과와 농가소득('00기준) 대비 0.8% 지지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앞으로 남은 과제

논농업직불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제도정착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화를 통한 생산기반유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농업과 농업사무관 김완수)

나. 경영이양 직불제

고령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쌀전업농인의 영농규모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쌀전업농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생산성이 낮은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유농지를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하고 영농에서 은퇴하는 경우에 ha당 일정금액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통하여 고령은퇴농업인 47천명에게 831억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 1인당 179만원의 소득을 지원하였고, 쌀전업농 30천명에게 31천ha의 농지를 경영이양토록함으로써 1인당 1.03ha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같이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고령은퇴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의 효과를 가져왔고, 쌀전업농에게 영농규모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쌀생산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표 2-2-30>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ha, 백만원)

사업별	건수	면적	금액	지급단가
계	48,331	31,176	83,115	ha당 지급기준(만원)
농지매매	7,843	3,427	9,201	: ('97) 258, ('98~'99) 268,
임대차	40,488	27,749	73,914	('00이후) 281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행정사무관 김규억)

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영농 이행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에 따라 1999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등 환경개선 정도가 크고 지원과급효과가 높은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농업인은 대상지역내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일정수준이상의 친환경농업실천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 그 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인으로 하였다. 대상농산물은 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식용할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사업과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작목반원이 아닌 농업인은 인근의 작목반조직과 통합관리토록 하였다. 작목반의 종류는 벼·채소·과수·기타작물 등 4종류로 제한하였고 1개 작목반은 1개 작목종류만 선택토록 하였다.

보조금액은 초기단계 벼의 관행재배와 저투입농법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하여 ha당 524천원을 지원하였다. 친환경적인 영농실천으로 사업시행전인 1998년에 비해 최근 3년간 화학비료·농약사용량이 약 6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1>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ha, 호)

	1999~2000실적	2001 실적	비고
보조지원액	11,462	5,650	ha당 524천원지급
사업량	20,728	10,480	
참여농가수	36,133	18,806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관 정영환)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 추진방향

(가) 도입 필요성

WTO출범이후 수입개방 확대로 산간·오지 등 조건불리지역의 농업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감소가 심화되면서 급속한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여건이 열악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지역사회 및 농업기반 유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2001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함에 따라 밭농업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나) 추진과정

2001년 3월 이후 농림부는 세차례의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기본추진방향을 수립하고(2001.4.8),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읍·면별 통계자료 수집 등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6.2~12.31). 시범 구역도를 가지고 강원도 홍천군(5.28), 충북 진천군(6.1) 현지조사를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구역도를 통해 경사도 경계 구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1,423개 읍·면중 399개 오지면의 밭을 대상으로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농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2002년에 399면의 밭경사도 조사 및 대상지 구역도 작성을 위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였다.

(2) 선진국의 조건불리 직불제

(가) EU의 조건불리직접지불제

EU에서는 1975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①고도 600~1000m 이상이거나 경사도 18% 이상인 산악지역과 ②생산성이나 농가소득이 국가평균의 80% 이하이거나 인구밀도가 평균의 50% 이하이고 인구 감소율이 연평균 0.5% 이상인 일반조건불리지역 ③또는 해안·도서지역 등 특수불리지역의 경종 및

축산농가에게 향후 5년간 경작을 조건으로 25~200ECU/ha(약 2.5~20만원/ha)를 지급하고 있다. EU는 EU집행부에서 25%를 기본으로 최고 75%까지 재정을 지원하고, 회원국 사정에 따라 독일·이태리처럼 중앙·지방정부간 재정분담을 하기도 한다. EU는 전체 농경지의 56%인 78백만ha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중 약 124만농가가 실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EU 전체농가의 약 17%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나) 일본의 중산간 직접지불제

일본은 2000년에 중산간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특정 농산촌법, 산촌진흥법, 과소법 등 8개 지역진흥법에서 지정하는 시정촌(市町村)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용지 약 200만ha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농지를 대상으로 평야지와의 생산비 격차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농지는 ①경사도가 논 1/20, 밭 15도 이상인 단지화된 1ha 이상의 급경사지 ②소구획·부정형 농지 ③초지비율이 70%이상인 지역의 초지나 급경사 채초 방목지를 대상으로 하고 ④기타 논 1/100~1/20, 밭 8~15도의 완경사 농지나 고령화율(40%이상), 경작포기율(논 8%, 밭 15% 이상)이 높은 지역 중 시정촌장이 판단하여 지정한 농지 등이며, 전체 5%의 범위내에서 都道府縣의 지사(知事)가 지정하는 특례지역을 인정하고 있다.

논은 80~210만원/ha, 밭은 35~115만원/ha, 초지는 15~30만원/ha을 지원 하되, 호당 1,000만원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지급조건으로서 향후 5년간 계속 하여 대상밭을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마을협약(集落協定)을 체결하여 수로·농로 관리 및 기타 다양한 공익적 기능 제고 활동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일본의 중산간 직불제는 시행 첫해 2,158개 대상 시정촌의 80%인 1,687개 시정촌이 참여하여 25,621개의 마을협약과 498개의 개별 협정을 체결하여 총 대상면적의 70%인 541천ha의 면적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교부금 지급실적은 2000년 예산 700억엔의 60%인 419억엔이 지급되었으며, 예컨대 飯山市 柳原集落의 경우 101명이 참가서명하고, 공동비와 개별보조금을 합하여 호당 평균 73만원 수준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스위스의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스위스는 직불제가 가장 잘 운용되고 있는 나라로서 1959년부터 처음 실시하였으며, 농업지대를 경지의 고도, 기후, 일조량, 토질 및 농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야지역, 중간지역, 광의의 중간지역, 구릉지역, 1급~4급 산악지역의 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 가운데 구릉지역과 산악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이나 여름철 방목축산 및 경사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별로 지원대상별로 다양하게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가축사육에 대해 230~1,500프랑/LU(Livestock Unit, 가축환산 단위), 경사지에 370~510프랑/ha, 하기 방목에 대해 10~300프랑/LU을 지급하되, 대상농가는 세가지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1996년기준 총지원금은 4억 3,200만프랑이며, 총가구수 79천호보다 많은 87천 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윤원습)

6. 농외소득원 확충

1990년대 중반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빠른속도로 확대되고, 특히 농업소득의 증가가 주춤한 상황에서 비농업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은 아직까지 IMF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근로자소득과 비교한 농가소득의 비중도 1995년 95%수준에서 2001년에는 78.4%로 하락하였다. 이렇듯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취업이나 농업외의 사업을 통한 농외소득기회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농가소득중 농외소득의 비중을 보아도 일본 87%(2000년), 대만 83.1%(1998년), 미국 88.6%(1997년), 등 선진국과 주요경쟁국의 농외소득비중이 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1년에 5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유통정책 등 전통적의미의 농업정책 이외에·지역경제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농촌의 고용을 확대하고, 농가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 그린투어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주5일근무제 도입 등으로 여가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고 테마를 살리고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가생활패턴의 변화가 일고 있어, 2001. 5월 농촌관광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농외소득증대 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농정회의(2001.8월)를 거쳐 2002년도 녹색농촌체험활동사업예산 4,925백만원(국고 2,900, 지방비 2,025)을 확보하고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2002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마을의 생활편의시설 및 여가기반시설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관광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과제용역 추진 및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촌관광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을 종합하고,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과 행정사무관 안용덕)

나. 농공단지 활성화

농공단지 개발의 활성화와 기지정 농공단지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1994년 5월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개정하여 1991년 12월부터 중단된 지방비 융자재원에 대한 여신을 재개하였다. 또한,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체 조림비 납부를 면제시켰으며,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을 1994년 9월과 1996년 5월, 1997년 12월, 1999년 4월, 2001. 2월 및 2001년 10월에 개정하였다. 특히,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2000년중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1년 2월 『농공단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증액(추가농어촌지역에 농공 단

지 조성시 부지조성비 지원 55천원 → 80천원/평), ②부적지 조성 방지를 위한 입지양호지역 등 신규지정기준 강화, ③지역특화 산업단지·전문단지 조성, ④ 대기업 입주 촉진, ⑤자금지원강화 등이다.

한편, 2001년10월에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민간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부지조성비를 지원토록 하는 등 활성화조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수차에 걸친 제도 보완과 지원을 통하여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농촌진흥과 시설서기관 조홍제)

다. 농촌휴양자원 개발

과수, 화훼, 축산 등 농축산물 생산·재배시설과 휴게소, 식당, 농특산물 직판장, 편의시설 등을 겸하여 설치·운영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여 도·농간 교류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농원과 휴양단지, 민박마을이 되도록 추진하고 청소년 등이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체험훈련프로그램을 확대, 인근의 유적지, 문화재 등과 연계한 패키지상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표 2-2-32> 농촌휴양자원 개발 계획

구 분	합 계	2001년까지	2002계획	2003이후
사업량(개소)	974	645	9	328
- 휴양단지	22	9	-	13
- 관광농원	544	353	-	191
- 민박마을	408	275	9	124
지원액(백만원)	213,590	166,366	900	46,324

주 : 자부담 개발 사업량은 제외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박병태)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사업은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원료농산물의 대량구입처 확보와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역에 농산물가공공장 신규건설, 기존 운영중인 가공업체의 시설개보수·현대화, 포장개선(디자인, 용기), 운영(가공원료수매자금, 판매·홍보)비 지원, 가공공장 경영주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이 있다

그동안 농산물가공공장은 1989년이후 1,089개소를 건설하였으며, 2,829억원을 국고보조·융자 지원하여 708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381개소는 관리해제(퇴출 166, 관리기간 경과 215) 되었다.

한편, IMF의 영향으로 정부지원 가공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1998년에는 관리중인 업체(1,00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51.5%의 업체가 경영부실·미흡으로 나타남에 따라 1999년부터는 경영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가공공장 건설 목표를 2,000개소에서 1,200개소로 하향 조정하여 신제품개발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신규 가공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기존 운영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현대화 중점지원 및 포장개선비(디자인, 용기개발), 운영비(가공원료수매자금, 판매·홍보) 지원 확대, 가공업체 경영주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 지원방식도 1998년까지는 국고 보조·융자 지원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참여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양을 위하여 국고융자(70%), 자부담(30%)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농산물가공공장 경영활성화대책 추진 결과, 2001년에는 업체의 운영상황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즉, 산물로만 유통되던 농산물을 가공처리함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유망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산업 기반 구축, 품목별 주산단지의 원료농산물을 사용하는 산지가공공장 확충으로 계약재배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농산물을 산지 소재 가공업체에서 소비함에 따른 유통단계 대폭 축소 및 유통비용 획기적 절감 등의 성과도 거둘수 있었다

<표 2-2-33> 농산물가공공장 연도별 운영상황

구 분	단 위	1998(A)	1999	2000	2001(B)	대비(B/A)
○ 매출액	억원	4,269	5,304	5,691	5,970	40.0% 증
- 업체당 매출액	백만원	588	692	762	906	54.1% 증
○ 수출액(업체수)	억원(개소)	265(88)	385(157)	319(127)	358(128)	35.1% 증
○ 원료농산물구입액	억원	2,872	3,006	3,115	3,290	14.6% 증
○ 연간 고용인원	명	8,000	8,700	8,500	9,153	14.4% 증
- 연간 지급임금	억원	653	702	746	767	17.4% 증

2001년도의 경영활성화대책 추진실적은 가공공장 신규건설 7개소 25억원, 기존 운영업체의 시설개보수·현대화 16개소 31억원, 포장개선(디자인, 용기개발) 20개소 2억원, 가공원료수매자금 335개소 1,140억원을 국고융자 지원하였으며, 가공업체에 대한 판매·홍보지원 10억원, 가공업체 경영주에 대한 컨설팅을 53개소 3억원을 보조 지원하였다

<표 2-2-34> 농산물가공산업 추진현황(2001년)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가공공장 건설				가공원료 구입자금	판매· 홍보	경 영 컨설팅	합계
	신규	시 설 개보수	포장 개선	소계				
용자	개소수	7	16	20	43	335		378
	지원액	25	31	2	58	1,140		1,198
보조	개소수					-	53	53
	지원액					10	3	13

(식품산업과 이득섭 사무관)

제 2 절 농업전문경영체 및 여성농업인 육성

1.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 육성

가. 개 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젊은층의 이농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농업이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농업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장차 우리 농업을 선도할 농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1981년도부터 시작한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은 2001년까지 총 117,794명을 선정하고 영농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화·규모화된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일정수준의 경영기반과 경력, 발전가능성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19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업농육성사업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총 89,627명을 선정하고 영농규모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 2001년도 추진상황

2001년에는 후계농업인 3,270명을 선정하고 1인당 평균 3,360만원을 개인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며, 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는 종전에는 호당 평균 50~1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쌀 전업농에 대한 농지구입지원 이외의 사업은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의해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쌀 전업농 7,467명을 선정하여 평균 3,200만원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였고 자금지원 이외에도 기술교육, 해외연수 실시, 각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병행하였다.

다. 평 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조11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17,794명의 후계농업인을 확보하였으며, 후계농업인으로 지원받은 농가의 영농자산 증가 및 경영규모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업농육성사업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영농규모화자금 등 총 3조5,10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전업화와 규모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표 2-2-35> 2001년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 업	축 산
계	9,695	8,964	731
후계농업인	3,270	2,539	731
전업농	6,425	6,425	-

주 : 축산전업농은 1995년부터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별도 추진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강형석)

2. 법인경영체의 육성

가. 영농조합 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협업적인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있으며 1991년 25개소를 시작으로 2001년까지 총 6,288개소가 설립되었다.

개별경영보다 법인화하여 경영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유리하며, 정부의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법인설립이 다소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요건의 강화로 최근에는 설립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크게 영농조합법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농지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기타소득은 조합원당 1,200만원 공제후 그 잔액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법인 고유의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분리 과세된다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은 면제하며 농지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감면된다. 둘째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지역농업을 유지·발전시키는 중심적인 농업경영체로 자력성장할 수 있도록 농협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경영 및 기술지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나. 농업회사 법인

농업회사법인은 1991년부터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위탁영농회사제도를 보완·발전시킨 제도로서,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있으며, 1990년에 6개소를 시작으로 2001년까지 총 1,627개소가 설립되었으나 최근에는 대형 농기계의 확대 보급에 따른 영농대행 물량의 감소로 설립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내용을 보면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농업경영이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농기계 구입자금, 농업경영자금 등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 법인경영체 육성시책 평가

법인경영체는 생산뿐 아니라 관련 2·3차산업기능을 포괄하는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의 중심체로서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경영체의 경우 치밀한 사전 준비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영체 운영 경험 및 세무,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강화하여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출자금 및 자기자본금의 최저한도와 운영실적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은 출자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법인 위주로 지원을 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법인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경영장부 기장을 의무화하고,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인명의로 등기여부를 확인하며,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케팅, 회계, 세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업법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이경천)

3. 신지식 농업인육성

가. 개 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농업도 소규모 토지·자본으로 신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농업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농업시대에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주도할 신지식농업인을 발굴·육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신지식농업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 117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정하여 “신지식농업인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이들의 노하우와 신지식기술 등을 확산하여 지식농업시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신기술과 노하우를 담은 홍보용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신지식농업인의 개념>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끊임 없이 개발·개선·혁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지식농업인 육성 방안

지식기반사회의 지식농업을 주도할 신지식농업인을 확대 발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해외 선진지 견학기회 부여 등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며, 신지식농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미래의 농업세대에 대한 신지식농업인 농장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추진, 신지식농업인 경영체 견학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양성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농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신지식농업인 다큐멘터리 영상물 및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지식농업인을 지식농업의 확산 주체로 육성해 나아가고 있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김승환)

4. 농업인 교육 및 농업계학교 교육 활성화

가. 농업인 교육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선진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52만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영농기술, 농업기계, 농촌생활과학, 4-H회원,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높은 수준의 영농기술과 과학적 생활기술을 농촌현장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기여하였다.

(1)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수출유망품목 또는 고소득 작목에 대한 새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농업인 789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업발전을 주도할 핵심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증진토록 하였다.

(2) 전문농업인 교육

21세기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을 주도할 핵심 영농인력 육성을 위하여 품목별 전업농가 및 전문농업인 조직체 회원 등 499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 및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영농공개강좌

지역특화품목의 개발과 육성을 촉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전국 25개 지역에서 5,417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공개강좌를 개최하였다.

(4) 농업인 정보화교육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22,912명(도 : 3,106, 시군 : 19,806)에게 체계적인 농장관리 및 농산물 유통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농업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5)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시군별로 3개 이상의 주력품목을 선정, 품목별 조직을 대상으로 연 4회에 걸쳐 72,346명에게 품목별 생산기술 및 유통 등에 대한 상설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전문 경영능력 및 자기학습 능력을 향상시켰다.

(6) 새해영농설계교육

1~2월중 전국 577,878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영농현장에로기술 및 새기술, 경영정보 및 농정시책 등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별 새해영농계획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7) 농기계 교육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안전운행 등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단위에서는 전국 194명의 농기계교관을 대상으로 신 기종의 취급조작 및 정비수리 전문기술을 4일간씩 2회 교육하였고 농기계 정비 기능사 양성 교육은 농업인·귀농인·수리업소 직원 등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72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다.

농업현장에서의 실무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전국 농과대학생 65명에게 농기계 운전, 포장작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기계지역망(ESCAP/RNAM)사업 워크숍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공무원 및 농업인 13명

에게도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260명을 대상으로 현장실기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도 단위 교육은 기계화영농사 1,247명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을 새로 구입한 322명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및 관리요령을 1~2주간 교육하였고, 시군 단위 교육은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을 소형기종 구입농가를 중심으로 23,130명에게 실시하였다.

농기계 안전사용 보수교육은 도로주행형 기종 보유농가 150,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50개소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교관 143명, 수리요원 272명 합계 415명으로 수리 전문지도반을 편성 20,703회에 걸쳐 오지마을 33,557개를 대상으로 고장 농기계를 수리하였으며 농업인 258,747명에 대해서는 자가정비 및 수리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지원기획과 농촌지도관 가형로)

나. 농업계학교 교육 활성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지역 농림업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국립 농림계 14개 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첨단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 대 농민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별 특성화 분야(표 1 참조)별로 연구·개발·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1994년 이후 총 투자계획(675억원) 대비 82% 수준인 총 554억원(2002년 60억원 지원)을 지원하였다. 특성화 목적에 맞는 연구를 위해 대학별로 기본적인 시설·장비·기자재를 완비해 가고 있으며 그 성과는 <표 2>와 같다.

2004년에 종료되는 농림계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이 지금까지의 투자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당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36>

대학별 특성화분야

학 교 명	특 성 화 분 야	학 교 명	특 성 화 분 야
강원대 농생대	고냉지 환경보전형 농업개발	전남대 농대	수도, 맥류, 배
강원대 산림과학대	산림자원의 생산, 이용 가공 및 환경자원개발	순천대 농생대	조미 채소류(마늘, 파, 양파, 고추, 생강, 부추)
한경대	낙농분야	안동대 자연과학대	유용자생식물(약용 등), 고추
서울대 농생대	농업생물환경과학	경북대 농생대	과수(사과, 복숭아)
충북대 농대	포도, 버섯, 잎담배	경상대 농대	시설원예, 한우
충남대 농생대	인삼, 과채류(딸기, 참 외, 수박, 토마토 등)	진주산업대	양돈
전북대 농대	수도, 양계	제주대 농생대	감귤, 화훼

<표 2-2-37>

대학별 사업성과

대 학 별	사 업 내 용
서울대	· 유리온실, 목장현대화 · 농업연구정보시스템, 실험기자재 · 실험농장, 농업환경오염방제시설, 종합농업공작시스템 구축
강원대농생대	·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신축, 연동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첨단 한우생산 기반시설 정비, 실험기자재, 온항습실, 축산물 가공 공장
강원대산림대	· 첨단유리온실 · 산림자원 개발 첨단 실험기자재 · 온실부속시설 · 농업 과학기술센터 장비 보완
한 경 대	· 낙농기술지원센터 신축 · 실험 기자재 · 실험동물 사육실
충 북 대	· 농업과학기술센터 신축, 첨단유리온실, 생명공학실, 버섯재배사, C/T 하우스, 실험 기자재
충 남 대	· 농업과학기술센터 신축, 인삼 · 과채류 시설, 망실 · 실험기자재, 인공 토양제조시설
전 북 대	· 농업과학기술센터 신축, RPC시스템, 정보시스템 · 환경제어시설, 축산물가공공장, 실험기자재, 양계시설
전 남 대	· 농업인교육센터 신축, 배과수원 포장, 실험 기자재 · 첨단유리온실, 온실냉난방시설, 세대단축온실
순 천 대	· 조미채소기술센터 신축, 실험기자재, 농업인 교육관, 플러그 육묘시설
안 동 대	· 농업특성화연구센터 신축, 유전자보존하우스, 조직배양실, 다목적기계 실, 표본실, 식물생장조절실, 실험기자재,
경 북 대	· 사과연구센터 신축, 사과원 조성 및 부대시설, 실험기자재 · 사과원 선과시설 등 시설보완
경 상 대	· 첨단시설, 유전자원개발실, 유리온실, 한우사 보완, 실험기자재 · 경연질재 실험온실, 수확처리실, 농업과학기술센터 신축
진주산업대	· 실험기자재(양돈특성화기자재), 모델돈사, 육가공공장, · 양돈과학관
제 주 대	·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신축, 환경조절온실 등 온실(3종) · 저장고, 실험기자재, 농업정보화시스템 구축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기획과 농업연구사 안종웅)

5. 농업벤처 육성

가. 개요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전·후방연관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제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기업으로서 생산분야, 농업투입재분야, 식품가공분야, 유통분야 등에 진출하여 비용절감, 생산성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 관련산업의 발전 및 농업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처음으로 농업벤처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 기타농업벤처 창업보육센터지원 등 관련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나. 2001년도 추진상황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처음으로 농업벤처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33억원)와 민간(67억원)이 공동출자하여 100억원 규모의 제1호 「농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 우수한 기술력과 농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아이템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벤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분야 벤처기업 평가기관 설치,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및 투자박람회개최 지원, 기타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 농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강형석)

6.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가. 추진배경

농업 투·융자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영농이 규모화, 현대화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부실사례가 발생하고 동일한 영농조건이라도

경영체의 기술, 경영능력 여하에 따라 생산성 및 수익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경영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진단, 경영 및 정보화 교육실시,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첫째, 2001년에 주요품목 60개의 경영표준진단표를 활용하여 농가 스스로 기술·경영상의 문제점을 확인·보완토록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및 농촌지도계통 조직에 학계, 컨설팅업계, 관계기관, 선도농가 등이 참여하는 컨설팅 전문가팀을 구성·운영하였다.

둘째, 농촌현장 밀착형 컨설팅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기술·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급변하는 경영여건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원예·특작·축산분야 농가(법인)를 대상으로 유료(자부담 50%)의 전문·상업적 농업컨설팅 서비스기반을 구축하고자 1999년부터 민간 농업경영컨설팅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2001년에는 4,000백만원(국고 1,200, 지방비 800, 자부담 2,000 백만원)을 투자하여 500개 농업경영체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2-2-38>

2001년 컨설팅서비스 지원실적

계	원예·특작	축산
개소 500(64)	79(20)	421(44)

* 전체지원 농가 500개중 64개는 법인경영체임

셋째,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전문경영체에 대한 집중교육이 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경영체,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현장교육 등의 경영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통교재를 제작하여 교육과정에 활용토록 보급하였다.

넷째, 농업인의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업인들은 진단표 작성과 다른 농가와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다. 평 가

농촌지도계통에 의해 수행된 농가 경영 컨설팅은 60개 품목의 경영표준 진단표를 개발보급하고 68천여 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처방 및 기술상담·지도 등 문제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민간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사업초기로서 컨설팅에 대한 인식부족 및 컨설팅결과에 대한 확신결여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참여농가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서서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컨설팅에 대한 농업경영체의 만족도도 향상되고 있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이경천)

7. 농업종합자금제 확대 추진

가. 추진개요

농업종합자금제는 사업별·품목별로 세분화된 농업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개보수·운전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종합지원하는 선진적인 농업자금지원제도로서 대출기관이 행정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일관 담당하는 지원체계이다.

정부는 1998년에 농업경영자금제 도입을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1999년 전국 34개 지역(농협 시·군지부 17개소, 지역축협 17개소)에서 원예특작과 축산분야를 대상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0년도에는 원예·특작분야의 채소, 화훼, 과실, 인삼등 품목별 생산유통시설사업과 축산분야의 한우, 젓소, 돼지, 닭등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전업농육성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통합하여 원예·축산분야의 재배·생산에 중사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지원조건은 연리 5%(2002.7.1부터 4%), 거치·상환기간은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2년이내 상환이며,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에만 20백만원을 하한으로 하고 있다.

<표 2-2-39>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구 분	기존지원체계	종합지원 제도
○ 지원 방식	개별사업별 분산지원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지원
○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농발심의회)	대출취급기관(농협)
○ 자금 지원	년1회 일괄 선정·지원	수시선정·지원, 사업평가후 추가지원
○ 사 후 관 리	채권관리 중심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나. 종합자금제의 주요 특징

첫째, 사업추진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대출기관이 일관 담당하고 대출위험도 부담토록 하여 대출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침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농가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농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사업의 성패에 대한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농업인의 편의(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를 위해 연중 수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종합지원함으로써 사업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병행하여 사전·사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품목별·지역별·사무소별로 자금을 사전 배정(할당)하는 공급자 위주의 자금공급방식을 지양하여 경기 등 여건변동과 사업성을 반영하는 신속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 2001년도 종합자금 지원실적

(1) 품목(축종)별 지원실적

원예특작분야의 채소(21%), 특작(20%)부문과 축산분야 양돈(14%), 한우(11%)부문의 비중이 높았으며, 화훼(6%), 양계(1%)부문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양돈·양계분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신규시설자금 지원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농가당 평균지원규모는 25백만원이며 분야별 평균지원규모는 축산분야가 37백만원, 원예특작분야가 21백만원으로 축산분야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금용도별 지원실적

용도별로 보면 시설자금이 27.7%, 개보수자금 8.7%, 운영자금 63.8%로서 운영자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이는 2001년부터 운영자금의 별도 지원이 가능하였고, 시설투자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2-40>

농업종합자금 추진 현황('01년)

분야	세 품목·축종	사업량 (호)	자 금 용 도(백만원)				평 균 지원금액 (백만원)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합 계	
원 예 특 작	채 소	1,456	12,437	886	22,990	36,312	24.9
	과 수	988	8,984	640	16,658	26,282	26.6
	화 훼	364	3,712	264	6,823	10,800	29.7
	특 작	2,391	11,991	854	22,155	35,000	14.6
	소 계	5,199	37,124	2,644	68,626	108,394	20.8
축 산	한 우	649	8,995	2,842	7,631	19,468	30.0
	젓 소	410	7,202	2,275	6,111	15,588	38.0
	돼 지	496	10,936	3,454	9,278	23,668	47.7
	닭	51	765	241	648	1,654	32.4
	기 타	103	1,499	474	1,272	3,245	31.5
	소 계	1,709	29,397	9,286	24,940	63,623	37.2
기 타		214	90	-	2,883	2,973	13.9
합 계		7,122	66,611	11,930	96,449	174,990	24.6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라. 추진성과

(1) 종합자금지원시스템의 안정화 및 추진체제 확립

1999년 시범사업으로 출범한 이후 4년차에 이른 종합자금제는 그간 사업계획 수립상담, 경영능력 및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 경영실태조사에 의한 사후관리 등 기본시스템을 정립함으로써 제도정착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2) 정책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충분한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대상자 선정으로 농업분야의 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품목별·지역별·용도별 구분 없이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자금지원의 경직성을 탈피하였다.

(3)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사업성공률 제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 농업경영체만을 선별지원하여 사업과 경영체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시설·운영·개보수자금을 농업경영체의 사업발전 단계별로 종합지원함으로써 경영체가 스스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자금지원 이후에도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기초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농가에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경영컨설팅과의 연계를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사업성공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김호성)

8. 여성농업인 육성

가. 개 요

1960년대 이후 농업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1970년 14,422천명에서 2001년 약 8.3%인 3,933천명으로 줄었다. 농가여성인구도 1970년의 7,258천명에서 2001년 2,031천명(농가인구의 51.6%)으로 감소하였다. 영농형태도 농업경영이 전문화 규모화되면서 미곡중심의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과수·채소·화훼 등 시장지향적인 상업영농체제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표. 2-2-41>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중 여성비율 추이

(단위 : 천명)

	1970		1980		1990		2000		2001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전체	14,422	7,497	10,827	6,641	6,661	4,240	4,032	2,795	3,933	2,785
남성 (%)	7,164 (49.7)	3,666 (48.9)	5,415 (50.0)	3,331 (50.2)	3,279 (49.2)	2,123 (50.1)	1,972 (48.9)	1,372 (49.1)	1,902 (48.4)	1,370 (49.2)
여성 (%)	7,258 (50.3)	3,831 (51.1)	5,412 (50.0)	3,310 (49.8)	3,383 (50.8)	2,117 (49.9)	2,060 (51.1)	1,423 (50.9)	2,031 (51.6)	1,415 (50.8)

자료 : 통계청 2001년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이와 같은 농가인구와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라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의 하나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가인구의 51.6%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부도 여성농업인력의 전문화 즉, 「여성농업인력의 주류화」의 실현이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력육성)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0년에는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하였다.

2001년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의 추진 첫해로써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으며, 여성농업인육성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하였다.

나. 주요 추진시책

(1)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전문적인 농업인력화를 위해 농진청과 농협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과 교양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업도 경영을 해야하는 오늘의 농업 현실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동력이 된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강화를 위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여성농업경영인반(초급, 중급)을 신설하여 2박3일씩 4회에 걸쳐 173명을 교육하였다. 중견 여성농업인의 지식기반농업 대응능력 향상 및 초급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위한 직업의식 키우기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였다. 여성농업인은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고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가 적어 다른 계층의 교육과 달리 여성농업인 눈높이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눈높이 교육훈련은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전문직업의식을 고양시키고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전문농업인으로서 농업·농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2000년에 이어 2001년도에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협대학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8천만원을 지원하였다.

(2) 각종 단체 및 위원회에 여성위촉 확대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확보와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농정분야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1997년말 5.1%에서 1998년 10.1%, 1999년말 20.8%, 2000년말 24.2%, 2001년말 30.0%로 확대되었으며, 농업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인 농촌진흥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

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에 국장급 또는 이사직에 각 1명씩 여성이 취임했으며 농업협동중앙회 대의원은 1,924명, 여성임원은 94명으로 임명되는 등 관련기관의 각 분야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계속 독려하고 있다.

(3) 여성농업인센터 시범운영

여성농업인은 전체농업인의 52%에 해당하고, 농업종사자도 51%에 이르지만 농업·농촌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드물고 교육·문화 등 복지정책도 열악한 실정이므로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마음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방과후 자녀학습지도와 전문적인 농업인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2001년에는 전국 4개도 4개 지역(영동, 서천, 안동, 진주)에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시범 운영하였다.

<표 2-2-42>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명)

	영 동	서 천	안 동	진 주	계
고 충 상 담	60	230	143	68	501
영 유 아 보 육	19	10	26	38	93
방과후 학습지도	10	40	38	-	88
교 육(회)	460(13)	912(37)	545(21)	2,215(82)	4,132(153)
단 체 활 동(회)	663(7)	3,491(68)	840(7)	846(7)	5,240(89)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1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여성농업인센터는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발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농소정협력사업비에서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2002년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지침에 반영하였다.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일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작업의 피해를 줄이고 출산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조건을 고려한 농가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 농가도우미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에 이어 2000년 농가도우미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1일 24,000원에서 27,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율도 50%에서 80%까지 높였으며, 사업지역도 68개 지역에서 87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가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2001년에는 1,692농가에서 농가도우미를 이용하였다.

<표 2-2-43> 농가 도우미제도 실시 시·군 현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울산	인천
87	16	10	6	8	7	11	13	10	4	1	1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5) 여성농업인 정책연구 사업추진

2001년도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연구사업으로 각종농업정책에 대한 성분석, 여성농업인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연구, 농업·농촌 발전과 여성전문인력육성 교재개발 등 3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농업정책에 대한 성분석은 여성농업인의 주류화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시행을 위하여 각종농업정책의 성분석을 주요골자로 하였으며,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연구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성전문인력육성 교재는 현 농업·농촌여건상 여성농업인의 기여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리더쉽개발, 농촌자녀교육과 가족, 여성문화와 건강 등 총4개분야 32강좌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눈높이 교재를 개발하여 여성농업인의 이해촉진과 교육효과 증진을 추구하였다.

다. 평 가

1998년 3월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한 이후 여성농업인 정책 강화를 위하여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여성농업인대표가 참여하는 정책자문회의의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각종 농정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농업인단체의 사회활동 지원 및 여성농업인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1999년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00년에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1년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농가도우미제도 및 여성농업인센터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한발 다가서는 중요한 시책이라 할 수 있으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가 4년여 밖에 되지 않아 여성농업인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여성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세열)

<표 2-2-44>

여성농업인육성 사업추진 현황

	단위	1998	1999	2000	2001
□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훈련					
○ 정보화교육	명	-	-	160	21,450
○ 영농기술교육	명	-	-	-	30,594
□ 여성농업인 교육시스템 구축	종	-	프로그램 개발연구	-	눈높이교재 개발/4
○ 여성농업인교육 워크숍 개최	회	-	-	-	1
○ 여성농업인 강사육성 추진		-	-	-	수요조사
□ 여성농업인 해외선진농업연수	명	-	-	28	5
□ 후계여성농업인육성	%/명	129/1,011	20.3/980	18.4/859	14.1/462
□ 각종위원회 여성위촉 확대	%	10.1	20.8	24.2	30.2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					
○ 여성조합원	%	-	-	-	19.6
○ 여성대의원	명/%	-	-	-	1,924/64
○ 여성임원	명/%	-	-	-	94/31
□ 여성단체 위탁사업 활성화					
○ 국민안전식생활교육·홍보	백만	503	359	205	200
○ 도·동교류사업	개/백만	워크숍2회	11/200	9/150	8/150
□ 여성농업인 단체활동 지원	백만	20	40	60	80
□ 여성농업인 전문직업의식 고양					
○ 여성농업인 단체행사 지원	백만	20	20	20	27
○ 여성농업인 표창	명	-	-	30	17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개소	-	-	-	4
□ 모자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명/백만	-	-	-	540/350
□ 농가도우미제도 정착	시군/명/ 백만	-	도입연구	68/730 /257	87/1,700/ 1,100
□ 여성농업인정책과제개발연구					
○ 농림부	과제	-	3	3	3
○ 농진청	과제	-	-	3	3
□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정비		여농정책 기본계획	-	여농육성 5개년계획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정
○ 여성정책 특강 실시	회	수시	수시	수시	10회
○ 여성정책반 운영	회/명	-	-	평등의식확 산연구	1/38

제3절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 혁신과 정보화 촉진

1. 농업기술 혁신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21세기 농업과학기술을 주도할 기초기술 및 실용화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목표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농업핵심 기반기술과 농업정책 지원 및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시험연구사업에는 소속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상연구사업과 대학 등 외부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공동연구사업이 있다.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2001년도 시험연구사업은 ①주곡의 안정공급을 위한 생산기술 지속 개발 ②고품질 원예작물의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③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④생명공학기술 등 첨단농업기술의 산업화 촉진 ⑤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의 정착 ⑥병해충·잡초 종합관리 기술개발 및 농산물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⑦유용 자연자원 개발 및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경상연구사업 1,115과제, 공동연구사업 205과제 등 1,320과제를 수행하여 품종육성 140건, 시책반영건의 152건, 영농활용 790건, 산업재산권 98건 등 모두 1,318건의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표 2-2-45> 2001년도 주요연구성과

품종육성	시책반영건의	영농활용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기타	계
140	152	790	98	47	91	1,318

2001년도에 도출한 연구성과 가운데 시책반영은 농림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 및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영농활용자료는 농업인이나 지도직 공무원들이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육성한

140품종의 신품종은 품종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물별로는 식량작물 33 특용 및 약용작물 19, 원예작물 85, 기타 3품종 등이다.

<표 2-2-46> 2001년도 육성 신품종 현황

계	식량작물	특용·약용작물	원예작물	벼	석	에
140	33	19	85	2		1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김시주)

가. 쌀의 지속적 안정생산 기술개발

최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반면 생산량은 다수성 품종 보급과 재배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지면적의 축소와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식량부족,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 등 식량수급의 불안정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의 주곡인 쌀은 식량안보 측면이나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TO 재협상 이후 쌀 수입 자유화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품질, 고수량의 우수한 품종 개발과 친환경적이며 저비용의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밥맛이 좋고 수량성이 높은 품종 개발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2001년에는 벼 10품종을 새로 개발하였다.

주요 신품종으로는 밥맛이 추청벼 수준 이상이며 10a당 쌀 수량이 550kg 이상으로 다수성인 “새상주벼”, “석정벼”, “새계화벼”, “중남벼” 등을 비롯하여, 도복에 강하여 직파재배에 적합하고 양질 내재해성인 “동진1호”와 소득작물을 재배한 후에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단기생육성 품종인 “만추벼”와 “만월벼”를 개발하였다.

또한 가공·특수용 품종으로는 찰쌀과 멥쌀의 중간 특성을 지니고 있고

건강식 현미밥용인 “백진주벼”, 식혜제조가 용이한 “설개벼”, 라이신 함량이 많아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안벼” 등 기능성이 높은 품종을 육성하였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밥쌀용 89품종 가운데 추청벼 이상의 밥맛을 보이는 고품질 23품종과 미곡종합처리장 및 전업농가 등의 선호가 높은 5품종을 선정하여 2002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대별 적응품종으로 추천하였다.

재배기술 개발에서는 질소질 비료 시비를 지금까지 4회 나누어주던 방법을 출수기 이후의 시비를 생략하는 3회 분시로 개선하였는데, 출수기 이후의 시비는 단백질 함량을 높여 밥맛을 떨어뜨리는 원인이었다. 벼의 등숙기에 완전미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대별 최적 파종 및 이앙 시기를 설정하였고 고품질 쌀 브랜드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 간척지 일품쌀 완전미”, “신동진쌀” 등에 대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등을 개발하고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였다.

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잦은 강우에도 파종이 가능한 벼 부분경운 건답직파 재배기술을 보완하여 경운·파종·비료 및 제초제 살포와 배수로 설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화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중묘기계이앙 보다 46%의 노력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단위 면적 재배에 적합한 트랙터 부착용 대형 이앙기를 개발하여 이앙에 드는 시간을 62.5% 절감하였다.

벼 재해경감 재배기술로는 90년만의 최대 봄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생육장애를 대비하고자 지대별 주요 벼 품종에 대하여 10% 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양한계시기’가 산간고냉지는 5월 25일, 중부중산간지는 5월 30일, 중부평야지는 6월 23일, 남부평야지는 6월 28일임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김정곤)

나. 발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발작물은 노동생산성이 낮고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발작물의 재배면적은 1970년대를 기준으로 할 때 1980년대에 50%, 1990년 28%, 2000년에는 16% 수준으로 크게 감소된 반면 밀, 옥수수, 콩의 수입은 2000년 기준으로 1,370만 톤, 금액으로는 18억 달러나 되었다. 또한 비옥한 농경지는 경제성이 있는 시설재배지로 전환되고 최근에는 유흥지, 건물부지 및 공공시설용으로의 전환이 꾸준히 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척박한 토지를 밭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 발작물 수량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품질이 우수한 발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 품종 및 안정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001년도의 신품종개발은 보리, 콩 등 8작물에서 21품종, 특용작물은 6작물에서 12품종, 약용작물은 3작물에서 3품종을 육성하였다.

보리는 숙기가 빠르고 호위축병에 강하며 알맹이가 커서 소비자가 많이 선호하는 “큰알보리 1호” 등 5품종, 밀은 성숙기가 그루밀 보다 5일 빠르며 체분율이 높아 생면이나 건면 등 국수제조에 적합한 “조품밀” 등 2품종을 육성하였다. 또한 청예조사료용으로 출수기가 빨라 답리작 및 옥수수 전작 생산에 적합한 “옥전호밀” 등 2품종과 내한성이 강한 삼한귀리 등 귀리 2품종을 육성하여 겨울철 유흥농경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특히 국내 육성 호밀품종인 “울호밀”은 해외(캐나다 PCL사)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종자 생산·판매시 톤당 5달러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개발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콩은 콩나물 수율이 높고 종실 및 콩나물에서 이소플라본(Isoflavone) 함량이 높아(3,192 μ g/g)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기계화 적응성이 우수한 “소록콩” 등 4품종, 옥수수는 수량이 높고 숙기가 빨라 조기재배에 적합한 단옥수수 “단옥 3호” 등 3품종을 육성하였다. 고구마는 식미, 외관 등이 우수하고 덩굴쪼김병에 강한 생식·가공용 “신건미” 등 2품종을 개발하였다.

특용작물 중에서 참깨는 종자 알맹이가 크고 무거울 뿐 아니라 항산화성분 함량이 높고 착유·조미용으로 적합한 “남백깨” 등 2품종을, 들깨는 잎 뒷면에 자색색소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일반깨잎에 비해 많아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잎전용 “보라들깨” 등 5품종, 땅콩은 종실에 올레인산 함량이 높고 대립종이며 도복에 강한 “보원땅콩” 등 2품종을 육성하였다.

밭작물의 재배기술개발에서는 중북부지방에서 답리작 작부체계 안정화를 위해 찰쌀보리+벼 재배로 벼 단작 대비 86%의 소득증대효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기존 건조+정선+포장+운반+수매+저장의 단계를 미곡종합처리장을 이용한 산물보리 일관처리기술을 확립함으로써 기존의 10a당 4.6시간에서 2.1시간으로 54%의 노력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콩에서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일관작업체계를 확립하여 관행대비 94% 노력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참깨에서는 수확탈곡기를 개발하여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던 수확 및 탈곡작업을 크게 개선하였는데, 예취결속기와 탈곡기를 이용할 경우 10a당 4.5시간까지 작업시간을 단축시켜 인력작업 대비 83%의 노력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농법의 일환으로 사료작물인 헤어리벳치 재배이용에 있어서는 토양내 질소공급 및 토양유실억제는 물론 10a당 175kg의 조단백질 사료를 생산하게 되어 유희농경지 활용과 화학비료 투입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김정곤)

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국민 식생활의 수준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및 다양화로 원예작물에 대한 소비량도 크게 늘었다. 채소류의 1인당 소비량은 1990년 133kg에서 2000년 148kg으로 11%, 과실은 1인당 소비량이 41.8kg에서 53.4kg으로 28%, 화훼류는 1인당 연간 소비액이 5,600원에서 13,900원으로 2.5배나 증가하여 1970년 농업 총생산액의 18%에 불과하던 원예산업의 비중이 2000년에는 31%로

커졌으며 그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중국, 동남아, 남미 등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어와 우리 농산물시장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예작물의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분야에서는 2001년도에 채소, 과수, 화훼 등 24작물에서 85품종을 육성하였다.

채소류는 14작물에서 44품종을 육성하였다. 감자는 중생종으로 바이러스병 및 역병에 강한 “신남작” 등 2품종, 배추는 바이러스병에 강한 “황실” 등 3품종, 무는 수출용으로 근피색이 진분홍인 “핑크탑” 등 3품종, 고추는 일시수확이 가능하고 수확율이 높은 “생력211호” 등 13품종을 육성하였다.

방울토마토는 바이러스병에 강하고 과피 균열현상 발생이 적은 “우량방울1호” 등 8품종, 수박은 덩굴쪼김병 저항성인 “왕대” 등 5품종, 호박은 흰가루병에 강한 “시골” 등 2품종, 멜론은 당도가 높고 외관이 우수하며 병에 강한 “은누리2호”를, 딸기는 조생종으로 흰가루병에 강하며 당도가 높은 “매향”을 육성하였다.

상추는 중생종으로 샐러드용 결구상추인 “아담”과 추대 성장을 늦춰 쌈용 상추로 적합한 “적하게” 등 3품종, 양파는 조중생으로 저장성이 좋은 “만추황”, 부추는 울진 재래종을 고정한 “동장군”, 생강은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 가능한 “풍미”를 육성하였다.

과수에서는 2작물 3품종을 육성하였는데 배는 과실이 크고 당도(13.8°Bx)가 높으며 검은무늬병에 강한 극조생종(8월 중순)인 “한아름”과 당도(13.2°Bx)가 높고 검은줄무늬병에 강한 조생종(9월 상순)인 “금촌조생” 등 2품종, 7월 하순에 출하가 가능한 조생종으로 외관이 수려하고 당도(12.8°Bx)가 높으며 맛이 우수한 자두 “퍼플퀸”을 육성하였다.

화훼류에서는 8작물에서 38품종을 육성하였는데 국화는 주년재배가 가능하고 백색 스프레이형인 “함백” 등 4품종, 나리는 조생종으로 꽃 모양이 컵형이고

주홍색인 틈나리 “홍화” 등 4품종, 카네이션은 백색과 적색이 혼합된 스프레이형인 “데네브” 등 4품종, 장미는 백색과 분홍색 복색이고 향기가 좋은 “스위트핑크” 등 13품종, 비모란선인장은 갈색 구에 백색 모음이 잘 발달된 “담담” 등 5품종, 거베라는 화색이 적색으로 다수성인 “허니문” 등 4품종을 육성하였다.

이밖에도 산취선인장 “홍운” 등 2품종, 아마릴리스 “탐라” 등 2품종 등 소비자가 크게 선호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신품종을 육성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채소 재배기술 개발에서는 고추 육묘 및 정식노력을 10a당 44시간 절감이 가능한 직파재배 기술을 확립하였고, 오이 시설재배시 결가지 발생을 46% 향상시킴과 아울러 착색단고추의 경우 고온기 재배시 측지 3엽당 1개 또는 측지 4엽당 2개를 착과시켜 6.6% 증수하였으며 고랭지 재배시 지중가온 기술을 확립하여 34% 증수하는 등 수출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였다.

과수분야에서는 사과 품종별 적합한 수분수용 꽃사과 “Yantai” 등 4품종을 선발하여 과수의 결실안정방법을 확립하였으며, 포도 우박 피해과원의 동해방지 및 조기 수세회복 방법, 복숭아 동파직후 주간부 밴딩에 의한 수세회복 방법 등 과수 기상재해 경감방법을 확립하였다. 이밖에도 폭기식 심토파쇄 방법을 개발하여 배 과수원의 물리성 개선과 토양 인산과 칼슘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온주밀감의 해거리방지를 위한 가을전정 및 부분 전적과 기술을 개발하여 수량 변동율을 3.1%로 감소시켰으며, 감귤 품종인 “부지화” 대과생산 및 해거리 방지를 위한 적정 착과수준 구명과 함께 갈색 및 청색 반점 발생원인을 구명하였다. 또한 대미 감귤수출시 사용금지 약제인 「만코지」 대체약제로 EPA 허용 약제 중 「아족시스트로빈」을 선발하였다.

화훼류에 있어서는 먼저 나리 미성숙 구근의 성숙 및 휴면타파 조건을 구명하여 발아율과 상품화율을 향상시켰으며, 1년 내에 출하가 가능한 아잘레아 소형분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단경기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거베라에서 격리상 관비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절화 수량이 50% 증가하였으며

시비량도 절감할 수 있었고, 동계 지중난방을 통하여 지온을 20~24℃로 유지함으로써 절화수량의 증가는 물론 상품률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수출장미의 수확 전·후 처리제를 개발하여 절화수명을 8~10일 연장하였으며, 습식 대체용 건식 저장방법을 개발하여 절화수명을 5일 연장하였다.

원예작물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시설하우스의 안전적설심을 19cm에서 25cm로 안전풍속을 30m/s에서 35m/s로 구조 안정성을 보강한 농가보급형 자동화하우스 3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모델을 3개에서 10개로 늘려 신규 설치 및 재해복구시 지원기준을 확립하였다. 단동형비닐하우스용 자율구동 측창 개폐기를 개발하여 시설내 온도 편차를 ±4.0에서 ±1.0로 줄였으며 측창 개폐노력을 87% 절감할 수 있었으며, 코크스 난방기의 연료공급·송풍·재처리 제어장치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다.

김치의 주원료이며 채소 재배면적의 12%를 차지하는 배추와 마늘은 파종·이식에서 수확·선별까지 일관 시스템화를 위해 농업기계화연구소와 원예연구소 등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배추는 두둑성형기, 정식기, 중경제초기, 붐방제기, 수확기, 운반적재기 등을 개발하고 활착 촉진, 생육균일화 등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노력 81%, 소요경비 47%를 절감하였으며, 마늘은 쪽분리에서 통마늘 선별까지 일관기계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노력 75%, 소요경비 44%를 절감하였다. 특히 ‘마늘직립파종기’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중국, 미국 등에 국제 특허출원하였다.

또한 배추, 고추 등 소립종자를 육묘상자에 정밀하게 파종할 수 있는 육묘용 소립종자 파종기를 개발하였는데, 소형이고 경량이면서 가격도 1대당 10,000원 이하로 저렴하여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당근은 굴취, 뽑기, 잎 절단, 수집이 4줄씩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밀도가 수확율 96%(손상율 1%)로 우수한 수확기를 개발하였다.

국화, 장미 등 절화류 수출시 육안선별에 의존함으로써 신뢰도가 낮았던 문제를 절화류의 길이, 꽃대 굵기 및 휨 정도, 개화 정도 등에 따라 5등급으로

선별하는 절화선별시스템을 개발하여 절화류의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병해충 분야에서는 사과 '홍로'품종에서 발생한 줄기 이상증상의 원인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에 보급하였고, 휘발성 유인물질(특허출원)을 이용한 끈끈이트랩으로 사과원 나무줄류 발생예찰방법을 개발하였으며, 복숭아 심식나방과 순나방의 발생특성 및 주요 방제시기를 구명하여 복숭아과원에서 심식충류 동시방제체계를 확립하였다.

장미에 발생하는 주요병해인 줄기마름증상의 원인과 방제방법을 구명하였으며, 박과작물의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병(CGMMV)을 비전문가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항체여과지진단법을 개발하는 한편, 지표식물을 이용한 검정기술도 개발·보급하였다. 이외에도 감자 더덩이병 조기진단용 키트(ELISA)와 나리에서 파이토플라즈마병을 검정할 수 있는 검정용 프라이머를 선발하였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이광식)

라.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조사료 이용기술 개발

국민소득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70년 5.2kg, 1980년 11.3kg, 1990년 19.9kg에서 2000년 31.9kg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축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축산업은 개방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쇠고기와 생우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육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 축산물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확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청에서는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물생명공학연구의 기반구축 및 고품질 친환경 안전 축산물의 생산공급 기술개발을 2001년도 중점방향으로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가축개량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0년까지의 국가단위 개량목표를 축종별로 설정(농림부 고시, 2002-1)하였으며, 가축 개체표식(ID)을 국제 호환이 가능한 16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국가단위 우량종축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 한우 19두와 젃소 2두의 보증종모우를 선발하였으며, 암수소 동시 개량을 통한 한우개량 효율증진을 위하여 한우 고급육형 암소 핵군 5,000두를 조성하였다. 또 국내 최초로 한국형 우수종돈 3계통을 조성하여 돼지개량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초음파 표준화상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상태에서 육질·육량을 조기관별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육질과 육량이 우수한 개체를 신속하게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량한우의 조기 대량증식을 위한 체세포 복제 수정란 이식기술을 개발하여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인 8.7%의 수태율을 보임으로써 체세포 복제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하였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현재 6두의 복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체세포 복제소의 생산효율 향상을 위한 기초기술 보완과 생산물(우유 및 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수입 쇠고기와 국내산 젃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우고기임을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감식법을 개발, 실용화 단계에 있다. 털색 관련 유전자 특이마커(MC1R)를 이용하면 젃소고기와 한우고기는 100% 판별이 가능하며, 수입 육우고기는 기존에 개발된 3개의 한우 특이마커(MC1R, MG12, MG12M-N)에 2001년 새로 개발된 마커(KTH004)를 추가하여 이용하면 판별 신뢰도가 91.5%로 향상되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하였다.

한편 가축으로부터 사람에게 유용한 의료용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연구에도 역점을 두어 조혈촉진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돼지「새롭이」에 이어 형질전환 가축의 젃과 오줌에서 빈혈치료제로 사용되는 조혈촉진제(EPO)를 정제 분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또 수정란 체외배양을 이용한 인간 알부민 함유 형질전환 병아리를 생산(부화율 5.5%)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켰다.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100% 거세, 비육후기 보리 20~30% 혼합 급여, 출하체중 650kg 이상 사육 및 고기 숙성기간을 10~14일로 연장하는 등의 고급육 생산기술을 종합 투입하여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을 52.3%(일반

거세우)에서 85% 수준으로 높였다.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해 물돼지(PSE 돈육) 발생율을 줄이고자 물돼지발생 유전인자(PSS) 제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닭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출하체중 1.6kg 미만의 국내 소비용에서 2.5kg 이상의 대형육계 생산기술을 확립하였다. 또한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계란(4개 등급)과 닭고기(3개 등급)의 품질규격 및 등급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소 사육단계별 위해요소 중점관리체계(HACCP) 프로그램과 미생물 제어기술 등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였다.

환경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 및 시설 생력화를 위하여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제를 개발하여 「에코 바이오」란 상품으로 실용화하였으며, 오존(O₃) 산화법을 이용하여 BOD 98% 제거 및 92%의 방류수 탈색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온도 습도 유해가스 등을 종합 제어 할 수 있는 돈사환기 시스템 및 자동제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다.

한편 조사료 자원의 개발과 이용효율 증진을 위하여 내한성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화산 101호」 종자 4,000kg을 보급하였으며, 네덜란드 Joordens 회사와 「화산 102호」, 「화산 103호」 종자 판매시 톤당 100불의 로열티를 확보하게 되었고, 다수성 우량 사료작물(옥수수 6, 수수×수단 잡종 4품종)을 선발하였다. 또 보리총체 사일리지의 젖소 착유우 급여로 수입 조사료 대비 사료비 14% 절감, 거세 한우는 배합사료 18% 절감효과가 있었으며, 산불피해 지역의 초지 조성에 의한 조기 식생 피복효과, 생벚짚 원형곤포 사일리지 조제기술 확립 등 농가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기술을 집중개발 보급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초종자의 자급과 양질 조사료의 자급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서 성)

마.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개발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목표로 이와 관련된 농업 기술 개발 및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 생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정밀농업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보전하는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은 물론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농업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밀농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철원, 양구 등 민통선 지역 14천ha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집중개발지역인 대전지역 54천ha에 대한 농업기반 정보의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토양환경 정보망 운용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과 웹서비스망(29개 시군) 구축을 통하여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및 재배적지, 적성등급, 토지이용추천 및 토양관리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자부, 농림부 등의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과 연계하여 운용하고 있다.

농업환경 변동실태 분석을 위해 노지 밭에 대한 비옥도를 조사한 결과 인산은 572mg/kg, 칼리는 0.79cmol⁺/kg로 과다 축적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단인근 취약농경지는 조사지점 600지점 중 중금속함량이 오염기준 초과 지역 17지점 223ha에 대한 토양개량 대책을 시책에 반영토록 건의하였다.

또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농경지 토양수분변화를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여 토양수분상태에 따른 물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농업용 지표 500지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만금 수계 수질에 대하여 만경강 43지점과 동진강 19지점을 조사한 결과 수질에 대한 영향은 축산지역과 도시생활하수지역 및 공단하수 통과지역 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분석한 결과 논 이용형태별 산소 방출량은 단작재배가 연간 17.8톤/ha, 이모작재배가 22톤/ha로 단작대비

이모작 재배가 24%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개된 농업용수에 대해서 논농사에 의해 지표수의 질소 정화기능은 연간 34.86kg/ha, 지하수의 질소 정화기능은 연간 25.33kg/ha 임을 분석하여 논농사가 수질정화기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OECD 농업환경지표인 양분지표, 토지이용 및 보전지표, 토질지표, 물사용지표, 수질지표, 온실가스지표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계량화 평가방법을 정립하였으며, 비료사용량 절감 및 물 절약과 지구온난화 저감 등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한편, 환경친화적 분뇨처리 및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기술 개발로는 과수, 채소 등의 발작물 10종에 대한 액비사용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화학비료와 돈분뇨 액비사용시 환경영향을 비교하여 적정량의 액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액비 활용기술인 혐기성소화에 의한 가축분뇨 종합관리시스템(IWM)을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에 설치하여 발생하는 가스(Biogas)로 전기를 생산하였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고현관)

바. 병해충·잡초 종합관리 기술개발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국가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묘목, 종자 등과 함께 외래병해충이 유입되고, 이상기온으로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농약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용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농산물 중 잔류농약으로 국민건강 등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연구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병해충·잡초의 정밀예찰을 위한 새로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등 61기관이 참여하여 국내종(6작물 39종), 외래종(병 22, 해충 20, 잡초 18)에 대하여 전국 규모로 농작물 병해충·잡초예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예찰시스템에는 천적을 포함한 병해충의 종류, 생태, 방제자료 등 177,343건과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16작물 5만건의 정보를 내장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농작물 병해충·잡초의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적기에 방제대책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농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하는 생물적 방제기술을 안전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고자 진디벌, 칠레이리응애 등 5종에 대하여 천적 대량사육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23개소, 천적회사 3개사에 천적생산기술을 이전하였다. 이중 3종의 천적에 대한 농가실증 시험시 107ha의 포장에 방사하여 방제효과를 시험한 결과 생존률이 높고, 방제효과도 우수하였다.

현재까지 개발된 천적으로는 칠레이리응애(딸기의 점박이응애 방제), 온실가루이좀벌(토마토·오이의 온실가루이 방제), 진디벌(고추·수박의 진딧물 방제), 애꽃노린재(고추·오이의 총채벌레 방제) 등이 있다.

바이러스병의 사전예방으로 방제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작물 재배 초기에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프라이머(primer)를 개발하였다. 수박, 오이, 멜론, 호박 등 주요 박과작물에 발생하는 5가지 바이러스병인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WMV),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 규리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KGMMV)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으며,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도 1시간 이내이고 정확도는 99% 이상으로 전남 및 경남농업기술원 등에 6,000점을 분양하였다.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등록신청 및 등록농약의 작물 잔류성을

평가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였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은 등록신청농약 291건 중 설정대상인 144건, 국내 재배환경에서의 잔류성 평가에 의한 기준변경 34건, 재등록 신청농약 219건 중 대상품목 193건의 기준변경 등 총 988품목 중 613품목에 대하여 기준설정을 완료하여 농민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또한 토양 중 농약잔류량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개발하였는데, 국내사용농약과 국제적 관심농약 (POPs 및 EDs) 등을 포함하여 단시간 내에 잔류농약 200여 성분을 분석할 수 있고 기존에 15일정도 소요되던 분석시간을 1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었으며, 분석비용도 개별 성분 분석방법보다 매년 약 3~5억원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편 소면적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없어 소면적 재배농가에서는 병해충 발생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1998년부터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여 2000년도에 6작물 26품목, 2001년도에는 들깨, 취나물, 상추 등 25작물 50품목을 직권등록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들깨잎 등 23작물 50농약 성분 96건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수출용 사과, 배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적용 가능한 농약 4종을 개발하였으며 적용농약의 안전사용체계를 수립하여 농약잔류문제가 없는 수출농산물 안전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고현관)

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유용 농업자원의 자원화 기술 개발

농작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과 함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확 후 관리기술과 자원화기술 개발도 중점 추진하였다.

먼저 사과, 배, 복숭아에 이어 감귤의 비파괴 선별시스템 개발도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감귤은 크기별로만 선별하여 오던 것을 근적외선 분광투과법을 이용하여 감귤의 당도, 산도, 숙도, 부패, 크기 등을 인자로 하여 14개 등급으로 시간당 14,400개가 선별 가능한 신속·정밀한 선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일본에 노지 감귤을 처음으로 수출하였다. 한편, 수출용 장미의 유통 및 저장과정에서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확 전 처리제(STS)와 수확 후 처리제(DF-100+S, AS+S)를 개발하여 절화의 수명을 8~10일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버섯, 곤충, 양잠산물 등 농업 유용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되는 버섯 및 누에품종을 개발하여 농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버섯은 발이수가 많고 갯형태가 균일하여 상품성이 높은 팽이버섯 “백설”을 육성하였으며, 상항버섯은 초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우량품종인 “황금”을 선발하여 품종등록 하였다.

한편, 누에분말, 동충하초 및 누에그라 생산을 위하여 암수를 쉽게 감별하여 수나방번데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누에품종 “추강잠”을 육성하여 장려 품종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기록된 누에 수나방이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구명한 결과 남성호르몬 33%, 정자수 41%, 운동 지구력이 60%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실용화하여 천연강정제 “누에그라”를 개발하여 양잠농가의 소득을 4배로 향상시켰으며, 미국, 캐나다 등에 수출로 외화 획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야생동충하초균에서 혈압강하 효능이 우수한 애매미유충눈꽃동충하초(*Isaria sinclairii*)의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시범보급 중에 있다.

한편, 농촌생활연구소 주관으로 2,337종의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하여 아미노산, 지방산, 식이섬유, 미량무기성분 등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국가 표준식품 성분표」를 발간하여 각종 단체의 급식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방부 등에 시책반영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인간과 자연, 전통이 조화된 농촌환경조성 연구를 통하여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며 전통문화 보존형 농촌마을 모델 5개와 마을운영프로그램 9종을 개발하여 농촌마을의 관광자원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산식품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상품화 연구를 통하여 인공발효관

리기술을 이용한 메주 제조법 개발, 전통 엿의 제조법 개선 등 전래 민속 음식의 상품화를 추진하였고, “레드퀸”, “미향” 등 새로 육성된 장미품종의 향산화 효과 및 생리활성 성분 함량 구명으로 장미아이스크림 제조기술을 특허 출원하였으며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시식용으로 제공하였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김시주)

2. 유용 유전 자원의 종합관리

농업유전자원은 신제품개발, 신물질탐색 및 생명공학연구를 위한 기본재료로 이용되고 자연생태계의 안정적 유지보존에 필수적이거나 한번 소실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체계적인 보존과 탐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 각국에서는 유전자원의 수집·평가 및 활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우량 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나라가 앞으로 닥칠 종자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원의 무기화 개념으로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도 생물다양성협약을 체결하여 각국의 자원을 보호하는 추세 이기에 점점 외국으로부터 자원을 수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자원 보유국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조기에 대량 수집·확보하고 국내적으로는 국가 유전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국내외 유전 자원의 수집·보존·탐색

농촌진흥청에서는 해외에서 유용 유전자원을 최대한 확보코자 노력중이며 그 일환으로서 유전자원 관련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유용한 유전자원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산간지, 도서 지역의 농가보유 재래종 및 품종육성기관, 종자회사,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종과 육성종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유전자원 종자 146천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수집된 종자자원에 대한 특성검정을 69%까지 마쳤으며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표 2-2-47>

유전자원 보유현황(종자, '01. 7현재)

(단위 : 점)

구 분	작 물 수	보존자원수	비율(%)	특성검정 자원수(%)
벼	1	24,112	17	21,234(88)
맥 류	10	46,454	32	34,354(74)
두 류	51	28,104	19	18,227(65)
잡 곡	12	12,341	8	9,461(77)
식량작물 소계	74	111,011	76	83,276(75)
특용작물	151	17,779	12	9,430(53)
원예작물	281	13,713	9	6,503(47)
기 타	626	3,651	3	957(26)
계	1,132	146,154	100	100,166(69)

또한 종자 뿐만 아니라 영양체 996종 11,010점, 가축 22종 18,996마리, 미생물 621종 13,207점, 누에 321점 등 총 18만여점을 보존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세계 6위 수준이다.

특히 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146,000여점 자원의 기초정보와 특성평가 성적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였으며 자원분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미생물 자원의 특성 및 영상 정보를 웹 서비스하고 미생물 자원의 유전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 후에는 양적으로 세계 6위 수준인 유전자원을 질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탐색 및 보존체제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과 농업연구관 박재균)

나. 주요작물의 Genome연구확대 및 유용 유전자 개발

주요작물을 포함한 농업유용자원에 대한 유전체분석 연구는 최근의 컴퓨터 및 통신기술(IT)의 발달로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급속한 발전은 주요 농업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한 후 무차별적으로

특허화 하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주자는 기술 종속국에서 탈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점이다.

1999년부터 벼 게놈분석 국제컨소시엄(11개국)에 참여하여 벼 1번 염색체를 일본과 함께 완성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9번 염색체를 분석하기 시작하여 각국에서 분석한 염기서열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1차 완성결과를 발표(2001년)하여 신젠타, 몬산토 등의 다국적기업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포스트 게놈시대는 염기서열이 분석된 정보를 이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개개의 유전자에 대한 기능을 분석하여야 특허화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벼의 게놈 분석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1년 7월 벼 흰잎마름병원균과 배추의 유전체 분석연구에 착수하였다. 미생물의 경우 벼 흰잎마름병원균에 대한 유전체 전 염기서열 분석을 조기에 완료하고 앞으로 10년간 최소 7종의 주요 농용미생물에 대한 유전체 염기서열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추의 경우는 국내 관련 연구자들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국제적 컨소시엄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향후 염기서열분석을 주도하여 10년 내에 분석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이들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농업생명공학 기술의 기본이 되는 많은 신규 유용유전자를 특허화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국내 농업여건에 맞는 형질전환 동·식물을 개발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생명공학기획조정과 농업연구관 김동헌)

다. 생물 정보의 D/B화 및 활용시스템 구축

농촌진흥청에서는 생명공학 원천기반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물 자원 및 유전체 분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 작물 및 미생물의 유전체 분석정보, 분자유전자 지도정보 및 유전자변형작물(GMO) 개발 및 안전성 관련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웹사이트 (<http://biogen.niast.go.kr>)에 공개하였다.

유전체 분석정보는 국내의 참여국이 최근까지 분석한 25% 정보(약 100Mb)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각 국별 추진현황과 함께 염기서열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작물의 유전체 연구를 수행하면서 개발한 벼 품질 및 생육관련 유전자, 배추 생육관련 유전자 12,000건에 대하여 관리 및 분양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각 유전자에 대한 염기서열 및 기능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전자 기능연구에 기초 자료가 되는 분자유전자 지도정보를 종합화하여 벼 1,096개, 배추 463개 마커들의 염색체별 위치 정보와 표현형 마커 정보를 저장하였으며, 유전자변형작물(GMO)은 국내에서 개발된 15개 작물에 대한 개발 현황과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작물 현황을 수록하는 동시에 GMO 안전관리를 위한 각국의 전담기관, 관리규정, 안전평가 및 연구동향에 관한 자료 등 50건을 수록하였다.

금후 증가하는 유전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요 작물에 대한 유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고 생물정보 분석(bioinformatics) 도구 개발 및 종합 분석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연구관 한장호)

3. 형질 전환 동·식물 개발과 유용물질 생산

가. 형질 전환된 작물의 조기 품종화 추진

농촌진흥청은 현재 14작물 35종과 2가축 5축종의 형질전환 동·식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중 제초제저항성벼와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검증하는 중이며 앞으로 4~5년 후면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벼와 감자에 대한 안전성연구는 도입유전자의 타 식물체로의 이동성, 농업 환경생태계의 영향(토양미생물, 곤충 등의 생태계 변화유무), 유독성물질의

생성 여부 등에 관한 환경위해성 연구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인체의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벼는 제초제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한 1대 잡종을 개발하여 현재 수량이 980kg/10a로서 획기적인 수확량이 증대된 품종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밀은 멕시코의 국제 옥수수·밀연구소(CYMMIT)와 공동으로 녹병저항성 형질전환체를 개발하였는데, 실용화될 경우 세계적으로 연간 4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의 경우는 빈혈치료제 생산 유전자(erythropoietin : hEPO)를 도입한 돼지(새롭이)를 생산하여 현재 SK 케미칼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중인 40종의 형질전환 동식물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거치고 조기에 품종화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생명공학기획조정과 농업연구관 김동헌)

나. 곤충·미생물 자원에서의 유용물질의 대량생산

가장 다양하고 방대한 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곤충자원은 농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생리활성물질과 유용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 생명공학 연구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누에는 물질대사기능이 고등 동물과 유사하며 취급이 용이하고 연중 사육이 가능함에 따라 유용물질의 대량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생명공학기법을 도입하여 누에로부터 버섯갈반병균 등 동식물의 병원성 세균에 저항력이 우수한 새로운 ‘누에신’ 단백질 유전자를 개발하여 특허등록하였으며, 한편으로 누에신을 생물농약이나 식품·사료첨가제로 활용하기 위해 대량생산연구를 수행한 결과 누에신 단백질 생산에 성공하였다.

이들 기술을 응용하여 누에 유충을 통한 경제적인 대량생산 기술을 확립하고 아울러 생산한 재조합 누에신을 생물농약으로 개발하고자 발현량 증대, 경제적인 생산공정 개발, 시제품 제작 및 효력검정 등 산업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동부

한농(주)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잠업연구관 강석우)

다. 동물자원 유용 물질의 대량 생산기반 구축

형질전환가축을 이용한 의약품 생산기술은 21세기 대표적인 지식산업 분야이다. 농촌진흥청은 인간의 조혈촉진유전자(hEPO)를 수정란에 미세주입하여 돼지를 형질전환 시킨 후 고가 의약품인 사람의 조혈촉진제(빈혈치료제)를 젖으로 분비하는 돼지인 『새롬이(Saerome)』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가축에서 EPO를 생산하게 한 세계 최초의 성공사례이다.

형질전환 돼지 『새롬이(Saerome)』를 이용하여 일반돼지와 인공수정을 시킨 결과 178두의 자돈이 생산되었으며, 이들을 검정한 결과 32두가 사람의 조혈촉진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후대에도 동 물질을 계속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새롬이로부터 생산되는 빈혈치료제(EPO)는 1g당 84만불(한화 11억원)의 고가의약품으로 우리나라의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SK케미칼(In2Gen)과 형질전환가축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 빈혈치료제를 상업화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유용유전자를 동물세포에 도입하여 배양한 후 의료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였다. 사람 및 가축의 불임치료제 등 이미 7종의 유전자를 동물세포에 도입하여 고가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생리 활성물질생산을 검증한 상태이며, 이들 결과를 국내외에 특허출원하는 등 첨단기술개발의 실용화와 지적소유권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가축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우의 게놈프로젝트(유전자분석)는 2020년까지, 돼지는 2010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대형국책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가축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등 고유의 원천기술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관 장원경)

라. 체세포 복제소 안정생산 및 수태율 증진기술 확립

체세포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우량 가축을 대량으로 생산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우수가축의 복제기술을 개발하여 1999년에는 한우 복제송아지 「새빛」 생산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체세포복제기술을 이용한 우수가축의 농가보급과 복제소의 생산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서울대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체세포 복제수정란을 시험적으로 농가 보유의 소 838두를 대상으로 이식한 결과 77두가 임신을 하였으며 그중 11두가 분만을 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체세포 핵이식기법에 의한 복제가축 생산은 높은 태아사망 및 유산 등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점이 많다. 일반적으로 체세포복제기술은 유사산, 난산 및 폐사율이 높아 복제소 생산율은 10%내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학·연 공동연구를 강화하였다. 한편, “복제소 및 생산물 사후관리 요령”을 관련기관 및 각 도에 시달하였고 복제소의 사후관리와 생산능력 조사 및 생산물의 안전성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관 장원경)

4. 농업생명 전담기구 및 지원체계 정비

21세기는 첨단분야에 대한 국가간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미래에는 농업도 적은 농지와 노동력으로 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요구되기에 우리의 농업도 고도의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바이오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생명공학 연구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2001년 2월 「바이오그린 21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이 사업단에서는 2001년부터 10년간 7,000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10년이내에 우리나라를 세계 5위 수준의 농업생명공학 기술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농업생명공학 육성 계획을 마련하였다.

가. 농업생명공학 연구 전담기구 설치

국가 농업생명공학 연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의 농업과학기술원 생물자원부를 농업생명공학연구원으로 독립시켜 식물생명공학분야의 기초연구를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하는 동시에 작물시험장, 원예연구소 등 작목기관에도 응용식물 생명공학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기술 연구소에 기초 및 응용생명공학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 농업생명공학 연구 지원체계 정비

「바이오그린 21사업단」은 대규모 국가단위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기획, 연구개발 사업의 진도관리, 세부 투자계획 수립, 타 부처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학·연 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동 사업단에서는 국내 대학, 국공립연구소, 산업체 등 모든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할 5대 핵심분야 즉,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농업생물자원의 유전체 분석,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농업생명공학실용화 촉진,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평가기술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분야별로 3~5개씩 총 20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분야별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컨소시엄 체제를 형성토록 유도하여 투자한 연구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국내외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 활용하는 동시에 과학재단의 Brain Pool제도, 해외 명예연구원제도, 국제공동연구 등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생명공학기획조정과 농업연구관 김동헌)

5. 농업정보화 촉진

급변하는 정보화추세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정보통신환경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정보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농촌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업관련기관등과 연계한 농촌 PC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가 PC보급률을 2005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금년 내에, 모든 읍 지역과 100명 이상의 수요자가 형성되어 있는 면 지역에서 ADSL과 위성인터넷을 활용한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정보화교육은 금년 중 8만명 교육을 포함, 2005년까지 40만명의 농업인에게 농업정보 119, 정보교육버스 등을 활용한 눈높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출하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전자경매, 경영정보 등 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 농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구축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초고속공중통신망은 ADSL, CATV, 위성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사업자간 경쟁에 의하여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자체 계획에 의한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경제성이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농간 정보격차가 점점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자에 대한 특별유자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과 농촌지역에도 정보화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2000년부터 농촌지역에 초고속통신(ADSL)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상대적으로 수요의 집중도가 높은 읍지역은 200개 초고속통신망(ADSL)구축이 완료되었으며, 면지역은 1,223개중 875개에서 ADSL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아울러 ADSL 등 유선방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위성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을 인하하였다.

<표 2-2-48>

통신요금 인하조정

현 행	변 경 ('01.6 이후)	비고
위성망이용료(20,000원) + KORNET접속료(3,900원) + 통신요금(사용시간에 따라 부과)	30,000원 월정액	ADSL lite와 같은 요금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이대형)

나.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화사회의 진전이 빨라짐에 따라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1998~2001년중 농업인 16만명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중에 76천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 및 지역 여건상 교육기회가 없는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 농촌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업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전화만 하면 지역의 농과대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 주는 '농업정보119서비스'를 전국 22개 농과대학에서 실시하여 농업인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컴퓨터 등 교육 장비를 탑재한 버스를 이용하여, 산간·오지의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촌마을로 찾아가는 교육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와 아울러 읍·면지역농협의 기초교육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중급교육 및 농업계 대학에서 전문교육 등 체계적인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2-49>

농업인 정보화교육 현황

구 분	계	1998~2000	2001
총 계	161,099	85,361	75,738
읍·면 기초교육	61,684	23,247	38,437
시·군 중급교육	14,351	-	14,351
품목·분야별 전문교육	10,042	8,949	1,093
농업정보 119서비스	27,976	12,899	15,077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3,100	998	2,102
생산자단체(농협)교육	11,186	6,508	4,678
정보화공공근로사업 (농가방문교육)	32,760	32,760	-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이대형)

다. 농업경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터넷 콘텐츠 확충

2000년 4월부터 농림수산정보센망(AFFIS.NET)을 통해 각종 농업정보와 건강, 의료, 문화정보 등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비디오 시네마, 생활 속의 작은 지혜 등 농촌생활관련 콘텐츠와 행사(단오제 등) 및 전통문화(부채춤 등)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향후에는 분야별 유명사이트를 조사·선별 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http://www.chulha.net>)을 운영하고 있다.

출하지원시스템은 1998년도 유통개혁대책 수립시 농업인 등 정보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통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999년에는 주요 채소류(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개발하여 2000. 1월부터 운영 및 정보제공 실효성을 검증하였으며, 2001년에는 부류별 대표품목(오이, 상추, 한우, 돼지, 사과, 장미)을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공정보로는 23개 공영도매시장의 시장별·법인별·가격대별 분석정보와 유통전문가의 작황·전망정보 등 농산물 출하시 활용하면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각종 그래프와 함께 제공하여 농업인이 농산물 출하시기와 시장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우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추진해온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은 2001년까지 806농가에 대해 구축지원 하였으며 농가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교육 및 정보화교육을 매년 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업정보119대학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2001년도에 제1회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우수농가를 발굴·홍보하고 타농가에 대해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농업인, 관련기관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하여 농산물전자상거래의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조규표)

라. 농림지식 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정부는 지식기반사회·지식기반농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 농업인 및 농업 관련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식Pool에 넣어 공동활용하고,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하였다. 지식관리시스템에는 농업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 유통, 가공, 농업정책 등의 자료가 포함되며, 특히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를 통해 얻은 농업과 관련된 노하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지식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농업정책이나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농산물에 관한 외국의 정책, 정보,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첫 해로서 전자결재, 전자메일, 게시판 등 여러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사용의 편리성 제공 및 개인이 보유한 지식, 전자결재완료 문서, 해외정보, 회의자료 등을 농업관련 기관 직원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1년 3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해외정보 구축강화, 인물정보 강화, 출하지원시스템 연계, e-Learning시스템 구축, 국회 및 국정감사 DB구축, 국내농업관련기사 DB구축, 농업관련기관(외청 및 소속기관·단체 등 12개 기관)의 중요DB를 상호 공유·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였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문광규)

제 4 절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개혁

1. 농산물 유통개혁

가.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소비자 유통주체간 경쟁이 격화되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도 소비자의 유통수요 및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유통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지농협을 중심으로 한 생산주체의 계열화·조직화를 통한 산지유통사업의 규모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먼저, 광역화되고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우수조합을 중심으로 중기·저리(3년, 3%)의 운전자금을 종합 지원하여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체제가 구축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생산·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 전국단위 생산조직 결성을 추진하여 2001년말 현재 4개 품목(참다래, 파프리카, 고랭지 채소, 겨울배추)에 대한 생산자 조직이 활동중에 있으며,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 중심으로 연합판매 등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공동브랜드화 등 마케팅 기능의 강화와 시장교섭력의 제고로 유통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산지유통기반시설에 있어서는 선별·포장·직거래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2001년까지 196개소를 확충하고, 운영실태 평가 및 경영컨설팅 실시 등 발전단계에 적합한 지도·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시설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운영자금 확대지원을 통해 시설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산물의 품질등급 및 포장규격의 표준화,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포장재비, 지게차 등 물류기기 구입비, 파렛트 등 물류기기 임대료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산지유통개선 시책에 힘입어 표준규격 출하율이 2000년 39.8%에서 2001년 46.2%로, 공동출하율은 2000년 55%에서 2001년 60%로 각각 증대되는 등 농산물 산지유통이 점차 효율화 되어가고 있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박범수)

나. 도매시장 개혁의 마무리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상장경매 원칙으로 인한 농산물 거래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품목에 따라서는 형식경매, 기록상장 등의 부조리가 일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상장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정가·수의매매제도의 활용 등을 통하여 도매시장 거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신규도입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농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도매시장운영지침이 되는 「도매시장업무규정」의 표준안도 마련하였다.

특히, 법시행과 동시에 도입이 가능한 지방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와 정산창구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정부, 도매시장개설자 및 종사자, 출하자,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도매시장제도 개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지도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전자경매는 경매결과 입력요원과 경매사 감축 등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선호도가 높은 중·상급품에 대한 경락가격을 높게 형성시키고 있어 상급품의 출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출하자의 수취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였으며, 경매현장에서 경락가격이 즉시 공개되는 특성으로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도매시장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도매시장법인을 대상으로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농산물 전자경매는 1994년 11월 개정된 농안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 일부 도매시장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입기반을 넓혀왔으며, 1999년 4월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전자경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부터 도매시장법인에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본격화하였다.

전자경매는 2001년말 현재 23개 도매시장 63개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경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중 9개소를 추가도입하는 등 2004년까지 개장·운영중인 전체 도매시장법인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도매시장에 상장 경매된 농산물 가운데 전자경매로 처리된 농산물도 컷해인 2000년에는 전체 거래량의 4%에 불과했으나 2001년 32.8%, 2002년 6월말 현재 58.6%까지 높아졌다. 외형적으로 불과 3년만에 전자경매가 수지식 경매를 누르고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장 주요한 거래방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러한 전자경매는 도매시장 농산물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경매결과 입력요원, 경매사 감축 등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중·상급품에 대한 경락가격을 높게 형성시키고 있어 상급품의 출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출하자의 수취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시장과 행정사무관 이정형)

다.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활성화

1998년부터 본격 추진되어온 농산물 직거래는 2001년에도 종합유통센터, 직거래장터, 도·농 자매결연 장터 개설, 파머스마켓 및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어 직거래비중이 1998년 12%에서 2001년에는 23%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약 1조4천억원의 유통비용 절감과 인근 도·소매상의 가격안정, 기존 유통채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종합유통센터는 현재 9개소 외에 2002년중 2개소를 추가 개장하고 4개소의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소도시 중심으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23개소 개설·운영을 지원해 나가고, 농업인

전자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물통합쇼핑몰에 전문몰 개설, 동영상 쇼핑몰, 지불·결제·웹로그 시스템 구축 등 쇼핑몰의 기능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직거래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 농축산물 산지-소비지 한마당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산지의 생산자 단체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소매단계 유통마진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 백화점, 할인점 등 민간 대형소매유통업체가 생산자(단체·조직)등과 직거래할 경우 직거래매취자금을 지원하는 등 직거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시장과 행정사무관 허원석)

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및 확대

인터넷 및 IT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 신속히 전환되고 있다. 2001년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인구는 총인구의 51.5%인 2,438만명이며,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총가구수의 55.2%인 794만 가구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2001년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는 2,949억원으로 전년대비 589% 증가하였다.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1,717억원으로 주요 거래품목은 축산물이며,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는 1,232억원으로 주요 거래품목은 곡류, 건강식품, 꽃 등이다.

<표 2-2-50>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 억원)

거래유형	2000년	2001년	증가율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425	1,717	404%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	1,232	-
합 계	500(추정)	2,949	589%

자료 : 통계청, 사이버 쇼핑몰 조사결과(매월), 2001
농림부 시장과

농업인과 소비자간 전자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농산물 통합쇼핑몰(www.a-peace.com)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농산물 통합쇼핑몰은 800여개의 농업인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웹호스팅·결제·보안시스템 등을 갖추어 공동이용하고 있다. 2001년에는 웹로그분석·공동구매·경매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지하철 광고를 실시하는 등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회원조합과 소비자간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협 인터넷 하나로클럽(shopping.nonghyup.com)을 운영 중에 있다. 인터넷하나로클럽은 2001년 433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농산물 B2C 거래규모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기업간 전자상거래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2년부터 우수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운영활성화 자금지원을 추진하는 등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추진결과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유통단계축소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유통인에게는 유통비용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2-51> 농산물 전자상거래 효과

구분	기업-소비자간 농산물 전자상거래(B2C)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농업인 이익	소비자 이익	
효과	도매가격보다 26% 높은 가격에 판매	소매가격보다 13% '낮은 가격에 구매	B2B사이트의 73%가 오프라인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자료 : 농림부 시장과

(시장과 행정사무관 박준국)

마. 디지털 유통을 위한 물류 효율화

소비자 구매패턴 및 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포장 단위의 표준규격으로 개편(127개 품목 666 포장규격)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재비를 2000년 415억원에서 2001년 625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였다.

유통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통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기기·설비를 단위화물적재시스템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기기·장비 지원을 확대('00 : 113억원 → '01 : 141억원)하였고,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01 : 35억원)을 통해 물류이동의 규모화, 복합운송, 하역기계화가 촉진되도록 하였다.

또한, 149개 우수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파워 전시회 개최를 통해 소비자 지향적 브랜드 마케팅 붐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표준규격농산물에 대한 바코드 도입을 통한 품질의 신뢰성 확보, 농산물 표준규격화 교육·홍보강화 등 지식기반·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산물 디지털유통체계 구축 노력을 강화하였다.

(유통정책과 서기관 정연호)

2. 농산물 수급안정

가. 농업관측 강화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하면서 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관측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 등락 폭이 크고 생산액이 많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면적, 작황, 사육상황, 가격동향, 재고상황, 소비동향, 해외시장정보, 수출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미래의 가격을 전망한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생산계획단계부터 판매까지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측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농업관측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2001년에는 보다 많은 품목의 정보 제공을 위해 상반기 3개(감자, 호박, 단감), 하반기 3개(당근, 양배추, 토마토) 품목을 추가하여 총 24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생산·제공했다.

또한 농업관측정보가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표본을 확대하여 정보를 수집·분석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지정보의 기초자료 수집원인 표본농가(5,800호 → 10,000호)와 모니터(440명 → 1,000명)를 확대·운영하였고, 전문연구팀(4팀 → 5팀)과 전담인력(25명 → 31명)도 확대하였다.

아울러 농업관측사업지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관측업무 지원과 대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온라인상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한 기반도 구축했다.

그리고 해외정보의 수집기능 강화를 위해 중국의 현지 모니터를 고추, 마늘에서 양파 품목까지 확대하였고, 북경 및 산동성의 연구소와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여 고추, 마늘 등 7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수출입 정보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생산된 농업관측정보는 부류별로 관측월보 또는 분기보 형태로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주산지 작목반을 비롯한 기관, 단체에 배포하고 있으며, 방송, 신문, 인터넷, E-mail과 2001년 신규 도입한 전화자동응답시스템(☎ : 060-700-1122)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우양호)

나. 유통협약·명령제 추진

계약재배·수매비축 등 정부 주도의 가격안정시책 만으로는 '농산물 제

값받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수급안정프로그램으로서 유통협약·명령제가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유통협약은 생산이 전문화되고 주산지화되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품질이 나쁜 농산물의 출하와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협약을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의 대표간에 맺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유통명령은 유통협약의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이 물량·품질기준 규제 또는 시장지원 등의 유통활동을 하기로 동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001년에는 양파·대파에 대해서 유통협약을 추진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였다. 양파는 생산과잉 예상물량의 50%(13천톤)의 품위저하품을 산지 폐기하고, 나머지는 정부수매후 수출 및 가공을 통한 시장격리로 약 714억원의 소득지지효과를 거뒀으며, 대파는 전국 대파협의회 주관으로 재배면적의 10% 수준인 449ha를 자율감축을 실시하여 약 120억원의 농가소득지지효과를 거뒀다.

(유통정책과 서기관 정연호)

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재배면적의 증감과 기상여건에 따라 풍·흉의 차가 크고, 가격 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무·배추·마늘·양파·파에 대해서는 재배의향 파종실적, 작황, 가격동향 등 농업관측 정보를 조사하고 동 관측 자료를 농업관측협의회에서 심의 분석한 후 농업관측월보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를 전산정보화하여 이용자들이 농림수산정보망(AFFIS),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95~2001년에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채소수급안정사업자금 4,500억원을 조성하여 2001년에 무·배추(봄, 고랭지, 가을), 마늘·양파, 대파·고추·당근에 대하여 산지농협과 농업인간에 60만톤을 계약재배한 후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를 조절 하도록 함으로써 성출하기 수급 및 가격을 안정

시켰다.

생산증가에 따라 가격이 낮은 대파 등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449ha를 산지 폐기하였고 가을무·배추도 수확기에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57천톤을 산지에서 폐기하여 시장 격리 조치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시켰다.

<표 2-2-52>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1990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 계	74.0	28,472	61.2	24,914	219.0	60,470	387.4	215,559	416.5	301,858	487.9	324,782	588.7	394,875	740.0	504,707
정수비	8.9	17,914	-	-	57.6	24,982	1.1	-	-	-	-	-	16.7	22,623	26.4	25,914
고추	3.5	15,204	-	-	-	-	-	-	-	-	-	-	-	-	-	-
마늘	1.1	1,602	-	-	14.6	16,832	1.1	-	-	-	-	-	16.7	22,623	16.0	23,298
양파	4.3	1,108	-	-	43.0	8,150	-	-	-	-	-	-	-	-	10.4	2,616
민간수매	42.3	8,805	27.9	18,478	76.6	17,969	44.6	38,006	33.9	19,367	59.3	22,483	45.6	20,848	56.8	25,028
마늘	20.2	8,098	11.3	13,578	14.1	11,566	16.6	14,245	8.2	13,721	13.1	13,683	14.9	14,079	17.8	17,123
양파	22.1	712	16.6	4,900	62.5	6,403	18.0	4,199	25.7	5,646	46.2	8,558	30.7	6,769	39.0	7,905
고추	-	-	-	-	-	-	10.0	19,562	-	-	0.04	242	-	-	-	-
정출조	22.8	1,753	33.3	6,436	3.8	217	98.0	353	25.6	1,491	24.6	2,299	28.4	1,404	56.8	3,765
계약재배	-	-	-	-	81	17,302	233.0	177,200	357	281,000	404	300,000	498	350,000	600	450,000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이재욱)

라. 과실류 수급안정 지원

2001년도 과실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과수 면적 증가와 감귤 풍작등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로 2000년에 비해 59천톤이 증가한 2,488천톤이 생산되었다. 공급량 증가와 전반적인 소비부진으로 과실 가격은 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주요과실의 정부비축사업 및 민간수매지원을 통해 수급안정 및 산지가격 지지와 단경기 출하조절을 통한 소비지 가격 안정에 노력하였다.

<표 2-2-53> 과실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합 계	73,724	22,942	48,046	18,847	102,747	28,607
정부수매	1,885	2,274	4,415	3,837	22,349	13,750
- 사과	1,885	2,274	1,440	1,222	6,348	4,732
- 배	-	-	2,975	2,615	7,828	7,433
- 감귤	-	-	-	-	8,173	1,585
민간수매	71,839	20,668	43,631	15,010	80,398	14,857
(저장용)	5,592	5,092	4,550	3,796	4,355	3,881
사과	2,637	2,251	2,120	1,529	1,438	1,524
배	1,391	1,511	782	796	461	490
단감	1,564	1,330	1,648	1,471	2,456	1,867
(가공용)	66,247	15,576	39,081	11,214	76,043	10,976
(농협)	41,591	11,280	31,555	9,579	68,371	9,058
사과	19,023	3,957	21,200	3,180	17,088	3,050
배	1,330	797	920	460	505	89
감	3,016	1,508	3,606	1,803	510	238
복숭아	3,047	1,231	2,000	900	307	207
포도	2,829	1,416	2,840	1,420	214	134
감귤	11,356	557	-	-	48,375	3,870
대추	215	860	181	725	75	578
매실	186	464	247	614	123	313
머루	71	50	-	-	-	-
유자	518	440	561	477	1,174	579
(유통공사)	24,656	4,296	7,526	1,635	7,672	1,918

자료 :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이영식)

제 5 절 축산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1.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 활성화

축산물 생산·도축·가공·판매의 일관체계 확립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육류 유통을 지육·냉동육 유통에서 냉장육·부분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시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1994년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acking Center) 건설을 추진해 왔다.

2001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9개소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여 2001년말 까지 9개소의 LPC(경기 안성, 강원 원주, 충북 제천, 충북 청원, 충남 홍성, 전북 익산, 전북 김제, 경북 포항, 경북 군위)가 완공되었다.

9개소의 LPC 건설사업비로 축발기금에서 1,047억원을 지원하였고 지방비는 34억원이 지원되었다.

선진국 수준의 시설을 갖춘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건설·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공급이 가능해졌으며, 가축의 생산·도축·가공·판매(수출)의 일괄 처리로 유통단계가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되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2000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둔화로 LPC 운영이 부진함에 따라 2001년도에 126억원의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활성화 자금을 지원하였다.

(축산물위생과 축산사무관 김동훈)

2.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2001년도 쇠고기 및 생우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사육불안심리로 한우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한우번식기반을 확보하고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01.4월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동 대책에 따라 초지등 번식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우량한 송아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전국확대 실시, 안정기준가격 상향조정(100→120만원) 및 두당 보전한도액 인상(20→25만원), 다산장려금 지급(3~4산 20만원, 5산이상 30만원)등을 통해 암소의 조기출하를 억제하고 한우번식기반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거세장려금(두당 20만원) 및 인공수정료(두당 2만원) 지원등을 통한 거세장려와 한우개량자원 확대에 대응한 한우고기의 품질차별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생우시장개방에 대비 수입생우원산지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식육판매점의 거래기록의무제, 도축장 HACCP적용 의무화 등 유통질서 확립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에 주력하였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이상수)

3. 민간수급 조절기능 활성화

돼지고기가격이 돼지고기 비수기인 10월 들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정부의 민간 비축, TV홍보 등 수급안정대책 추진으로 조기에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양계는 사육수수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수매비축 및 노계전문도계장 시설보완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수급안정을 이루었다. 또한 계절적 수요변화, 짧은 생산주기, 사육농가들의 입·퇴출 용이성 등에 따른 구조적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협 및 협회를 통한 소비홍보 및 입식자제 등 민간자율의 수급조절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부문에서는 우유의 민간자율적인 수급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집유일원화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집유일원화 참여농가, 유가

공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집유일원화 권역내 잉여원유에 대한 수매 및 차액보전 등을 통한 참여업체 경영부담 완화, 낙농자조금 활성화를 통해 소비기반 확충 등은 중점 추진하였다.

<표 2-2-54>

축산물 가격동향

(단위 : 원/kg)

	1998	1999	2000	2001
쇠 고 기	5,438	7,028	7,414	8,284
돼지고기	2,539	2,982	2,474	2,572
닭 고 기	2,602	2,453	2,356	2,528
계 란	926	859	774	981
우 유	535	535	602	610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도매가격이며, 우유는 원유가격임

(축산물위생과 행정사무관 이우곤)

4. 가축개량 추진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가축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2001년 가축개량 시책은 주요가축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한우개량은 한우개량농가(33천호)에서 등록된 152천두를 대상으로 혈통·능력이 우량한 암소집단을 집중적으로 육성 관리함으로써 한우 보증씨 수소 생산을 위한 당대 및 후대 검정용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능력검정을 거쳐 한우 보증씨수소 22두를 선발하였으며, 한우의 우량정책 1,173천두분을 생산하여 번식농가에 927천두분을 공급하여 한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우 예비등록제의 도입 시행과 함께 한우 유전평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축장에 바코드귀표 출현우의 도체성적조사를 통해

개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여 한우개량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였다.

젖소개량은 젖소 암소의 산유능력검정을 확대한 결과, 2001년에 낙농가 3,721호에서 약 131천두가 검정에 참여하여 검정 참여율이 42%로 전년 보다 약 10%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2001년도에 검정농가의 평균 산유량이 일반농가에 비하여 두당 1,615kg 더 높게 나타났다.

○ 2001년도 국내 젖소 두당 평균산유능력 추이(305일 기준)

- 검정농가 : (1995) 6,868 → (1999) 7,629 → (2001) 8,364kg

- 일반농가 : (1995) 5,836 → (1999) 6,132 → (2001) 6,749kg
 + 1,032 + 1,497 + 1,615

한국형 젖소 보증씨수소(국내생산 2두, 도입 5두)를 확보하여 젖소 우량 정액 668천두분을 생산하여 낙농가에 610천두분을 공급하여 젖소개량을 촉진하였다.

돼지개량은 종돈 검정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원종돈농장(GGP)-종돈농장(GP)-일반돈농장(PS)의 관리체계로 전문종돈업체를 육성하고, 돼지 인공수정을 위한 A.I.센타에 지원하여 능력검정을 받은 우량 씨수돼지 200두(구입비 두당 200천원 지원)를 확보하였다. 종돈(GGP, GP)의 교체물량(6,820두)은 국내산 우량 종돈으로 공급하여 자급율을 높여 나가되, 부족한 종돈 20%(1,382두)는 수입하여 충당하였다.

닭개량은 경제능력검정을 위하여 산란계와 육용계를 구분하여 14개 업체에서 34천수(산란계 25천수, 육용계 9천수)를 검정하고 검정소의 시설도 개선하여 우수한 종계를 선발해 양계농가에 보급하였다.

이러한 시책의 추진 결과, 2001년도에 다음 표에 보듯이 가축개량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2-2-55>

2001년도 가축개량 성과

축종	형질	1992	2001			
			목표(a)	실적(b)	진척도(b/a)	
한우	18개월령 체중(kg)	477	550	512	93	
	등심면적(cm ²)	75.8	76.4	84.7	111	
	등지방두께(cm)	0.75	0.75	0.52	144	
	육질1등급 비율(%)	15	60	24.8	41	
젖소	산유량(kg)	5,624	7,000	6,591	94	
	유지율(%)	3.64	3.70	3.70	100	
	무지고형분(%)	8.75	8.75	8.50	97	
돼지 (요크셔)	일당증체량(g)	930	960	952	99	
	등지방두께(mm)	14.9	14.0	13.4	105	
	사료요구율	2.41	2.40	2.29	105	
	비육돈 출하체중(kg)	97	105	105.5	101	
닭	산란계	산란지수(개)	269	285	288	101
		사료요구율	2.52	2.30	2.33	99
	육용계	육성율(%)	96	98	98	100
		6주체중(g)	1,720	2,100	2,194	105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축산서기관 최염순)

제6절 농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친환경농업기반 마련

1.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96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전성 부적합비율이 1999년도 1.8%, 2000년도 1.2%, 2001년도에는 1.1%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안전성 조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부적합 비율이 높은 30개 품목을 집중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여 2001년도에는 전체 조사 물량 중 66%에 해당하는 36,407건을 조사하였으며, 우리농산물의 수출지원을 위해 32품목 1,714건을 수출전에 조사하여 국산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였다.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농·소·정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하였다.

(식품산업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2. 친환경 농업의 기반마련

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 감축 추진

우리나라 농약사용량은 1991년 27천톤(성분량)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이며 2001년에는 2000년의 사용량 29천톤 보다 약 1천톤이 줄어든 28천톤이 사용되었는데 기상여건이 유리하여 병충해 발생이 경감한 것으로 사료된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1990년 1,104천톤(성분량)을 고비로 연차적으로 그 사용량이 감소하여 2000년도에 801천톤(성분량)에서 2001년도에는 725천톤(성분량)으로 76천톤이 감소되었다.

우리의 농업을 환경과 조화되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작물양분종합관리(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와 병해충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를 통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1999년 대비

2005년까지 30%, 2010년까지 최고 40% 감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1년도에 병해충 관찰포 1,650개소, 예찰포 200개소를 통한 과학적 정밀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에 경제적 방제가 실시되도록 하고,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를 점차 확대하여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대농업인 지도도 강화하였다. 또한 생물 농약 등 환경친화적인 농약의 개발·보급도 병행하여 화학합성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부하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국 14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을 통해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토양에 부족한 성분만을 시비토록 하고 완효성비료, 주문 배합비료, 저농도비료 등 환경친화형 비료공급을 2000년도에 107만톤에서 2001년도에는 120만톤으로 확대하여 비료 사용량 및 유실량을 감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경지토양의 특성을 D/B화하고 2005년까지 농업토양환경정보망(GIS)구축을 완료하여 인터넷웹서비스 등을 통해 필지별로 시비처방, 토양개량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분뇨자원화율을 92%로 높였으며, 축산분뇨 유출율을 4.6%로 감소시켰다.

나. 농업자원 유지·개량시책 추진

농업의 기본적인 자원은 토양과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토양은 모암자체가 산성인데다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생산력이 떨어져 지력은 일본에 비하여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용수 또한 점차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성토양 개량 및 논 토양의 규산 성분 공급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1997부터 100%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살포도 지역농협 주관하에 공동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2000년에는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필요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 6년 1주기, 규산 5년 1주기로 물량을 확대하여 공급하였으며, 2001년에는 석회5년 1주기, 규산 4년1주기로 공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사질토양 등 생산성이 낮은 토양에 대한 객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흙살리기운동”과 “푸른들가꾸기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화학비료·농약의 과다사용을 방지하고 사료·녹비작물 재배를 통하여 조사료의 자급기반을 확충하면서 지력을 높여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흙살리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에 공급된 토양검정기의 이용률을 높여 농업인 스스로 토양을 진단,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 등의 토양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푸른들가꾸기 운동을 통해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 등의 사료작물과 자운영 등의 녹비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를 국내에서 생산된 조사료로 대체해 나가는 동시에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이 증진되도록 하고 있다. 자운영 등 사료·녹비작물을 과중면적 기준으로 2000년에 46천ha에서 2001년에는 70천ha로 확대 재배하였다.

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지원·육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친환경농업기술을 수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있다.

1995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은 중산간지의 중소농가 등 규모화가 어려운 농가 등을 대상으로 토착미생물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성면에서 고품질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은 1995~2004까지 10년간 1,000개소의 조성을 목표로 1개소당 250백만원씩 총 2,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995~2001까지 1,310억원을 투자하여 524개소를 조성하였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1998년~2004까지 지구당 20억원씩, 총 3,780억원을 투자하여 189개소의 환경농업지구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

이며, 1998~2001년에는 380억원을 투자하여 28개 지구를 조성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2,178백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종합방제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시범마을 16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IPM과 INM 기술지도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하고 있다.

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추진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친환경농업단체에 친환경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58억원, 2001년에 73억원을 지원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993.12월부터 유기·무농약재배 농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는 27천호, 친환경농산물인증 재배면적은 25천ha,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526천톤으로 매년 30%이상 늘어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 자율신고로 운용되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도'를 정부 등 인증기관에 의한 '표시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2001년도에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Codex기준에 맞도록 설정하고 수입 친환경농산물도 인증을 받도록 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였다.

(친환경농업과 농업사무관 김기훈)

3.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체계 강화

환경친화적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최대한 자원화(퇴비·액비)하여 토양으로 환원토록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홍보 및 기술개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첫째, 자원화를 위한 신규시설과 노후시설 보완 및 정착촌구조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속적 지원('01년, 364억원)한 결과 2001년말 기준 규제대상농가(신고규모이상)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율이 96%에 달했으며, 이중 98%가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설치농가중 92%가 자원화방법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등 자원화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축분퇴비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판매가격차손을 지원(50만톤, 175억원)하고 경종농가의 축분발효액비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설치(339개)를 지원하였으며, 평야지·시설채소·사료작물 재배지 등에 액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둘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컨설팅 등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한 축산분뇨처리공법을 선정·홍보하여 축산농가들의 분뇨처리가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박영근)

나.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활용 확대

사료작물재배 및 초지관리면적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조사료 수입물량은 크게 증가하여 국내산 조사료 자급율은 85%, 급여수준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조사료 자급율과 급여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부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2001년 조사료 급여비율은 46%로 전년도에 비하여 7% 향상되었는데, 이는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사업 실시, 답리작 사료작물재배확대와 기성초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초지의 생산성 증대에 따른 것이며, 아울러 벼짚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생벼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기술 보급을 위한 베일러 및 래핑기 등의 장비구입비(658배, 75억원)을 지원한 결과이다.

증가되고 잇는 조사료의 수입방법을 개선하여 양질의 조사료(사료작물

및 목초)를 생산하는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부족한 조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수입조사료 양허관세 추천대상자를 생산자단체로 일원화하였다. 이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조사료 수입량이 2001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0.3% 감소하여 조사료 자급률이 향상되었다.

중·장기적으로 겨울철 유희농지를 활용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가축분뇨의 사료포로의 환원을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이상수)

4. 사료산업의 육성과 안전성 제고

사료의 생산원가 절감과 농가의 경영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수입사료원료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도 옥수수, 소맥등 13개 주요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또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관리하는 사료원료 11개 품목중 옥수수, 대두, 사료용근채류, 겉보리, 보조사료에 대하여는 양허물량을 증량하여 수입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WTO 출범이후 사료산업 및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곡물가격 불안에 따른 사료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료제조업 등록업체에 2001년은 307억원의 사료원조구매진급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도 2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제조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부담경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등 생산자단체와 양축가, 섬유질사료 제조업체 등에 섬유질사료가공제조시설 설치비 22억원(6개소)을 지원하였고 2002년에도 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998년부터 농산부산물 및 식품부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농가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혼합기·분쇄기 등 장비와 제조시설비를 지원해 왔으며, 2001년 41개소에 19억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

에도 3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 및 사료관리 강화를 위하여 2001년 사료관리법을 전면 개정(2001.3.28)하여 인체·동물의 질병원인이 우려되는 동물 부산물 등을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법 제13조)하였고, 사료의 품질관리강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의 첨가 및 혼합 제한제도를 도입(법 제14조)하였다.

또한, 사료의 원료관리·제조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별로 우수제조 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GMP및HACCP)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법 제15조)하였다.

남은 음식물로 생산된 사료 등을 판매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법 제2조)하였으며, 남은 음식물사료 등을 반추가축에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농가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법 제25조)하였다.

초식동물에 동물성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 소 등 반추가축에 동물성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 사용을 금지(법 제13조)하였으며, 수입신고대상 사료범위 확대(사료검사요령 개정고시, '01.6)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만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BSE 발생우려가 있는 사료까지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 수입 신고대상 사료 : ('99) 133개 품목 → ('00) 145 → ('01)189

사료관리법시행령을 개정('01.10.31)하여 사료중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남은음식물사료 및 미량광물질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또한,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01.12.31)하여 남은 음식물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업의 시설기준중 가열시설의 기준을 100℃에서 30분이상 가열(단, 돼지전용사료는 80℃에서 30분이상)하도록 구체화하였다.

(축산물위생과 축산사무관 조병임)

5.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강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재고를 위하여 가축의 사양관리와 도축장 위생관리,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검사, 축산물의 가공·보관·운반·판매위생관리를 강화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축의 위생관리는 가축사양환경·위생 및 질병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생적인 사양관리시설 설비와 사육환경 조성,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홍보하였다. 또한 사료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대책 추진과 아울러 가축 출하 전 후기 배합사료 급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둘째, 도축장 위생관리는 HACCP 의무적용을 위한 사전위생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도축장 시설위생 관리 및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 감독을 강화하였다.

<표 2-2-56>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정 및 대상품목 현황(2000.12.31기준)

구 분	식육가공장	유 가 공 장	도 축 장
지정업체수	14	27	30
대상품목수	햄류, 소시지류, 포상육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버터류, 가공치즈, 자연치즈	소, 돼지, 닭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셋째, 축산물 위생관리 및 검사를 위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위생검사 지도·감독과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 및 미생물검사를 강화하였다.

<표 2-2-57>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대상 확대

	2000년	2001년
잔 류 물 질	45종, 100,000건	73종, 102,824건
미 생 물	15종, 53,000건	15종, 105,948건

자료 : 농림부 축산국

또한 축산물위생검사 기술 및 능력제고를 위해 검역원 및 시·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검사장비를 보강하고, 시·도 검사관계자에 대한 검사기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검사요원의 질적 향상을 기하였다.

넷째, 축산물 가공·보관·운반·판매 위생관리의 일환으로 축산물가공장에서 HACCP 적용품목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축산물보관장에 대한 위생지도·감독과 함께 축산물판매 단계에서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공급되도록 하였다.

한편, 유통중인 위해축산물에 대한 회수제도(Recall System)를 정착시키기 위해 회수절차 규정인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고, 위해 축산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의 수입신고시 판매·유통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며,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

(축산물위생과 서기관 이홍섭)

6.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대책

67년만인 2000.3월에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구제역 유입·전파 위험이 높은 시기인 2001.2~4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의 동물·축산물 수입금지 및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강화 등 국경검역 강화조치를 지속 유지하고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적인 혈청조사를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당초 예상보다 8개월 빠른 2001.9.19에는 가축질병 방역에 관한 국제전문기관인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증받을 수 있었다.

한편, 구제역 종식에 성공한 이후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었다.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강도높은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왔는데,

예방약 100% 지원(연간 3천만두분) 등 예방접종을 독려한 결과 전국적인 면역형성율이 2년 넘게 95% 이상 지속되었고 1999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전국적인 비발생 상태가 2년 이상 유지되었다.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수차에 걸친 공청회·설문조사·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이후 대한양돈협회의 건의에 따라 2001년 12월 1일에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청정화 선언을 하였다.

또한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작업반을 지속 운영하고 돼지 오제스키병 및 닭 뉴캐슬병 등 기타 가축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였다.

(가축방역과 서기관 김창섭)

제 7 절 농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1. 농산물 수출진흥대책

가. 개 요

농산물 수출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적극적인 해외 시장개척활동에 힘입어 1995년 이후 16~17억불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1년에는 2000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돈육수출이 어려워지고 세계경제의 침체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과실, 채소 및 가공식품 등의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비해 3.1% 증가한 15억 8천만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들면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기본적으로

풍흉 등 자연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제약은 수출상대국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출국과 수입국 양국이 동시에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드는 경우에는 수출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수출업자들이 수출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하여 외국 바이어 등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잘 안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수출계약 당시보다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수출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외국바이어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다같이 영세하여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고 국내 수출품의 규격화, 등급화 및 디자인과 포장 등 상품경쟁력이 뒤지는 것도 수출증대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요인은 단기간내에 극복되기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2001년에도 정부는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규격을 표준화하고 포장을 개선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물량공급의 원천인 전문생산단지 89개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2001년에는 세계경기침체와 2000년에 발생한 구제역 등의 어려운 수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틈새시장 발굴조사를 강화하고 수출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컨설팅 기술지원단』운영하여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해외시장 정보조사 및 신속전파체계 구축과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한 특별기획전 등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나. 해외시장 개척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박람회 참가는 제품판매활동, 기업 이미지 제고, 정보수집, 바이어 확보

등 수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업활동을 한자리에서 가능케 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장기적인 수출기반 조성, 신규바이어 발굴 및 세계 시장정보 입수 등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지속적으로 참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의욕도 크게 고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람회 참가사업은 정부투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1988~1992년 기간에도 9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부터이며, 지난 9년간('93~2001) 참가실적은 총 137회에 달한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대상지역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3년에는 유럽, 일본, 미주지역에 국한되었으나 2001년에는 유럽 4회, 일본 3회, 미주 2회, 중국 3회, 브라질 1회, 호주 1회, 홍콩 2회, 대만 1회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대만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박람회 참가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1년에는 354개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품목수도 1,430개로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박람회 현장에서 외국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수출계약액은 1993년 3,310만 달러에서 2001년 2억 2,98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또한 박람회 참가규모와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참가에 필요한 사업비도 2001년에는 총 31억원이 되었다.

<표 2-2-58>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실적

(단위 : 천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참가회수(회)	17	16	12	13	16	19
참가업체(수)	508	470	399	365	367	35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출품 품목수(개)	1,828	1,977	1,435	1,476	1,616	1,430
수출 계약액(1천달러)	140,691	164,122	176,773	213,733	228,985	229,879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2) 해외홍보

한편,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특성과 이미지를 외국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알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홍보사업은 전문성과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어 영세한 농산물 수출업자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의 기본방향은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창출과 이미지 제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홍보대상상품의 수출 시기를 감안한 집중적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가는 것이다.

주요 홍보수단으로는 책자, 전문지, 방송, 옥외광고, 리플렛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2000년부터 홍보효과가 큰 TV광고, 인터넷광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광고사업은 1991년 2회를 시작으로 2001년에는 42회의 광고를 해외유명식품 전문지에 게재하였다. 주요 전문지로는 「International Fruit World」(스위스), 「식품상업」(일본), 「Global Produce」(미주)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 홍콩, 대만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빌보드, 시내버스, 공항카트 등 옥외광고와 라디오 광고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1996년부터 일본의 동경, 오사카에 TV식 전자 광고판(멀티비전)을 설치하여 김치와 신선농산물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밖에 홍보용 VTR(영·중·일어)을 제작하여 국제박람회를 통해 상영하거나 배포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다. 농산물 수출지원체제 강화

농산물 수출업체의 자금압박요인 해소를 위한 원료수매자금, 유통자금, 시설자금 등을 2000년의 3,157억원에서 2001년에는 3,588억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수출업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대해 자금지원시 금리, 자금배정 및 담보 등에서 우대지원 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수출촉진을 유도하였고, 신용평가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의 투자적격업체에 대한 무보증 대출 및 신용보증서 담보 확대 취급 등 신용대출 활성화와 대출포기금 신속배정제도 도입 등 실수요에 부응한 적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우리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5년 3월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처음 실시한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는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농수산물(임·축산물 포함)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위험(가격상승, 수출불능, 대금회수불능 등)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농가가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제도시행이후 가격상승위험보험의 보험요율인하(보험금액의 1% → 0.5%) 부보율 상향조정(계약금액의 60% → 70%), 보험청약조건완화와 대금회수(수출)불능위험보험의 보험금 지급시한 및 수입자 신용조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가격상승위험보험청약시 매매계약서만으로 가능한 품목을 14개 품목에서 88개품목으로 확대하였고, 신용장 거래시 정상인수 범위를 확대(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등)하는 등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농수산물수출보험의 계약체결 실적은 우리 농산물의 주 수출국인 일본, 미국, 홍콩 등으로 수출불능위험이 낮으며, 최대 수출국인 일본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수출에 따른 위험 등에 노출되는 기간이 짧아 2001년도 가입실적은 259억원(47업체)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무역진흥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이낙휘)

2. 수입관리

가. 개요

UR농산물 이행계획서상에 시장접근물량이 책정되어 있는 품목은 총 188개 세번(63개 품목군)으로 이들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양허관세 수입추천 및 수입이익금 징수의 근거를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안법 등 6개 개별법률에 신설하고,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양허관세 추천방법을 농림부장관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다.

위 개별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농림부장관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농림부고시로 제정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수입관리하고 있다.

나.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현재 시장접근물량 63개 품목중 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17개 주요 품목은 국영무역으로 수입관리하고 있고, 연유, 분유, 참기름, 밤, 대추 등 6개 품목은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우, 맥주맥, 옥수수, 감자전분 등 40개 품목은 실수요자 추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영무역 또는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국내 생산시기, 생산량, 유통가격 등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 탄력적으로 수입시기를 조절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여 수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의 수입으로 발생한 수입이익금은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 각 품목 관련 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관련 품목의 경쟁력제고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중우, 중계, 옥수수, 대두, 참깨, 맥주맥 등 20개 농업용원자재 품목 및 국내 가공산업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수요량을 저율관세로 수입토록 하고 있다.

다. 수입관리 운용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과도한 수입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특히 관세상당치(TE)로 개방한 품목 중 땅콩, 메밀 등 45개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동적으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수입을 막도록 하였다

이미 UR협상 이전부터 단일관세로 개방된 품목 중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당면, 고추장, 표고버섯 등 8개 품목에 대하여는 최고 70%까지 관세를 인상조정(조정관세 부과)하여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무역진흥과 행정사무관 황인용)

제 8 절 농촌 활력증대 및 농업인 복지증진

1. 농촌 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전국 1,224개면 중 오지·도서면을 제외한 762개면을 대상으로 면지역내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주민 편의·복지시설과 주택을 정비하고, 면지역내의 중심거점 마을을 대상으로 기존 마을 정비는 물론 택지를 조성하여 마을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정부는 향후 2004년까지 전국 762개면에 대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제1단계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면당 1개소 수준의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190개소의 선진화된 농어촌마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마을 정비는 면당 4~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45억원 (보조30, 용자15),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지구당 3년 내외의 사업기간 동안 30~50억원(보조 20~30, 용자 10~20)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문화마을과 연계하여 지구당 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1년에는 총예산 3,539억원(국고 36, 지방양여금 2,548, 지방비 604, 용자 351)을 투입하여 정주권개발은 279개면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여 85개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문화마을조성은 신규 16개 지구를 포함한 47개 지구에 대한 마을기반조성을 추진하여 18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주권개발면과 기반시설이 완료된 문화마을지구에 1,375동의 농어촌주택을 개량 정비하였다. 또한 농어촌의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마을조성과 연계하여 10개 지구에 대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였다.

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표 2-2-59>

도로포장현황

(2001년말 현재)

구 분	총 연 장(km)	포 장 도(km)	포 장 륜(%)
고속도로	2,637	2,637	100
일반국도	14,254	13,759	96.5
특별시·도	17,810	16,662	93.5
지방도	15,704	12,320	78.5
시 도	17,533	13,055	74.4
군 도	23,458	11,713	49.9
농어촌 도로	62,398	16,826	27.0

자료 : 2002년 도로현황조사서(건설교통부, 농어촌도로는 행정자치부 자료)

정부는 낙후된 농어촌도로를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의 농어촌도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농특세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농어촌도로 포장률을 2001년 27%에서 2010년에는 39% 수준까지 높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2-60>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

구분	계	'94~2001	2002계획	2003-2009
사업량(km)	12,242	7,434	541	4,267
사업비(억원)	73,877	30,780	4,319	38,778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계국

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표 2-2-61>

상수도 보급현황(2000년말 현재)

구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톤/일)	급수량 (천톤/일)	1일 1인당 급수량(L)
○ 특광역시	23,096	22,682	98.2	15,115	9,011	397
- 시지역	15,259	14,641	96.0	9,158	5,460	373
- 읍지역	3,683	2,795	75.9	1,714	911	326
- 면지역	5,939	1,656	27.9	993	501	303
계	47,977	41,774	87.1	26,980	15,883	380

자료 : 2000환경부 상수도 통계

농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0년말 27.9% 수준으로 도시지역(97.6%)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며, 특히 면단위 이하에 산재된 자연마을 중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 마을은 비교적 적다. 대부분 마을은 우물·하천 등 자연수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지역 수질 오염으로 생활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암반지하수개발)을 1994년부터 추진하여 2001년까지 3,351개소를 개발하였으며, 2002년에는 480개소, 816억원을 투자하는 등 2004년까지 총 5,000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표 2-2-62>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계획

구 분	추진목표	2001까지	2002계획	2003계획	2004계획
사업량(개소)	5,000개소	3,351	480	480	689
사업비(억원)	8,000억원	5,471	816	816	898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시설서기관 조홍제)

2. 농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자녀중 실업계고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사업으로 52천명에게 324억원,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사업으로 2,500명에게 19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63> 2001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사 업 명	인 원	지 원 액	비 고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52	32,407 (9,722)	국 고 30% 지방비 70%
○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2.5	1,950 (390)	국 고 20% 지방비 50% 자부담 30%

주 : () 내는 국고지원액
 자료 : 농림부여성정책담당관실

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영세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199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사업시행 초기에는 농촌의 면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4년도에 읍·면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실업계고교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2001년도부터는 편모농업인의 인문계고교생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표 2-2-64>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연도	대 상	비 고
1990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고교 1, 2학년생	전액 국고 지원
1991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 3학년 추가
1992	면지역 중 2, 3학년,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중 도서벽지 실업고생 추가 지원 1993부터 지방비 2/3부담
1994	면지역 실업계 고교생	중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1997	읍·면지역, 시의 개발제한구역 실 업계 고교생	읍지역 전체, 시의 개발제한구역 확대 국비 30%, 지방비 70%부담
1999	상 동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자녀 포함. 국비 30%, 지방비 70%부담
2001	편모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교생 포함	상 동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양축인·임업인·어업인의 자녀 중 실업계 고교생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편모농업인의 인문계고교생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01년도까지 총5,460억원(1,411천명)을 지원하였다.

<표 2-2-65>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결산기준)

(단위 : 천명, 백만원)

1990~1992		1993~1996		1997~2001		계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626	148,179 (148,179)	400	173,806 (57,466)	385	224,042 (67,268)	1,411	546,027 (272,913)

주 : ()내서는 국고지원액('97년이후 30%부담)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하여 설치된 전국 11개교 자영농과 재학생에게 기숙사 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1986년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총142억원(25천명)을 지원하였다.

<표 2-2-66>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실적(결산기준)

(단위 : 명, 백만원)

1986~1992		1993~1996		1997~2001		계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9,446	4,135 (827)	4,681	2,172 (422)	11,636	7,846 (1,573)	25,763	14,153 (2,822)

주 : ()내서는 국고지원액(20%부담)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조용범)

제3편 2002년도 농정시책

여 백

제 1 절 2002년도 농정목표

우리 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농산물 과잉기조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농산물 유통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도·농간의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으로 시장개방 폭이 넓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가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농산물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역주의의 확산과 심화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투자 유인효과의 증대를 위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농가경영혁신과 소득안정 추진

둘째, 소비자만족 생산·유통시스템 실현

셋째,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 주력

넷째, 농촌지역 개발과 복지증진

다섯째, WTO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 등의 목표 아래 2002년 농정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2 절 2002년도 농정시책 방향

정부는 「경쟁력 있는 농업·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에는 크게 네 가지 정책방향을 기조로 하여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민생안정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당면해 있는 소득불안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쌀값 안정,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

둘째,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농업인 육성, BT·IT산업의 접목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생산과 유통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모이도록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넷째, 금년부터 본격화되는 WTO 농업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당사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적극 추진

가. 쌀의 수급균형과 적정가격 유지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은 연이은 풍작과 의무수입량(MMA) 증가로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소비는 꾸준히 감소하여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올 10월말의 재고는 FAO가 권장하는 적정량의 2배인 1,318만석 수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확기 전에 주정용, 가공용 공급을 확대함은 물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긴급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쌀의 조속한 수급균형 달성을 위해 발벼의 수매 중단, 논에 타작물 재배 장려 등의 방식으로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질소질 비료사용 절감, 수매규격개선, 고품질 품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보

유하고 있는 쌀의 시장방출을 조절하여 쌀값의 계절진폭을 확보하고, 수확기 출하물량을 충분히 흡수하여 과도한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고 있다.

나.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관리 강화

농업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농업인에게는 금융비용이 큰 부담이다. 농가경제가 악화된 후에 사후적으로 부채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농가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정부는 시장금리 인하 추세 등을 감안하여 농업종합자금, 수출관련자금 등 37개 중장기 정책자금과 기금의 금리를 1%p 인하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재해, 가격폭락 등 여러 가지 경영위험요인들을 안고 있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고액투자 농가를 대상으로 회생가능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상시적 「경영회생지원제도」를 200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대상품목을 사과, 배 이외에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까지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률 인상, 보험료 분납, 보험재해 추가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내실화

세계 각국은 WTO체제하에서 농산물 가격지지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직접직불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우리도 WTO 규정과 합치하는 직불제를 확충하고 지원방식도 개선하는 등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논농업직불제」는 논이 갖고 있는 홍수방지·지역사회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보상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 지급단가를 2배로 인상한데 이어, 논에 심을 수 있는 재배 작목도 농가 자율에 맡겼다.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장려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전업농가의 규모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 농업인에게만 지원

하던 것을 1ha 미만 영세농업인도 희망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경사도가 높아 정상적인 농업활동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불리지역 발직불제」는 399개 오지면에 대해 도상(圖上) 연습, 경사도 조사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중점 육성

농업 투·융자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종전의 일률적·평균적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금 및 기술·정보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업화·규모화된 농가를 집중육성하기 위해 생산시설의 기계화·자동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의 계열화·브랜드화를 촉진하고 있다. 벼농사는 3ha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소득문제 해결이 가능하므로 농지 규모화자금 확대, 농지양도세 감면, 고령·영세농가의 경영이양 장려 등의 방식으로 영농규모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업자금지원은 협동조합이 농가의 경영능력과 투자계획 등을 심사하여 대출하는 “농업종합자금”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채증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BT·IT 접목으로 농업성장 견인

농업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BT·IT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농업발전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 5위의 농업생명공학 기술국을 목표로 유전체(Genome) 분석 및 고부가가치 형질변형((GMO) 동·식물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농촌진흥청에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품목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에 완료되는 농촌 ADSL 보급사업에 맞춰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농가의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을 강화하여 농업경쟁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 소비자 중심의 생산·유통 실현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격보다는 품질, 안전성, 브랜드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유통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58개에서 82개로 확대하고, 우수 브랜드에 대해 공동선별을 위한 지원과 소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성 조사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부적합 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소류는 시장출하 이전 포장단계에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도축장은 내년 7월까지 위생안전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하며,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상호간 연합마케팅을 촉진하고, 수요처를 발굴하는 등 협동조합 중심의 농산물 판매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다.

라. 세계를 지향하는 수출농업 육성

최근 들어 파프리카, 화훼 등 신선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금융, 동·식물 검역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하여 수출농업에서 우리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특히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농산물 수출확대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공항내 홍보데스크를 설치하고, 해외의 우수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홍보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농촌활력 증진방안 본격 강구

가. 도시자본 유치 및 그린투어 활성화

농촌이 활성화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농가 소득이 교육·의료비 등으로 도시에 유출되는데 반해, 도시자본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농촌에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농촌투자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고 있다.

도시민이 농촌주택과 텃밭을 보유해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수련시설·레포츠시설 등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는 등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농지와 산지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관광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농촌생활체험, 역사문화탐방, 향토음식 등을 패키지로 하는 관광상품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마을 등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촌과 농촌관련 산업에 대한 도시민의 투자를 알선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해주기 위해 농업기반공사에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농촌의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낙후된 농촌의 교육과 의료여건이 농촌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교육 등 복지부문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늘리며, 농촌학생기숙사 설치 확대 등의 종합대책을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 교육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농촌특성에 맞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장비를 확충하고 공중보건 한의사의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의 연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가도우미사업,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료·연금 등 농촌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농촌복지증진 대책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

4. WTO농업협상 및 FTA 협상에 적극 대응

WTO/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은 금년과 내년에 걸쳐 협상의 중요한 틀이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2003) 3월까지 보조금과 관세감축의 세부 원칙을 마련키로 하고, 매달 1~2회 회의를 개최하여 점차 쟁점을 압축하는 양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NTC 6개국간 워크샵을 통해 세부의제별 공동입장을 최대한 발굴하는 등 공조관계를 적극 활용하고, 품목별 영향분석을 통해 우리입장과 대응논리를 보강하여 9월에 열리는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Modality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Modality 협상 이후의 양허협상에도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고 있다. 품목별 D/B를 적극활용, 협상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협상 이후의 대응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양허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해 주요교역 상대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 양허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는 일부품목을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고, 칠레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10년내 관세철폐를 주장하여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FTA추진으로 농업부문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등 보완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농업인과 전문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군호)

제 3 절 2002년도 농림부문 예산확보

1. 2002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2002년도 농림예산은 IMF로 인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수확기 쌀값안정대책 예산 집중지원, 농가소득안전망 확충, 농가소득원 적극 개발 및 매년 반복되는 재해예방과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농업기술개발과 농업·농촌정보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첫째, 수확기 쌀값안정을 위해 양곡수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과 정부수매, 농협시가매입 등에 필요한 지원과 정부보유벼 공매중단 등에 따른 양특회계 세입 감소분 지원을 위해 양특회계의 한은차입 한도를 대폭확대 반영하였다.

한편,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매입여력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개소당 운영

자금 확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금리를 무이자로 하는 이차보전예산을 반영하였다.

둘째, 농가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농가소득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논농업 직불제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조건불리지역 발농업 직불제 도입기반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며, 농외소득원 확충 일환으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셋째, 농산물의 유통개선부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유통의 하드웨어(시설) 부문은 신규투자자를 줄이는 한편, 농업관측사업, 유통활성화사업 및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 등 소프트웨어(운영) 중심의 투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넷째, 가뭄과 호우 등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용수개발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는 한편, 기반이 어느 정도 확충된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필요소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기술개발예산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촌에 PC 보내기 운동과 함께 5,000대 분량의 중고 PC수리비용 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정보화촉진기금에 8만명의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

한편, 경쟁력 있는 선도적 경영주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계 학교 졸업자 등 창업농 인원수 확대와 1인당 지원규모 인상을 통해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에 주력하였고,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다.

2. 2002년 농림예산 규모

2002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총 9조 2,851억원으로 2001년 보다 5.4%증가 되었으며,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1-1> 2002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감 (B-A)	%
기 능 별	○생산기반조성	21,908	21,515	△393	△1.8
	○농업기계화	2,623	1,940	△683	△26.0
	○생산 및 유통개선	10,834	8,341	△2,493	△23.0
	○기술개발 및 정보화	2,250	2,580	330	14.7
	○인력육성	2,855	2,774	△81	△2.8
	○농촌소득원개발 등	2,743	3,633	890	32.4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32,649	38,007	5,358	16.4
	○양곡지원	7,813	9,969	2,156	27.6
	○공공근로사업	1,239	721	△518	△41.8
	○기본적경비	3,186	3,372	186	5.8
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포함)		88,100 (92,777)	92,852 (94,502)	4,752 (1,725)	5.4 (1.9)
양곡관리특별회계		11,586	12,382	796	6.9
농특세관리특별회계		2,162	1,849	△313	△14.5

<표 3-1-2>

2002년 농림예산 사업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감 (B-A)	%
				%
1. 생산기반조성	21,908	21,515	△393	△1.8
2. 농림기계화	2,623	1,940	△683	△26.0
3. 생산 및 유통개선	10,834	8,341	△2,493	△23.0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2,250	2,580	330	14.7
5. 인력육성	2,855	2,774	△81	△2.8
6. 농촌소득원개발 등	2,743	3,633	890	32.4
○ 농촌소득원개발 등	1,582	2,462	880	55.6
○ 생활환경개선	874	839	△35	△4.0
○ 기타사업	287	332	45	15.7
7.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32,649	38,007	5,358	16.4
○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12,151	18,926	6,775	55.8
○ 채무상환	20,498	19,081	△1,417	△6.9
8. 양곡지원	7,813	9,969	2,156	27.6
9. 공공근로사업	1,239	721	△518	△41.8
10. 기본적경비	3,186	3,372	186	5.8
합 계	88,100	92,852	4,752	5.4

제 4 절 농정추진체계의 개선

1. 농업인·소비자·정부의 협조체제 강화

전체 산업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 소비자,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와 우리 농업·농촌·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소·정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동안 환경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농교류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비용부담과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확산되지 못하여 정부가 재정·행정 지원을 통해 농·소·정협력사업을 확대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도시민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고, 자연환경·전통문화체험 등으로 정신적 풍요와 건강한 삶을 향유하고, 농업인들은 지역 농업·농촌이 활성화 되고 도·농간의 문화·사회적 격차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농·소·정협력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여 농협중앙회 등 농업인단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소비자단체, 녹색연합 등 환경운동단체에서 총 43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도·농교류협력사업,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 사업,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사업 등 48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소·정협력사업은 경제발전과정에 형성된 농업인과 도시민, 농업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정서적 장벽을 허물어 ‘동등 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공생관계’를 구축하여 상호보완적인 상생(相生)관계 형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유 형	도·농교류협력사업	농업·농촌알리기사업	농업·농촌지키기사업
사 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생산현장체험·농촌문화 체험, 일손돕기사업 ○ 도시소비자 생산·유통현장체험 및 자매결연, 팜스테이 ○ 숲가꾸기 및 녹색산촌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나무 벼사랑 체험, 친환경농업현장체험 ○ 선농제향, 도시·농촌 한마당 잔치 ○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산 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보전을 위한 흙문화 축제 ○ 농촌체험을 통한 오지 농촌마을의 농업·농촌지키기 ○ 설악산 자생식물 민간지킴이 운동
사업량	33개사업(31개단체)	9개사업(9개단체)	6개사업(6개단체)

(농업정책과 서기관 진기형)

2. 농림사업의 투융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가.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국정과제 추진 점검

농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체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2002년도 자체평가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농업생산·유통체계의 개선” 등 11개 과제를 선정, 상·하반기 각 1회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할 계획이다.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농업인·소비자 단체의 민간전문가 21명을 위원으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소비자단체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유도하였고, 금년 8월에는 평가위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농촌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행계획과 자체평가결과 심의 등을 위하여 상반기에 해당 소위원회를 평균 3회, 전체회의를 2회 각각 개최하

였다. 농림부와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상반기 대상과제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금년에 선정된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여건 변화로 계속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농림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는 1998년 6월 처음 확정된 이후 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사회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차례씩 수정·보완되었으며, 2001년 11월까지 완료된 농림부문 국정과제는 39건이며 추진중인 과제는 총 38건으로 그 중에는 농림부와 관련부처 공동추진과제 5건이 포함되어 있다.

총 38개 국정과제중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2개 과제는 금년 상반기 완료하였고, “유통시설의 효율성 증진”,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 및 “우량농지 보전강화” 등 36개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있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배종혁)

나.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평가 개선

금년에는 2001년 한해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12개 주요 예산사업의 추진실태, 농업분야에 대한 자체 지방비투입실적, 친환경농업·유통대책·수출촉진·농업정보화 등 주요 농정시책 추진노력, 농림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규정이행실태,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의 현장점검결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역특화사업비중에서 150억원을 차등지원하였다.

한편 2002년도 농림업무의 평가는 중앙정부 정책현안에 대한 자치단체

관심과 협력의 정도, 차별화된 시책 추진 실적, 이미 지원된 시설의 운영·관리실태 등을 새로운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는 항목중 그 동안 평가결과가 비교적 양호하게 개선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신성암)

다. 현장농정 점검·지원의 내실화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추진상황을 농림부 중견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 확인·점검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농정을 추진하고 농림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평가위주에서 현안업무의 추진독려,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현장농정을 지원하고 현장여론수렴 및 농정시책 홍보위주로 운영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신성암)

3. 농업행정쇄신 및 규제개혁

2002년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농업분야의 WTO 재협상 등을 앞둔 어려운 대외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고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농업관련산업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업경영목적 농지소유상한 폐지 및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허용과 주말·건강·취미·체험농장용 농지 비농업인 소유 허용 등 농지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농지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업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농림부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하여 농업인에게 전자적 정보공개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근 포장농산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던

중량허용오차 및 포장농산물의 의무표시사항 정비를 통하여 생산자의 표준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농산물유통에 편리하도록 농산물유통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유창상)

4. 농림조직의 개편

가. 농림부

(1)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2002.6.26 종전에 책임운영기관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농림부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의 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의 정원을 직급별에서 계급별로 변경하고,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의 직급별 정원과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자체내부규정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중 재정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자체확보 할 수 있는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장이 초과수입금을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6666호, 2002.3.2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637호, 2002.6.25) 농림부와 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15호, 2002.6.25)

(2)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국 조직정비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시장개방확대로 축산물수급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민간자율조정기능으로 전환되는 등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의한 손실이 축산업은 물론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축산물위생 및 가축방역 조직을 보강하는 등 농림부 축산국 일부기구 및 기능을 재정비 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26호, 2002, 8.24)>

축산물위생 및 가축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축산국의 축산물유통과와 가축위생과의 과명칭을 축산물위생과와 가축방역과로 변경하고 축산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축산관련 환경오염방지 및 축산분뇨처리대책 업무를 축산경영과로, 축산경영과의 가축개량업무를 축산정책과로 상호 이관하고, 축산정책과에 소·돼지·닭을 제외한 가축사육의 육성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분산관리하던 소·유우·돼지·닭의 경쟁력제고 및 경영개선과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업무를 축산경영과로 일원화 하였으며

가축위생과의 축산물관리업무와 축산경영과의 사료관리업무를 축산물위생과로 이관하여 축산물 및 사료의 위생·품질·안전성관리 업무를 일원화 하였다.

(3) 검역수요 증가 및 GMO표시제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 등

농축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 이로인해 검역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동식물검역 기능 및 인력과 GMO 표시제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소 확대 등 2003년도 농림부의 소요기구 및 소요정원을 2002.5.14 행정자치부에 요구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GMO 관련인원과 농산물안전성조사 및 사료검정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출장소 증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출장소 신설과 돼지고기 수출검사원, 축산물위생 감시인력 및 축산물 탐지컨센타 등의 인력보강
- 국립식물검역소의 출장소 및 지소의 과신설과 수출용목재 열처리에 따른

검역인력 등 보강

- 국립종자관리소의 종자관리 정보화 인력과 품종심사 및 DNA분석을 위한 특수 검정인력 보강 등

(조직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병은)

나. 농촌진흥청

(1) 농업생명공학연구 전담기구 신설 등

농업생명공학 기술선진국의 연구기능 재정립과 첨단농업 과학기술개발 연구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총무과의 인사업무와 기획관리관실의 조직관리업무를 하나로 묶어 기획관리관소속하에 행정법무인사담당관실을 설치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532호, 2002. 3. 2),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11호, 2002, 3. 6)>

- 농업생명공학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에는 생명공학기획조정과를, 소속기관은 농업과학기술원의 생물자원부를 폐지하는 대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을 각각 신설하고 작물시험장, 원예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에 각각 생명공학연구 관련과를 신설하였음
- 농촌진흥청 소속인 농촌생활연구소를 농업과학기술원 소속으로 이관하여 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농산물가공이용과를 신설하여 전통식품자원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제주농업시험장의 감귤시험장을 폐지하여 제주농업시험장으로 통합하고 기존 2기관 3개과에 감귤과와 식물환경과를 신설하여 1기관 5개과 체제로 개편함
- 영농현장중심의 기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에 교육직

공무원 9인(교수5, 조교4)을 증원함

-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인력 25인, 행정요원 1인, 전산요원 13인, 사서요원 1인을 증원하고 기능직 38인을 감축하였으며 연구사 20인을 연구관으로 직급 격상하였음
- 총무과의 인사업무를 기획관리관실 소속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이관하여 행정법무인사담당관실로 개칭함

(2) 책임운영기관 관련

농촌진흥청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농업기계화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등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7638호, 2002. 6. 25),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16호, 2002. 6. 25)>

(농촌진흥청 행정법무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임대환)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제 1 절 농가경영 혁신과 소득안정 추진

1. 쌀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 도모

가. 쌀 산업 발전대책 추진

최근 우리의 쌀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 국내외 가격차 확대에 따른 경쟁력 저하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품종개발과 생산기반 정비의 결과 1980년대 이후에는 쌀을 자급하게 되었고, 특히 1996년 이후에는 6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으며 지난해에는 3,830만석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생산의 증가 외에도 UR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난 1995년 457만석이던 재고는 2000년 749만석으로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적정수준을 훨씬 넘어선 927만석, 올해 말에는 1,040만석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재고의 증가는 막대한 관리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 쌀값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해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한 것은 풍년의 영향도 있지만 적정수준을 넘어선 과잉재고와 이에 따른 시장불안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국제쌀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매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온 결과 쌀의 국내외 가격차는 더욱 커짐에 따라 향후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격차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을 해소하며,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산위주의 정부주도형 양정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새롭고 효율적인 양정으로 대전환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4.18일 가격불안요인 해소를 위한 과잉 재고처분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 가격하락과 소득감소에 대비한 소득안정장치 도입, 소비자 중심시대에 부응하는 고품질쌀 생산체계 구축, 식용쌀 소비 촉진과 가공용 수요개발 등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민간중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통구조혁신과 민간유통의 활성화, 규모화와 경영절감을 통해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쌀산업종합대책」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나. 고품질 쌀 생산·유통촉진

그동안 우리 벼농사는 주곡인 쌀의 자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연속풍작과 수입증가로 공급량이 늘어난 반면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에서는 우리 입맛에 맞는 값싼 양질의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2004년 WTO재협상을 앞둔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우리쌀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기능성을 강화시켜 소비자가 찾는 쌀생산 위주로 한층 강화하였다. 우선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질이 떨어지는 발벼 재배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정부 수매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질소질비료 줄여주기” 추진으로 고품질 쌀생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의 쌀생산을 위해서는 재배기술 못지 않게 수확후관리 또한 중요하므로 앞으로 생육후기 물관리 및 적정건조·저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한 “고품질쌀 계열화 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2~3개 선정하여 품종을 통일하고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하여 품종에 따라 구분 수매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300개의 RPC

18만 8,000ha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이 사업을 통해 품질차별화와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양곡에 대한 표시사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 쌀소비 촉진 전개

최근들어 식생활 패턴이 다양해지고 먹기 편한 인스턴트 식품소비가 늘어나면서 쌀소비량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정부는 도시화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소비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고 있다. 쌀 소비기반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학교급식용, 군·관수용은 신곡으로 공급하여 수요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가공용 쌀 공급가격을 판매원가 수준으로 인하하고, 쌀 가공제품 및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가공용 수요를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밥중심의 식문화를 유지하고, 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촉진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쌀의 우수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심화를 위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쌀소비 촉진 TV공익광고 심포지움 연구발표 등 여론주도층을 통한 쌀소비촉진 행사,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라. 민간유통기능 강화

2004년까지 쌀 유통량의 40%수준을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산물상태로 일관처리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총 7,363억원(국고보조 2,322, 국고융자 2,047, 지방비 38, 자부담 2,965)을 투자하여 신규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 443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2002년도에는 신규RPC 설치를 중단하고 늘어나는 산물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조·저장시설 84개소를 설치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수매량 축소에 따라 민간유통주체의 수확기 물량흡수를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확기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품종을 통일하고 질소비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고품질 쌀생산 계열화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RPC에는 3~7억원의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여 RPC를 민간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인중)

2. 금융 부담경감과 경영위험관리 강화

가.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

2002년 7월 1일부터 용자금리가 5%인 농업정책자금(기금사업 포함) 37개 사업에 대해 1%P 인하하였다.

일시에 많은 사업을 대상으로 인하할 경우,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 재정운용계획 등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계농업인력육성, 농산물수출촉진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과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과 같이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것은 농업경영여건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금에 의존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고, 1997년 이후 시중은행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추세를 보여 왔으나, 농업정책금리는 계속 5% 수준에 고정되어 있어 정책금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게 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도 시중금리의 동향, 국가재정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강신복)

나. 농업경영 회생지원제도 도입추진

(1) 추진배경

농업경영이 종래 소규모 영농에서 고가의 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함에 따라 농업은 자연조건의 제약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경영상 위험요인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농업경영체들은 가격폭락이나 질병 등 외부충격으로 경영위기에 한번 빠지면 연체로 인해 모든 자금지원이 중단되어 그대로 파산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농가부채문제로 귀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건실한 농업경영체가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 외부충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농업경영체가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2) 운영방법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 외부충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업농규모이상의 농업경영체 중에서 경영평가결과 회생이 가능한 농업경영체를 지원대상자로 하며,

회생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를 농협중앙회(시, 군, 지부 등)에 설치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밀경영평가(재무상태, 경영능력, 기술수준, 자구계획의 실천 가능성 등)를 실시하여 정상경영체, 회생가능경영체, 회생불능경영체로 유형별 구분하여 회생가능 농업경영체에게는 경영체 회생자금을 지원하고, 회생불능경영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기존 농업시설을 활용토록 2003년부터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03년 정부예산안에 지원자금 500억원 반영

(3) 기대효과

농업경영회생 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 외부충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농업경영체에게 정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회생가능할 경우 경영회생자금 지원으로 경영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회생불능 경영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업시설을 타농업인이 인수할 경우 인수자금을 지원하여 시설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업자원의 방치와 유실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김오영)

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확대

(1) 대상품목 확대

20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정착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200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험대상품목을 포도·단감·감귤·복숭아까지 확대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제도개선

2001년 보험가입신청을 마감한 후 지역조합,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보장수준을 최대 85%까지 확대하였고 그 내용을 세분화하여 농가의 선택범위를 확대하였다. 보험대상재해에 호우를 추가하였고 태풍·우박은 주계약으로 동상해·호우는 특약으로 하는 제도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또한 보험요율 적용단위를 시·군단위로 세분화하였고 보험료분납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농가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율을 순보험료는 30%에서 50%로, 운영비는 50%에서 70%로 대폭 확대하였다.

<표 3-2-1>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내용

구 분	종전('01년도)	제도개선('02년도)
대상품목	사과, 배 (2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6개)
대상재해	태풍, 우박, 동상해	태풍·우박(주계약), 동상해·호우(특약)
상품종류	가입수확량의 70%·80%	70%·75%·80%·85%
보험료납부방식	일시납	2회까지 분할납
가입단위	농가단위	과수원 단위 허용
요율 지역단위	시·도별	시·군별
방제시설보험료 할인	품목별5~8개 시설, 5~15%할인	품목별 7~10개 시설, 5~20%할인
정부지원	순보험료 30%, 운영비 50%	순보험료 50%, 운영비 70%

(3) 가입결과

4월말까지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18,652농가가 11,029ha를 보험에 가입하여 시행 첫해인 2001년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2년째 시행중인 사과·배는 지난해보다 가입면적이 46.9%P가 늘어나, 면적기준 가입율이 29%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는 재해보험제도에 대한 농가의 이해가 높아졌고 보장수준 확대 등 제도개선과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대폭 확대되어 가입상의 어려운 점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복숭아·단감·감귤 등도 시행 초년도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향후 계획

2003년에는 재해보험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사과·배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2002년에 확대한 포도·단감·감귤·복숭아는 내년 한해 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보완과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부담경감 방안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여 재해보험제도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김원일)

라. 가축공제 대상품목 확대

가축공제는 자연재해 등 가축피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발생시 재생산 기반을 조속히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농가 공제금의 50%를 축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공제는 1997~1999까지 3개년 동안 「소」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대상축종에 「말, 돼지」, 2002년에는 「닭」을 추가하였다.

<표 3-2-2>

가축공제 추진 과정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대상가축	소	소	소	소,말,돼지	소,말,돼지
사업조합	70개	93	104	전국	전국
가입두수	35천두	34천두	29천두	632천두	2,318천두
지급건수	355건	1,624	1,078	1,767	3,421
지급금액	319백만원	1,219	955	1,694	4,163

자료 : 농림부 축산국

2002년에는 가입두수가 6,617천두로, 2001년도 2,318천두에 비해 크게 확대되어 가축공제사업이 축산농가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공제 제도는 각종 사고(수해, 풍해, 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폐사가축에 대해 양축농가에게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부가적으로 폐사가축의 불법유통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축종별 보상사고 범위중 돼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고에 “설해”, TGE(전염성장염;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PED(돼지유행병설사병; Porcine Epidemic Diarrhea), Rota(로타바이러스설사병, Rota Virus) 3개 질병과 “축산휴지”를 추가하였고, 사고시 가축공제 보상금액도 “가입금액 한도내 80%”까지 보상에서 공제상품의

이를 위해서 논농업직불제 도입목적중의 하나인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 중 담수의무를 해제하고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목 재배가 가능하도록 재배작목을 자유화하여 채소, 콩, 사료작물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기능유지가 어려운 과수, 관상수, 약용작물 등 영년생 작물은 계속하여 제외하고 있다.

* 재배가능작목 : 콩·옥수수, 채소, 화훼, 사료·녹비작물 및 인삼, 잔디 등
또한, 친환경 영농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쌀 증산 유발효과 방지와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였다.

토양검사는 8,250점에서 61,500점으로 잔류농약검사는 798점에서 2,250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마을 공동책임제를 도입하여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영농기장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서 화학비료, 농약사용량 기장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용량을 감축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대다수 논농업농가가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이중·중복 선정, 실경작, 필지분할 여부 등에 대한 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천산시스템을 개발하고 10월까지 일선 행정기관에 보급하고자 추진중에 있다. 전산시스템이 보급되면 부적격자 색출 등이 용이하여 인력과 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대상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소득보전 직불제와 생산조정제 도입과 연계하여 논농업직불 지원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논농업직불제의 정책목적을 재정립해 나가고 영농규모화 촉진과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완수)

나. 친환경 직불제 대상지역 확대

200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영농 이행단계에서의 명확한 차별성을 확보하고 더욱 수준높은 친환경농업이 농업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가지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먼저 대상지역을 종전의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예산사정 등을 감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중 일정수준이상 친환경영농을 이행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직불보조금(ha당 524천원)을 지원하도록 하되, 농가당 최소 1천㎡이상 농지를 경작(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등은 제외)하여야 하고 연간 친환경농산물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또한 환경규제지역내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 저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친환경영농의무 불이행으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사용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사업대상자 중 종전의 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사용중인 농가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인증으로 전환하여야 계속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 이외에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표 3-2-4> 2002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대상 선정

(단위 : 백만원, ha, 호)

	대상면적	농가수	보조지원액	비고
계	5,731	7,126	3,003	ha당 524천원
유기·전환유기농산물 인증	677	641	354	
무농약농산물 인증	1,904	2,435	998	
저농약농산물 인증	3,150	4,050	1,651	

<표 3-2-5>

친환경농업의 이행단계별 실천기준

	친환경영농 이행수준	비 고
○ 일반관행 농업	○ 화학비료·농약은 임의사용	○ 과거의 다수확(중산) 위주의 농업
○ 친환경농업		
-친환경영농실천의무	-화학비료·농약 기준량 이내 사용	-일반적인 친환경농업(논농업직불기준)
	-화학비료·농약 기준량의 1/2이내	-친환경직불지원기준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농약은 기준량의 1/2이내	-친환경농산물인증대상
-무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기준량/3이내농약사용금지	- "
-전환기유기농산물	-화학비료·농약 1년이상 사용금지	- "
-유기농산물	-화학비료·농약 3년이상 사용금지	- "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관 정영환)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도입추진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가) 도입배경

최근 연속되는 풍작과 MMA 수입량의 증가 등으로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국민의 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쌀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으로 그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조적 공급과잉, 정부수매물량 감소로 대표되는 정부역할 축소, WTO DDA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 논의 등을 고려할 때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농업직불제는 가격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가격과의 연계성이 약하여 효과적인 소득보전장치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위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에서는 2002년 6월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쌀산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산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농특위에서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지금의 과잉공급을 해결하고 수급균형을 도모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쌀값하락 및 쌀농가소득의 감소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농특위의 쌀소위,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10. 22 명목조수입 하락액의 80%를 보전하기로 하는 등 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의결하였다.

(다) 사업시행

농림부는 농특위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농특위와 국회논의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 시행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2002년산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일단 정부안으로 중심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200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9월30일 마련하였다. 시행지침은 제도가 수확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농업인들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산에 대한 계약체결이 10월 15일부터 이루어졌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예산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2003년도 정부예산안에 1,100억원이 반영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은 농업인의 가입정도, 쌀가격 하락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등 사전에 소요를 예측하기 불가능함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 기금에는 정부출연금 및 농업인 납부금이 적립되게 된다.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 준비

(1) 추진현황

2002년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정책토론회를 농림부, 지자체, 농경연,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충북(2.26)·서울(3.5)에서 개최하였고, 도상연습을 실시(2002.4~6)하여 직불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횡성군 강림면, 무주군 적상면, 봉화군 재산면 3개면의 2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실시된 도상연습은 경사도 14%이상의 밭과 초지를 대상으로 구역도 및 지번조서를 작성하고 마을대표 및 마을주민의 협조로 마을협약 작성 및 보조금 신청과정까지 실시하였다.

2002년 4월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대상지역인 399개 오지면의 밭경사도 조사 및 대상지 구역도 작성을 12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리정보 시스템(GIS)를 이용하여 구역도를 작성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수치지형도가 미구축된 군사보호구역 등에서는 지자체의 지가전산도면을 활용하고자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구하였다.

(2) 향후 추진계획

밭작물은 규모가 영세하고 품목이 다양하므로 충분한 검토와 보완으로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전체 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향후, 농업인들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취지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2002년 12월까지 대상지역의 구역도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윤원습)

제 2 절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1.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중점 지원

가. 영농규모화 촉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쪼고 유능한 쌀전업농에게 장기저리의 이자(매매 : 연리 3%, 임대 : 무이자)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영농규모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동 기금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재특회계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결손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규모확대를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으로 그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2002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7,367ha, 3,159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가 2,912ha, 2,210억원, 농지임대차가 4,365ha, 886억원, 농지교환·분합이 90ha, 6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각 시·도별 농업진흥지역면적, 쌀전업농수, 2002년 사업신청액, 전년도 집행실적, 농지가격등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쌀전업농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규모확대가 촉진될 전망이다.

<표 3-2-6>

2002 영농규모화추진 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2 계획(A)		2001 실적(B)		증 감(A-B)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7,367	315,866	9,040	268,681	△1,673	47,185
농지매매	2,912	220,983	1,787	132,081	1,125	88,902
임대차	4,365	88,610	7,163	131,800	△2,798	△43,190
교환분합	90	6,273	90	4,800	-	1,473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와 행정사무관 김규억)

나.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생산자리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경력이 3년이상이고, 연령이 65세이상(질병·사고 및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60세이상)인 고령농가가 소유농지를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사용대하고 영농에서 은퇴하는 경우 ha당 281만원(지원상한액 5.3ha, 1,500만원까지)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생산성이 낮은 65세이상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영농 규모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2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600ha, 1,686백만원으로 이 중 농지매매가 77ha, 214백만원, 농지임대차가 523ha, 1,472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2001년도 사업비 초과 신청접수 물량 및

2002년도 영농규모화사업 예산 등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따라서, 완전경영이양을 전제로 하는 농지매매사업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2001도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대상자로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확정된 자는 농지임대차도 지원한다.

<표 3-2-7>

2002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2 계획(A)		2001 실적(B)		증 감(A-B)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600	1,686	1,952	5,480	△1,352	△3,794
농지매매	77	214	245	690	△168	△476
임 대 차	523	1,472	1,707	4,790	△1,184	△3,318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행정사무관 김규억)

다. 생산자 조직 중심의 계열화·브랜드화 추진

WTO체제 출범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규모화 및 계열화를 통한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판매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선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작목반·영농조합을 계열화함으로써 일선조합이 실질적인 산지유통주체가 되도록 하고, 일선조합은 다시 광역의 연합조직에 계열화하여 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작목반·영농조합과 같은 기초생산자조직은 생산에 있어서 정보교환 등 생산활동에 치중하고, 수확후 관리, 소비지 출하 등을 일선조합이 수행하도록 하며, 광역의 연합조직은 유통정보, 신상품개발, 브랜드화, 판촉 등 마케팅 활동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생산자조직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출하촉진자금(839억원), 생산자조직 육성자금(640억원),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400억원)을 지원하여 생산자가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출하사업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00개소의 산지유통조직을 지정하여 유통정보의 수집·분산,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등 품목별 지도·지원의 중심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연합사업 확대(11개 조직, 23개 품목)를 통해 산지유통혁신과 실질적인 생산출하조절을 담당하는 품목별 연합조직의 결성을 촉진('02 : 11개 연합조직)함과 아울러, 해당품목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전국단위 연합조직에 자조금 조성을 보조지원('02 : 23억원)함으로써 생산자조직 자율에 의한 수급조절능력이 배양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박범수)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1) 개 요

농업종합자금은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분야의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체에게 시설·개보수·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 지원계획

2002년 종합자금지원은 7,230억원(농특자금 1,480억원, 농협자금 5,750억원)으로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을 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농업종합자금의 운용은 기존 농림사업자금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자금을 사전에 배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풀(pool) 방식으로 운용하고, 농업인의 수시 신청에 따라 연중 수시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금공급의 신속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표 3-2-8>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실적	2000실적	2001실적	2002계획
합 계	15,000	160,500	175,717	723,000
농특자금	15,000	128,500	138,717	148,000
농협자금	-	32,000	37,000	575,000

(3) 2002 지원제도 개선

공급과잉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을 제한하였던 양돈·양계부문의 신규시설 설치자금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따라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종합자금지원원칙에 의거 2002. 5월부터 신규시설자금 지원제한을 해제하였다.

그리고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추세와 어려운 농업경영여건을 고려하여 2002. 7. 1일부터 대출금리를 5%에서 4%로 낮추어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중 전업경영체 지원자금인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전업경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중 농업종합자금제로의 통합이 바람직한 사업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자문·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5,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회계교육이수와 1억원 이상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연1회 회계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자금지원 이후에는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료에 기초한 농가경영진단결과를 농업경영체에 제공하여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향후 제도개선 방향

농업종합자금제는 정책자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부실화율을 낮추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다.

앞으로 대출절차를 더욱 표준화하고 대출관련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담당자 확충 및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취약한 사업계획 수립 능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있는 경영체를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결과의 자료화와 경영 분석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징후의 사전 감지, 농가에 경영진단자료 제공, 컨설팅사업과 연계 등 사업성공위주의 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업종전망 및 동향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김호성)

마. 농업인력 육성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우리 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2010년까지 16만명을 육성할 목표로 2001년에 3,270명을 선정, 지원한 데 이어 2002년에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 1,100명, 재촌신규후계농업인 1,500명 등 2,600명을 선정,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물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 하였으나 신규취농자를 우대지원하고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일정수준의 경영기반과 경력, 발전가능성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화, 규모화된 쌀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쌀 전업농육성

사업은 2004년까지 10만호(5ha이상 6만호, 3~5ha 4만호) 육성을 목표로 2000년에 7,467명을 선정, 지원한 데 이어 2001년에는 10,000명을 선정하여 영농규모화자금 2,68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수·화훼, 축산 등 기타분야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의해 지원하게 된다.

<표 3-2-9> 2002년도 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육성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후계농업인	쌀전업농
선정인원	13,500	2,600	10,000
지원금액	378,700	100,000	268,700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강형석)

바. 법인 경영체의 육성

2002년 7월에는 기타생산자단체의 범위를 고시하여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지위를 부여하고 1,778개의 영농조합법인과 433개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업용 시설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02년 7월에는 농업연수생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2003년도 상반기부터 활용토록함으로써 최근 농촌 노동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법인의 인력난을 덜어 주는 등 농업법인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이경천)

사. 컨설팅 지원체계 확립

앞으로 농업분야의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수준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한도를 상향조

정하고 신규창업농과 일정규모이상의 경영체를 집중 지원하여 구조개선을 촉진시키고, 가공컨설팅을 경영컨설팅에 통합·운영하고, 은퇴공무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농업경영컨설팅이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이루는 제도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이경천)

아. 여성농업인 육성

(1)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강화

(가)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실시

여성농업인육성계획추진 두번째 해인 2002년도는 급속하게 변하는 농업 환경에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신지식·신기술 농업의 적응력을 키우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업기여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화의 시대를 맞아 여성농업인도 정보화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화교육은 농업협동조합회원조합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을 통해 24,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각 교육기관에서는 여성농업인을 교육대상인원의 30%이상인 30,000여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을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농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과 초보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마케팅, 정보화, 지역사회의 역할 등 전문직업의식과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력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기법을 숙지하여 현장감 있는 눈높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강사, 전문교육요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교관반」을 신설하여 25명을 총 6회에 걸쳐 교육할 계획이다.

(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및 위원회 여성참여

신규후계농업인 선정시 평가점수가 360점이상인 여성에 대해서는 시·군별 선정대상 인원의 20%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자격 있는 여성농업인이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며 30% 이상의 참여율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 여성농업인센터 시범운영 지원

여성농업인은 전체농업인의 52%에 해당하고, 농업종사자도 51%에 이르지만 농업·농촌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교육·문화 등 복지정책도 열악한 실정이므로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마음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방과후 자녀학습지도, 농업 전문가가 되기위한 자아실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전국 9개도 18개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표 3-2-10>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시·군 현황

계	경기2	강원2	충북2	충남2	전북2	전남2	경북2	경남2	제주2
18개소	용인 여주	양구 횡성	영동 청주	서천 홍성	진안 부안	나주 장성	안동 영양	진주 거창	북제주 남제주

금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는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발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1,836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85%(개소당 1,020백만원)까지 보조한다. 2002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

(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0년 처음으로 도입한 생산적인 복지 제도이다. 2002년도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7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도우미 단가(27,000원)의 80%(21,600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지역을 87개 지역에서 163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농가도우미 3,200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표 3-2-11>

농가도우미제도 실시 시·군 현황

(단위 : 개)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울산	인천
163	31	18	12	16	14	22	23	20	4	1	2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3)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여성농업인 복지지표개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등 70백만원의 예산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의 개발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여성농업인 관련 각종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단기 사업계획과 추진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를 개발하여 적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농업인정책을 개발하고 그 진척상황을 평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 연구는 정부, 교육기관, 농

업관련 단체 등의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실태를 조사하고 교과과정, 교재내용 등을 분석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종합적 운영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복지현황 및 욕구를 다면적으로 진단하여 농촌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쓰일 것으로 기대하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위·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제고 및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제고가 보다 중요시되어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성 및 농업관련단체 교육담당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정책반」을 11월에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세열)

2. BT·IT접목으로 농업성장 동력 발굴

가. 유전체 분석·GMO 등 농업생명공학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1980년대부터 다양한 유전자원의 확보가 농업발전과 국가 부창출의 밑거름이라는 인식 아래 재래종, 육성종 등의 국내부존자원을 수집·보존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해외자원의 도입에 주력한 결과, 생명공학연구의 기본소재가 되는 작물종자 147,192점, 작물 영양체 996종 13,528점, 가축 8종 16,539마리, 미생물 632종 13,532점, 누에 321점을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하게 되어 양적수준으로 볼 때 세계 6위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보유량 확보를 목표로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정보활용 전산화를 위하여 보유중인 147,000여점의 자원의 기초 정보와 특성평가 성적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고 자원분양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농용미생물 보존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미생물 자원의 수집, 보존 기초자료 및 특성분석 평가자료를 D/B화하였다. 현재, 이들 자원

정보중 1차적으로 우리 고유자원을 중심으로 23천점을 일반에 공개하여 (<http://genebank.rda.go.kr>), 자원검색, 분양, 기탁보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후에는 양적으로 세계 6위 수준인 유전자원을 질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수집·탐색 및 보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가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현행 유전자원 관리규정의 관리대상 자원이 농촌진흥청 소속연구기관, 도농업 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 및 미생물자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금후, 유전자원관리규칙의 제정을 통해 다양한 농업유전자원에 대해 분야별 자원의 관리주체로서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자원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리기관의 범위를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적인 농업유전자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농업유전자원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분양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원의 분양을 연구용으로 한정하고, 유전자원의 활용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자원등급을 구분할 계획이다. 특히, 국외로 분양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이 분양조건 및 절차를 강화하여 우리 고유자원의 해외 유출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표 3-2-12> 농업유전자원 등급지정 및 국외분양 요건

등 급 지 정	국외분양요건
- I 급 : 국내야생종, 재래종 및 근연종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 II 급 : 국내육성종	품종육성후 5년경과(직무육성인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 III 급 : 국외수집종	국제규약준거, 농촌진흥청장에게 사후신고

농촌진흥청은 1999년부터 국제 벼게놈분석 컨소시엄(11개국)에 참여하여 2001년 3월에 벼 1번염색체를 일본과 함께 완성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9번염색체를 분석에 착수하였다. 본 컨소시엄은 2002년말에 1차 완성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서 신젠타, 몬산토 등의 다국적기업이 제한적인 유료 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전체 염기서열정보는 완전 공개할 방침이다. 여기에서 획득한 연구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벼 흰잎마름병원균과 배추의 유전체분석연구에 착수하였으며, 9월에 벼 흰잎마름병원균의 유전자지도 초안을 작성(4.5 Mbp), 2002년 5월에 국제유전자은행(NCBI)에 등록함으로써 한·중·일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전자변형작물(GMO) 개발 및 안전성 관련 정보 등과 함께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웹사이트(<http://www.niab.go.kr>)에 공개하였다.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환경친화적인 20작목 50종의 형질전환 작목을 개발 중에 있고, 이중 제초제 저항성 벼,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등은 실용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단계에 있으며, 동물분야에서는 빈혈치료제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돼지(새롬이)를 개발후 기업체와 공동으로 산업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 농업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 비타민 E 강화 상추, 향암물질 생산 감자, 조기개화 국화, 인공장기생산 돼지 등의 고부가가치 형질전환작목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 형질전환 동·식물(GMO)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농림부고시로 농업환경영향 심사규정을 제정·운영함으로써 국내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안전성 심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9년에는 한우 복제송아지 「새빛」 생산에 체세포 복제소 6두가 태어났다. 이 후 복제소의 생산효율 증진연구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02년 5월까지 각 도 축산기술연구소에 복제수정란을 188두에 이식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구제역 상황이 종료되면 각 도 축산기

술연구소에 체세포 복제 수정란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진청 축산기술 연구소에서는 자체 연구사업용으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체세포 복제수정란을 143두에 이식하여 수태율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체세포복제기술은 수정란의 비정상적인 발생에 의해 유사산, 난산 및 폐사율이 높아 복제소 생산 성공율은 5~10% 정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산·학·연 공동으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복제소 생산연구의 투명성 확보와 수태율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세계적인 추세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체세포 복제소의 농가보급 등 산업화는 당분간 지양하고, 복제소의 사후관리 및 생산물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여부에 관한 연구를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업생명공학육성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그린 21 사업은 2001년도에 총 18억원을 투입하여 3대 핵심분야 6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이 필요한 19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지만, 2002년도에는 3대 핵심분야 14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농업생물자원의 유전체분야에 10과제,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분야에 20과제 농업생명공학 실용화촉진 분야에 57과제를 선정하여 총 87개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등 54개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 등 총 92기관이 참여하여 명실공히 산학연 공동연구체제를 갖춘 과제들이 기관별로 다양하게 선정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그린21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0년도에는 고부가가치 형질전환 동식물 150품종 이상, 신기능성 물질 50종 이상을 산업화함으로써 연간 100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세계 5위의 농업생명공학 기술강국이 달성되어 국내 농업이 국가 부 창출의 주력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생명공학기획조정과 농업연구관 김동헌)

나. 기술개발을 위한 품목별 협의체 운영

그동안 기술개발 결과가 농업현장의 기술수요와 차이가 있어 현장적응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기술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연구과제에 반영함으로써 개발기술의 실용화율을 높이고자 현장필요 기술 개발을 위한 품목별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품목별 협의체는 품목별 독농가, 지역특화작목 연구소의 관련연구관, 농업기술센터의 품목별 전문가, 인근 농과계 대학교수,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2002. 6월말 현재 전국 157개 농업기술센터에 267개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연간 3~4회 운영된다.

품목별 협의체는 크게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품목별 전문 농업인으로부터 파악한 현장애로기술을 심층 검토하여 지역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관련전문가가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농림기술개발사업 현장애로 기술 농업인개발과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품목별 협의체를 통해 현장애로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 참여자에게 아이디어로 제공하는 것이다.

2002년도에는 현장애로기술을 500건 이상 발굴하여 그 중 150건 내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인데, 2002. 6월말 현재 농업인들로부터 현장애로기술 217건을 접수하여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과학기술자들에게 기술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농업인개발과제 125건(2,891백만원)을 선정 지원하였다

(친환경농업과 농업서기관 민주석)

다. 원격영농상담소 운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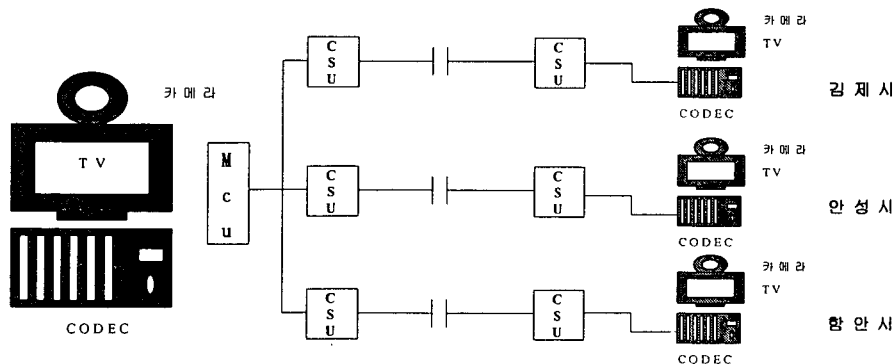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초고속 정보망을 구축하고 선도 응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영상회의 시스템을 응용한 원격진료, 원격초등교육과 함께 원격영농상담 시범시스템이 1995년 2월에 출발하였다.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은 농업인이 현장애로기술을 전문가와 영

상으로 직접 대면하여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식량작물 중심의 기술보급 조직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시대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 타분야 보다 지도인력은 오히려 더욱 줄어들고 있다.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전문가 및 전문지도사를 광역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지도기관의 지방화 이후 자칫 소홀하기 쉬운 중앙기관과 지방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에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1) 원격 영농상담시스템

원격 영농상담시스템은 일반적인 영상회의 시스템과 같이 원거리에 있는 당사자간에 영상을 농작물 병해충 등 영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영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관찰하면서 농업인에게 처방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9개의 연구기관과 28개의 지도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앞으로 2004년까지 2~3개 시군당 1개소씩 70개소를 설치하면 농업 기술보급의 혁신적인 매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원격영농상담시스템 구성도

인터넷 원격영농상담 시스템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농업인이 안방에서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영농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01년에 느타리버섯,

오이, 젓소 등 10개의 작목반을 대상으로 7회 시범운영 하였고 2002년에는 80여개의 작목반에, 2003년부터는 333여개의 작목반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동형 상담시스템은 온실 및 포장 등 현장의 식물 및 강사의 음성을 중계소(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등)를 거쳐 다른 기관에 전송하고 상대국의 음성이 현장의 이동형 원격상담시스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동형 원격상담시스템의 신호전송은 무선으로 이루어지며 직선거리를 기준하여 2km이상에서 영상, 음성이 원활하게 전송된다.

(2) 서비스 내용

2001년도에는 219회 10,159명의 농업인 및 관련직원이 이용하였고 2002년에는 12,000여명이 이용할 예정이다. 서비스 내용에는 원격상담 및 교육, 즉시상담, 새기술 소개 및 최신 연구동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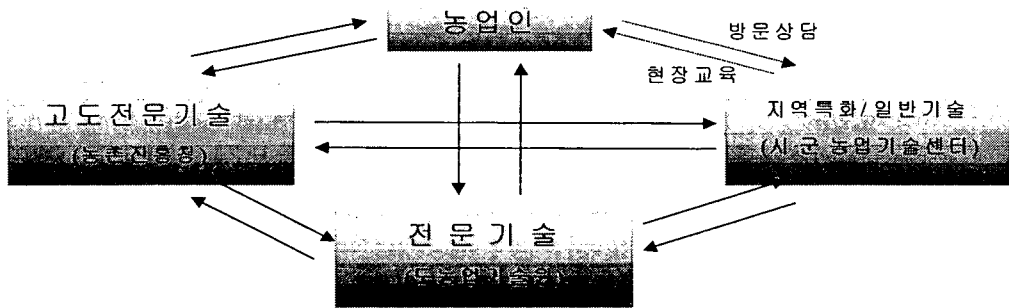
첫째, 원격상담 및 교육은 기존의 새해영농설계교육이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봄에는 품종선택법, 여름에는 병해충 방제법, 가을에는 수확/저장 등 해당시기에 시스템이 설치된 인근지역 농업인이 공통적으로 관심있는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주 4회 실시하고 있다. 강사는 주로 연구기관의 재배 및 병해충 전문가가 동시에 출현하여 양질의 교육 및 상담을 질의응답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둘째, 즉시상담은 이 시스템의 서비스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상기온과 환경공해 등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시급하고 돌발적인 애로기술 사항에 직면할 때 즉시상담을 요청하면 30분 이내에 이 시스템으로 전문가와 현장의 실물을 가지고 상담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새기술 소개는 농촌지도직원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매월 격주 금요일에 실시되며 최신 연구동향 세미나는 연구기관간 최신연구정보를 원격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격주 월요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3)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이용 활성화 방안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장애로기술 상담을 분산하여 실시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현장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일반기술/지역특화기술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전문기술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고도전문기술은 농촌진흥청이 신속하고 입체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그림 2> 현장애로기술 상담의 다채널 구성도

둘째, 인터넷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터넷이 가능한 마을회관, 농가 안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야간 등 편안한 시간에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 및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시범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원예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형 상담시스템을 연구기관 및 도 농업기술원에 확대 설치하여 온실 및 포장에서 생동감 있는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인터넷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의 생산과정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차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 5일제 근무」와 연계시켜 도시민들이 직접 농장체험을 하는 계기로 활용할 경우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 전산사무관 오병택)

라.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1) 개요

21세기 농업의 경쟁력은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첨단기술력과 정보화의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농업은 종합생명산업으로서 유전공학·생명공학·기계공학·전자·화학 등 수많은 연관학문과 관련분야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따라서, 우리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고유의 토착기술을 현대 과학기술에 접목시켜 우리실정에 맞는 한국형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부응한 실용 기술을 개발하고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농업분야에 응용하여 실용성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수행 과정에 농업인과 민간연구소·산업체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우수기술개발자 및 활용자를 발굴하여 시상·격려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첨단기술개발사업

농업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타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분야에 접목하여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첨단기술개발과제와 기획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첨단기술개발과제는 자유공모과제로서 지원대상기술은 품종 및 첨단생산 기술, 기계화 및 자동화시스템개발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및 정보 기술 등이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3년이내, 연구비는 5억원이내를 지원한다.

또한, 기획연구과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기술과제로서 체계적인 연구기획에 바탕을 둔 과제지정 공모방식에 의한

품목별 일관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절감 등 비용절감형 기술, 농업을 종합생명산업화 할 수 있는 기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가공·저장·유통기술, 산림자원의 이용·보전 및 새로운 용도개발 기술, 통일대비 북한농업 공여기술, 국가정책 목표달성 및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긴요한 중점기술 등이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3년이내, 연구비는 10억원이내로서 『농업기술개발중장기기본계획』과 해당 실·국의 제안요구 자료검토에 따라 원예, 축산 등 10개 분야별 중점개발대상과제를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연구성과의 산업화 등 필요시 첨단기술개발과제는 2년, 기획연구과제는 3년이내 추가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3)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농업인들이 영농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부응한 실용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와 농업인개발과제로 구분하여 자유공모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는 기술개발 수준이 첨단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로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농업용 기계·자재개발기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술 등이 이에 해당되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3년이내이며 지원금은 2억원이내이다.

또한, 농업인개발과제는 농업인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는 실용기술로서 시험·연구가 미치지 못하는 국지적인 지역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기술,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충기술 등의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애로기술을 개발하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2년이내, 연구비는 3천만원 이내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4)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농림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벤처형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육성·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우리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우리부는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자가 산·학·연 협동으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되는 기술,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등을 개발·지원하는 것으로써 특히, 하이테크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3년이내, 연구비는 3억원이내로써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촉진

농업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한 우수한 연구개발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연구인력의 참여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우리농업을 21세기의 종합생명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제정한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이 금년 들어 제5회를 맞게 되었으며 시상식을 2002년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기술의 현지활용보급 및 정착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고, 종료된 기술에 대해서는 자료의 D/B화, 인터넷을 통한 농림기술복덕방개설, 기술설명회, 각종 세미나, 시연회, 전시회 등을 통해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과 농업사무관 박백화)

마. 농업정보화의 확대 추진

1999년 농업·농촌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정보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초기단계 정보화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농업인들의 정보

화마인드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식정보화의 급격한 진전은 많은 환경변화를 가져왔다.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IT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한편, 농업·농촌분야에서도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올해 기존의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계획」의 추진실적 중간점검 및 보안대책을 수립('02.6)하여 농업·농촌정보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조기 확충, 정보화교육의 체계화, 출하지원시스템 확대 등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충

농촌지역의 수요검증과 소형장비 적용을 위한 초고속통신(ADSL)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 되고있다. 농촌지역에 적합한 소형 ADSL 장비의 국산화 성공에 따른 가격하락, 농촌지역 정보수요 확산 등으로 농촌지역의 초고속통신망은 2001년에 전체 읍지역과, 875개(전체 1,223개) 면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말까지 전체 면지역까지 ADSL을 보급할 계획이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이대형)

(2) 농업인 정보화교육 확대

도·농간 정보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002년도에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지난해 75천명에서 80천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초급·중급·전문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여 교육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읍·면단위 회원농협에 정보화 기초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터넷 농업정보 활용 등에 대한 중급교육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품목별 전문 정보화교육 과정은 전국 22개의 농과대학 및 농업연수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농촌현장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정보화교육 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과대학생이 농가를 방문하는 농업정보119서비스 대학도 전국 22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신청과 교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교육관리 시스템(edu.affis.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의 반복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원격교육의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표 3-2-13>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1998~2000	2001	2002
총 계	241,299	85,361	75,738	80,200
읍·면 기초교육	104,684	23,247	38,437	43,000
시·군 중급교육	30,351	-	14,351	16,000
품목·분야별 전문교육	13,042	8,949	1,093	3,000
농업정보 119서비스	43,676	12,899	15,077	15,700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5,600	998	2,102	2,500
생산자단체(농협)교육	11,186	6,508	4,678	-
정보화공공근로사업 (농가방문교육)	32,760	32,760	-	-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이대형)

(3) 농업경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터넷 콘텐츠 확충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기능 개선으로 정보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농업관련 전문기관·단체·업체 및 전문가 등 정보제공자(IP) 발굴, 농촌생활정보 전문사이트와 제휴 확대 및 각종 농업정보사이트 링크 연계를 통해 농촌생활과 복지관련 정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정보의 경우 품목중심으로 정보를 분류하여 이용자가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정보제공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산물 출하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한 출하지원시스템(<http://www.chulha.net>)은 26개 공영도매시장의 경락 가격 분석정보 및 유통전문가의 시황·전망정보 등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자율적인 출하시기·시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02년에는 부류별로 11개 품목에서 23개 품목(추가 : 닭·계란·배·감귤, 내용보장 : 호박·파·당근·토마토·수박·참외·단감·감자)으로 서비스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품목별 핵심요약정보 제공 등 이용자 편의위주로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며, 전자경매를 실시하는 도매법인을 대상으로('01년 5개시장 9개법인 → '02년 14개시장 37개법인 확대계획) 속보형태로 경락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통한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106농가지원을 시작하여 2001년까지 총806농가에 대해 구축지원 하였으며, 2002년에는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개발비의 50%에 대해 농가 자부담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홈페이지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22개 농업정보119대학에서 전담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농가운영교육도 해당지역 119대학에서 담당하게 된다.

2001년에 이어 올해도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우수농가를 발굴·홍보하고 주 소비 계층인 주부를 대상으로 농산물 인터넷 쇼핑물 이용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조규표)

(4) 농림지식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은 농림부, 소속기관 및 농림유관기관에 농림관련 지식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포털지식포털 서비스로서 2002년도 3차 확대 구축사업을 진행중이다. 지식관리시스템 확대구축사업시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을 대국민서비스 수준으로 확장하여 농업인에게 기존 농림지식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식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주요 농업관련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디렉토리서비스와 강력한 검색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계사이트 확대에서 기존 농림지식관리시스템에 연계된 농림부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 13개 기관의 농업관련 학회, 단체, 기업, 대학, 농업매체 등 140여개 기관을 추가로 연계하여 농림지식관리시스템 상에서 농업관련 지식 정보를 획득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한편 기존 지식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기존에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 및 보강하고 주요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콘텐츠 중 사용자호응도가 높은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식관리시스템은 3차확대구축사업을 통하여 농업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의 댐을 지향하고 있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문광규)

(5) 「농촌PC보내기 운동」 추진

농업·농촌 정보화의 초기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정보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보접근기회 제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PC의 보급률이 도·농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PC보급의 확대를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농업인의 지식·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촌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정부기관 등이 사요하던 중고PC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PC보급률을 2005년까지 50%수준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기증받은 중고PC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대당 8만원씩 지원하여 성능을 개선시켜 보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기증과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pc2farm.org)를 개설하고 사은행사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다 많은 기업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법인이 농촌 정보화를

위하여 기증하는 PC등의 금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서규식)

바. 농업벤처 육성

농업인의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농업벤처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2년에는 정부(100억원)와 민간부문(100억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100억원 규모 「농업전문투자조합」 2개를 결성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농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아이템을 가진 농업벤처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벤처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보육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벤처 창업경연대회 및 농업벤처 투자박람회 개최 지원, 농업분야 벤처기업 평가기관 설치, '산·학·연·관'의 휴먼네트워크 구축, 기타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 농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강형석)

3. 농업기반시설 정비

가. 일반 경지정리 사업

그 동안 경지정리사업은 평야지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평야지에서는 기반정비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지정리사업은 경사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사업여건이 열악하여 소요사업비가 정부에서 책정·지원하고 있는 예산단가보다 높아 사업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002년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1,504억원과 지방비 373억원 등 1,877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가을에 착수한 6천ha를 봄마무리하고, 새로이 3천ha를 가을에 착수할 계획이다.

<표 3-2-14>

일반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총논면적	총계획	2001까지	2002계획	2003이후
사업량	1,146	800(915)	709(813)	6(7)	85(95)
-진흥지역	770	665(760)	623(713)	6(7)	36(40)
-진흥지역밖	376	135(155)	86(100)	-	49(55)

주 : 면적은 마무리 논면적 기준, ()은 논면적에 농로, 용·배수로 등 시설부지를 포함한 구역면적 기준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재홍)

나. 대구형 경지정리사업

개발목표 200천ha중, 2001년까지 79천ha를 마무리하였고, 2002년에는 과거에 소규모로 농기계 작업이 어렵게 경지정리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862억원과 지방비 212억원등 1,078억원을 투자하여 지난가을에 착수한 4천ha를 영농기 이전 완료하고 새로이 3천 5백ha를 가을에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형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형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5>

연차별 대구형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0까지	2001계획	2002이후
사업량	200	73	6	121

주 : 봄마무리 기준임.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재홍)

다. 밭기반정비 사업

밭작물 상습가뭄지역을 해소하고 기계화영농기반을 구축하며,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체 밭면적 730천ha중 채소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 110천ha(15%)를 1단계 정비목표

로 용수개발, 농로정비 등 발기반정비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중에 있다. 1994~2001년까지 10,729억원(국고 8,396억원, 지방비 2,333억원)을 투입하여 47천ha를 정비하였으며, 이는 전체 발면적 730천ha의 6%, 1단계 목표면적의 43%수준이다. 2002년에는 1,217억원(국고 978억원, 지방비 239억원)을 투자하여 5천ha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합리적인 투자계획으로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목표면적 110천ha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 정비할 계획을 반영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발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개발이 가능토록 하여 발농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16> 연차별 발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목 표	2001까지	2002계획	2003이후
사 업 량	110	47	5	58
사 업 비	25,794	10,729	1,217	14,028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재홍)

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영농작업은 농기계 확대 보급으로 첨단화·대형화되어 가는 반면, 영농작업의 근간인 경작로는 비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쌀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까지 경지정리 대상면적 80만ha안에 있는 주요 농로 22,000km를 확·포장할 계획이다.

이미 1995~2001년에 11,231km의 확·포장을 추진한 결과, 영농시간 단축, 농산물 운반용이, 생활환경개선,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등 사업효과가 높아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2002년도에는 1,514억원을 투자하여 1,450km를 확장·포장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량

과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3-2-1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총 계 획	2001까지	2002	2003이후
사 업 량	22	11.23	1.45	9.32
사 업 비	29,262	11,362	1,514	16,386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권총희)

마.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 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영농기반조성사업으로 최근의 연속 풍년농사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아직도 수리답율은 77%에 불과하며 나머지 23%는 천수답으로서 작은 가뭄에도 물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수혜면적규모에 따라 대규모, 중규모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다. 수혜면적 3,000ha 이상의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경북 성주, 전북 동화동 2개지구 7,380ha에 대해 추진중이며, 수혜면적 50~3,000ha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130개지구 55,601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그중 20개지구 7,460ha를 2002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방지로 안정영농을 도모하고, 농지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영농기계화를 촉진하여 노동력 절감, 단위 생산량 증가로 소득증대 등에서 효과가 크다. 앞으로 2009년까지 235천ha에 대한 방재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며, 2002년에는 국고 2,252억원을 지원하여 108지구(30천ha)에 대한 배수개선을 추진하고 이중 31지구(8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수렁논 개량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하배수개선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은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을 중

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자원확보는 물론 기계화 영농기반구축, 상습침수 해소, 우량농지 창출 등으로 영농환경개선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2001년에는 시행 중에 있는 새만금지구등 7개지구에 국고 886억원과 농지관리기금 2,350억원등 총 3,236억원을 투자하여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재해예방과 안전영농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의 노후시설 개보수와 흠수로 현대화 등 총 7,71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국고 2,983억원을 지원하여 수리시설개보수 355개소, 저수지준설 8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용수관리지동화(TM/TC) 사업은 기존의 인력에 의하여 현장위주로 물관리 하던 것을 용수절약, 유지관리비 절감,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원격 조정에 의한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자동화 및 원격조정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국고 53억원을 투입하여 1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2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98개소, 지방관리방조제 1,491개소 등 전국 1,589개소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61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시설이 67%인 1,061개소에 달할 뿐 아니라, 방조제 외측보호 사석의 유실,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재 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 발생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의 확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2년에는 773억원을 투입하여 100개소의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발정책과 토목사무관 김일환)

4. 농업기계화 촉진

가.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1) 추진배경

농업기계화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업기계화촉진 시책에 따라 부족한 농업노동력 문제해소,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구조개선 촉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가격·유통 등 공급문제, 농기계산업구조의 경쟁력 약화, 농기계 사후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 기계화촉진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나타나 21세기 농정여건에 걸맞게 농업기계화정책의 중장기계획의 기본틀을 새로이 하고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여건의 변화와 개방화에 대응, 농업기계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마련한 농업기계화정책 제도개선 방안의 실천 및 농업인의 편의 및 농기계이용률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기계화정책 제도개선

업체통보가격을 상한으로 하였던 농기계가격을 완전 자율화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다. 농기계 모델의 합리적인 관리와 우수성능 농기계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기계모델에 대한 형식명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구조, 성능·안전성 등이 기존 공급모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형식명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생산중단모델, 소량 판매로 경제성이 없는 모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저비용 농기계 보급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진입 모델이나

공급중인 모델 중 기술개발, 국산화 등으로 생산원가를 10%이상 절감한 경제형 농기계 공급제도를 도입하여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우대하기로 하였다. 작물생육, 환경조절기기 등의 신규진입시 시험연구기관의 검증의무를 부여하고 새로 개발된 기종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평가를 거치게 하며, 품질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농기계는 자유진입기종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진입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A/S실태 종합평가제를 계속 추진하여 농기계 수리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는 한편, 농기계유통의 효율화 및 중고 농기계 거래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2002년도에는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농기계 및 공급자의 기준과 신기술 농기계와 밭작물·축산전용 농기계에 대한 우대지원 등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제도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융자지원한도액 산정에 있어서는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고품질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쌀전업농과 고품질벼 생산농가(친환경농업육성법상 친환경농산물인증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쌀품질인증을 3,300㎡이상 받은 농업인)가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지원한도액을 기준금액의 70%에서 90% 해당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저렴한 농기계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국산화 등으로 생산원가를 10%이상 절감한 농기계 및 기본성능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10%이상 저렴한 저가의 경제형 농기계에 대하여는 융자한도액을 20%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도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7,360억원(국고융자 1,472, 농협융자 3,680, 자부담 2,208)으로 98.4천대분의 농기계구입자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2001년 지원한 7,189억원보다 171억원(2.4%)이 늘어난 것으로 농기계 적기 공급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3-2-18>

2002년도 농기계구입지원 사업비

(단위 : 천대,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농협융자	자부담
		계	보조	융자			
98.4	736,000	147,200	-	147,200	-	368,000	220,800

<표 3-2-19>

융자한도액 산정기준표

구 분	융자지원액 산정기준
① ○ 신기술농기계(신규공급일로부터 2년이내) ○ 농협농기계은행, 농업회사법인 등이 공동이용목적으로 구입하는 농기계	기준금액의 90% 해당액
② ○ 발작물·축산전용 농기계중 주요기종	기준금액의 80% 해당액
③ ○ 보행형동력경운기와 그 부속작업기 ○ 톱밥제조기(15마력미만 원동기 부착) 및 선택품	기준금액의 50% 해당액 (선택품은 공급가격의 50% 해당액)
④ 기타 농기계(①②③제외)	기준금액의 70% 해당액

(농업기계자재과 행정사무관 임신탉)

다.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1)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2002년에는 240억원의 수리용부품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리점 등 먼단위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도 고장 농기계 운반용 차량 구입비 뿐만 아니라 수리·정비용 건축비 등을 지원하며, 사후봉사업소의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리용 부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와 대리점 사이의 전산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A/S실태 종합평가제(연 2회)를 계속 추진하여 사후봉사 실태가 부실한 제조업체와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제외 또는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지원제외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사후봉사 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B/S(사전서비스)실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연 2회(3~4월, 8~9월) 전국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주관 하에 사후봉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지역순회수리봉사반을 편성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수리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수리기사와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 운전요원 171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계화영농사를 1,000명 양성하는 등 115천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2)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8개소를 설치하고, 사후봉사업소 보관창고 9개소, 일반농가 보관창고 180개소를 설치하되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도 보조지원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보관창고 설치비 70%를 용자지원하고 있다.

(3)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 촉진

중고농기계 거래시장은 중고농기계 적정판매가격 산정이나 품질보증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등 극히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선 농협으로 하여금 8개소의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전시판매장 설치 및 수리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개소당 사업비 1억원의 50%인 5천만원까지 보조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용연수를 경과한 중고농기계에 대하여도 3년이내의 기간동안 구입자금을 용자 지원토록 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기계화연구소 등의 협조를 받아 중고농기계 용자지원 가격기준표를 시달하는 등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계자재과 기계사무관 박상민)

라. 농기계 생산지원

2002년도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서 농기계생산비축에 180억원,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생산비축자금은 연리 5%, 용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며, 시설농업기자재지원은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최근 2년간 매출실적, 국산화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출지원 한다. 금년도 농기계생산비축자금 지원은 21개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농업기자재자금은 8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기계자재과 공업서기관 한한수)

마. 농업용 면세유 공급

2002년도 재정경제부로부터 배정받은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의 공급 한도량은 휘발유 148,200kl, 실내등유 422,500kl, 보일러등유 17,300kl, 경유 1,709,500kl, 중유 106,600kl, 윤활유 6,900kl, LPG 2,300톤 등 총 2,413,300kl 이다. 이에 따른 2002년도 면세액 추정은 728,353백만원에 이르며, 세부적인 면세내역은 부가가치세 10%, 교통세는 리터당 휘발유 588원, 경유 234원이며, 특별소비세는 등유 107원, 중유 6원, LPG 40원이고, 교육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15%이며, 등유는 특별소비세의 15%이다. 주행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11.5%이며, 판매부과금은 등유에 한하여 리터당 23원이다. 금년도 상반기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실적은 983,922kl로서 배정량 대비 40.8%이며 전년대비 -2.9% 수준이다.

(농업기계자재과 공업서기관 한한수)

바. 서울 국제농업기계 박람회 지원

2002서울국제농업기계 박람회는 2002. 11. 8(금)~11. 13(수)일까지 6일간 (주)코엑스 (본관 1층, 2층, 신관 1층 : 7,400평 규모)에서 개최한다. 동 기간 동안 실시되는 주요 행사는 전시회 및 부대행사(농기계 수출활성화 세미나, 국제농기계학술심포지움 등 5개 행사)로 실시되며 15개국 300개업체

참가와 25만명의 관람객이 참관할 계획이다. 동 박람회 예산은 국고보조 220백만원과 행사수입금 1,241백만원을 포함하여 1,461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표 3-2-20>

서울국제농업기계박람회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2	1994	1996	1998	2000
지 원 액	800	632	600	315	220
참가규모	16개국 195개업체	20개국 280개업체	25개국 401개업체	14개국 258개업체	15개국 283개업체

또한, 해외공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해외 우수업체 유치와 더불어 수출활성화 세미나 등 부대행사를 거행함으로써 국제적인 농업기계박람회로 자리잡고 있다. 2002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제인증협회(UFI)로 부티의 인증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박람회가 되고자 계획하고 있다.

(농업기계자재과 공업서기관 한한수)

제 3 절 소비자 중심의 생산·유통 실현

1.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추진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배의향, 생산전망, 예상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관측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측품목을 2001년 24개에서 2002년에 26개로 확대하며 채소와 과일 등 품목별로 관측정보 발표시기를 세분화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1995년부터 시행중인 계약재배사업은 2001년까지 정부와 농협이 공동조성한 4,500억원의 자금을 활용, 채소 생산량의 11%인 600천톤을 계약재배하여 지역농협이 체계적으로 출하를 조절토록 함으로써

가격등락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재배사업을 선도하는 핵심농협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취형계약 사업방식 이외에 수탁형 사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지원 기간도 현행 11~19개월에서 11~36개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사업조합의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변화에서도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1998년부터 시행중인 최저보장가격제도는 그동안 경영비와 자가노력비를 고려하여 최저가격을 결정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수급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개선하고, 가격발표 주기도 연간 3~4회 분산 발표하던 것을 금년부터 년2회로 축소하여 농가의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과잉 기조를 보이고 있는 시설채소 대해서도 정부와 농협이 1,5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오이, 호박, 가지에 이어 토마토와 풋고추에 대한 출하조절약정사업을 실시하여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과실류는 계약출하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농가와 농협간 계약을 통해 일정 수준 범위내에서 약정가격을 보장하고, 저품위 과실은 가공원료 공급 등 시장격리를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서 대상품목을 사과·배 외에 단감을 추가하고, 계약물량도 대폭 확대(사과·배 : 6% → 13%, 단감 : 5%)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대파·감귤 등 주산지화가 잘된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생산자조직의 법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조금제도를 확충하여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의 추진

우리농산물의 품질차별화 및 고급화 실현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애용을 통한 성가의 보장을 위하여 1992년 7월부터 우수농산물의 기준을 설정하여 농산물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1992년 7월 일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한 이래, 1993년 유기·무농약으로 재배한 농산물, 1995년 축산물, 1996년에는 저농약으로 재배한 농산물까지 확대 실시하였으며, 1998년에는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도 특산물품질인증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 소비자들의 농산물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유기·무농약·저농약으로 재배한 농산물은 친환경인증으로 전환하고, 현재는 일반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도 품질인증 농산물의 유통비율은 총 국산농산물의 생산량 대비 1% 수준이며, 현재까지 표준규격 또는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에 대하여만 품질인증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품질인증기준을 설정하고 맛·당도 등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도 품질인증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21> 연도별 품질인증 및 친환경 인증실적 (단위 : 천톤)

연도별	계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물량)
	품목수	물량	품목수	물량	
92	24	4	-	4	
93	40	12	-	12	1
94	59	29	-	28	1
95	71	74	-	72	2
96	76	118	-	113	5
97	85	168	-	157	11
98	90	193	-	179	24
99	108	192	-	174	28
00	113	216	-	178	38
01	-	294	62	206	88
02.6말	-	148	63	92	56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이강호)

3.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보급

국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상품조달체계 구축이 시급해 짐에 따라 수확후 관리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현장 중심으로 적용·확산시켜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문가들로 품목별 개발팀을 구성, 매뉴얼을 작성('02 : 4품목)·보급하고, 수확후 관리기술 현장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작물관리·저장·포장·시설설비·경영관리·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구성, 상품 개발과 연계된 기획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확후 관리 기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유통시설관리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하며, 생산·원료조달·선별·포장·물류표준화 등 시설별 표준모델을 작성, 농가에 보급하여 산지유통시설의 최적이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확후 관리시설·장비보급시 사전 사업성 진단을 통해 품목별 유통형태, 경제성, 마케팅 능력 등을 평가하고 사업자 선정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2년도중에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산지유통전문조직(300개)에 품질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케 함으로써 품질관리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공동계산제 조직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수확후 관리를 촉진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서기관 권재한)

4. 직거래 사업의 내실화·활성화

정보화기술의 발달,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확대 등 유통여건 변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 실정에 맞는 직거래 기반을 확충하고 기존 직거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산물 직거래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거래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대도시에 규모화되고 정례화된 직거래장터의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고, 파머스마켓은 생산자 조직과 작목반,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취급품목을 다양화 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산지출하주체를 중심으로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생산농가를 연결하는 유통계열화사업을 확대하여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유통효율을 증대시키고, 유통경로를 다원화하여 경쟁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농 교류를 통한 직거래 확산유도를 위해 지역단위 문화축제와 농산물 판매를 연계하는 직거래장터 운영과 행정기관 및 농협이 협조하여 농촌체험, 산지농장 직거래를 알선중재하는 등 다양한 사업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유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종합유통센터와 대형 하나로마트에 품질인증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코너를 확대 설치해 나가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차질없는 운영과 종합유통센터간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물류의 원활을 기하고 도매기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TV, 라디오 방송 및 신문 등 대중언론매체를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홍보함으로써 직거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월드컵,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내의 특수여건과 연계된 기획판매행사 개최로 직거래 분위기를 확산하고, 농산물통합쇼핑몰의 일괄주문, 핸드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전자직거래 서비스 실시 등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수 농업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가능 홈페이지 제작·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자직거래 기반구축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과 행정사무관 허원석)

5.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의 내실화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하여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년도 안전성조사 목표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밀 분석요원 및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조사 물량도 55천건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안전성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적합 비율이 높은 품목을 집중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안전성 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면적재배작물 등에 적용할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을 확대 설정하여 농약안전사용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안전성조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생산자에 대한 공동 지도·교육등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다.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농·소·정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도단위 농·소·정 협의회를 새로이 구성 및 운영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6. 원산지표시제 실효성 제고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소비자에게 농산물의 원산지 정보제공을 목적으

로 1991년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한 이후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지도·단속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96%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많고 수입농산물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형태도 다양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 업소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범국민적 감시활동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5년 고발포상금제, 1996년 농산물명예감시원제를 도입하여 운용('02년 현재 2,600명)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원산지별 비교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국단일신고전화(1588-8112번)를 운영하고 있다.

<표 3-2-22> 고발포상금 지급액 및 명예감시원 위촉 현황

	2000	2001	2002
고발포상금 지급액(백만원)	127	165	135
명예감시원 위촉(명)	2,008	2,549	2,600

특히 1998년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특별사법경찰관('02현재 378명)을 활용, 위반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송치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는 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매일 관세청 통관자료를 전산망으로 입수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원산지표시대상 업체가 자발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이행하도록 지도·홍보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원산지 식별안목을 향상시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유도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 활용·관세청 통관정보 활용·과학적 원산지 식별법 개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위반사범을 색출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의 강화를 위하여 법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 행	개 정(안)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이강호)

제 4 절 축산업 경쟁력 강화

1. 2002년 축산여건 변화와 전망

가. 대내적 여건변화 전망

2002년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고, 원유수급불안정으로 인한 분유재고증가 등 축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다.

한편, 국민소득 수준향상으로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이 소비자들의 중요한 선택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처리장의 HACCP적용 확대 등 유통단계에서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해야하고, 축산분뇨 등 축산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축산이 향후 축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생산과잉과 수요포화로 적자상품만이 생존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수입축산물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근절없이 축산업은 존립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혁신,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축산정책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나. 대외적 여건변화 전망

2001년말 농산물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을 표방하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본격 출범함으로써 관세추가감축, 시장접근 물량확대 및 정책지원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및 투자협정(BIT)등 양자체제의 확산과 권역별 무역자유화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WTO가입으로 수년내 중국산 저가 축산물의 영향 등 동북아 축산물생산 및 소비시장의 역학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자유무역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업화·규모화 등 규모의 경제와 생산비 절감노력과 함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해 수입축산물과 차별화 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좁은 국토면적에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가공형 축산으로는 건전한 축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축산, 경종 농업과 축산업의 연계를 강화한 자연순환형 축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광우병, 구제역, O-157, 다이옥신 등 축산식품과 관련된 위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농장에서 식탁까지 추적가능시스템 및 역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윤동진)

2.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2001.4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2조 4천억원을 집중투자, 한우산업 육성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우번식기반을 확보·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제주도 등 20ha이상 집단화된 초지를 보유한 번식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우송아지생산기지 21개소를 조성하여 값싸고 우량한 송아지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정착, 다산장려금 지급, 송아지 공제가입 월령 단축 [(‘00) 6개월령 → (‘01) 3 → (‘02) 2], 농협 번식우시범목장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지정리된 집단농지 등을 이용,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1단지 20ha이상)를 조성하여 조사료를 저렴하게 생산하여 공급하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하여 거세장려금(두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송아지 경매시장 운영(17개축협 시범실시)으로 우량한 송아지와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으며,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사육농가를 조직화하여 한우 브랜드화의 내실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한우개량사업 강화를 통한 우량한우 개발을 위해 한우 등록사업을 확대하여 개량자원을 확충해 나가고, 인공수정 확대를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과 도별 보증씨수소 선발지원 등 지역별 자율적인 개량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선진화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LPC 기능활성화와 부분육상장경매제를 실시하여 냉장·부분육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영세식육판매업소 등 소매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규모화·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바코드 도입 및 식육거래기록의무제 도입 등으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유통 단속강화로 소비자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이상수)

3. 가축개량 추진

우리 축산업은 2001. 1월 생우, 쇠고기 수입자유화 완전 시장개방 시대로 진입하였다. 축산물의 수입의 증가와 중국의 WTO에 가입, DBA 협상등의 축산업여건이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공

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육여건에 적합하고 생산성이 높은 고능력 가축에 대한 개량과 사육의 규모화로 가축개량에 대한 전문기술과 정보화 이용의 보편화를 위하여 가축개량을 더욱 촉진하고 사양조건을 개선하여 가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저비용·고효율의 가축개량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개량목표에 따라 능력검정과 혈통등록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유전평가를 하여 경제형질 위주로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2년도에는 한우·젓소·돼지·산란계·육계에 대한 2010년까지의 개량목표를 설정하여 고시하고, 다음과 같은 축종별 가축개량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 한우개량

한우개량은 그 동안 체중 증가에 역점을 두어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고급육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육질중심의 개량체계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한우 보증씨수소의 선발체계를 개선하여 선발비율을 강화하는 한편, 한우 번식우 20두 이상 번식·비육 일관사육농가를 연간 100개소씩 총 500개 개소를 선정하여 한우개량 육종농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우의 유전능력평가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개량조합 중심으로 등록우의 농가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귀표 부착 한우의 도체정보를 활용한 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한우개량 연구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젓소개량

젓소개량은 산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젓소 능력검정 참여율이 현재 약 47%수준을 2005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하여 60%로 그 참여율을 높여 나가고, 한국형 젓소 보증씨수소의 선발 활용을 정착시켜 우량 정액을 생산하여 국내 공급할 뿐만 아니라 동남 아시아 지역에 수출을 추진하며, 수정란 이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돼지개량

돼지는 민간주도에 의하여 종돈업체의 자율적인 돼지개량 및 종돈보급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유전평가와 능력검정 및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종돈농장이나 종돈농장 등 개별농가에서 종돈을 수입하여 실용돈을 확대 생산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돼지개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종돈개량체계를 확립하여 돼지개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30% 수준인 돼지 능력검정 비율을 2010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핵돈군의 인공수정센터 설치(2개소, 40~60억원)와 더불어 종돈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우수 종돈장 인증제를 도입하여 제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종축개량협회, 양돈협회)를 조직화하여 종돈개량을 위한 민간 전문조직체로 육성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해 종돈 수출을 다변화 하는 등 돼지개량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 닭개량

닭개량은 능력검정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용계 능력검정의 경우 비교적 개량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종계의 경우 국산 종계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현재 대부분을 외국의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닭개량도 돼지개량과 마찬가지로 국가차원의 종계개량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닭의 경제능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계농가에 우량 종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함과 더불어 국내 재래닭의 고품질 육용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정책과 축산서기관 최염순)

4. 양돈·양계 수급안정 및 품질고급화 추진

양돈·양계는 구조적 수급불안을 없애기 위해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양돈·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자율의 수급조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2001년에 1,000억원(양계 500, 양돈 500억원)의 수급안정자

금을 조성하여 우선 수급안정위원회에 의한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실시하고, 홍수출하 등 불가피할 경우 육가공업체의 수매를 통한 과잉물량의 시장격리 등을 추진 할 방침이다.

한편, 구제역 청정화전까지는 돼지고기의 선호부위와 비선호부위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선호부위의 소비촉진을 위한 TV광고 등 소비촉진 홍보 강화, 비선호 부위를 이용한 2차 육가공시설 및 돈가스 프랜차이즈개설 지원(20개소, 22억원)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구제역 청정화 이후 본격적 수출재개에 대비 규격돈 촉진자금의 지속적 지원, PSS보유 종돈 조기도태유도, 육질등급기준보완 등을 통한 물태지 생산감축 등 품질고급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금년 12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이후 일본정부와의 수출재개 협상,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돈 구매자금 및 가공·저장시설·운송 및 장비설비화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산돈육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품질라벨링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양계는 일정규모이상의 전업규모의 종계 및 부화업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육계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닭고기와 계란에 등급제를 도입할 것이다.

아울러, 닭고기를 대일 수출전략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확대 및 닭고기 수출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마케팅, 광고 등 수출시장개척 등을 추진할 것이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이흥철, 안규정)

5. 우유수급 안정대책 추진

원유와 유제품의 자율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생산자와 수요자가 참여한 낙농진흥회를 설립하고('99.1.1), 수급 조절의 기초수단인 집유일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낙농가의 참

여유도를 위하여 민간자율의 수급조절 대신 정부정책자금에 의해 잉여물량을 구입함에 따라 생산과잉현상이 나타나 수급불균형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원유의 생산감축을 위해 2개월('02.4.22~6.22)에 걸쳐 젓소도태(24천두)를 추진하였고, 낙농관련단체가 자율적으로 비유축진제 사용을 억제하여 오고 있다.

또한, 분유재고소진을 위해 농촌지역 복지시설에 전지분유를 무상공급하고 분유 대량 사용업체에 국산분유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우유소비 확대로 잉여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55억원의 홍보비를 투입하여 TV 공익광고, 기획프로그램 제작, 우유요리 강습회 실시 등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우유소비촉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체세포등급을 3개등급에서 5개등급으로 조정하여 2002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원유검사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낙농가의 유질개선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선진 원유수급조절방식 등의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시유 시장중심의 국내 유제품 소비체계 유지·확보와 치즈 등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유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원유시장 및 국내산 유제품시장의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잉여원유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10.16일부터 잉여원유에 대한 차등가격제를 도입시행하여 수요에 맞는 생산조절제 시행기반을 유도해 나가고, 원유의 가격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유기본가격이 시장원리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기능을 재조정하여 집유일원화 참여자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산과 수요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임채록)

6.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 선진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산물·공급확대를 위한 선진국형 축산물 유통기반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선진국형 위생도축·가공장인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활성화 등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냉장부분육의 유통체계를 확립시킬 계획이다.

도축시설 일제조사를 통한 도축장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영세·노후 도축장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기존 도축장과 통합하는 경우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도축장에 대한 자율적인 정비를 추진할 것이며, 도매시장·공판장의 지육경매는 점진적으로 부분육 경매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식육판매점의 규모화, 현대화를 추진하고 식육처리 가공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소매단계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LPC·브랜드 업체 및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직판장 및 가맹점을 확대하고 일반 식육판매점의 식당점업지원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적극적인 부가가치 창출능력과 의지가 있는 소매유통의 전문인력을 육성할 것이며, 축산브랜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축산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1년에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을 11.25~11.26까지 개최하여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금년에도 11월초에 우리축산물브랜드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농·축협이 유통망을 통합·연계하는 등 경쟁력 있는 선진유통조직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계통출하를 활성화하고 가축시장의 기능은 개선하여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고, 3000여곳에 달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및 직판장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망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식육차량을 이용한 이동판매와 지역축협의 산지축산물 판매장 형태를 직거래체제로 전환하여 생산자단체의 직판기능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금년부터 생우수입이 완전개방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WTO 쇠고기 패널결과에 따라 수입전문판매점제도를 폐기하는 대신 원산지둔갑판매방지와 축산물위해사고 발생의 리콜시스템 구축을 위해 식육판매업자가 거래기록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제도보완하였으며 이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나. 소비자가 신뢰하는 유통체계 구축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부응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의 디지털 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대비하여 축산물 Barcode시스템을 돼지고기부터 도입하고, 국내외산의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조절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부분육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선호부위와 비선호부위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이와 병행하여 가격차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및 공판장 2개소에서 부분육 상장경매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전국 도매시장·공판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축산물의 등급별·부위별 구분판매제를 확대 시행하여 물류표준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내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품질인증제』 장려등 브랜드육을 집중 육성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차별화 할 계획이다.

유전자를 이용한 쇠고기감별법을 개발을 완료('02.6)하였으며, 부정유통방지체계를 구축하고 명예감시원제도등을 통한 민간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축산물위생과 행정사무관 이우곤, 축산사무관 김동훈)

7.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가. 축산분뇨의 자원화

축분비료는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토양개량에 의한 작물의 증수효과가 있으며,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서는 축분비료를 토양에 환원하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되 축사구조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효율적이며 우량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악취 및 파리 등의 제거를 위하여 우수한 환경개선제를 선정·홍보하는 등 축산농가의 분뇨자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축분비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기존의 축분퇴비유통센터(23개소)의 운영활성화를 지원하며, 지역내 축분발효액비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축분비료유통센터(40개소)를 지정하여 액비 수거·운반·살포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경종농가들의 액비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을 확대('02, 400개소→'03계획 680개소)해 나갈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구축을 위하여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유기축산세부사양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유기축산 희망 농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에 활용해 나갈 것이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박영근)

나.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최근 들어 복잡하고 번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하고 깨끗한 농촌의 자연과 환경을 즐기면서 심신의 안락과 농업문화를 체험하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세에 부응해 나가면서 도·농의 교류촉진에 기여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이바

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희농경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연계한 조사료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경종농가의 담리작 조사료 생산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농가 부산물 및 곡물을 활용한 자가배합사료의 이용도를 높이고, 볏짚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등에 필요한 자재등을 지원할 것이다.

기성초지의 전용은 억제하고 신규 초지조성은 적극 유도하여 초지관리를 위한 임차료·종자대·비료대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초지조성에 중산간 지역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근교 농가가 중산간지로 이전하여 목장개발을 희망할 때에는 필요한 국·공유지를 우선 임대토록 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이상수)

8. 가축방역 대책 강화

2002년도에도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계절적으로 유입 위험이 높은 2.1일~4.30일까지 『구제역방역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관계부처 협조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였다. 4.16일과 4.30일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지속추진토록 하는 한편,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확대·운영하는 등 국내방역을 강화하였다.

경기도 안성에서 5.2일 최초의 구제역 의심축 보고가 있는 후 안성·용인·평택 및 충청도 진천 등 인접한 4개 시·군에서 16건(5.2~6.23)의 구제역 발생이 있었다. 발생신고 직후 정부는 관계부처, 군·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차단방역을 실시, 최근 구제역이 발생하였던 외국과 비교할 때 단기간(최초 발생후 52일)에 박멸에 성공(8.14 종식선언)할

수 있었다.

<표 3-2-24> 지역별 이동제한 해제 상황

구 분		경기 안성·용인	경기 평택	충북 진천
발 생		5.2~6.23(13건)	6.2(1건)	5.3, 12(2건)
살처분종료		6.24	6.3	5.15
혈청검사		7.16~8.3	6.25~7.20	6.6~6.14
이동제한 해제 (시·도지사)	경계지역	7.28	7.12	6.15
	위험지역	8.7	7.20	6.24

자료 : 농림부 축산국

금번에 발생한 구제역 발생농장은 총16건중 13건이 최초 발생농장인 안성 울곡농장 반경 10km내외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효과적인 차단방역이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었다. 2000년과는 달리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500m이내 우제류 가축과, 3km이내 돼지 전두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총 162농가 160,155두) 등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취 하였으며, 위험지역 (3km이내)과 경계지역 (3~10km사이)으로 구분되는 방역대를 설정, 사료 등 오염물건 소각·매몰, 가축·차량·인력 등에 대해 이동 통제를 실시하였다.

아직 최종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역학조사내 용에 따르면 2002년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외국인 노동자나 해외여행 농가 등을 통해 외국에서 유입되고 국내에서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한 기계적 전파로 추정되었다.

정부는 구제역이 종식됨에 따라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재발방지를 위해 평시방역 강화대책을 수립, 질병유입 경로별 및 전파위험도별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한 조치로는 공·항만 검색·소독 강화 등 국경검역 강화 조치의 지속 유지, 시·군단위 「방역대책」 수립·추진, 「전국일제소독의 날」 매주실시, 공동방제단 운영내실화 등 민간방역 활성화를 위한 국내방역

체계개선 등이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농가자율방역 책임을 명문화하고 농장질병관리등급제 도입, 신고지연농가 사육장시설 폐쇄 등 개별농장의 방역별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및 수매보상등의 관련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여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산농가 등록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이외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사업은 광우병 예방, 닭뉴캐슬병·돼지오제스키병 등 근절기반 구축,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이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종돈장, 종계장, 부화장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중시하여 종축으로 인한 질병의 수직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나갈 것이며, 가축의 매매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제시토록 하여 농가의 자율적인 예방접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경쟁력있고 안정적인 축산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자율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방역대책 추진시 민간 중심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예방접종 및 축사소독 등 자율방역 활동을 위한 방역차량, 예방약 및 소독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의 자율방역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방역관리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농장폐쇄 및 사육제한 등 엄격한 관리를 시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학·연 공동의 가축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병성감정 제도 등을 확립하여 방역기관간 공동방역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며,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 검역조치를 강화하고 질병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가축위생과 수의서기관 김창섭)

부록 : 구제역 대책 추진

1. 개 요

2000년도 구제역 발생 이후 국경검역강화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국내방역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2002년 5월 2일 경기 안성의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6.23일까지 50여일 동안 2개도 4개 시·군에서 총 16건(돼지 15건, 젓소 1건)이 발생되었다.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은 「Pan Asian O1」 형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역학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농가들을 통하여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차량·사람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에 의해 추가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확인 즉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발생농가 및 인근 500m범위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하였으며, 특정지역내 구제역 확산상황 등 역학적 특성과 가축방역중앙협의회 자문 결과에 따라 원발생농장 중심 3km범위내의 사육돼지 전두수를 살처분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 병력과 장비의 적극적인 지원은 추가 전파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조치를 신속 종결하게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와 강력한 이동통제 등 신속한 차단방역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저지하고 발생 건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구제역 발생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실시 등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6.15일 충북도 진천의 경계지역을 시작으로 8.7일에는 경기도 안성·용인의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되었다. 이후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내었던 일부 가축들에 대한 정밀검사(프로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은 2002.8.14일 전국적인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였다.

이번 구제역 방역과정을 통해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질병의 연중 발생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평시 방역체계의 강화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생계비 지원 등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여러 가지 미비점과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방법의 전면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구제역 종식선언을 계기로 공·항만의 검역 사각지대 보완을 통한 국경 검역의 강화, 농장단위 질병관리 강화와 정부·지자체의 방역체계 개선 및 민간방역 활성화 유도를 위한 협회·단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험도 및 유입경로로 추정되는 요인별 대책을 수립하여 평시방역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의 구제역 역학조사 전문가의 평가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활동을 통하여 질병방역이 진일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2. 구제역 발생 경과

5.2일 경기도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울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최초 보고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3일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이후 6.23일까지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인접 4개 시·군(안성, 용인, 진천, 평택)에서 총 16건 발생하였는데 2000년도와는 달리 젖소에서 발생한 1건(경기도 안성소재 맘마목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돼지에서 발생하였다.

발생상황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1차발생은 5.2~3일간 경기 안성과 충북 진천에서 각 1건씩 발생하였으며, 2차발생은 5.10~12일간 6건, 3차발생은 5.18~19간 4건 그리고 4차발생은 6.2~23간 4건의 발생이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도 안성과 용인에서 각각 9건 및 4건이 집중하여 발생하였으며, 경기도 평택에서 1건 및 충청북도 진천에서 2건이 발생하였다. 발생지

역은 경기도 안성시의 최초 발생농장인 울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 외 지역에 13건이 집중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구제역 확산이 성공적으로 저지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구제역 발생이후 의심증세로 총 35건이 신고되었으며,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9건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3. 구제역 발생 전개 양상

구제역이 최초 발생된 것은 5.2일 경기도 안성소재 울곡농장이었으며, 바로 다음 날인 5.3일에는 울곡농장으로부터 남쪽으로 22.5km 떨어진 충청북도 진천에서 1건이 추가로 발생되었다.

안성 울곡농장 및 진천 발생농장과 이들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 외의 우제류 동물 전체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가 완료된 5.5일로부터 5~7일이 지난 5.10~12일 사이에 경기 안성과 용인지역에서 6건이 추가로 발생하였다(2차 발생).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된 농장중 5개소는 안성과 진천의 최초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에 위치해 있었으며,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가울리에서 발생한 1개 농장만이 울곡농장에서 남서쪽 6.9km에 위치하였다.

구제역 방역대책협의를 위해 열린 가축방역중앙협의회에서 살처분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최초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내외 지역의 사육 돼지 전체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완료한 5.17일로부터 1~2일이 지난 5.18~19일사이에 안성 울곡농장으로부터 3~10km사이에서 떨어진 4개 농장에서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있었다(3차 발생).

이후 상당기간 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었으나, 5.19일 발생보고가 있는 후 2주가 지난 6.2일 경기도 평택시 버들농장에서 구제역 발생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6.7일과 6.10일, 그리고 6.23일에 각각 1건씩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4차 발생).

4. 구제역 방역 조치사항

가. 구제역 발생이전

정부는 2001년부터 계절적으로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2.1일~4.30일까지를 『구제역방역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관계부처의 협조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여 왔다.

전국의 출입국 공항 및 항만에 발판소독조(310개)를 설치하여 모든 입국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검역탐지견 4두를 배치하여 해외여행자가 휴대하여 불법반입하는 육류 등 검역물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건초·농기계·골프화 등에 대하여도 철저히 소독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는 상황을 가상하여 주요 지역에서 실전 방역훈련(CPX)을 시행하고,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여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자율방역을 지도하고, 방역관리가 다소 소홀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전국에 10,355개소의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일제 소독을 지원하였다.

나. 구제역 발생 후 차단방역

5.2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직후인 5.3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및 시·도 부지사 대책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농림부에 『구제역비상대책본부(위원장 : 차관)』를 설치하는 한편, 농림부 및 산하기관 등 전 농림공직자에 대해 비상근무령을 발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였다. 아울러 농림부 공무원을 구제역 발생지역에 파견·상주시켜 해당 시·군의 이동통제 및 방역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군·경 등 유관기관에 구제역 방역활동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구제역 확산억제를 위해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발생농장 및 인접 500m내 농장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살처분·매몰, 소독 등 강력한 초동방

역조치를 시행하고, 사료·뒤짚 등 농장내 오염물건 등 오염우려 물품을 확인·추적하여 소각·매몰처리하였으며,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축·차량·인력 등에 대하여 방역지역 내외로의 이동통제를 실시하였다.

구제역 발생에 대응하여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은 발생농장에 대해 임상 관찰과 출입자 및 가축이동통제, 소독 등 초기방역 조치를 취하였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장조사팀을 구제역 발생지역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정밀검사를 수행하였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이동통제 등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km이내)과 경계지역(3~10km)으로 구분되는 이동통제지역을 설정·운영하였다. 이동통제지역을 통과하는 주요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군인·경찰·공무원, 생산자단체, 농가 등이 구제역 발생 지역별로 최종 살처분이후 21일 이상을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불법이동가축감시, 출입차량·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특히 전파위험이 높은 도로(331 지방도 등)에 대해서는 통행을 차단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동통제초소 최대 운영현황('02.6.17기준)>

- 경기도 119개소 857명 (군·경 354, 공무원 289, 기타 214)
- 전국 329개소, 2,204명(군·경 725, 공무원 873, 민간 606)

또한 발생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9개 가축시장과 4개의 도축장을 잠정 폐쇄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확산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함과(5.3~5.4) 함께, 전국의 나머지 93개 가축시장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휴장(5.4)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을 확인한 직후부터 발생농가 및 인근 500m범위에

사육되고 있던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군병력의 협조를 받아 살처분·매몰을 실시하였다. 이후 2차 발생(5.10~12일) 시기에 「가축방역중앙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3km내외 지역에 사육되고 있는 돼지 전두수에 대해 살처분·매몰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살처분 대상범위를 3km 이내로 확대하였다. 2002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의 수는 163농가 160,155두에 달했는데, 신속한 살처분을 위해 농가 설득·협의를, 매몰지 확보, 장비·인력지원 등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특히 군 병력·장비 적극 지원으로 조기 살처분 및 이동통제 등 신속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져 영국('01.2~9월간; 2,030건), 우루과이('01.4~'02.2월간; 2,057건) 등 보다 구제역 발생건수가 대폭 적어지게 되었다.

※ 군 지원현황('02.5.3~7.14 누계) : 병력 44,323명, 장비 1,446대

역학적으로 구제역 발생위험이 제기된 지역과 농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읍·면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농림부 공무원을 현장에 주재시켜 방역활동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농림부·농협중앙회 합동으로 불시점검반 운영 및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간부급 공무원을 매일 현장에 파견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축주·관리인·외국인 고용원, 차량 등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가능성이 크므로 농장단계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 『구제역방역 농가행동지침』을 마련하여 농가에서 자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농가행동수칙 리후렛 4종을 제작·배포(100천부)하고, 매일 마을앰프방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홍보를 실시하였다. 방역상 위험농가는 특별관리농가로 지정·운영하였는데, 발생농장과 직·간접 접촉이 있었던 185농가에는 전담수의사(47명)를 배치하여 매일 소독상황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전국의 방역취약농가 252농가에도 전담방역관 94명을 배치하여 방역활동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6.23일 마지막 발생한 농장을 기준으로 이동제한지역(10km)내 2,128농가에 대해서 안성·이천지역 18개 농·축협 조합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방역활동을 점검·지도하게 하였다.

다. 경기 안성과 충북 진천 차단방역 추진상황 비교

경기도 안성과 충청북도 진천에서의 구제역 발생 현황을 대별하면, 안성에는 총9건이 발생하였는데 2002.5.2일 울곡농장에서 최초발생한 이래 5.10일부터 6.23일까지 8건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진천에서는 2건이 발생하였는데 2002.5.3일 이춘북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5.12일 추가로 1건이 발생하였다.

양지역에서의 구제역 방역 조치상황을 구제역 발생이전과 구제역 발생이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제역 발생이전

경기도 안성·용인지역은 돼지 등 가축의 사육밀도가 높은 반면, 충청북도 진천은 이에 비해 낮은 사육밀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지역이 사료공급이나 동물약품, 축산관계자 접촉기회가 진천에 비하여 더 많아서 구제역 등 질병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안성과 진천 모두 「공동방제단」을 편성하고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전국적인 방역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안성의 경우에는 대규모 농가를 제외한 소규모 농가수가 진천에 비해 약 100호정도 더 많음에도 공동방제단 및 공공근로 인력 투입 및 소독장비 동원면에서는 진천군에 비하여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일제소독의 날 운영실적>

구 분	소규모 농가수	공동방제단	공공근로 인력 투입	소독장비 동원
안성시	806호	27개단	882명	2,422
진천군	707호	28개단	1,100명	7,384

(2) 구제역 발생후

경기 안성의 경우 5.10일부터 6.23일까지 8건의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구제역차단 통제초소를 5월말까지만 확대하다가 6월 이후에는 오히려 축소 운영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안성 시기별 이동통제초소 운영실적>

구 분	계	5.2~9	5.10~13	5.18~28	6.2~10	6.11~23	6.24~30	7.1~
신고건수	15건	1	3	5	5	1	-	-
양성판정	9건	1	2	3	2	1	-	-
통제초소	-	17개소	32	41	33	26	27	28
배치인원	-	90명	279	416	345	75	219	222

반면에 충북 진천은 5월12일 추가발생이후 잠복기간이 경과한 6.10일까지 최고 30개의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천 시기별 이동통제초소 운영실적>

구 분	계	5.2~9	5.10~13	5.18~28	6.2~10	6.11~23	6.24~30	7.1~
신고건수	5	1	2	1	-	1	-	-
양성판정	2	1	1	-	-	-	-	-
통제초소	-	24	24	30	30	29	7	5
배치인원	-	353명	357	386	338	252	56	40

양지역의 이동통제 및 농가접촉 상황에 있어서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안성은 최초발생농장인 울곡농장에서의 발생신고가 늦어져서 3km 통제선 밖에 오염원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추가 발생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동통제 상황을 살펴보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3~10km사이의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졌으나 지선이나, 농로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였으며, 차량에 대한 소독만 이루어지고 사람에 대한 소독이 제대로 되지않아 오염원이 사람 등을 매개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된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었으나, 안성에 비하여 이동통제초소를 훨씬 많이 설치·운영한 것이 구제역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진천에서는 농가모임 등이 거의 없었으나, 안성에서는 피해보상 논의 등을 위한 모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도 전파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라. 구제역 발생원인 및 전파 경로 추정

현재 구제역 발생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하여는 「구제역역학조사위원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기초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추정되고 있다.

원발농장에서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Pan Asia O1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바이러스는 동북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혈청형으로서 이들 국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구제역 방역상황을 조사·평가하기 위해 2002.6월말 한국을 방문했던 국제적으로 저명한 구제역역학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유입경로는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에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중국교포, 몽골인 등)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접촉한 친지·친구 등을 통해 간접적인 매개체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근지역 농가들이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기 직전에 중국에서 개최된 축산기자재박람회(4.23~27)에 축산농가들이 참가한 사례나 인근지역 농가들의 해외여행(3.15~19) 등이 있었다. 2000년과는 달리 발생농장에서 잔반을 급여한 사실이 없으며, 황사·바람 등에 의한 전파시 나타나는 불특정, 산발적인 특성 등을 나타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잔반 및 황사·바람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발농장에서 인근농장으로의 전파된 경로나 요인에 대하여는 발생농장 및 비발생 농장 축주간 접촉을 통한 전파, 농장의 출입자(종업원, 동물약

품·정액납품자 등)를 통한 전파, 농장을 출입한 차량(사료·분뇨차량 등)을 통한 전파 등이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6.29일부터 7.4일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부방역대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실시한 외국 전문가들도 비슷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외국 구제역 역학전문가 약력>

- Dr.Graeme Garner : 호주 농무성 역학관련 수석연구책임관
- Dr.Graham Mackereth : 뉴질랜드 국립질병조사센터 (National Center for Disease Investigation)역학전문가
- Dr.Sherrilyn Wainwright(女) :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사처(APHIS) 수석 역학전문가

(1) 외국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2000년 발생한 바이러스와 같은 혈청형(Pan Asia O1)이긴 하나 毒株(Strain)와 根源(source)이 다르므로 최근들어 유입된 것 같으며, 이는 오염된 사람 또는 물품을 통해 외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금번 발생한 바이러스가 중국, 몽고에서 퍼지는 것과 같은 혈청형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Pan Asia O1형은 병원성이 매우 강하므로 검역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전파될 수 있으며, 일본,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유입된 바 있는 바이러스이다. 이렇듯 검역만으로 구제역과 같은 외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축산농가들이 방역당국에 협력하고 자기 농장에 적절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원발농장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된 주요한 요인은 사람·차량 등의 이동에 의한 기계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몇몇 사례(1-2건)에서는 단거리 공기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0년도에는 소에서만 발생하였으나 이번에는 주로 돼지에서 발생한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이전에 감염돼지가 살처분되어 옆의 소 사육농가로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번의 구제역 발생시 생축의 이동이 구제역 확산의 요인이라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온도 25℃ 이상 습도 60% 이하 일 때 바이러스 활력이 떨어져 전파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관련, 이들 전문가들은 공기중에 있는 바이러스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을 때 생존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기전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리는 오염된 축사나 축산농가에서 사용되는 기구에 있는 바이러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역프로그램의 유효성 문제에 대하여는 살처분정책과 이동제한을 포함한 방역조치가 전파를 억제시키는데 효과적이었으며, 동물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구제역 발생에 대응하여 보여준 능력과 완벽함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함으로써 신속한 구제역 확진과 감염된 양돈농가에 대한 즉각적인 살처분을 가능케 하여 발생건수를 줄이는데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영국과 비교할 바 없이 짧은 시간에 진단 및 살처분을 실시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예방접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금번 발생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돼지에서 접종한 후 면역을 획득하는데 수주(2-3주)일이 소요되며, 최초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때 이미 다수의 농장이 감염되어 있었다고 판단되고 질병이 통제할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점, 발견 당시 최소 4개 농장이 잠복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발농장 주위에 대한 예방접종은 감염을 은폐시킬 가능성이 있었으며, 백신접종팀이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예찰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차후 비발생국 지위획득에 시간이 더 걸리는 단점이 있고, 예방접종은 임상적 발생건수 및 방역초기에 살처분할 가축의 수를 줄

이는 등 장점이 있으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추가발생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전파위험은 벗어났다고 보며 시간이 갈수록 위험성이 낮아지나, 트럭 등에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1~2곳 추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평가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방역은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농가·국민·정부가 함께 유입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제역 위험에 대해 국민 모두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입출국시 전단지 등을 나누어주고 기내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사례로서 뉴질랜드는 기내에서 비디오로 홍보하고 입국신고서에 서명하게 되어 있으며 농가방문, 농산물 반입여부를 허위로 작성시 처벌을 받게 되고, 모든 수화물은 X-ray 검색을 받고 탐지견을 동원해 음식물을 찾아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중국 등 외국인이 방한할 때 주지시키고 가급적 외국인들이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시킴으로써 구제역 발생 위험을 낮출 것을 권고하였다.

(2) 구제역 역학전문가의 권고내용

해외 구제역 전문가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조기신고체계 및 농가의 자체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

의심축의 조기 추적·보고를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며, 축산농가 종업원과 방문자의 위생 및 가축의 신규입식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양축가 스스로가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② 자료분석 방법 등 역학조사기법 추가 개발

구제역 발생시기의 방역정책 결정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는 자료의 분석과 제시 방법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

성이 있다.

③ 추가발생시 3km 지역내 소에 대한 위험평가 및 살처분 검토

발생농장 3Km 구역내에 사육되는 소와 관련된 위험을 신중히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의 예방적 살처분을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살처분하라는 것은 아니며, 세밀하게 관찰하라는 취지의 권고사항이다.

④ 세척·소독 및 고위험 물품에 대한 표준처리 방법의 지속 적용

구제역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염농장내의 위험물품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위한 표준실행절차(SOP)의 지속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세척, 소독 및 감염농장내의 고위험물품 취급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⑤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 필요

금번 사례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예방접종 필요성이 없다고 보나, 구제역 박멸계획의 일환으로, 가축방역당국은 구제역 예방접종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미리 평가·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국경검역 체계의 지속 유지

국경에서 효과적인 검역체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며, 출입국 공항 및 항구에 도착하는 승객과 연관된 위험의 평가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마. 구제역 방역추진 우수지원 사례

국방부에서는 구제역의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한 살처분·매물, 통제초소 운영, 소독활동에 군병력을 적극 지원하여 구제역 확산 저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구제역 발생시 군장병 44,000명 및 장비 1,414대 등 군병력과 장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소독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구제역 발생시 경찰 약 51,000명을 지원하였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청장 특별지시를 1~11호까지 발령하고, 가축방역 체제를 비상사태로 전환하여 방역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도 농업기술

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지도인력을 총동원하여 마을앰프 방송 실시, 지역 TV, 유선방송 등을 통한 구제역 방역 지원을 강화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기 안성지역에서의 통제초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45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 및 통제 활동 적극 추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비상근무인력 1명씩 발생 시·군의 상황실에 상주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를 지원하는 등 방역활동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바. 방역대책 교훈

안성 울곡농장의 구제역 최초신고가 늦어짐으로써 이동제한지역 설정 등 차단방역 이전에 구제역바이러스가 외부로 전파되어 잠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강화로 사육가축에 대한 이상증세 파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상증세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신고지연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교훈삼아 정부는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제역은 외국 역학조사 전문가의 지적과 같이 훌륭한 방역체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유입이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 등 상시 구제역 발생 국가와 인접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 스스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농장출입 차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통제초소의 강력한 운영과 사람·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5.2~6.23일까지 안성지역에서 발생한 9건의 구제역 대부분이 발생농장 및 이동제한지역내 사람과 차량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 추정되었는 바, 성공적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하여는 구제역 발생지역의 사육밀도와 접근 가능경로에 따라 2~3중으로 통제초소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하여 군·경찰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군·경찰과의 “합동방역훈련”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이동 제한지역 해제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고 안정단계에 접어든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경계지역과 위험지역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계지역 및 위험지역 해제일>

구 분	진천지역	평택지역	안성·용인지역
최종 살처분	5.15일	6.6일	6.24일
경계지역 해제	6.15일	7.12일	7.28일
위험지역 해제	6.24일	7.20일	8.07일

6. 구제역 종식에 따른 후속조치

정부는 우리나라가 구제역 발생국가로 둘러싸여 있고 이들 국가와의 물적·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연중 구제역의 유입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가축질병 관리대책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여행객의 급증 및 외국인 인력 고용 등으로 외국의 악성가축질병 유입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며, 농장 위생등록제 도입, 농장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소독 및 가축질병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토록 하며, 출하·수송·도축 전 과정에서의 가축질병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방역조직체계를 정비하여 민간방역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가축방역중앙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료·동물약품 영업사원을 “명예 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 활성화하며 가축방역관의 수의사 의무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원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가축방역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행 민법상 사단법인인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를 특수법인화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긴급행동지침(SOP)도 개정해 나갈 계획인데, 살처분 보상 및 수매시 보상기준 마련과 도축장·가공장, 부산물처리업체 지정문제, 도축후 부산물 처리문제 보완, 발생지역 분뇨처리 방법제시, 지역별 살처분을 위한 중장비 동원계획 수립, 매몰지 사후관리 방법제시, 지역별 가축사육 분포도 작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축산물방역과 수의서기관 김창섭)

제 5 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1. 수출여건과 전망

금년도 농산물 수출여건은 2002년 5월에 구제역이 재발하여 대일 돈육수출 재개가 지연되고, 주력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기침체 지속 및 각국의 검역 조치강화 등에 따라 수출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중국·대만이 WTO에 가입하여 세계농산물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합이 가속될 것이나, 단기적으로 중국농산물이 상품성, 검역문제 등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중국의 비합리적인 수입장벽이 제거되고 대만으로의 과일수출이 증가되어 우리 농산물의 수출증대에 좋은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표 3-2-25>

2002년도 농·축·임산물 수출전망

(단위 :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2002(전망)	전년대비 증 감 륜
국가전체	132,313	143,685	172,268	150,439	162,000	7.7
농림축산물	1,635	1,680	1,532	1,580	1,663	5.3
농 산 물	1,005	1,004	1,133	1,252	1,368	9.3
축 산 물	385	408	144	118	95	△19.5
임 산 물	245	268	255	210	200	△4.8

주 : 수출전망추계 : 국가전체(산업자원부), 농축산물(농림부), 임산물(산림청)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일반적으로 우리 농산물은 농업선진국에 비해 생산가격이 높고 품질경쟁력도 낮은 실정이다. 또한 수출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국내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이 구축되지 못한데다 수출선의 유지·확보에도 충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WTO 체제 출범 이후 국내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힘입어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농업인도 수출농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출확대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역진흥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2. 농·축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

수입국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자금 지원 확대 및 수출애로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며,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차별화된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 한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수출 농산물의 생산·공급기반 구축

채소, 과일, 화훼 등을 중심으로 2001년말 현재 89개소의 고품질 농산물 전문생산단지가 지정·운영되고 있는바, 전문생산단지를 재 편성하여 품종 선택에서부터 재배, 생산시설, 선별·포장, 가공저장시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세계 일류화 가능성이 있는 우수 농산물을 적극 발굴하여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채소, 특작, 과수, 화훼 등 수출전략작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인 인삼과 김치의 세계브랜드화를 위해 캐릭터 등록국을 확대해 나가고 Codex규격제정을 통해 한국산 제품의 기능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돈육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 조기 확보를 통한 수출재개를 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닭고기 수출기반확충을 위해 양계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자금지원확대 및 수출애로요인의 적극 발굴·해소

수출업체의 자금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자금 등 수출관련자금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하에 수출유망품목 중심의 현장밀착형 컨설팅 실시를 강화하며,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배기술, 병충해, 수확후관리기술, 선별 및 상품화, 포장기법, 예냉 및 선도유지, 검역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애로요인의 적기·신속한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수출애로상담 전용전화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무역의 중심이 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시회의장 무역정보센터 등 수출지원기능을 갖춘 종합시설로서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 건립을

2002년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며, 채소·화훼류 등 신선농산물의 주 생산지역인 전남 광양과 경남 마산에 공동예냉, 선별, 포장, 저온저장, 운송, 검역, 통관 등의 일관 수출체계를 갖춘 농산물 수출물류센터를 2003년도 운영목표로 설치·추진하여 수출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제고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보험제도의 이용을 제고를 통한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가격상승위험보험의 가입대상품목 확대, 부보율 인상 및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소비자 지향적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우리 식품에 대한 잠재수요를 발굴하고 우리 식문화를 전파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농산물 수출업체에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국제박람회(2002년: 20회) 참가를 적극 유도하고, 전시·홍보·수출상담 등으로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일본, 홍콩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는 특별기획전, 시식회, 간담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와 병행하여 해외관측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00억불 규모의 일본 농산물 수입시장과 WTO에 가입한 중국, 대만시장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소비자 판촉 행사를 개최(16회)하고 국제적 판매망을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연계한 수출확대방안을 모색하며, 아울러 일본에 편중(40%이상)된 농산물 수출시장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수출상대국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종 및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신규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및 현지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주요거점도시별·품목별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광조우 및 상해식품박람회를 참가하여 중국의 틈새시장 개척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상품 수출확대 가능성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002한·일 월드컵」등 국제행사를 주력 수출품에 대한 세계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획이벤트인 한국전통식품과 전통문화와의 만남의 전, 국제인삼교역전 등에 전시관설치 및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수출농산물을 세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경, 대만, 홍콩 등의 지역에서 광고효과가 가장 큰 김치, 인삼에 대한 TV광고를 실시하고, 국제전문지 광고게재, 홍보용 VTR제작·배포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전시회도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동경, 뉴욕 등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설치·운영중인 7개의 해외농업 무역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중소수출업체 해외마케팅활동 지원강화현지적응상품개발, 주요 전통품목 전시·홍보, 이벤트행사 개최 및 일일사무소 제공, 수출안내 등의 수출지원기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진흥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이낙휘)

3. 수입관리대책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WTO협정 내용과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쌀, 고추, 마늘 등 74개 세번별 주요품목은 국영무역형태로 수입관리하고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16개 세번별 품목은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관리하여, 수입으로 발생하는 판매이익금을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의 수입은 국내 생산시기,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시장접근물량을 적절하게 수급관리 함으로서 국내 농업보호와 WTO협정 이행을 동시에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표 3-2-26>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년도별	개방품목수	주요 품목	수입자유화율
1994말까지	1,190	바나나, 배, 키위, 유채 등	82.2%
1995. 1. 1	167	보리, 옥수수, 대두, 고추, 마늘, 참깨 등	93.7
1996. 1. 1	2	포도, 사과주스	93.9
1996. 7. 1	13	버터, 연유, 유당, 인조꿀, 누에고치 등	94.8
1997. 7. 1	39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감귤 등	97.4
2001.1.1	8	소, 쇠고기 등	98.0
2002.1.1	-		98.9
잔여품목	16	쌀 관련품목	98.9
계	1,448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나. 관련법상 각종제도의 적극 활용

수입자유화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관련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고추장, 표고버섯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고추장 : 기본세율 8% → 조정관세 45%). 또한 관세화 품목, 즉 관세상당치로 개방한 품목 중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는 땅콩, 대두, 고구마 전분 등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땅콩, 메밀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도록 2002년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명 발동기준 및 세율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 원산지표시제 실시 및 단속강화

품질이 낮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

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산(177개), 국내산(145개) 및 가공품(121)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단속 공무원을 활용하여 1998년부터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라.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WTO 출범에 따른 검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1992~2000년까지 972억원을 투자 1~3단계 동식물검역기능 강화대책을 마무리하고, 2001~2004년까지 4개년간 755억원을 투자하는 4단계 동식물검역 선진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앞으로 4단계 선진화대책은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의 기능강화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여 검역기술의 선진화를 꾀하여 나갈 계획이다.

(무역진흥과 행정사무관 황인용)

제6절 농촌 활력 증진 및 복지 지원 강화

1.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유치로 농촌활력 증대

가. 농촌의 현실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교육·문화등의 복지기반이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우리 농촌은 지난 20년간 인구(면지역)는 3.4%감소하였고 노령화율(65%이상)도 14.7%에 달하는 등 공동화(公同化) 현상이 심화되어 상업·교육 등 최소한의 자생기반도 확보하기 어려운 인구 3천명이하의 면(面)수가 1990년 152개 면에서 2000년 447개 면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UR이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해 농촌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농업의 규모화, 농촌생활환경개선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농외소득원 창출의 한계 등의 이유로 농촌사회가 계속 위축되고 농촌의 내부자본이나 정부지원만으로는 자생력을 회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농촌활력증진 방안 모색

한편, 주5일근무제의 도입과 국민연금시대의 도래 등으로 레저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농촌이 보유한 고유의 생태환경, 전통문화, 자연경관 등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한 체험·체류형 농촌관광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관광수요 증대에 대한 농촌의 수용태세는 아직 미흡하여 다양한 농촌의 부존(賦存)자원을 관광자원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농촌에 산재한 빈집, 폐교와 한계농지 등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전원주거시설이나 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에는 농촌의 자체 자본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외부의 자본을 유입시켜 농촌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활력을 되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다.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 방안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대규모 투기성 자금이 아닌 건전한 도시자본의 유입이라 할 것이다. 도시자본과 도시민이 농촌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농촌주민들과 융화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개발의 이익을 농촌사회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투자유치의 대상으로는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소유, 농촌 빈집·폐교·한계농지 등을 이용한 전원주거 및 관광·복지시설의 유치, 비농업인의 농업법인이나 협동조합에 출자 참여, 민속주·전통식품 등 친농업·농촌형 산업의 활성화, 체험·체류형 관광사업과 농촌형 체육·위락시설의 유치, 노인복지시설, 교육·연수·수련 시설의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농촌투자유치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라. 농촌투자유치센터의 설치·운영

도시자본의 성공적인 농촌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2002. 7.18일 농촌투자유치센터(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농업기반공사내)를 개설하여 농촌투자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소개·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동센터에서는 농촌투자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관련 법령·제도의 지속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도시자본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대상사업 발굴, 농촌관광 정보 제공 및 농촌에 산재한 빈집, 폐교, 한계농지 등 다용도로 활용가능한 유휴자원 정보의 제공 등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센터개설이후 10월 중순까지 3개월간 27천여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농촌투자정보를 제공받았으며, 520여명이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투자상담·소개·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도시민들이 농촌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농촌활력증진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발정책과 시설서기관 이봉훈)

2. 그린투어리즘 등 농촌관광 활성화

주5일 근무제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종전의 유명명소 순례위주의 대중관광에서 농촌전원관광형태로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있어, 『농촌관광』은 농촌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로 지역사회로서의 기능과 활력이 점차 쇠퇴되고있는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기존 농촌지역의 잠재관광자원을 체계화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및 개발하여 도시민이 찾아오도록 하는일이 중요하다. 이에 따

라 정부에서는 훌륭한 자연경관이나 특산품이 있거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과의 연계가 가능한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을 마을별 사업계획 발표와 현장실사를 거쳐 18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중에 있으며, 시범마을 지도자 및 도·군 담당자들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도별로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주민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관광 관련 최신정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한 농촌관광마을 안내, 관광농원, 지역축제 등을 망라한 농촌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촌관광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관광을 추진하고있는 마을을 평가, 우수마을을 선정·표창·홍보하기 위해 『농촌마을 가꾸기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관광 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 『농촌관광 프로그램개발』, 『농촌관광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방안』 등 세 종류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농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농촌관광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과 행정사무관 안용덕)

3.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속추진

1990년대 이후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투자의 성과로 농업생산성과 소득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 생활환경개선부문도 1990년도 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2002년에도 총3,379억원(국고보조 34, 지방양여금 2,616, 지방비 413, 국고융자 316)을 투융자하여 303개면에 대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그중 66개면을 완료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50개 지구를 추진하여 15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신·개축 및 개량 등) 1,291동의 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마을의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처리시설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 시행체계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그간에 추진되어온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주로 관 주도로 추진되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주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주민합의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이며,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주택용지 조성 후 분양에 따른 입주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외지인의 유입 등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용지조성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존의 중심마을을 현대식으로 정비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다. 다양한 농어촌주택표준모델 개발·보급

주택개량시 건축설계에 소요되는 설계비 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3개의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였고, 2001년도에 새로운 4개의 모델을 추가 개발·보급하였으

며, 앞으로 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농어촌주택 표준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주민이 주택건축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시설서기관 조홍제)

라. 농작업 효율화 및 피로회복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진흥청에서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로를 해소하여 건강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80개소에 40억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지방비 50%)을 투입하여 1996년부터 총 404개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였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내에는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각종 기구와 찜질방, 목욕실, 휴식실 등의 피로회복시설과 체력단련기구들을 비치하여 수시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로경감과 작업의 편이화를 위해 농산물 수확운반차, 파종기, 비료·농약살포기, 밭작업화등 농작업 보조기구를 보급하였으며,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77개소, 마을공동쉼터 200개소 등을 설치하여 농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2001년에는 80개소에 40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마을지도자 특별교육 실시 및 건강관리교재 제작 배부 등을 통해 건강관리실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 농가주거환경개선

노동력을 재충전시킬 수 있는 가사노동공간을 편이화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농특회계 융자금 108억원으로 호당 4.2백만원씩 2,570호에 지원,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2001년에는 농특회계 융자금 45억원으로 호당 4.2백만원씩 1,077호에 지원하여 고령 및 영세농을 중심으로 부엌 및 목욕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물이 필요 없고 냄새도 없는 친환경 화장실을 420호에 12억원, 호당 2.8백만원씩 융자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장 김화님)

4. 전통식품산업 투자 활성화

2002년도에는 전통식품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자를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지식인·명인 지정업체로 확대 추진하고, 신규사업 참여자는 성공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지원하고,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사전 부실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동중인 가공업체에 대하여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가공공장 건설 7개소 35억원, 기존 가공업체의 시설개보수 및 현대화 20개소 27억원, 포장개선(디자인, 용기개발) 14개소 2억원, 가공원료수매자금 350개소 1,280억원을 국고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가공업체에 대한 판매·홍보지원 11억원, 가공업체 경영주에 대한 컨설팅을 70개소 2억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표 3-2-27> 농산물 가공산업 추진계획(2002년)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가공공장 건설				가공원료 구입자금	판매· 홍보	경 영 컨설팅	합계
	신규	시 설 개보수	포장 개선	소계				
융자	개소수	7	20	14	41	350		391
	지원액	35	27	2	64	1,280		1,344
보조	개소수					-	70	70
	지원액					11	3	14

(식품산업과 농업사무관 이득섭)

5. 농촌의 교육·의료 등 복지여건 개선

가. 농어촌 복지증진 종합 대책 추진

1990년대 중반이후 농산물 수급불안 등 경영위험이 증가하는 데 비해 WTO규범하에서 가격지지정책은 계속 축소되어 농가 소득안정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도·농간 복지여건 및 생활환경 격차는 점점 확대되어 젊은층 이농이 심화되고 농촌사회를 활력있게 유지할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1994년 신설된 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촌의 복지여건 향상과 도로, 주택 등 생활여건 개선에 총 4조 1,088억원을 투자해 면(面)지역 도로 포장율이 1996년 기준 26.6%에서 38%까지, 상수도 보급율이 20.8%에서 46.3%로 상승하고 보건소·보건진료소의 시설 장비를 확충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농촌의 교육·의료·문화·생활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복지대책은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정부는 농촌의 교육, 의료, 문화 등 농촌 복지여건과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농촌 복지관련 대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1년 '농촌복지증진 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2002.3월부터 농촌복지 개선과제를 검토중에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도 농림부가 참여하는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2002.3)가 구성되어 농어촌교육발전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인의 복지분야 숙원사항 중 농가부담 경감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아래 과제는 2003년부터 우선 개선하기로 하였다.

- ① 그동안 1ha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교생자녀에 한해 입학금과 학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인문계 고교생 자녀까지 확대지원받게 되며

- ②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지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학생수가 연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1인당 지원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며
- ③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최저등급보험료의 1/3수준에서 1/2까지 확대된다. 현재 월 4,400원 수준의 국고지원이 2003년 1월부터 6,600원, 동년 7월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에 맞춰 7,700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02년 각 지역 농촌 보건소의 공중보건한의사를 작년보다 216명을 증원한 334명을 배치하였으며, 농부증 등 만성증후군 예방 등 보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사업전담 보건의 제도를 도입하였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를 각 도별 2개소씩 18개소까지 확대하여 보육 및 방과후지도, 여성농업인 교양학습과 상담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농가도우미 사업도 내실화하였다.

아울러 농촌 젊은층 이농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농촌교육문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농어촌교육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농촌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농촌의 보건의료체계 및 문화인프라의 강화, 연금·건강보험·기초생활보장 등 농촌사회안전망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정희)

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영세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0년도에 도입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2000년까지는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

인자녀 중 실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편모 농업인의 인문계고교생 자녀에 대하여도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2년도에는 편부 농업인의 인문계고교생 자녀를 포함한 52천명에게 39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3-2-28> 2002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계획

(단위 : 천명, 백만원)

사업명	인원	지원액	비고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52	39,600 (11,880)	국 고 30% 지방비 70%

주 : () 내는 국고지원액
자료 : 농림부여성정책담당관실

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해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에게 기숙사 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식 고취를 위해 1986년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2,050명을 대상으로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3-2-29> 2002년도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명	인원	지원액	비고
○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2,050	1,599 (320)	국 고 20% 지방비 50% 자부담 30%

주 : () 내는 국고지원액
자료 : 농림부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조용범)

제7절 WTO 농업협상 대책 추진 및 남북농업교류·협력 활성화

1. 농업협상 논의동향

UR협상 결과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농업협상의 예비작업으로 1997년부터 WTO 농업위원회에서 “분석 및 정보교환” 작업을 통해 협상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 바,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식량순수입국에 있어 농업의 비역적 기능” 제하의 협상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1999년 4월에는 일반이사회에 “농업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제출하여 우리의 기본입장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2000년에 협상이 시작되면서 WTO농업위원회에 각국이 제안서를 통해 협상의 목표와 그 달성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종합제안서와 NTC에 대한 공동제안서(27개국)를 제출하여 협상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001년 5월 이후부터는 제 1단계 협상에서 중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을 의제로 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작업이 제 2단계 협상이 이루어졌다. 2001년 5월, 7월, 9월, 12월에 회의를 개최하며 벌어진 2단계협상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각국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선의 논의가 반복되었다. 회원국들이 이 시기에 일반이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기술적인 의제가 논의되는 농업위원회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였는 바, 예를 들면 TRQ관리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는 TRQ제도가 농산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전제하고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관리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시장여건과 품목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를 제약하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규범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특히 공매제도는 경쟁적

시장조건 조성, 무차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임을 강하게 강조하였다. 관세인하에 대해서는 농산물 관세문제를 공산품과 똑같이 접근해서는 안되며 단기간 내에 급속한 관세감축을 하는 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농업개혁은 기존 관세화 모델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축대상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고 신축성을 인정하면서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제도나 총액을 기준으로 감축하는 현행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지 못하여 신뢰성에 상처를 입은 WTO는 2000년 중에는 개도국들이 제기하는 UR협상 결과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 이른바 이행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주력하면서 신뢰회복에 힘을 쏟았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01년에는 뉴라운드 출범 문제를 재차 논의하기에 이르렀으며, 세계경기 침체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2001.11.9~14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WTO 출범 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출범하고, 농업협상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도하각료회의 선언문에서 ①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②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③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로 농업협상의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선언문안 협상과정에서 NTC 국가간 공조를 통해 “이러한 목표가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NTC에 대한 고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 각료회의에서는 향후 농업협상의 일정이 제시되었는 바,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Modality)를 2003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국별 이행계획서는 2003년 하반기 제5차 각료회의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2004년말까지 다른 분야와 함께 일괄 타결하기로 결정되었다.

도하각료선언문의 농업분야 문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각료회의의 막판까지 쟁점이 되었다. 각료선언문 준비과정에서 수입국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의 근거규정인 농업협정 20조를 기초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에, 케언즈그룹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농업협정 20조를 넘어서는 강도높은 개혁목표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개도국들은 자신들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대 피해자라면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차이로 인해 진통을 겪은 끝에, 농업분야 각료선언문을 확정지었다.

동 문안은 수출국과 수입국이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을 적정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농업협상 진행과정에서도 수출국과 수입국들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문구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동안 제시되지 않았던 농업협상의 종료시점 및 중간일정이 제시됨으로써 앞으로 협상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농업협상대책반장 김종철)

2. 대외 협상체계 구축

정부는 2001년 협상대응과정에서 농업협상을 준비하면서 1998년부터 농림부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WTO협상대책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은 수입국들(NTC그룹)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하였다. 한국·일본·스위스·노르웨이·모리셔스 여섯 나라는 2001. 5.28~31 모리셔스에서 42개국을 초청,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국제회의”를 두 번째로 공동개최하여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 데 이어, 도하 각료회의가 열린 현장에서도 40개국을 초청한 각료급회의를 개최하여 NTC가 농업협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각료회의에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김동근 농림부차관이 참석하여 우리 입장을 알리고 수입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으로 협상이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대외활동도 보다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농림부의 경우 1998.4월부터 운영하고 있던 협상대책단의 책임자를 기획관리실장에서 차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대책단에 농업인 단체와 통상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고 있다. 대책단 내의 농업통상정책협의회와 WTO 농업통상자문단 등을 통한 각계의견 수렴도 일관성있게 진행해 왔다.

2001년 6월 국회에서 추진한 국제농림어업의원연맹의 총회행사 준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NGO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상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면서 민간, 국회, 행정부가 힘을 합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99년과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모든 시·도를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업인과 농림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협상동향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며, 인터넷과 수시정보전달시스템을 통해 협상동향을 알리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속에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통상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계속적으로 협상담당자로 활용하고 1999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통상자문변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상대응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가 일본·EU·미국 등 주요협상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정보 및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주요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우리와 입장이 가장 유사한 일본과는 농업장관회담 등을 통해 공조관계를 더욱 굳힌 한 해였다.

(WTO농업협상대책반장 김종철)

3. WTO 농업협상 적극 대응

앞으로 정부는 WTO 농업협상대책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WTO 농업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Modality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특히,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확고히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이해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동향과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논리를 강구하고, 품목별 수급상황, 국내외 가격차, 관세율 변동, 경쟁력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NTC국가간 공조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NTC 반영필요성을 집중 부각시켜 우리 입장반영을 위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협상준비와 병행하여 협상동향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리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제시된 의견을 협상대응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다.

(WTO농업협상대책반장 김종철)

4.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대책

가. FTA 추진경위

최근의 세계경제질서를 보면 WTO를 중심으로 무역질서가 다자화 되어 가면서도, 동시에 지역경제화(Bloc화)추진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경제가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2000년 73%)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 FTA협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8.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는 FTA 경험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담이 적으며 남미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계절이 우리와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하였

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FTA의 첫상대로 선정·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1999.12~2000.12월 기간중 4차례의 실무협상이 있었으나, 관세 양허안에 대한 양국 입장차이로 금년 8월까지 추가협상 개최되지 못하고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였다.

칠레측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10년내 관세철폐를 주장하였으며 우리측은 국내농업에 영향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금년 2월 LA에서 양국은 고위급협의를 계기로 협상재개를 합의하고 양측은 양허안을 금년 2월과 7월 각각 교환하였다.

5차 협상은 8.20~23일간 칠레에서 개최하였는데, 양국의 양허안에 대한 여전한 의견차이로 타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5차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의 조기진전을 위해 협상의 핵심분야인 양허안에 대해 양국 실무자간 별도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에따라 양허안 별도협상이 9.11-13, 10.10-11간 2차례에 걸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2차례의 별도협의 과정에서 양측은 농산물과 공산품의 양허안과 관련하여 이견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6차협상은 10.18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농산품 및 공산품 분야에서 일부 미결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금융 투자 분야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었다. 양측은 협상시한을 넘긴 10.21일 오전까지도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이견을 해소하지는 못한채 한국정부의 입장을 추후 칠레측에 통보키로 하였다.

10.24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기존 미결쟁점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확정하여 이를 칠레측에 통보하였으며 칠레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한-칠레 FTA가 타결되게 되었다..

나. 농산물 분야 협상타결 내용

최종 타결된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쌀과 신선사과 및 배는 FTA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포도는 11월~4월간에 적용되는 관세를 향후 10년간 균등철폐하고 5월~10월간에는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 참깨등 관세가 높거나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은 DDA협상 이후에 다시 논의기로 하였다. 쇠고기, 닭고기, 유장, 기타채소(건조), 맨더린, 자두 등의 품목은 소량의 TRQ를 제공하고 관세인하 문제등은 DDA협상 이후 논의기로 하였다. 관세철폐계획을 제시한 품목중 국내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한 품목은 7년~1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내리기로 하였으며,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협정문과 관련해서 우선 양국은 농산물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SG: safeguard)제도를 도입기로 합의하였다. 동제도는 수입급증으로 심각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발동할 수 있는 바,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용이하고 발동기간 및 회수에 제한이 없는 등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와함께 제3국산이 칠레산으로 둔갑되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축산물의 경우 칠레에서 출생하여 칠레에서 도축된 것만을 칠레산으로 인정기로 하였다. 동식물 검역분야에서 양국은 WTO/SPS 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FTA체결로 검역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보완대책 수립 등)

한-칠레 FTA는 향후 양국이 정식 서명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게 되면 30일이 경과된 후 발효되도록 되어있다.

농산물의 경우 중요품목은 이를 제외하거나 DDA협상후 논의토록 하였

으며, 관세철폐 계획을 제시한 품목도 상당수는 7~1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도록 되어있어 단기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경쟁력 향상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품목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단기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정병규)

5.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가. 북한의 식량 농업 상황

북한 농업은 생산체제의 비효율성,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이후 만성적인 에너지 난으로 인한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 필수 농자재 부족과 비효율적 관개체계, 자연재해 등으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어 왔다. 지난해는 우리정부 및 국제사회의 비료 등 농자재 지원으로 곡물생산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외화부족으로 식량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식량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01년도 통일부·농촌진흥청의 북한식량수급 추정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자체생산량으로는 약 231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01년 2002년도에 WFP를 통하여 중국산 옥수수 10만톤씩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 국제사회는 미국 밀 15.5만톤, 중국 옥수수 등 21.5만톤, 베트남쌀 0.5만톤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 다소 식량난 완화에 도움을 주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159만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WFP보고서도 2001/2002년도 식량생산은 겨울~봄 기간중 양호한 기후

조건으로 겨울밀, 봄보리 등 봄 작황이 지난해 보다 2.5배 증가하여 총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하였지만 식량소요량에는 역시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3-2-30> 2001/2002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단위 : 천톤)

추정기관	소요량 (a)	생산량 (b)	부족량 (c=a-b)	외부도입 추정량(d)	부족량 (c-d)
통일부·농진청 (정상배급기준700g/일)	6,260	3,946	2,314	718	△1,596
WFP (기아해소수준457g/일)	4,957	3,656	1,301	919	△382

* 외부도입량(718천톤)

- 중국 옥수수 등(215), 미국 밀(155), 한국 옥수수 100, 태국 쌀(28) 등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 현황

(1) 정부차원의 지원

북한에 대한 인도적차원의 식량지원은 1995년 국내산 쌀 15만톤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꾸준히 지원해 왔다. 1996~1998년중 WFP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옥수수등 73,000여톤의 식량을 지원하였고, 2000년에는 태국산 쌀 30만톤 및 중국산 옥수수 20만톤을 식량차관(약 88,227천 달러, 약 1,147억원)으로 지원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WFP를 통해 2001년 중국산 옥수수 10만톤을 2001.3.29~5.11까지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중국산 옥수수 10만톤을 2002.2.28~4.20 기간중 지원하였다.

특히, 2002.4.3-6 기간중 임동원 특사의 방북으로 이루어진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관계 원상회복”등의 10개항 합의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02.8.12-14)을 거쳐 2002.8.27~30중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식량차관 40만톤, 비료 10만톤을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산 쌀 40만톤을 식량차관(차관금액 11,000,000\$, 약 1,320억원)으로 2002.9월부

터 약 6개월간 지원될 예정이다. 원금상환 방식은 10년 거치, 30년 상환; 연리 1%조건 등으로 2000년 차관지원조건과 동일하다.

또한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1999년부터 매년 비료를 지원하여 왔다. 지난해에 이어 2002.5월에도 영농기에 맞추어 20만톤의 비료가 지원되었고 2002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에 따라 2002.9월부터 비료 10만톤을 추가로 지원중이다

- 비료: ('99년) 15.5만톤 → ('00) 30 → ('01) 20 → ('02) 30 (상반기20, 하반기10)
- 식량지원
 - 정부무상지원 : ('95) 국내산 쌀15만톤
 - 식량차관 : ('00) 태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10만톤 → ('02) 국내산 쌀 40만톤
 -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96~'97) 옥수수·혼합곡물 등 약 7만톤
 → ('98) 옥수수3·밀가루1, → ('01) 옥수수10
 → ('02) 옥수수 10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현황

대북지원 민간단체중 농업부문은 현재 10여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5개 민간 단체가 3,003백만원, 2001년에는 12개 민간단체가 6,682백만원, 2002년에는 8개 민간단체가 3,852백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대북협력 지원사업은 소규모이지만 연중지원되고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대북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는 씨감자, 비닐 및 각종 농자재·농기계·잠업 및 젓염소 목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함북 봉산 염소원중 목장에 축사, 젓염소, 비료, 건초 및 협동농장에 농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는 2002년중 「농기계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남한의 건축자재, 각종 수리기구 및 수리부품 등을 지원하여 평양 인근에 연

간 600대 규모의 농기계수리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공장 운영을 위하여 타이어, 베어링 등의 부품을 매년 지원할 예정이다.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는 씨감자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함북 은성군 협동농장에 60만달러 상당의 씨감자와 농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월드비전」은 2000.8월에 평양 농업과학원내 씨감자 생산 온실(2개동 4,959m²), 육모장 및 순화온실(1개동 1,322m²), 씨감자 소피경 재배망실(16,529m²) 등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 4개지역(평양, 양강도 대흥단, 평북 정주, 황남 배천)에 씨감자 생산사업을 추진중이며 2002년에는 함흥지역 씨감자 생산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1998년부터 옥수수재배 및 증산을 위한 옥수수 종자, 비료, 농기계, 농자재 등의 지원과 함께 ‘옥수수 증산사업’으로 북한내 25개 연구소에서 북한 학자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옥수수 품종개량을 수행하고 있다.

옥수수 국내종자와 비료 등의 농자재를 지원하여 북한지역에 재배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생산된 표본 100g씩 국내로 반입하여 옥수수 품종에 대한 기술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한국이웃사랑회」는 1998년부터 운영중인 4개 젓소목장에 새끼땀 젓소 등을 지원하였고, 젓소의 지속적인 사육과 생산된 우유를 급식하기 위하여 매년 콩사료, 우유생산 각종 기기, 수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JTS는 2002년도에 함경북도 경성, 라선, 연탄 등 농장 700정보에 비료, 농자재를 지원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 · 「농협중앙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3자 협력으로 3천수 규모의 『산란종계사육시설』 및 종계, 사료, 육추사, 육성사, 부화장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평양시 외곽에 총 8억원 규모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단체 주요 지원사업 현황>

남북농업발전협력시민연대(씨감자), 남북어린이어깨동무(어린이영양지원), 새마을운동중앙회(손수래 등 농자재 지원사업 산란종계시설), 우리민족서로돕기(지역별 농업협력, 젓염소 목장지원 농기계수리공장), 월드비전(씨감자 생산지원사업), 평화의숲(산림복구-양묘장 조성), 한국JTS(농업기술 및 어린이 영양지원), 유진벨 (질병퇴치사업),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국수공장 및 급식지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국수공장 운영)

<표 3-2-31>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규모

(단위 : 만달러, 억원)

연도	정부차원		민간차원	
	금액	주요지원품목	금액	주요지원품목
1995	23,200(1,850)	쌀15만톤(국내산)	25 (1.9)	담요 8천매
1996	305 (24)	혼합곡물,분유,기상자재 (WFP, UNICEF 등)	155 (12.4)	밀가루,분유,식용유 등
1997	2,667 (240)	옥수수,밀가루 등 (WFP, UNICEF, UN기구)	2,056(182.1)	옥수수,밀가루,감자,라면 등
1998	1,100 (154)	옥수수,밀가루 등(WFP)	2,085(275.3)	곡물, 비료, 소, 식용유 등
1999	2,825 (339)	비료11.5만톤	1,863(223.6)	비료,밀가루,계란,씨감자 등
2000	7,863 (944)	비료 30만톤	3,513 (421)	사료, 감귤, 의류, 경운기,양수기, 의약품 등
2001	7,045(913)	비료 20만톤 WFP 옥수수10만톤 등	5,184 (674)	과일12천톤, 농자재 등
2002. 7.31현재	6,548(860.5)	WFP 옥수수10만톤 비료 20만톤 등	2,126(289)	트랙터, 젓소, 사료, 유유설비, 종자, 온실자재 등
계	44,510(4,400)		14,881 (1,790)	

자료 : 통일부 (www.unikorea.go.kr)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대비체계

(1) 중장기 남북농업협력 추진방향 모색

북한농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남북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대비 남북농업 공동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매년 3억원의 예산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용역 발주하여 북한농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은 ‘남북한 농업의 상호 보완성 증대방향과 추진전략’ 등 8개 지정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하였고, 2002년에는 ‘국제기구의 북한농업개발사업·추진방식 분석 및 적용방안’ 등 8건을 연구용역중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북한농업연구 분야를 ‘북한농업기초연구’, ‘남북농업협력연구’, ‘통일대비정책연구’로 나누어 분야별 중기연구목표를 수립·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분야전문가로 구성된 「북한농업연구자협의회」를 두고 연구방향을 심의·조정하고 연구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중·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한반도 식량농업상황을 전망하고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남북농업협력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농업이 한반도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2) 북한농업지원협력단 구성·운영

농림부는 남북농업협력에 있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지원 활성화와 당국간 협력 추진 준비 등을 위하여 2001.4월 농림부내에 「북한농업지원협력단」을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이 협력단은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이 단장이 되고 대북지원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와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총괄반, 식량·과수반, 축산반, 잠업반, 생산기반 정비반의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씨감자 지원’, ‘축산업 지원’ 등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남북한 농업지원 협력사업의 문제점과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 농업분야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3-2-32>

북한농업지원 협력단 구성

분 야	협 력 단
민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 월드비전, 한국JTS, 국제옥수수재단, 한국이웃사랑회, 새마을운동본부, 남북농발협, (주)현대아산
총 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협력단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진흥청 국제협력과장, 농협 조사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 과수	농협 영농자재부, 농촌진흥청 대관령작물시험장,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과수재배과
축 산	농협 축산개발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잡 업	대한잡사회회, 농촌진흥청 잡사곤충연구소
생산기반	농업기반공사 북한농업연구실

※ 통일부는 자문위원으로 논의과제에 따라 협력단 회의 및 전문가 회의 참석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정희)

●2002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년 11월 일 인쇄

2002년 11월 일 발행

발 행 : 대한민국 농 립 부

편 집 : 농림부 농업정책과

인 쇄 : 동양문화인쇄 (주)

☎(02)502-3994

<비매품>